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이윤주 · 최용환 · 길정아 · 황현정



보고서 표지 디자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보고서 디자인 콘테스트』의 당선 작품을 카카오톡 이모티콘 작가(작가명 모지)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실사한 것입니다.

***당선작 프롬프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 청소년들을 지지하는 어른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문화, 기후변화, 인공지능, 미디어, 권리”

AI 디자인 _ 곽진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행정원)

실사 디자인 _ 변지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인턴)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저 자 이윤주, 최용환, 길정아, 황현정

연구진 연구책임자_이윤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최용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길정아(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교수)
황현정(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_김지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공정의 의미를 파악하고, 관련 주체인 청년, 전문가, 공무원이 인식하고 지향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 간 인식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의 방향 수립 및 시행에 따른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공정’의 개념 및 의미 분석

정부 국정과제 기조를 토대로 청년정책 영역에 따른 청년층의 진입경로나 선발방식, 절차 등을 주축으로 접근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차원에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개념과 기준의 방향과 목적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우리 사회의 공정과 청년

공정에 대한 인식 전반의 지형과 청년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 전반의 이슈를 살펴보기 위하여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일간지 사설 및 부처 보도자료)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관점과 우리 사회에서 청년정책에 따른 공정 담론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 및 정책적 흐름을 파악하였다.

●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IDI)을 통해 본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

청년(19~34세) 대상으로 공정 전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국정과제와 교육, 일자리, 주거로 분류하여 해당 영역 정책에서 드러나는 ‘공정’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이 바라보는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기준을 이해하고, 영역별 청년정책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정책 지원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적 차원을 강조한 정책과제를 수립하였다.

●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본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청년정책 가운데 공정과 관련한 현안 이슈와 공정에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청년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생활, 참여 영역에서의 국정과정 추진 정책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년정책 공정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 성과와 중요도를 파악함에 따라 정책추진 방향과 목표 및 실천과제를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 정책세미나를 통해 본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청년정책 주체로서 청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중심으로 정책세미나를 시행하였다. 정책세미나는 다양한 정책 주체가 인식하는 ‘공정’의 의미와 기준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에 대한 토론을 통해 상호 간 인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사회에서 ‘공정’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추진도

■ 연구결과

주요 연구 결과

1.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분석 → 성별, 연령별, 소득별 청년 공정성 인식 및 요인 파악, 다른 연령세대와의 공정 인식 비교 검증
- 2013~2023년 주요일간지 언론사 사설 중 “청년”, “공정” 키워드·의미 연결망 분석 → 청년, 공정 이슈에 대한 언론(미디어) 프레임 및 군집(클러스터) 특징 도출
- 2023년 청년정책 주요 부처(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보도자료 분석 → 부처 단위 청년정책 영역별 추진 방향 및 목표 검증

2. 설문조사 분석

- 전국 17개 시도 청년(19~34세) 대상 공정 기준 및 개념, 대상 차이에 따른 공정 적용에 대한 태도, 청년정책 영역별 공정에 대한 평가 → 기회 및 절차 공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 성별·소득에 따른 공정 가치 부여, 청년정책 중 일자리 영역에 가장 높은 공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실증 근거 마련

3. 심층면담 분석

- 연령, 성, 지역, 학력, 직업, 청년정책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12명의 청년(19~34세) 대상 1:1 심층면담 실시 → 공정에 대한 경험 인식, 교육-일자리-주거 경험에 따른 공정 기준 및 평가, 공정 가치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실증 근거 마련

4.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 청년정책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후 AHP/IPA 분석을 통해 국정과제에서의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주요 요인 파악→ 청년정책에 따른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향후 청년정책 방향 모색 → 국정과제 추진 정책과 청년정책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향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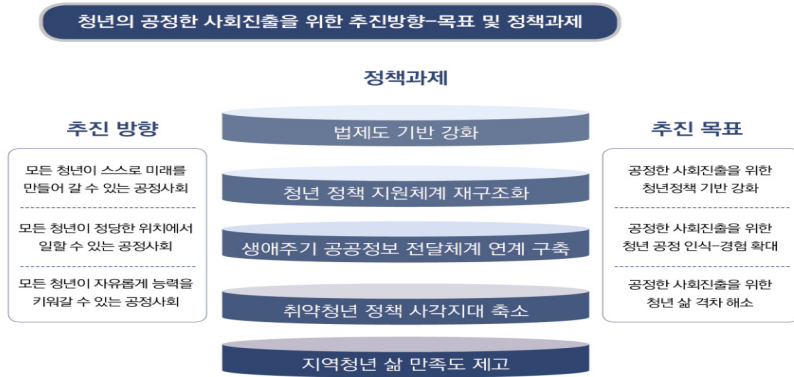
5. 청년정책 주체(청년-전문가-공무원) 간 정책세미나 분석

- 청년-전문가-공무원 11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개념 및 기준, 국정과제에서의 청년정책 운영 과정 평가, 영역별(교육-일자리-주거) 청년정책에 대한 공정가치 실현 방안 등 상호 간 인식 공유 및 협의 →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실증 근거 마련(의미 연결망 분석), 청년정책 관련 주체 간 소통 기회 확장 가능성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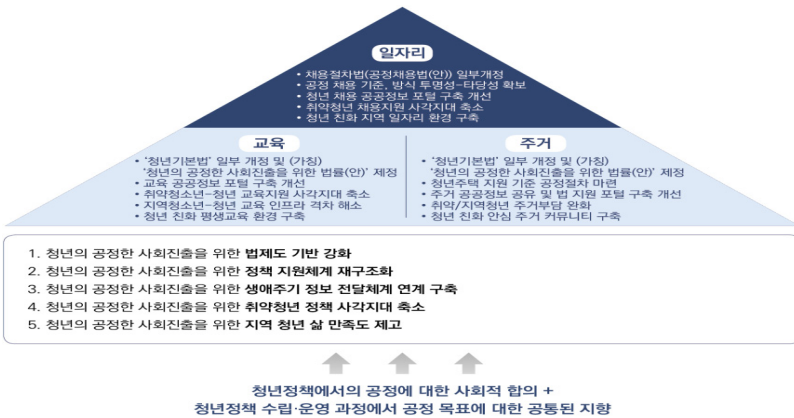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추진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5대 정책과제와 15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하였다.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에 따른 정책과제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영역별 정책제언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연구보고 23-기본0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추진체계	5
3. 연구내용	6
4. 연구방법	8
5.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15

II. ‘공정’ 프레임으로 살펴본 청년정책

1. 공정의 개념 및 의미	19
2. 청년정책에서 공정의 중요성	26
3. 청년정책을 통해 본 공정	48
4. 소결	60

III. 우리 사회의 ‘공정’과 ‘청년정책’: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1. 2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우리 사회의 공정	65
2.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청년정책과 공정	83
3. 소결	114

IV. 청년 당사자 관점에서의 ‘공정’: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1. 청년 관점에서 본 ‘공정’ : 설문조사	119
2. 청년 관점에서 본 ‘공정’ : 심층면담	146
3. 소결	177
V. 청년정책 주체 간 ‘공정’에 대한 인식 차이:	
전문가 의견조사 및 정책세미나	
1. 전문가 관점에서 바라본 ‘공정’ : 의견조사	181
2. 청년정책 주체 간 ‘공정’ 인식 차이 : 정책세미나 ...	195
3. 소결	212
VI.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주요 논의 및 정책제언	
1. 정책 도출 과정 및 추진 방향·목표 설정	217
2. 정책 방향·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수립	223
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제언	229
4. 소결	256
참고문헌	259
부 록	267
Abstract	293

표 목차

표 Ⅰ-1. 전문가 자문 계획 (안)	9
표 Ⅰ-2. 설문조사 추진 계획 (안)	10
표 Ⅰ-3. 심층면담 추진 계획 (안)	11
표 Ⅰ-4. 전문가 의견조사 추진 계획 (안)	11
표 Ⅰ-5.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계획 (안)	13
표 Ⅰ-6. 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13
표 Ⅰ-7. 청년정책 콜로키움 개최	14
표 Ⅰ-8. 청년정책 주제(청년-전문가-공무원) 대상 정책세미나 개최 ...	14
표 Ⅱ-1. 공정성 유형 및 내용	23
표 Ⅲ-1. 응답자 특성	66
표 Ⅲ-2. 청소년의 사회관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 ...	67
표 Ⅲ-3. 사회 전반적인 공정성의 인식	67
표 Ⅲ-4. 15개 영역별 공정성의 인식	68
표 Ⅲ-5. 교육기회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70
표 Ⅲ-6. 취업기회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71
표 Ⅲ-7. 고용형태에 따른 대우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72
표 Ⅲ-8. 주거의 기회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73
표 Ⅲ-9.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74
표 Ⅲ-10. 과제 및 납세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75
표 Ⅲ-11. 지역균형발전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76
표 Ⅲ-12. 법집행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76
표 Ⅲ-13. 정치활동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77
표 Ⅲ-14. 언론 보도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77
표 Ⅲ-15.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78
표 Ⅲ-16.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78
표 Ⅲ-17.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79
표 Ⅲ-18.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인식	80

표 III-19.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취업기회 보장에 대한 인식	81
표 III-20.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한 인식	82
표 III-21. 연도별 언론사 보도 청년 관련 사실 수	86
표 III-22. 18개 토픽별 대표 단어	91
표 III-23. 부처별 보도자료 수	96
표 III-24.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포털 주요 단어의 빈출 횟수 및 tf-idf	98
표 III-25. 고용노동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주요 단어의 빈출 횟수 및 tf-idf	101
표 III-26. 교육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주요 단어의 빈출 횟수 및 tf-idf	103
표 III-27. 국토교통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주요 단어의 빈출 횟수 및 tf-idf	105
표 III-28. 보건복지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주요 단어의 빈출 횟수 및 tf-idf	108
표 IV-1. 분석대상자 특성	120
표 IV-2. 청년 대상 설문조사 구성	121
표 IV-3. 조사 일정	124
표 IV-4. 청년이 인식하는 공정 개념	126
표 IV-5. 우리 사회에 대한 공정 인식	127
표 IV-6.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지 않은 분야	129
표 IV-7.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청년정책	131
표 IV-8. 청년의 자립 및 사회적 성취에 대한 인식 (계속)	132
표 IV-9. 사회에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과 사회의 공정성 인식: 피어슨 상관계수	134
표 IV-10. 청년의 자립 및 사회적 성취에 대한 인식 (계속)	135
표 IV-11. 청년의 자립 및 사회적 성취에 대한 공정 인식	137
표 IV-12.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139
표 IV-13. 청년 일자리 정책(채용절차)에 대한 인식 (계속)	141
표 IV-14. 일자리 정책(제도운영)에 대한 공정 인식	143
표 IV-15.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공정 인식	144
표 IV-16. 청년 대상 1:1 심층면담 추진 (안)구성 및 내용	146
표 IV-17. 심층면담조사 참여자 특성	147
표 IV-18. 심층면담 참여자 특성	148

표 IV-19. 면담조사 항목	149
표 V-1. 청년정책 영역의 공정사회 기여 달성도 (9점 척도)	184
표 V-2. 청년정책 영역의 공정사회 기여 중요도 (9점 척도)	185
표 V-3. 국정과제 세부내용의 달성도 (9점 척도)	187
표 V-4. 국정과제 세부내용의 중요도 (9점 척도)	188
표 V-5.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세부정책 대안의 달성도 (9점 척도)	190
표 V-6.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세부정책 대안의 중요도 (9점 척도)	191
표 V-7. 공정사회 진출을 위한 정책영역의 상대적 중요성 (전문가별 AHP)	193
표 V-8.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국정과제의 상대적 중요성 (전체 AHP)	195
표 V-9. 청년-전문가-공무원 정책세미나 개요	196
표 V-10. 청년-전문가-공무원 정책세미나 논의 주제	197
표 VI-1.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과제 및 세부실천과제	223
표 VI-2.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근거 및 운영방식	224
표 VI-3. 국정과제 청년정책과의 연계성	226
표 VI-4.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21~'25)에 기반한 정책과제 실천(안)	227
표 VI-5. 청년기본법 개정(안)	232
표 VI-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법) 개정(안) ...	234

그림 목차

그림 Ⅰ-1. 청년특별대책 목표	4
그림 Ⅰ-2. 연구 추진체계	5
그림 Ⅰ-3. 연구내용	8
그림 Ⅰ-4.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추진 설계 ...	15
그림 Ⅱ-1. 청년정책의 정의에 따른 이행 도식	33
그림 Ⅲ-1. 사회 전반적인 공정성의 인식	68
그림 Ⅲ-2. 교육기회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71
그림 Ⅲ-3. 취업기회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72
그림 Ⅲ-4. 고용형태에 따른 대우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73
그림 Ⅲ-5. 주거의 기회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74
그림 Ⅲ-6.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75
그림 Ⅲ-7.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인식	80
그림 Ⅲ-8.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취업기회 보장에 대한 인식	81
그림 Ⅲ-9.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한 인식	82
그림 Ⅲ-10. 토픽 모델링에 따른 모형의 적합도 검증	89
그림 Ⅲ-11. 토픽 단위 구조적 토픽 모델링(STM) 분석 결과	93
그림 Ⅲ-12. 토픽 단위 클러스터링 분석 결과	94
그림 Ⅲ-13. 국주요 신문사 사설 ‘청년’ 키워드 중심 의미 연결망 ..	95
그림 Ⅲ-14. 3개월(23. 5~23.7) 중앙부처 ‘청년’ 보도자료 의미 연결망	97
그림 Ⅲ-15.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청년포털) 최빈 단어 워드 클라우드	99
그림 Ⅲ-16. 국무조정실 청년포털 의미 연결망	100
그림 Ⅲ-17. 고용노동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최빈 단어 워드 클라우드	102

그림 III-18. 고용노동부 청년정책 의미 연결망	102
그림 III-19. 교육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최빈 단어 워드 클라우드 ...	104
그림 III-20. 교육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의미 연결망	105
그림 III-21. 국토교통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최빈 단어 워드 클라우드	107
그림 III-22. 국토교통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의미 연결망	108
그림 III-23. 보건복지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최빈 단어 워드 클라우드	110
그림 III-24. 보건복지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의미 연결망	110
그림 III-25. 정부부처 청년정책 보도자료 전체 최빈 단어 워드 클라우드	111
그림 III-26. 부처별 청년정책 보도자료 Top10 빈출 단어 비교 ...	112
그림 III-27. 부처별 주요 단어 비교: tf-idf 분석	113
그림 III-28. 정부부처 청년정책 보도자료 키워드 중심 전체 의미 연결망	114
그림 IV-1. 청년이 인식하는 공정 개념	125
그림 IV-2. 우리 사회에 대한 공정 인식	127
그림 IV-3.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지 않은 분야	129
그림 IV-4.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청년정책	130
그림 IV-5. 청년의 자립 및 사회적 성취에 대한 인식 (계속)	132
그림 IV-6. 사회에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과 사회의 공정성 인식: 산점도	134
그림 IV-7. 청년의 자립 및 사회적 성취에 대한 인식 (계속)	135
그림 IV-8. 청년의 자립 및 사회적 성취에 대한 공정 인식	137
그림 IV-9.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138
그림 IV-10. 청년 일자리 정책(채용절차)에 대한 공정 인식 (계속) ...	140
그림 IV-11. 일자리 정책(제도운영)에 대한 공정 인식	142
그림 IV-12. 성별에 따른 일자리 정책(제도운영)에 대한 공정 인식 ...	142
그림 IV-13.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공정 인식	144
그림 V-1. IPA 매트릭스	182
그림 V-2. 청년정책 영역의 공정사회 기여 IPA 결과	185
그림 V-3. 국정과제 세부내용의 IPA 결과	188
그림 V-4.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세부정책 대안의 IPA 결과 ...	191
그림 V-5. 공정사회 진출을 위한 정책영역의 중요성 (전체 AHP) ...	193
그림 V-6.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국정과제의 상대적 중요성 (전체 AHP)	194

그림 V-7. 청년-전문가-공무원이 인식하는 공정 개념 인식	199
그림 V-8. 국정과제(90~92)에서의 청년정책 공정지향 목표 인식 ...	201
그림 V-9. 청년-전문가-공무원이 생각하는 청년정책에서의 지향점	202
그림 V-10. 주체별로 인식하는 현행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203
그림 V-11. 영역별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204
그림 V-12. 부처 사업 중심으로 살펴본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204
그림 V-13. 청년정책 사업에서 지향하는 공정에 대한 인식	206
그림 V-14. 생애주기에 따른 청년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아이디어 ..	208
그림 V-15. 청년정책 대상으로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	210
그림 V-16. 청년정책 지역 불균형에 대한 인식	212
그림 VI-1.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정책 추진 방향	219
그림 VI-2.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과정 ...	221
그림 VI-3. 연구 설계에 기반한 정책과제 도출 결과	221
그림 VI-4.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에 따른 정책과제	223
그림 VI-5.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영역별 정책과제	257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추진체계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 5.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공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공정 논의는 교육, 취업, 주거 등 청년의 삶 영역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청년들의 외부 환경요인에 따른 출발점의 차이는 청년들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향후 개인 역량, 자산, 직업 등에 있어 더욱 큰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2021년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소득 기준 상위 20% 청년과 하위 20% 청년 대비 소득은 7.7배, 자산은 261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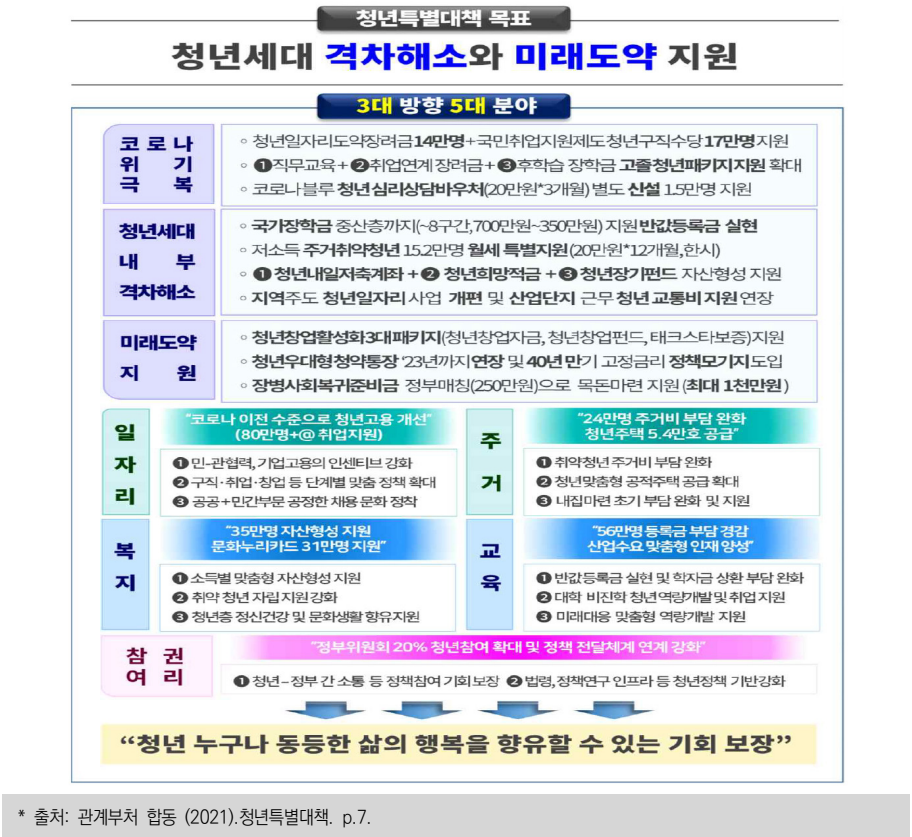
이러한 격차는 최근 ‘부모찬스’로 일컬어지는 논란과 더불어 청년세대의 공정에 대한 요구를 분출시키는 도화선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 간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짐에 따라 취업 기회나 사회·문화 인프라 등이 부족한 지방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2018년 청년 일자리 대책을 시작으로 일자리 중심으로 청년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였다. 이후,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 교육, 복지정책도 병행하면서 청년의 삶 전반을 대상으로 한 청년정책들이 등장하였다. 2020년 3월에 청년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1·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수립 등을 통해 청년정책은 점차 확장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로 정책 영역이 체계화되고, 청년참여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도 구축되었다.

그중 청년세대의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춰 발표된 청년특별대책(‘21.08)에서는 청년세대 내 격차 완화를 통한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목표로 청년의 주거, 교육, 일자리, 복지

1) 이 장은 이윤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최용환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집필하였음.

영역에서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방향성으로 수립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22). 세부 과제 목표에서도 청년세대의 주거, 취·창업 등 일자리 기회, 교육 기회 등에 있어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의 특성상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되기 어려운 것을 고려하여 최대한 다양한 영역(사회학, 교육학, 정치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의 전문가와 현장 청년, 그리고 청년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에서 나타나는 공정의 의미를 중심으로 정책 주체로서 청년, 전문가, 공무원 들 간 인식과 지향점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세미나를 통해 청년정책의 방향 수립 및 정책과제 설정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였다.

이 연구는 청년층을 둘러싼 ‘공정’에 대한 논의에 있어 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차원에서 공정 개념이 사용되는 것을 지양한다.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의 의미와 기준을 재정립하면서 정책을 둘러싼 정책 입안자와 당사자, 그리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정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는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 현 시대 상황에서 청년정책을 둘러싼 다 주체 간의 인식을 공유하고, 상호 간 소통을 시도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실현 방안을 마련하였다.

2. 연구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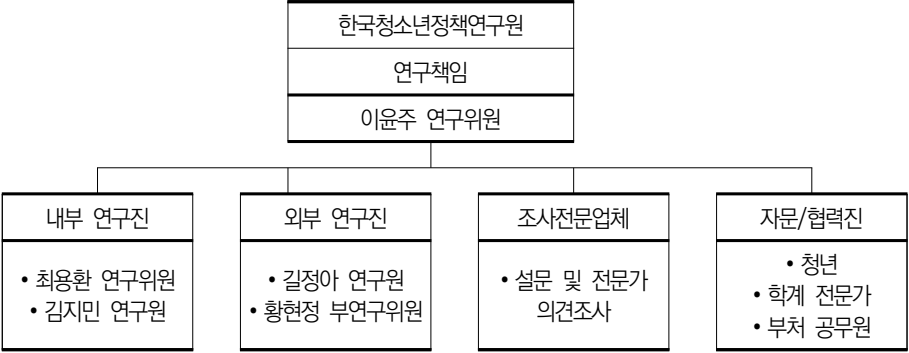


그림 1 -2. 연구 추진체계

3. 연구내용

1) ‘공정’의 개념 및 의미 분석

청년층에서 ‘공정’은 어떻게 개념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청년정책에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과 목표에서 드러나는 공정의 의미와 기준을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정책 가운데 교육, 일자리, 주거 영역에서 공정의 기준과 적용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육에서는 대학입사에서 공정한 출발선에 대한 측면이 강조되었고, 일자리에서는 입사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을 중심으로 공정 논의가 제시되었다. 한편, 구직 과정에서 습득하고 공유한 고급 정보, 인맥을 통한 사적 정보 또한 공정한 절차 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와 같은 요인이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주거 영역에서도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등에서의 청년들의 진입 경로나 선발 등을 주축으로 접근하였다.

2)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우리 사회의 공정과 청년

공정에 대한 일반 인식과 청년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 전반의 이슈를 살펴보기 위하여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2021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회통합실태조사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정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청년 이슈를 둘러싼 각 언론사들의 사실과 부처 보도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청년정책에 있어 언론사와 부처의 관점과 청년정책에 관한 공정 담론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파악하였다.

3)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IDI)을 통해 본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

정책 주체별 ‘공정’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부 국정 운영 기조에서 언급하는 ‘공정’, 각 부처별 정책 목표로서의 ‘공정’, 정책대상자로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청년(19~34세) 대상 설문 및 심층면담을 시행하였다. 청년 대상으로 공정 전반에 대한 인식과 청년정책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국정과제와 교육, 일자리, 주거로 분류하여 해당 영역의 정책에서 드러나는 ‘공정’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

로 질문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이 바라보는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개념과 기준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청년층의 생애주기 과정을 거치면서 쌓아온 경험과 인식을 토대로 공정 가치 실현을 위해 청년이 요구하는 영역별 청년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다루었다.

4)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의 의미

본 연구는 청년정책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통해 AHP와 IPA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공정한 청년정책의 영향 요인과 현안 이슈, 청년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생활, 참여 등과 관련한 현안 국정과제의 추진 정책들과 정책 방향에 대한 성과와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청년 대상 국가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청년정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기초 작업을 하였다. 이후,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가지고 청년정책 분야의 각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검토하였다.

5) 정책세미나를 통해 본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청년,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의 정책세미나를 통해 공정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고 관련 주체가 인식하는 ‘공정’의 의미와 범주를 살펴보았다.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청년 정책의 주체인 청년, 학계 전문가,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인식하는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에 대해 상호 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공정의 의미와 기준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청년과 청년정책 전문가, 정부 공무원 그룹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청년정책에서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는 이와 같은 과정은 정책 당사자와 입안자 등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 간의 공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시도로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시도는

이를 통해 청년정책의 방향과 목표 수립, 정책과제로서의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청년정책에서 공정에 따른 기준과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3차에 걸친 정책세미나를 통해 청년정책 주체자 간의 공정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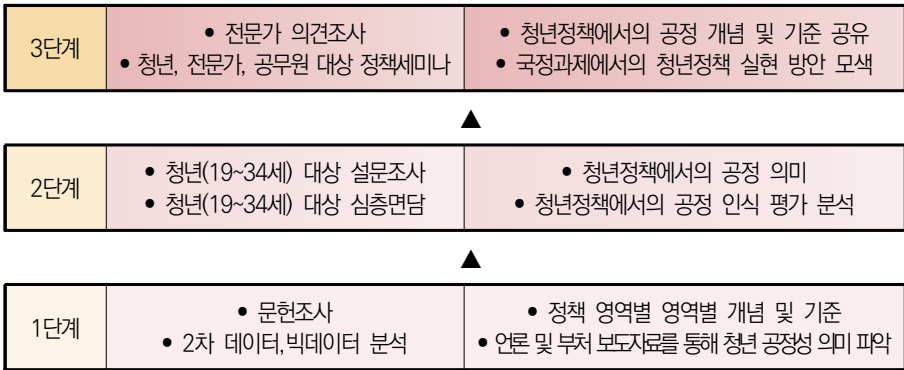


그림 1-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자문, 청년(19~34세)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면담(IDI), 전문가 의견조사, 공무원 정책실무협의회, 청년-전문가-공무원 대상 정책세미나 등을 실시하였다. 각 주체별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에 관한 경험 및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를 토대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영역별, 주체별로 청년정책의 공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학회와 연계한 연구성과 발표회 및 정책세미나를 통해 청년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를 중심으로 공정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정책 방향과 목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1)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공정’의 개념과 의미를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의 의미와 기준 등을 재정립하였다. 또한 국정과제 및 부처별 청년정책을 토대로 공정한 기회 확보를 위한 정책 및 기본계획 등의 자료를 통해 청년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2) 전문가 자문

청년정책을 둘러싼 공정 개념과 의미가 전공별, 영역별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의 정책 지원에 대한 공정성 요인 파악, 동향과 과제, 설문도구 개발, 공정한 청년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계 전문가 뿐 아니라 청년활동 경험이 있는 청년,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자문진을 구성함으로써 청년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표 1-1. 전문가 자문 계획 (안)

횟수	자문영역	자문진
1차	연구 추진 방향 설정 자문	○ 유관 학계 전문가 ○ 청년정책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 ○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차	공정한 정책에 대한 이론 및 청년층 대상 정책진단 자문	
3차	설문조사 도구 개발 자문(조사내용 타당성 검토 등)	
4차	공정한 청년정책의 구축 방향에 대한 자문	
5차	정책제언을 위한 자문	

3)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조사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공정성을 질문한 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청년정책을 다룬 일간지 신문 사설 및 부처의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토픽 모델링과 의미 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언론에서 바라보는 청년과 공정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공정성을 확인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담론이 어떠한 흐름으로 형성되어 왔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청년정책 유관 부처 보도자료를 토대로 의미 연결망 분석을 시행함에 따라 부처 특성에 따라 청년정책의 성격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그 안에서 공정의 의미를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4) 청년 설문조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 전반 및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공정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3년 청년통합조사 위탁 수행기관의 표집틀에 의거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만 19~34세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연령별(19~24세/25~29세

/30~34세), 성별(남/여), 지역별(17개 시도 기준) 등을 기준으로 고려하여 ‘공정’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설문 대상인 청년에 대한 보호 또는 동의 수집 등을 고려한 연구윤리 절차로 IRB 심의 신청하여 통과하였고, 연구진 전원은 연구윤리교육을 수강하였다.

표 1-2. 설문조사 추진 계획 (안)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청년
표집틀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집계구
표본수	2,000명
표집방법	다단계층화집락표집방법
조사시기	6~8월

조사는 조사원이 태블릿PC를 활용한 가구방문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시행하였고, 조사 불가능 가구(군입대, 장기출장, 이사로 인한 빈집 등), 조사 불응 가구(요일, 시간대를 달리하여 최소 3회 이상 시간과 일자리를 달리하여 방문했음에도 부재, 대상자의 강력한 거절 등)에 대해서는 표본가구로 대체하였다. 조사는 10~15분이 소요되었으며, 개인이 판단하는 공정성에 대한 기준, 청년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 공정성 등을 중심으로 인식 및 요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5) 청년 대상 심층면담 IDI(In-Depth Interview) 분석

설문조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경험과 인식에 대해 심층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청년 유형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 소득, 청년정책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총 12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시행하였으며, 1회 평균 면담 시간은 60~8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IDI 진행에 있어서도 연구 대상인 청년에 대한 보호 또는 동의 수집 등을 고려한 연구윤리 절차를 밟기 위해 IRB 심의를 신청하여 통과하였고, 연구진 전원이 연구윤리교육을 수강하였다.

표 I -3. 심층면담 추진 계획 (안)

주요 요소	내 용
면담참여자 섭외 과정	양적 조사 응답자 중 면담 대상 청년 선발
면담참여자 수	12명 내외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연령, 성, 지역, 소득, 청년정책 참여 유무별 청년 특성 등을 고려
면담방식 (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개별 혹은 집단면담)	반구조화된 면접방식을 통한 일대일 면담
면담시간 및 횟수	1인당 60~80분씩 1회 면담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면접 시 녹음하여 전사
면담자	연구진

6)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공정한 청년지원정책 수립 전략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의 대상은 전국 청년정책 실무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조사 시작 1개월 전에 청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소속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하여 집락 및 할당 추출을 통해 모집된 2,000여 명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집락 및 할당 추출을 통해 모집된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별 무작위 추출하고 이들에 대하여 계층적의사결정법(AHP) 문항과 중요도-성과도(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문항을 조사하였다. 조사시기는 2023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유효표본은 150명 내외를 목표로 수행하였다. 조사내용은 공정한 청년정책의 영향 요인과 현안 이슈, 청년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생활, 참여 등과 관련한 현안 국정과제의 추진 정책들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표 I -4. 전문가 의견조사 추진 계획 (안)

주요 요소	내 용
조사대상 전문가	• 전국 청년정책 실무가 및 전문가
선정방법	• 약 1개월 간 청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소속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하여 집락 및 할당 추출을 통해 모집된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통한 유효표본 150명 조사

주요 요소	내 용
조사내용	• 청년정책의 영향 요인과 현안 이슈, 청년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생활, 참여 등과 관련한 현안 국정과제의 추진 정책들과 향후 정책 방향
조사방법	• 집락 및 할당 추출을 통해 모집된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별 무작위 추출
조사시기	• 2023년 7~8월

7) 기타 연구방법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이라는 주제와 문제의식을 토대로 생애주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청년을 둘러싼 생활 영역에서의 변화를 위해 총 8회에 걸친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정부 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청년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과 3회에 걸쳐 협의회를 가졌다. 특히, 일자리와 주거영역의 경우 청년정책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와 2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영역별 정책과제 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를 하였다.

무엇보다도 청년 당사자의 시각에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점에 초점을 맞춰 정책연구 협의회를 시행하였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이 추구하는 공정의 방향성과 본 연구에서 살펴본 청년 시각에서의 공정 요구를 비교하여 청년의 삶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실현가능한 정책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하였다. 그 밖에도 영역별 정책 마련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와도 1회씩 정책실무협의회를 추진하고, 청년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도 2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입법적인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청년정책 입법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회와도 회의를 통해 청년정책에서 공정성 실현을 위한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표 1-5.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계획 (안)

차수	주요 내용	참석공무원 부처(과)	개최시기
1차	청년정책 주요 추진과제에서의 '공정' 논의·검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2월
2차	청년층 '공정' 및 영역별 청년정책 만족도 관련 논의 검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3월
3차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공정' 논의·검토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9월
4차	청년정책 방향 및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공정' 논의·검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9월
5차	중앙 및 지자체 청년정책 연계를 통한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장민수의원실	10월
6차	청년 주거 임대차 및 청년주택 관련 정책제언 검토	국토교통부	10월
7차	중소기업 청년 채용 및 창업 지원에 따른 정책과제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10월
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역할 제고(안) 검토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10월

○ 한국입법정책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본 연구는 청년들의 공정사회 구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입법정책학회와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입법적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3년 8월 18일 구립서초유스센터에서 열린 학술대회는 '공정한 채용과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청년의 공정한 채용절차를 위한 법적 시사점과 인식개선 정책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고금리 및 디지털금융시대 청년세대의 공정한 사회진출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방안이 논의되었다.

표 1-6. 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횟수	주요 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1회	청년의 사회진출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의	학계 전문가 및 청년 대상 50명 내외	8월

○ 청년정책 콜로키움 개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을 주제로 한 ‘공정, 누가 어떻게 주장하는가’의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를 통해 오프라인 콜로키움을 시행하였다. 콜로키움에는 연구주제에 관심 있는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청년층 내에서도 특성에 따라 공정에 대한 민감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청년과 공정 주제에 대한 의견 등을 중심으로 청년층에서의 공정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표 1-7. 청년정책 콜로키움 개최

횟수	주요 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1회	‘공정’ 누가 어떻게 주장하는가	청년, 청년정책 관심 참여자 대상 10명 내외	8월

○ 청년정책 주체(청년-전문가-공무원) 대상 정책세미나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의 공정성 논의를 위하여 정책을 둘러싼 주요 주체 간의 인식 공유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세미나를 총 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청년, 전문가, 공무원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이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1회차에서는 공정을 지향하는 정책으로서의 방향과 목표 등에 대해서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세미나가 운영되었다. 2회에서는 국정과제에서 청년정책 영역별 평가와 더불어 상호 간의 인식 공유를 통해 공정 개념에 대해 주체 간 합의를 이끌어가는 절차도 포함하였다. 3회차에서는 공정 가치 실현을 위해 청년정책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해갈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중심으로 실천 방안 마련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표 1-8. 청년정책 주체(청년-전문가-공무원) 대상 정책세미나 개최

횟수	주요 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1회	공정 개념 및 의미,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목적 및 방향성 제시 등	청년(청년정책조정 위원회위원 포함), 전문가, 공무원 등 총 12명	8월
2회	청년정책 영역별(교육, 일자리, 주거 등) 공정 기준 및 적용 방안 공유 및 국정과제 청년정책 운영		9월
3회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구현 방안 제시 등		10월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추진되어 온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하나의 체계도로 표현하면 [그림 1-4]와 같다.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구분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기존 연구동향과 선행연구를 통해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개념과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2차 데이터와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공정과 청년정책을 둘러싼 국민 인식과 미디어와 보도자료를 통해 나타나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공정과 영역별 청년정책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기 위해서 설문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 시점에서 국정과제에서 제시하는 청년정책의 공정 개념이 어떻게 청년층 사이에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끝으로 청년정책 전문가와 공무원, 청년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발현을 어떻게 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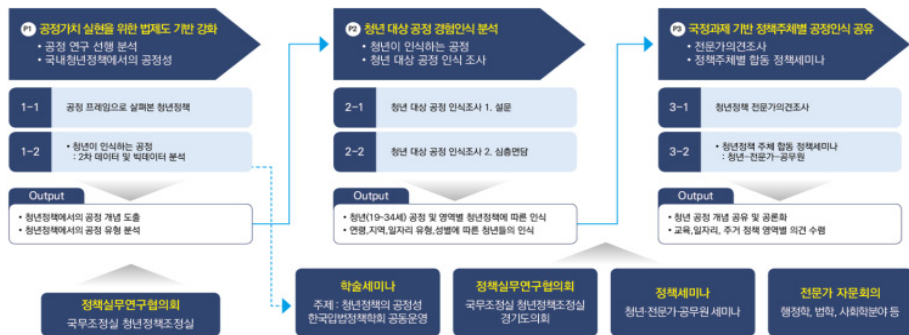


그림 1-4.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추진 설계

5.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1) 연구결과

-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개념, 의미 분석
- 언론에서 나타나는 청년, 공정에 대한 프레임 특성 도출
- 부처 보도자료를 통해 본 청년정책 영역별 우선순위 및 중요도 파악
- 청년 대상의 공정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조사 분석
- 청년정책 관련 주체(청년-전문가-공무원) 간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인식 논의
-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청년정책 방향 및 목표, 중점과제 도출

2) 기대효과

- 청년정책의 목표 및 방향성을 재정립함으로써 향후 청년정책 수립 및 운영에 기여
- 청년이 인식하고 요구하는 공정한 사회진출 방안을 토대로 국정과제에서의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에 기여
- 부처 차원에서 청년정책이 청년친화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정책 대상자의 정책 효능감 제고



제2장 ‘공정’ 프레임으로 살펴본 청년정책

- 1. 공정의 개념 및 의미
- 2. 청년정책에서 공정의 중요성
- 3. 청년정책을 통해 본 공정
- 4. 소결

1. 공정의 개념 및 의미

1) 공정의 다차원적 개념 대한 논의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공정에 대해 질문한다면 각기 다른 기준을 통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공정을 주장하며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더욱 그렇다. 최근 한국의 청년 현실을 살펴보면 교육, 일자리, 주거에 있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모찬스를 통해 입시와 취업, 소득분배 등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연관이 있다. 이러한 논란이 커질수록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갈망이 커짐과 동시에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생각과 의견이 공유되고, 이에 대한 공정성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따른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학자들이 제시하는 ‘공정’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중심으로 공정을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을 설정해보고자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보상이 두 사람의 기여한 바에 비례하여 분배되었을 경우 보상은 공정한 상태를 이루게 된다”고 분배 정의의 원칙을 제안하였다. 이에 Adams(1965)와 Horman(1961)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 정의의 원칙을 확장하여 분배 공정성이란 집단 내에서 어떻게 보상이나 권리, 책임, 부담 등을 분배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지칭하며, 집단 내에서의 분배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 이론으로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즉, 공정은 절대적 동일 기준이 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집단 내에서 분배하는 정의 원칙을 일컫기도 한다.

2) 이 장은 이윤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정준영 연구원(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최용환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집필하였음.

또한 롤스는 사회 안에서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으며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최대한 균등하게 분배하는 한편, 경쟁으로 발생한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 내 ‘최소수혜자’를 설정하여 소득과 부를 차등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하였다(황경식, 2018). 이처럼 롤스는 개인 차원에서의 사회적 지위, 재산, 재능 등에 따라 정의의 원칙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이라는 추상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개인보다는 사회 전체 차원의 정의를 고려하여 일반적 차원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반면, 노직은 이와 같은 롤스의 정의론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권리(재산권)를 침해한다고 반박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리주의에서 제시하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공리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은 신성불가침한 존재이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희생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Robert Nozick, 1997). 이에 노직은 ‘정의의 자격이론’을 제시함으로써 공정에 따른 사회정의를 논의할 때 소유물의 취득과 이전과정에 있어서 정당성에 초점을 맞춘다. 즉, 소유하게 된 과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소유물 배분의 ‘최종결과’가 사회 전체의 공리 증진에 기여하지 못하고,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더라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였다(김범수, 2022).

롤스의 정의론에서는 분배의 최종결과가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이 되는 것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배로 보고 있는 반면에 노직의 경우, 최종결과와 관계없이 소유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면 분배 결과와 관계없이 공정하다고 보았다. 한편, 드워킨은 공정의 기준을 동일한 출발선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드워킨은 ‘자원의 평등이론’에 기반하여 정부 정책으로서 국민들이 소득 재분배에 있어 출발선에서 불평등하지 않도록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하였다(김범수, 2022).

최근 청년 이슈와 관련하여 ‘부모찬스’가 자주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정성과 연결되며, 합법적인 범위하에서 발생하는 ‘부모찬스’가 공정한가에 대한 논의로 확장된다. 이에 드워킨과 같이 출발선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부모찬스’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직의 경우 과정과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공정하다고 보는 반면, 드워킨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찬스’는 개인의 출발선상에서의 자원의 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처럼 공정의 기준은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그에 따른 해석과 평가를 할 때 각기 상이한 입장을 제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효민과 김석호(2015)의 연구에서는 공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제한된 기회와 자원을 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얼마나 정당하게 가져가는가에 대한 평가와 수용의 문제이며, 법·제도 등 게임의 규칙이 적절한가의 문제로 보기도 하였다. 즉, 과정에서 동일한 규칙을 공평하게 적용받는가와 동시에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 게임을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는가는 공정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더불어 드워킨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해서는 자원의 평등 관점에서 허용될 수 있는 공정한 불평등이라고 하였다. 즉, 자신의 선택으로 인하여 불평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선택과 관련 없이 발생한 불운에 대해서는 사회가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주장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따른 정부의 지원 사례를 통해 적용해볼 수 있다. 이는 드워킨의 입장에서 선택적 운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롤스의 공정 논의에서 ‘최소수혜자’에게 차등적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볼 때 전세사기에 따른 정부 지원은 최소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드워킨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로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의구심을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철학적 논의는 사실상 우리사회우리 사회의 청년 이슈와도 밀접하게 접목되어 있다. 일례로 롤스의 공정 개념을 접목하여 청년지원정책으로서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 있다. 롤스가 제시하는 최소수혜자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청년 대상 중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노직의 입장에 적용해보면, 최소수혜자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최소수혜자를 위한 사회적 선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청년정책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에 있어 기성세대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논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논의의 연장선에서 ‘청년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가?’ 라는 문제제기로부터 시작 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최근 청년 이슈로 많이 언급되는 부모찬스 논란은 드워킨이 제시한 자원의 평등을 통해 볼 때 부모의 도움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가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합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출발선의 차등을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는 또 다른 이슈를 제기한다. 주거 이슈와 관련해서도 2030세대 청년들이 내집 마련을 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에 있어서 합법적인 상속, 증여 등의 방식을 적용할 때 이를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지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청년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각기 다른 공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의하는 공정에 대한 잣대를 공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생략되었다. 또한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는 청년의 정체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청년은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이행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세대 차원에서도 다차원적인 관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에 덧붙여 공정 또한 다양한 정의를 지니고 있어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논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다.

따라서 공정에 대한 개념화와 기준을 정립하고, 정책 주체별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공정 개념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토대로 청년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 간의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서의 공정 논쟁에 참여하는 주체 간의 갈등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2) 공정을 둘러싼 연구동향 분석

공정을 둘러싼 기준과 관점은 다양하다. 그렇다면 각 주체별로 어떠한 차이를 지니고 있을까? 하상웅(2021)에 따르면 공정은 시장, 시민사회, 국가 차원에서 지향하는 목표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시장 영역에서 공정은 능력, 기여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행위가 정당하다는 형평 원리, 능력주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에서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기대를 지니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의 공정은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평등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영역에서는 생산과 소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소외될 위기에 빠질 수 있으며,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정체성이 강화되지 않는 소수자들이 소외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외되는 계층이 국민이라면 국가 차원에서는 제도적으로 평등원칙을 통해 공정성을 실현해야 할 목표가 있는 것이다(김석호 외, 2021, p.28. 재구성).

이를 청년에 대입해 볼 때 과거에 비해 청년들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이 늦어지고 불안정 해집에 따라 사회 공동체에서 소외될 위험에 빠진다. 이러한 자립의 지연은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목소리를 제시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부모세대에서 세습된 불평등과 양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크게 받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공정’은 더욱 부각되고 강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다룬 공정 논의를 살펴보면 설정 기준에서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작용한다. 먼저, 교환이론적 전통으로서 개인은 자신이 투자한 만큼 얻어낸 교환물의 가치로 공정성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상대적 박탈감 측면에서 개인은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보상의 공정성을 판단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공정성을 평가한다는 것이다(Davis, 1959). 이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공정성에 대해 조직 내에서 느끼는 심리상태와 연결되어 있다. 즉, 개인이 자신이 투자한 것과 보상받을 것을 상대방과 비교하여 교환관계가 공정한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박효민, 김석호, 2015).

이는 개인이 자신의 보상과 준거인물의 보상을 비교해서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경우,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바로 잡아서 공정한 상태로 바꾸려 한다는 주장과도 연결된다(Folger, Cropanzano & Goldman, 2013).

한편, 절차공정성(조직공정성)과 관련하여 상대적인 차원에서 공정에 관한 논의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이 받는 대우에 대한 느낌이나 인식을 의미하기도 한다으로 나타나기도 한다(Greenberg, 1987). 이는 조직이라는 제도 내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구성원의 지각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상희, 임영대, 임세순, 2014). 이는 추후 대인관계의 처우와 의사소통, 그리고 상호작용성 개념과 연결된다(정형철, 2020).

표 II-1. 공정성 유형 및 내용

구분	연구자	연구내용
분배공정성 (distributive justice)	Folger&Konovsky (1989)	· 구성원이 받고 있는 보상의 총량이 자신이 회사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절한지 지각하는 정도
	이수지, 김유진, 손영우 (2007)	· 임금, 상여금, 승진 등의 자원 배분에 있어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받는 보상의 적절성
절차공정성 (procedural justice)	Greenberg (1987)	· 산출물이 나오기까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 인식으로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자신의 의견에 대한 요구나 공정성 과정에 대한 인식
	이상희 외(2014)	· 서비스 회복연구에서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객불만을 관리하는 데 적용되는 절차

구분	연구자	연구내용
상호작용 공정성 (interaction justice)	Bies&Moag (1986)	· 의사결정 절차를 집행하는 동안 구성원이 받게 되는 대인관계와 절차공정성이 절차라는 고정된 측면을 다루고 있어 절차 진행 시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해서 대인 간의 교감을 중시
	김봉무(2014)	· 규칙이나 절차의 집행과정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대인적 처우에 대한 지각 또는 절차와 의사결정에 대한 사려 깊음
	김영수(2012)	· 의사결정 과정에서 권한 보유자가 보여주는 대인적 처우, 정책, 절차의 실행 과정에서 구성원이 지각하는 처우에 대한 공정성

* 출처: 정형철 (2020). 절차공정성 및 상호작용공정성이 자아존중감에 끼치는 효과: 채용방식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p.8. 재인용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청년정책을 둘러싼 공정 논의는 주로 정책 주체 간의 상호관계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공정을 둘러싼 상대적 개념을 토대로 수행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심재휘, 배정현, 이기혜(2022)의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의 공정성 인식구조 분석을 통해 다른 세대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인식 담론을 발전시켰다. 이를 통해 청년의 생애주기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세대 담론으로서 공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청년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공정성에 특별히 민감하기보다는 청년들이 사용하는 뉴미디어가 지니는 특성이 이들의 여론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에 특화된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뉴미디어에서 주로 불평등과 불공정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절차공정성을 강조하는 청년세대의 공정성 인식을 결과의 불평등을 수용하는 태도로 확장해서 논의하기보다는 불평등한 출발점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태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석호(2018)도 공정성의 문제를 기반으로 세대 간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기회와 자원의 분배를 중심으로 청년세대 이슈를 다루었다. 특히 청년세대에게 자원과 기회가 축소되고 생애주기에 따른 졸업, 취업, 결혼 등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연됨에 따라 세대 간 공정성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에서부터 문제 제기를 시도하였다.

청년 세대를 둘러싼 공정성 관련 연구는 분야별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김은영, 김미란, 양성관, 임진택(2013)의 연구에서 대학입학전형 정책을 둘러싸고 대입전형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 방향성 및 구체적인 대안을 제기하였다.

또한 강태중(2018)의 연구에서도 우리 사회의 대입제도를 둘러싼 ‘공정’ 인식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일상적 언어로 공정을 주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으나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 공정한 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일관성을 찾는 것이 쉽지 않으며, 대입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공정에 대한 근본부터 논의를 시도하면서 공정이 어떠한 차원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그 스펙트럼 안에서 우리 사회에 합당한 공공선의 맥락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일자리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인재 채용의 투명성에 대해 다룬 송진섭(2020)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인재할당제에 초점을 맞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현황 및 채용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유, 홍성수, 장민선, 배건이(2017)의 연구에서는 법률적 차원에서 불합리한 차별 법률을 발굴하여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불공정 이슈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확산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다수의 연구들이 ‘공정’ 의미를 정치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영역 등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에 초점을 맞춰 정책에서 ‘공정’은 어떻게 개념화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토대로 국정운영의 지향 중 하나인 ‘공정’이 현 정부의 청년정책에서 어떠한 방향성과 기준을 토대로 수립·운영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년, 전문가,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 등 청년정책을 둘러싼 주체들이 인식하는 공정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상호 간의 인식 차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특히, '23년도 시행 중인 청년정책(교육, 일자리, 주거 영역 등)에 한정하여 공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교육 영역에서는 대학입시에 초점을 두고, 일자리 영역에서는 입사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거 영역에 있어서도 공공임대나 분양 등에서의 청년들의 진입 경로나 선발 등을 주축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정책 당사자인 청년, 청년정책 전문가가 인식하는 공정의 의미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정책 당사자인 청년과 전문가가 인식하는 ‘공정’과 청년정책에서 드러나는 ‘공정’의 의미가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지 비교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청년정책에서 왜 공정이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사회 청년정책에서 공정은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더불어 현 정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청년

들의 사회진출 시기에 따른 청년정책에서 공정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다룰 것이다.

2. 청년정책에서 공정의 중요성

1) 논쟁적인 ‘공정’ 개념

앞선 절에서 ‘공정’의 개념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요컨대, 대중의 언어 사용에 바탕을 둔 최근의 사회적·정치적 논쟁에서 유통되고 있는 ‘공정’이라는 말에는 일정하게 합의된 의미가 없다. 술한 유행어들의 운명이 그렇듯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앞다퉈 사용하면서 서로 다른 온갖 의미들이 그 하나의 용어를 통해 표현될수록, 그것이 누리는 인기에 반비례하여 합의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학술적 논의에서도 한국어 “공정”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 개념들 중에 무엇과 상응하는지(즉, 그것을 무엇의 표준적인 번역어라고 할 수 있을지) 정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 어떤 연구자는 그것을 영어 개념 “justice”와 동일한 것으로 쓰고, 다른 연구자는 그것을 “fairness”로 번역되는 의미로 쓴다. 물론 justice와 fairness, 정의와 공정성은 각 개념의 역사와 기본 의미의 측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가까운 개념이며, 어느 하나를 논할 때 다른 하나를 함께 검토하는 일이 흔히 수반된다. 하지만 justice와 fairness가 의미상의 교집합을 가지더라도 서로 완전히 교환가능한 용어가 아닌 이상, 이런 상황은 혼동을 낳는다. 예컨대 정교한 이론 작업을 위하여 justice와 fairness를 섬세하게 구별해야 하는 맥락에서, 그 논자가 사용한 “공정”이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문제는 한국어사전에 의존하여 ‘공(公)’과 ‘정(正)’의 뜻을 하나하나 풀이하고 단어의 사용 관행을 추적한다고 해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종류의 언어에서든 공정(fairness), 정의(justice), 자유(liberty), 평등(equality)과 같이 정치공동체와 사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 가치를 표현하는 용어들은—그 사회의 언어에 그런 종류의 말들이 존재하는 한에서—개념 정의(定義)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³⁾ 예컨대 공정이란 무엇인가? 그 용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무엇인가? 또 이런 개념 또는 용어들은 ‘그러한 공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와 같은 논쟁적인 질문을 낳는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용어를 사용하여 그저 제각기 다른 것을

3) 이 절에서는 존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을 비롯한 정치철학 분야의 고전적 연구와 널리 통용되는 한국어 번역을 따라, 잠정적으로 ‘공정’을 fairness에, ‘정의’를 justice에 대응시킨다.

말하고 있을 뿐이라면, 이러한 논쟁은 실로 무의미하거나 무익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공정 또는 정의의 핵심 아이디어를 정말로 공유하면서도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경쟁적으로 논하고 있다면, 이는 유의미하고 진정한 ‘견해불일치’(disagreement)라 평할 수 있다. 중요한 정치적·규범적 개념의 사례들에서 이런 종류의 견해불일치가 발생하는데, 이런 개념들을 그 본질상 끝없는 논쟁을 피할 수 없는 개념,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essentially contested concepts)이라 규정하기도 한다(Gallie, 1955-1956). 정의, 공정, 자유, 평등, 권리,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대표적으로 그러한 개념이다. Gallie (1955-1956)는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의 일곱 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① 해당 개념으로 이루어낸 성취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누구나 그 개념을 최고의 원리로서 받아들이면서 자기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 ② 해당 개념은 매우 복합적인 요소들로 구성된다.
- ③ 해당 개념의 복합적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게 기술될 수 있고 요소들의 가치와 중요도는 상이하게 매겨져서, 입장에 따라 특정한 요소들을 중심 요소로 내세운다.
- ④ 해당 개념의 의미는 고정되지 않고 열려 있어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상당 부분 변경되며 그 의미 변경을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렵다.
- ⑤ 해당 개념의 사용자들은 이 본질적으로 다투어지는 개념의 속성을 인정하면서, 논쟁 상대방의 용법보다 자신의 용법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논증하려 한다.
- ⑥ 해당 개념에는 반드시 개념 사용자들이 그 개념의 기원(원형)으로 삼는 사례들(original exemplar)이 있다.
- ⑦ 해당 개념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논쟁을 통해 개념에 관한 해석들 중 어떤 것들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해당 개념의 의미로 통합되고, 그리하여 그 개념은 점점 더 정합적인 개념으로 발전해 간다.⁴⁾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정 논의를 이러한 이론적 접근으로 다루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에 관한 다양한 관념과 해석들, 즉 복수의 ‘공정관(觀)’들이 공유하고 있는 최소한의 표준적 의미 자체가 문제이며, 공정 개념의 원형적 사례들을 특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정에 관한 대중의 집단 인식을 형성하는 사회적 논의와 학술적 논의가 분리되어 있다. 학술 작업을 통해 생산된 해석 및 용법들이 사회의 담론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4) 이 부분의 번역 및 요약 정리는 김도균, 2020에서 재인용

그럼에도 우리가 이 연구에서, 특히 이 절에서 답하려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청년정책에서 공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논한 현실의 조건에서 논쟁적인 개념·용어인 ‘공정’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고찰하고, 그것을 그 정책이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 가치로 정립하는 일은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더군다나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공통기반이 허약하기까지 하다. 이 연구 전체가 최종적으로는 청년정책 영역에서 공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기초를 제공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위 질문 자체를 먼저 정당화해야 한다. 대체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왜 제기하는가? 이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년문제’가 대체 무엇이고, 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청년정책’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러한 정책의 목표, 가치, 원리로서 ‘공정’ 개념을 논하고자 하는지부터 다뤄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 편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공정’에 민감하니까”라고 말하며 시작하는 것보다 —물론 이 진술의 의미와 함축에 관한 검토를 회피할 수는 없겠지만— 유익할 것이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청년정책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그러한 청년정책의 목표로서 ‘공정’이라는 가치를 검토하며, 청년정책에서 그러한 ‘공정’이 어떤 내용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차례로 논할 것이다.

2) 청년정책의 기본 개념

한국에서 고용정책의 하위 범주가 아니라 ‘고유한 의미’의 청년정책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부터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시도 끝에 2015년 서울시에서는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이 수립되기에 이른다. 이는 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지원 모델을 제시하여 청년정책을 협소한 고용정책의 영역에서 더 넓은 사회정책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윤태영, 박이대승, 정준영, 2020).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청년정책은 양적으로 빠르게 확대되었고 2020년 「청년기본법」의 제정을 기점으로 현 시점에는 상당히 제도화·주류화되었다고 평할 만하다. 이 기본법에 의거하여 같은 해에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이 수립되면서 청년정책은 명실상부하게 국가 행정사무의 하나가 되었다.

청년정책은 이렇게 제도의 한 분야로 이미 자리를 잡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에 관하여 여전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청년정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수많은 지원사업들이 “청년정책”의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청년정책의 개념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은 청년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는 데에

도 관련적이다. 지금처럼 그 이름에 너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부가 청년정책이라는 표제 아래에서 무엇을 목표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의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것인지 논의할 수 있는 공적인(public)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 ‘공정’이라는 가치를 담아야 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2020년 법제화 이후, 청년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기본 근거는 「청년기본법」(법률 제18433호, 2022. 2. 18. 시행)에 있다. 청년정책은 이 법에 의하여 규율되기 때문에 제도와 정책의 영역에서는 법률이 확고한 표준으로 기능해야 한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동법 제1조). 그렇다면 이 법은 청년정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우리는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조항의 “청년”, “청년발전”, “청년정책” 항목들을 재구성하면⁵⁾, 청년정책의 법적 정의(定義)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청년정책’의 법적 정의: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

이러한 정의에는 ① 정책대상(청년), ② 목표(청년의 삶의 질 향상), ③ 내용(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④ 시행주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고찰이 필요한 구성요소는 무엇보다 정책대상인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청년이 대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는 청년 주제의 해묵은 논란거리지만, 이 규정에 따라 청년정책의 구체적 대상 집단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더하여 해당 조항(제3조 제1호)의 단서는 다른 법령과 조례가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두고 있기 때문에 논의 양상은 더 복잡하게 나타난다.

5) 청년기본법(법률 제18433호, 2022. 2. 18. 시행)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실제로 2022년 6월 기준으로 전국 48개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조례상 청년의 나이 기준을 청년기본법과는 별도로 40대까지 포함하여 정하고 있다(조선일보, 2023). 농어촌을 비롯한 특정 지역에서 “청년”의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 청년정책을 위한 국비·도비 지원 예산을 받기 위하여 아예 “청년”에 포함되는 연령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그 말인즉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40대인 사람은 법률상으로는 엄밀히 “청년”이 아니지만 조례상으로는 “청년”이고, 따라서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청년 관련 지원사업에는 포괄될 수 있다. 앞으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인구수가 매해 줄어들게 되면 이런 추세는 더 심화될 텐데, 청년정책의 기본 목표에 비추어 이런 식의 조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김종진, 2023). 30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청년정책의 효과가 미약해지기 때문에 청년정책을 통해 개입해야 할 초점대상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법률의 기준은 어떠한가. 해당 조항의 규정처럼 34세 이하인 사람까지만 법률적으로 청년이라면, 어떤 사람이 35세가 되는 날 어제까지는 ‘청년’이었다가 오늘은 ‘청년’이 아니게 된다는 말인데 그러한 구분선을 뒷받침할 합리적 근거가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청년의 연령 상한선을 몇 세로 정하든 이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법률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현실적·실무적 필요에 따라 정책대상을 특정한 연령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입법을 통한 결단 말고는 ‘청년’이 누구인지를 매듭지을 수 있는 다른 사회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법이 그런 방식으로 청년을 인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제야 청년은 법률적 의미를 가진 집단으로 탄생하게 된다. 아동, 청소년, 노인·고령자 모두 마찬가지이다.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사람’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일도양단’(一刀兩斷)이라는 말이 표현하듯, 논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법의 고유한 기능이다.

물론 청년의 연령범위에는 정답이 없다. 또 청년을 반드시 ‘일정한 세대집단’으로 이해하여 연령을 기준으로 규정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한편 지금처럼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여 비교적 유연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다양한 이유에 의해 뒷받침되는, 다양한 요점을 가진 복수의 견해들이 경쟁할 수 있다. 만약 ‘청년이 누구인지’를 정하는 현행 법률조항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커지면 다시 입법부가 논의하여 결정하면 될 일이다.

여기서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어떤 이유로 그렇게(즉,

그러한 연령범위의 인구집단으로) 정의했느냐'이다.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청년기본법의 입법사(史)를 연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모종의 가설을 세우고, 최초 법안의 작성 과정, 국회 의사과정의 각 단계, 관련 행위자들의 개입, 청년문제에 관한 당시의 사회적·정치적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가설을 검증해보는 것이다. 예컨대 법안의 작성자들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청년정책의 법률적 근거로 활용됐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관련 규정을 —설령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을지언정— 중요한 전거로 삼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이 어떠하든 그런 결과를 만든 모종의 이유가 존재했다는 바로 그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그리고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다’라는 규정의 진짜 기원을 어디에서 발견하든, 그곳에는 ‘청년이 누구인지’에 관한 특정한 아이디어가 놓여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연령범위로 곧바로 환원되어선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러한(즉, 연령으로 환원되지 않는) 관념이 먼저 존재해야만 그것에 비추어 ‘청년은 바로 ○○인데, 따라서 법적으로는 n세 이상 m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해야 한다’라는 형식의 판단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핵심 문제는 결국 ‘청년이란 무엇인가’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청년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청년정책의 개념을 정확히 규정한다.

일상에서 우리는 “청년”이란 말을 다양한 방식으로 별 무리 없이 사용한다. 개별 언어 사용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청년에 관한 온갖 관념들이 그 말의 함의를 풍부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정책의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표준적인 의미를 가진 하나의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국제적인 논의 동향은 어떠할까? UN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가 2018년 발행한 “청년과 인권”(Youth and human rights) 보고서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다(OHCHR, 2018). 보고서는 청년을 “고정된 연령 집단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비동질적인 범주”로서 “성별, 민족, 인종과 같은 다른 형태의 정체성과는 다르게, 삶의 지나가는 한 단계”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 단계는 다름 아니라 ‘의존 상태’에서 ‘독립 및 완전한 자율성의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논의의 신속한 전개를 위하여, 우리는 이로부터 청년 개념의 한 가지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정의를 곧바로 도출할 수 있다.

‘청년’의 한 가지 정의: 의존 상태에서 독립·자율성 상태로 이행하는 삶의 단계

이런 정의에 따르면 ‘청년’이란 한 사람의 시민이 아동기(childhood) 양육자의 돌봄과

국가의 정규 교육·훈련과정을 거쳐, 의존 상태에서 독립·자율성의 상태로 이행하는 삶의 단계이다. 여기서 이행의 목표지점은 바로 ‘사회’이고, 그 과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 진출’이다.⁶⁾ 이행의 출발지점 또는 이행을 통해 벗어나고자 하는 ‘의존 상태’란 사회제도 바깥으로 배제되고 사회관계가 형성되지 않은/못한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른바 “사회 밖 청년”이라는 표현은 이런 요점을 잘 포착한다. 이러한 청년의 이행은 ‘사회로의 진입’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데⁷⁾, 이 과정은 삶의 여러 영역/층위에서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된다. 그중에서도 중심적인 것은 교육·훈련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과정이다. 한 시민은 청년이라는 삶의 단계에서 자기 일을 찾음으로써 사회에 자기 자리를 갖게 되고, 사회제도에 포괄되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된다. 이행은 주거 영역에서도 이루어지고(최초의 독립 거주), 가족관계를 비롯하여(새로운 가족 형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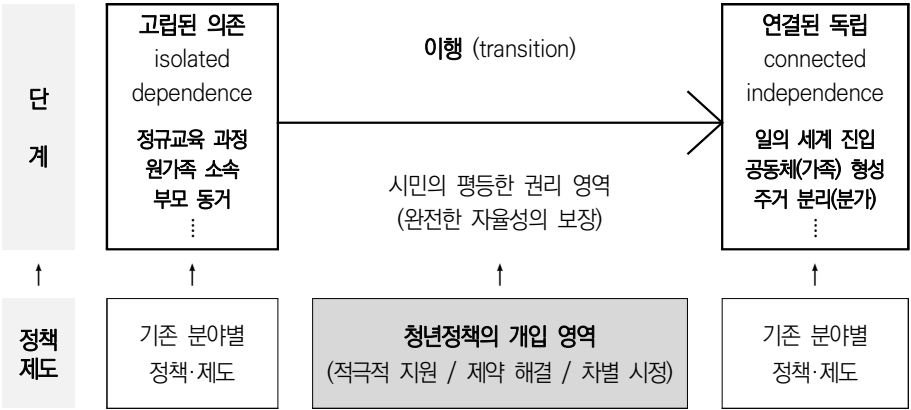
‘자율성으로 이행하는 삶의 단계’라는 청년 개념의 정의를 하나의 표준으로서 받아들이다면, 그에 따라 청년문제와 청년정책을 각각 정의할 수 있다. 우선 ‘청년문제’란 한 사람의 시민이 의존 상태에서 독립 상태로 이행하는 삶의 단계에서 겪게 되는 문제이다. 이행의 영역/층위가 다양한 만큼 청년문제도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또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교차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즉, 여성이 겪는 청년문제, 장애인이 겪는 청년문제, 지방거주자가 겪는 청년문제 등은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띤다. 청년문제의 이런 정의에 따르면, 한편으로 단순히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들’이 겪는 모든 문제들이 청년문제인 것도 아니고, 다른 한편으로 그 연령범위 바깥에 있는 사람도 청년문제를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 누군가는 20대에 이행을 완료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30대 후반까지도 이행 과정을 끝내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청년문제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행이 종료되지 않는다’라는 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년의 법률상 연령범위는 그 문제를 실제로 겪는 이들에게 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면, 청년에 40대가 포함된다고 한들 그 자체로 문제라 할 수는 없다. 국가와 지역마다 청년의 범위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6) 이 글에서 청년정책을 논하는 맥락에서 “이행”과 “사회진출”은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7) “사회진출”과 “사회진입”이라는 표현에서 진출이란 ‘나아가’를 의미하고 진입이란 ‘들어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반되지만, 그 목표지점이 동일하게 ‘사회’라는 점에서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그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모양을 강조하고, 후자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을 강조할 뿐이다.

다음으로 ‘청년정책’도 마찬가지로 형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정책적 개입의 방식을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은 버전으로 정식화될 수 있다(김선기, 정준영, 채태준, 강보배, 송효원, 2019).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청년정책’의 정의: 청년이라는 삶의 단계에 있는 한 시민이 의존 상태에서 독립·자율성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을 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② 방해가 되는 제약을 해결하고, ③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



* 출처: 김선기 외(2019).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행연구, p.14. 일부 수정

그림 II-1. 청년정책의 정의에 따른 이행 도식

청년정책을 이렇게 정의하면, 지금까지 분명한 기준 없이 청년정책으로 분류되던 많은 사업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젊은 미혼 남성의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더 이상은 ‘청년정책’으로 분류되지 않게 될 것이다(윤태영, 박이대승, 정준영, 이미라, 김수현, 2020). 이로써 ‘청년정책’이라는 개념·용어의 사용이 더 정확해진다. 더하여 우리는 의존, 독립, 자율성, 이행, 안정성, 사회진출/진입 등의 개념요소를 하나하나 자세히 다룸으로써 청년정책의 목표, 대상, 지원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김선기 외, 2019; 윤태영 외, 2020).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였다. 청년정책이란 “청년이라는

삶의 단계에 있는 한 시민이 의존 상태에서 독립·자율성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 즉 사회로 진출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로써 ‘청년정책이 무엇이기에 그것에서 공정이 중요한가’를 밝히려는 이 절의 전체 논변에서 하나의 기본 전제를 수립하였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차례이다. 청년정책의 개념이 ‘이행’을 핵심 요소로 가진다면, 청년의 이행 또는 사회진출에 ‘공정’이라는 가치는 어떤 식으로 결부되는가?

3) 청년정책의 목표로서의 ‘공정’

‘공정’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라는 하나의 정치공동체에서 시민의 기본적 지위와 상호관계, 사회적 협동체계의 작동 원리, 기본 재화의 분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근본적인 정치도덕적 가치들 중 하나이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종류의 가치들인 정의, 자유, 평등, 권리,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의 인접한 규범적 개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우리는 그러한 개념 지도를 펼쳐서 공정의 위치는 어디이고 다른 개념들과는 어떤 모양과 거리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탐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프레임워크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이라는 개념 하나만을 명확히 정의하는 일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별 의미가 없다. 더 큰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공정에 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공정(한)”이라는 말의 일상적 용법을 생각해보자. 공정한 사회, 공정한 기준, 공정한 규칙, 공정한 거래, 공정한 경쟁, 공정한 경기/게임, 공정한 기회, 공정한 절차/과정, 공정한 분배, 공정한 보상, 공정한 시험, 공정한 채용... 사례는 계속 추가될 수 있다. 이러한 언어 사용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에서 공정에 관한 특정한 관념이 ‘집단적 인식’과 ‘주도적 의미’를 형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특혜와 부정이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시험을 통해 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채용과 선발을 진행하는 것이 공정이다”와 같은 통상적인 관념을 생각해볼 수 있다(박이대승, 윤태영, 정준영, 2021). 하지만 다수가 받아들이고 여론을 주도하는 지배적·패러다임적 의미/해석/관념이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현재 실효적인 힘을 가질 뿐이고, 그와는 별도로 공적인 정당화(public justification)를 필요로 하며, 규범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위에서 열거한 “공정(한)”의 실사용례들 각각은 특정한 공정관(觀)을 수반할 것이고, 그중에는 분명히 ‘개념적 오용’이라 할 만한 것들도 섞여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공정이란 무엇인가’라는 공정 개념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수많은 사례들을 재료를 삼아서 두 가지 접근법을 구상해볼 수 있다. 첫째, ‘A가

공정하다는 것은 어떤 사태를 말하는가'를 중심에 두고 여러 사례들에서 개별적인 차이들을 사상(捨象)해 나가면서 추상적인 공통된 성질만을 남기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개념 정의의 방법이기도 하다. 둘째, '무엇의 공정인가'를 중심에 두고 '공정함'이라는 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되는 대상들의 공통된 성질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기준, 규칙, 거래, 경쟁, 경기, 시험, 채용이라는 항목들에 모종의 공통성이 있다면, 그것이 '공정'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 접근법들에는 각각의 어려움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의 경우, 하나하나의 사례가 —예컨대, “공정한 경쟁”이란 어떤 사태를 말하는가?—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라는 난점이 있다. 다양한 사례들에서 공통된 성질을 찾는 작업은 그만큼 어렵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종류의 개념들에 ‘하나의 본질’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의 문제도 쟁점이 된다. 이에 관하여 최근류와 종차(예: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개념(concept) 정의를 추구하는 대신에, 언어 사용에 나타나는 다양한 관념들(conceptions)로부터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s)의 관계를 이루는 요소들을 찾아 그 개념을 해명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Gaus, 2000). 두 번째 방법의 경우,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한 항목들이 애초에 ‘공정함’과 올바르게 연결된 것인지(즉, 개념이 옳게 사용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공정 개념을 전제해야 한다. 해명하고자 하는 바로 그 개념을 전제에 투입하면, 자칫 논점선회(또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begging the question)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언어공동체의 관행 그 자체를 분석의 적절한 출발점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우리는 공중(public)의 언어적 실천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사례들로부터 최소한의 항목(예: 거래, 경쟁, 경기, 채용)들을 가려낼 수 있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공정에 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이 지면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공정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이 연구 전체의 목표라면, 현 단계에서는 공정이 잠정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최대한 넓은 의미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는 앞으로 특정한 공정관(公正觀, conception of fairness)을 전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예컨대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능력을 측정하여 오직 그에 따라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와 같은 한 가지 좁은 의미의 공정 관념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통상적 의미의 공정은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이라는 법언으로 표현되는 분배적 정의

(distributive justice)와 밀접하게 연관된 가치로서,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이익과 부담을 분배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특히 각자에게 돌아가는 ‘몫’ 또는 보상이 어떠한가를 평가하는 차원에 관련된다. 이러한 평가는 그 사람의 유관한(relevant) 기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를 타인의 기여-보상 비율과 견주어보는 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⁸⁾ 이 지점에서 공정은 대중적 믿음의 차원에서 소위 ‘능력주의’와도 손쉽게 결합한다(박이대 등 외, 2021).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례성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무엇을 유관하다고 인정하여 그 차이만큼만 합당하게(즉, 그 차이에 비례하게) 차등적으로 대우·분배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따라서 공정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규율하는 규칙 및 절차의 적용·집행을 평가하는 차원과도 관련된다. 규칙 자체는 일반적이고 명확하고 일관되어야 하고, 규칙의 적용은 그 대상자들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며, 규칙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권한 행사는 배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단 이 정도의 원리를 넓은 의미의 공정 개념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손에는 ① 명확하게 정의된 청년정책 개념과 ② 넓은 의미의 공정 개념이 있다. 남은 과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설명하는 일이다. 여기에서도 출발점이자 준거점으로서 우선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청년정책의 개념이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청년정책은 청년이라는 삶의 단계에 있는 시민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으로서 ‘공정’이라는 가치를 수반해야만 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적 양상이다. 이는 “하면 좋다” 또는 “할 수 있다”라는 양상과는 다르다. 청년정책은 앞서 정의한 것과 같은 의미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내용상 일정한 의미의 ‘공정’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즉, 공정은 청년정책을 구성하는(constitutive) 요소이다. 우리는 청년정책에서 공정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이 논의를 시작했지만, 한발 더 나아가 청년정책에서 공정의 필수성, 즉 ‘청년정책은 공정을 수반해야만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청년정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것의 목표, 가치, 원리로서 ‘공정’을 포함한다. 하나는 청년정책이 사회정책 일반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즉, 다른 사회정책들과 동일하게) 가지게 되는 목표, 가치, 원리로서의 공정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정책

8) 나에게 적용되는 ‘기여-보상 비율’과 타인에게 적용되는 ‘기여-보상 비율’이 다를 경우, 어떤 유관한 차이에 근거하여 그렇게 다른지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요구하게 된다.

이 특수한 종류의 사회정책으로서 특수하게(즉, 다른 사회정책들과는 상이하게) 가지게 되는 목표, 가치, 원리로서의 공정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하나씩 살펴보겠다.

(1) 사회정책의 일반적 목표로서의 ‘공정’: 권리의 평등한 실현

청년정책은 사회정책의 한 종(species)이다. 그런 점에서 청년정책은 “○○한 사회정책”이라는 형식으로도 정의될 수 있다. 예컨대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 ‘청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책’,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정책’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청년정책을 다른 종류의 사회정책들과 구별되는 차이들(앞의 표현들에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에 해당하는 성질들)에 앞서, 사회정책의 일반적 목표가 청년정책에도 적용된다. 그렇다면 사회정책이란 무엇인가?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은 시민성(citizenship)의 기본요소로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⁹⁾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헌법상의 표현으로는 “국민”)은 시민이라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 평등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은 그러한 권리의 평등한 실현을 위협한다. 이에 국가는 시민성의 평등을 위하여 사회서비스를 차등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니고, 시민은 그것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시민과 국가 간에는 이러한 권리-의무 대응관계가 성립한다. 이때 시민이 가지는 권리가 바로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이고, 국가가 제공해야 할 사회서비스가 바로 ‘사회정책’이다 (박이대승, 2017). 그런 점에서 시민의 사회적 권리란 사회정책을 요구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법의 세계에서는 모든 시민이 평등하지만, 현실 사회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업과 빈곤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곤경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이때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 보장을 자기 역할로 삼는 복지국가(또는 사회국가)는 실업이나 빈곤에 대응하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9) 여기서 citizenship은 흔히 “시민권”으로 번역되지만, 그것은 ‘권리’로 환원되지 않는 요소들까지 포함한다. citizenship이란 ‘시민을 시민이게끔 만드는 조건들의 집합’이고, 크게 멤버십, 참여, 권리의 요소로 구성된다. 그런 점에서 “시민성”으로 옮긴다(박이대승, 2017).

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 사회서비스들의 총합으로 구성된 체계를 ‘사회보장’이라 부를 수 있다(윤태영 외, 2020). 시민들은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실업이나 빈곤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정치적·시민적 권리까지 평등하게 보장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보장 체계를 통해 시민들은 사회제도 안으로 “포괄”(inclusion)된다. 우리가 흔히 “포용”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

이처럼 사회정책의 개념과 정당화 원리의 핵심에는 시민의 평등한 지위와 권리가 있다. A라는 시민과 B라는 시민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만약 A의 권리는 보장되지만, B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상태를 두고 ‘공정하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다르게 볼 합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다르게 대우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권리의 평등한 실현’이 넓은 의미에서 ‘공정’에 포함된다면, 즉 권리가 평등하게 실현되는 것이 공정한 것이고, 그 반대는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사회정책은 그것의 일반적 목표로서 ‘공정’이라는 가치를 포함한다. 요컨대 사회정책은 시민의 평등한 권리를 공정하게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정책 역시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한 종류이다. 청년이라는 삶의 단계에서 자율성을 향해 이행하고 있는 시민들 중에는 현실의 복합적인 차별과 제약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민은 권리의 평등한 실현을 위하여 국가에 적절한 사회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것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그 사회서비스를 “청년정책”이라 부른다(정준영, 2020a). 이러한 첫 번째 측면에서 청년정책은 한 가지 중요한 의미의 공정, 즉 ‘권리의 평등한 실현’을 목표로 삼는다.

(2) 청년정책의 개념에서 도출되는 특수한 목표로서의 ‘공정’: 균등한 기회의 보장

앞서 논한 것처럼 청년정책 개념의 핵심 요소는 바로 ‘이행’(transition)이고, 바로 이것이 청년정책을 다른 종류의 사회정책들과 구별해준다. 물론 이행 그 자체는 삶의 다른 단계에서도 나타난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일상적인 언어로는 ‘은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모종의 이행을 핵심 요소로 포함한다. 특히 노동시장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면서 이행을 정상이나 표준으로 생각하는 접근법도 있다.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한 이후에 이탈하고 재진입하는 과정이 노동생애 전반에 걸쳐 일어나게 되므로 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이행‘들’을 위한

튼튼한 다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정책의 고유성을 찾기 위해서는 청년이라는 삶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행의 특수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이행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첫째, 청년의 이행은 한 사람의 시민이 겪는 ‘최초’의 이행(=사회로의 진출)이다. 이것이 ‘청년의 이행’이 갖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고유한 개념적인 속성이다.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여 자기 일을 가지게 되는 것, 처음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독립주거를 하게 되는 것,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원(原)가족(family of origin)에서 벗어나 자기 의사대로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는 새로운 사회관계, 생활관계,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예컨대 노동 경력이 없거나 짧고 직업숙련도가 낮은 사람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경력 초반에도 ‘사회초년생’이라는 이름의 취약한 지위에 있게 된다. 의존 상태에서 독립·자율 상태로 이행하는 최초의 과정은 온갖 불안정성에 노출된다. 자율성의 조건으로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심지어는 당장 취업에 성공한다 하여도 이행의 과업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현실적으로 그 이행의 결과가 생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청년의 이행은 그저 ‘한 번’의 이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내부/중심부’와 ‘외부/주변부’로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의 불평등한 현실에서 어떤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느냐는 실상 노동생애 전체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첫 일자리가 평생의 기대소득과 고용안정성을 결정하고, 그것이 사회적 지위와 관계를 규정한다.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이러한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예컨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장기 미취업 상태에 머물게 되거나 교육훈련에 공백을 겪은 청년들은 평생에 걸친 “흉터효과”(scarring effects)를 겪을 수 있다(정준영, 2020b). 최초의 이행 과정에 있는 청년들은 사회 위기에 더 취약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부정적 효과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이에 정책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청년들의 모든 이행이 괜찮은(decent) 이행, 즉 사회가 합의한 적정 기준을 만족시키는 이행이 되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따지는 일이다.

셋째, 이행의 과정은 사회의 기본적 재화(social primary goods)의 분배와 관련이 있다. 청년들은 그런 재화의 분배를 통해 사회에 진출한다. 일차적인 수준에서는 사회경제

적 자원으로서 소득의 원천인 일자리가 분배된다. 일자리는 자신의 정체성과 인격성을 실현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장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 시민들은 노동을 통해 사회제도에 포괄된다. 그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구성하는 기본 조건이기도 하다. 주거라는 재화 역시 단순히 ‘머물러 사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삶의 다른 요소들과 다양하게 연결되는 기본 조건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화들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분배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청년의 이행에서 분배되는 재화들의 목록에 무엇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청년정책의 영역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기회’, ‘지역사회에 동참할 기회’,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그러한 재화에 포함된다면, 청년정책은 그런 문제들까지 확장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요컨대 청년의 이행은 ① 한 사람의 시민이 겪는 최초의 이행으로서, ② 그 과정은 사회의 기본적 재화의 분배와 관련되고, ③ 그 이행의 결과가 생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우리는 모든 시민에게 적정 기준 이상의 ‘괜찮은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 청년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 있다. 괜찮은 이행을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자율성과 안정성에 이르는 이행, 각자도생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이행,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이행을 함축할 것이다. 그리고 청년이라는 삶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그것은 무엇보다 ‘공정한 이행’ 또는 ‘공정한 사회진출’을 필히 수반할 것이다.

최초의 이행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청년의 사회진출 과정을 좌우하는 핵심인자에는 각자가 놓여있는 사회적 위치와 여건, 입수·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자원들, 인생계획에 관한 선호와 동기 등이 있다. 청년의 자리는 흔히 “출발선”으로 비유된다. 이와 관련하여 ‘균등한 기회의 보장’은 가장 중요한 가치들 가운데 하나다. 결과의 불평등을 얼마나 용인할 수 있느냐와 별개로, 시작 단계에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평가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처럼 균등한 기회의 보장은 국가 최고 법규범의 기본 원리, 정치공동체의 기본 합의사항에 해당한다. 더욱이 청년기본법은 제4조에서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3항). 이러한 두 번째 측면에서 청년정책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의 공정, 즉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목표로 삼는다. 이런 식으로 청년정책은 사회정책으로서 가지는 일반성과 특수성

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것의 목표, 가치, 원리로서 복합적인 의미의 ‘공정’을 포함한다.

4) 청년정책에서 ‘공정’의 내용

결론적으로 청년정책은 모든 시민들이 적정 기준 이상의 **괜찮은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괜찮은 이행**이 최상위에 있는 목표라면, **공정한 이행/사회진출**은 그 바로 아래 단계에 위치하는 핵심적인 목표들 가운데 하나이다.

앞에서 논한 것처럼, 청년정책이 목표로 하는 ‘공정’은 우선 사회정책 일반의 개념으로부터 ‘권리의 평등한 실현’을 포함하고(첫 번째 공정 요소), 다음으로 이행이라는 고유한 특성에 근거하여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포함한다(두 번째 공정 요소). 우리는 여기에 일종의 문턱(threshold) 원칙으로서 ‘형식적·절차적 공정’ 관념을 도입할 수 있다(세 번째 공정 요소). 일자리와 같은 자원을 분배하는 절차에는 적어도 특혜와 부정은 없어야 하고,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고 공개적으로 고지된 일반적 규칙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권한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에 관한 대중적·여론 주도적 의미와도 부분적으로 부합한다. 이 세 가지 기본요소를 ‘**공정한 사회진출**’이라는 표제 아래에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청년정책의 목표로서 ‘공정한 사회진출’의 세 가지 기본요소

- ① 권리의 평등한 실현: 차별의 식별과 시정,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참여의 권리 보장
- ② 균등한 기회의 보장: 사회진출의 경로 및 기회구조의 다원화
- ③ 형식적 절차의 준수: 일반적 규칙의 지배, 특혜 및 부정 방지, 자의적 권한 행사 배제

요컨대 공정한 사회진출이 가능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청년이라는 삶의 단계에 있는 시민들의 권리가 평등하게 실현되어야 하고,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익과 부담의 분배를 위한 형식적 절차가 온전히 준수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본요소들의 내용을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1) 권리의 평등한 실현

공정한 사회진출은 청년들의 권리가 평등하게 실현되는 조건에서만 성립한다. 누군가가 차별당하거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는 공정하지 않다. 공정한 사회진출

을 구성하는 이 첫 번째 요소는 자연스럽게 청년정책에 대한 ‘권리 기반의 접근’을 요청한다(정준영, 2020a). 청년정책은 청년에 대한 시혜나 투자가 아니라 권리의 보장이어야 한다. 동일한 내용의 지원사업도 그 기본원리가 무엇이나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다. 청년정책에 대한 시혜 기반의 접근은 정책을 전형적으로 ‘불쌍한 청년들에 대한 도움’으로 본다. 대상자가 겪고 있는 당장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에 초점을 둘 뿐이며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청년들은 정책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받는다. 한편 투자 기반의 접근은 청년정책을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한다. 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러한 투자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사회 전체에 이로운 결과로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설득력이 있지만, 청년들에게 자신의 투자 가치를 증명하도록 요구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다. 시혜 기반 접근과 투자 기반 접근은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서로 다르지만, 청년정책을 일정한 조건 아래에 둔다는 점에서는 같다. 즉, ‘조건부 청년정책’의 원리인 것이다.

청년정책에 대한 권리 기반의 접근은 출발점이 질적으로 다르다. 청년정책은 청년 단계에 있는 시민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들(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들)에서 나오며, 그러한 권리에 의해 정당화된다. 정책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먼저 있고, 그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이 수립·시행되는 것이다. 정책대상인 청년들은 시혜나 투자를 얻어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보유자로서 자신들의 필요를 정당하게 요구/청구할(claim) 수 있다. 이로써 청년들은 청년정책의 전 과정에 참여할 자격과 권한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권한부여(empowerment)는 정책의 시행주체와 대상 간의 권력 관계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킨다.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시민들이 가지는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즉, 정부는 청년정책을 시행해야 할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정치적·법적·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어떤 권리이든 개념필연적으로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할 상대방의 의무가 반드시 대응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권리 기반 접근에 따르면, 청년정책은 (청년 단계에 있는) 시민과 국가 간의 이러한 권리-의무관계를 통해 작동한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있고(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의무를 지며(제4조), 이는 각 문장의 “**하여야 한다**”라는 당위 언어로 표현된다(강조는 연구자가 추가한 것).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

청년정책의 근거가 되는 권리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로부터 도출된다. 따라서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청년의 권리를 평등하게 실현하는 일은 주로 현실에 존재하는 ‘차별’을 식별하는 데에서 시작한다(OHCHR, 2018). 청년들은 연령에 관한 요소와 결합된 복합적인 차별과 구조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UN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는 “청년들에 대한 차별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종종 다른 기반에 의한 차별과 교차하고, 그것에 더해지고, 그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하나의 특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관건적이다”라고 지적한다(OHCHR, 2018). 이런 접근법은 국제적 표준이라 할 만하다. 유럽 지역에서 100개 이상의 청년단체들을 대표하고 있는 플랫폼 조직인 유럽청년포럼(EYF)은 “청년에게 친화적인 세계”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권리 기반의 접근을 분명하게 채택하고 있다(EYF, 2019). 유럽연합(EU) 또한 <유럽연합 청년전략 2019-2027>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청년에 관련된 모든 정책과 활동에 평등 및 차별하지 않음(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포괄(inclusion), 참여 등의 지도원리(guiding principles)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EU, 2018). 청년들이 나이에 기반을 둔 차별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형태의 차별에 마주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면서, 모든 형태의 차별에 맞서 싸운다는 것이다.

청년정책은 청년이라는 삶의 단계에 있는 시민들 가운데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식별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누가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일은 누가 그에 따른 의무를 지며 그 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일을 필히 수반한다. 정부는 청년의 사회진출/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과 제약에 개입해야 할 의무를 지며, 그 의무의 구체적 내용들은 청년정책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난다. 정부는 청년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청년문제의 당사자이자 청년정책의 대상자이자 권리의 보유자인 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 청년정책이라는 ‘공적인 재화’(public goods) 자체에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청년정책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정책의 공백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사회집단에 대해서는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를 통해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진출의 첫 번째 기본요소이다.

(2) 균등한 기회의 보장

대한민국 헌법은 기회균등의 원리를 포함한다. 우리는 적어도 출발선에서만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추상적인 이상을 공유한다. 청년들의 공정한 사회진출 역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조건에서 성립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을 우리는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그에 의한 결과의 불평등한 분배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기회의 문제는 주로 교육의 영역에서 논의된다. ‘입학 자격’과 같이 교육 자체가 하나의 기회이며, 사람들은 일정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직업 선택’과 같은 그다음 단계의 기회를 얻게 된다. 문제는 앞에서 말한 추상적인 기회균등의 이상이 많은 문제를 열어둔다는 점이다.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그 출발선이 인생의 어느 시점·단계이어야 하는지, 또 ‘균등’하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기회 자체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는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국가는 어떤 순간에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로 개입하여 기회균등의 원리를 실현해야 하는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기회균등을 상상해보자. 한 사회의 모든 아이들은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하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국가에 의한 교육만을 받고, 부모에 의한 개별적인 교육은 금지된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적어도 기회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었다”라고 진술할 수야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닐뿐더러, 현실에서 자녀의 교육과 발달에 관한 부모의 자유를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Fishkin, Joseph, 2016).

Fishkin, Joseph(2016)이 인용하고 있는 “전사 사회”라는 유명한 사례를 생각해보자. 그 사회는 한정된 수의 전사와 나머지 평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사가 되어야만 권력,

명예, 부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전사 지위는 오랜 기간 줄곧 세습되어왔지만, 누구나 열여섯 살이 되면 참여할 수 있는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기회는 더 균등해졌을까? 전사 부모를 둔 이들은 태어난 이후로 계속 더 좋은 조건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전사의 자녀들이 시험에서 승리하여 전사가 되었다. 실질적인 기회균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Fishkin, Joseph(2016)은 이 사례를 현대적으로 각색하여 “중요한 시험사회”라는 가상의 사례를 제시한다. 이 사회에서는 열여섯 살에 치르는 단 한 번의 시험의 결과에 따라 평생의 경력이 결정된다. 두 사회의 공통점은 기회의 경로가 단일하다는 점이다. 하나의 좁은 통로만을 허용하는 이러한 기회구조에서는 이른바 “병목현상”이 발생한다. 사회에서 중요하게 인정되는 삶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누구든 그 획일적인 경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 하지만 병목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정해져있고, 승리한 사람은 그 이후에 펼쳐지는 폭넓은 기회를 누리지만 다수는 실패하게 된다. 또 이러한 기회구조는 개인의 선호와 소망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에서 인정되는 한정된 경로 외의 가능성을 경험하거나 상상해볼 기회 자체가 제약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찰은 사실상 몇 번의 시험을 통해 평생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결정되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도 적용된다. 병목현상을 낳는 이러한 기회구조를 그대로 두고서 경쟁에 참여할 기회만을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노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해법은 다양한 삶의 경로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의 범위를 확대하는 다원적인 기회구조이다(Fishkin, Joseph, 2016). 청년이 사회로 진출하는 경로 자체를 다양하게 만들고, 그러한 경로를 통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몫의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기회구조의 실질적인 다원화를 모색해야 한다. 대학입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몇 번의 “중요한 시험”에 걸린 과도한 판돈을 줄여나감으로써 그러한 시험의 경쟁 압력을 분산시켜야 하고, 든든한 사회보장을 바탕으로 재도전의 기회가 계속 제공되어야 한다. 또 개인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인생 경로에 관한 자신의 선호와 소망을 폭넓게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년정책의 세부 분야 중에서는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제도와 연계된 부분, 취업지원제도, 역량 강화사업 등이 이와 밀접히 관련될 것이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진출의 두 번째 기본요소이다.

(3) 형식적 절차의 준수

공정한 사회진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의 두 가지 실질적 요소와 더불어, 이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분배에서 형식적 절차가 —최소한의 문턱으로서— 준수되어야 한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공정채용”이 의미하는 바도 그러한 것이다. 삶의 경로에서 대다수 개인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지만 사회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기회, 자격, 자원, 재화의 분배 과정은 사전에 만들어지고 모든 적용대상자들에게 그 존재와 내용이 명료하게 공지된 일반적 규칙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규칙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정당화되지 않은 혜택을 의미하는) 특혜 및 부정은 효과적으로 방지되어야 한다. 권한을 가진 사람의 자의가 개입되어선 안 되고, 재량의 행사는 부여된 권한 내에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진출의 세 번째 기본요소이다.

그런데 이 형식적 절차의 준수는 공정한 사회진출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 요소가 결여된 상태로 공정한 사회진출을 논할 수야 없지만, 그것만으로 공정한 사회진출이 실현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청년정책의 목표로서 ‘공정’을 좁은 의미의 형식적 관념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청년정책에서 공정의 중요성과 필수성을 논하는 의미는 무색하게 된다. 다른 실질적 요소들과 결합되지 않은, 순전히 형식적인 요소는 공허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정한 사회진출/이행’은 ‘공정한 경쟁·시합·경기’나 ‘공정한 규칙·기준·절차’로 환원될 수 없는 두터운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 요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청년정책에서 ‘공정’이 가지는 내용, 즉 ‘공정한 사회진출’의 기본요소들은 원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체화·정교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정책결정과정의 최종결과물이 바로 청년정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들이다. 이 연구의 목표도, 그런 원리들을 출발점으로 삼아 공정한 사회진출을 목표로 하는 청년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청년정책에서 추구되는 ‘공정’에 관하여 제기될 수 있는 비판적 관점을 간단히 검토한다.

5) 비판적 검토: 시험을 통한 지대추구로서의 능력주의

한국에서 공정에 관한 대중적·여론 주도적 인식은 이른바 ‘능력주의’와 밀접하게 결합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공정 관념은 단적으로 “시험과 같은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능력을

측정하여 오직 그에 따라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라는 믿음이라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그것은 개인에게 그의 재능, 노력, 능력, 기여, 성과에 비례하는 응분의 몫을 보상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버전의 능력주의에 대해서는 옹호론과 비판론이 모두 제기된다(박권일, 2021). 그것은 세습적인 신분질서를 타파하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노력에 보상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가치로 여겨지기도 하고, 현실의 불평등 자체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문제시되기도 한다.

박권일(2021)은 ‘이상적 능력주의’와 ‘현실적 능력주의’를 구별하여 한국에서 나타나는 능력주의 관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그에 따르면 ‘현실적 능력주의’에 해당하는 한국 능력주의의 핵심 특징은 “시험을 통한 지대추구(rent-seeking)”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한국은 Fishkin, Joseph(2016)이 말한 “중요한 시험사회”의 전형이다. 사회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몇몇 결정적 시험들의 결과가 사실상 그 이후 평생의 인생경로를 결정한다. 그런 시험들은 승자독식을 제도화하며, 불평등을 강화한다. 한국 사회의 기회구조는 ‘대학 수험능력시험’과 각종 ‘고시들’로 이루어진 “중요한 시험”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획일화되어 있으며, 이는 병목현상을 낳는다. 한국의 능력주의는 “공정”을 내세워 이러한 현실을 정당화하는 논리인데, 이는 엄밀한 의미의 ‘이상적 능력주의’와는 다르다.

한편 ‘이상적 능력주의’는 “세습, 상속과 같은 ‘외부효과’가 배제된 상태에서 개인의 재능, 노력, 기여의 기준에 의해 사회적 자원(지위와 부 등)이 비례적·차등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신조로 표현된다(박권일, 2021). 이러한 이상적인 능력주의는 정의로운 원리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그 역시 문제가 있다. 분배의 기준이 되는 재능, 노력, 기여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또 그것만이 유일한 원리로 작동하게 되면 —예컨대, 필요에 따른 분배를 요청하는— 다른 정의의 원리들을 위반하여 모종의 부정을 낳는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우리는 청년정책에서 ‘공정’을 논하면서 이런 비판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이 절에서 제시한 것처럼 ‘공정한 사회진출’을 구성하는 풍부한 실질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소들 가운데 하나인— 형식적·절차적 요소로만 논의를 한정한다면, 심지어는 그 절차를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측정된 능력에 따른 보상’ 정도로 협소하게 이해한다면, 그런 접근법은 그와 같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소수 외에 다수의 시민들을 청년정책에서 배제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청년정책에서 ‘공정’을 추구하는 진정한 요점은

지금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특정한 공정 관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데에 있다.

이 절에서는 청년정책에서 ‘공정’이 왜 중요한지, 더 나아가 필수적인지를 논하였다. 그를 위하여 청년정책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였다. 청년정책은 청년이라는 삶의 단계에 있는 한 시민이 사회로 진출하는(즉, 의존 상태에서 독립·자율성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청년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공정’이라는 가치를 수반한다. 청년정책은 먼저 사회정책에 속한다는 측면에서 ‘① 권리의 평등한 실현’으로서의 공정을 포함하고, 다음으로 최초의 사회적 이행에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② 균등한 기회의 보장’으로서의 공정을 포함한다. 우리가 청년정책의 핵심목표 가운데 하나를 ‘공정한 사회진출’로 설정하였을 때, 앞의 두 가지 항목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정 요소로서 포함된다. 여기에 세 번째 공정 요소로서 ‘③ 형식적 절차의 준수’가 더해진다. 한편 청년정책과 연관된 대중적인 공정 인식 중에는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실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재생산한다는 중요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다음 절에서는 분야별 청년정책에서 공정의 요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한다.

3. 청년정책을 통해 본 공정

1) 정부의 국정과제를 통해 본 공정한 청년정책¹⁰⁾

지금까지 공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 같은 공정 및 청년에 대한 공정은 정책적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어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현 정부의 공정에 대한 국정과제는 크게 국정과제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희망),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공정), 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참여)로 볼 수 있다.

(1) 국정과제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 국정과제 90. 은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10) 본 절의 내용은 대한민국정부(2022).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2022.07.에 기반하여 작성하였음.

으로 자산형성에 취약한 청년과 신기술 분야의 인재양성을 통한 청년의 일자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본 과제는 자산형성에 취약한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하는 건전한 자산형성, 노동시장에의 진입 활성화, 청년인재 양성을 신산업에 특화하여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돕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주도하는 중앙정부 부처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이다.

본 정책의 세부내용을 보면 첫째, 청년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정책이다. 주로 청년, 신혼, 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 호 공급과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가 그것이다. 또한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 Loan To Value ratio) 상한 완화를 추진하고, 소득대비 모든 부채원리금 합산 상환비율(DSR : Debt Service Ratio) 산정 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를 병행하는 정책을 제공한다.

둘째, 취업지원 혁신이다. 구체적으로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조기 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와 일경험을 제공하며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민·관 협업을 통한 기업주도의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청년창업 기반 강화이다. 본 정책은 창업인재를 청년 이전인 청소년기부터 양성함으로써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넷째, 미래역량 강화 지원이다. 이는 청년기의 미래인재들을 조기에 양성하고 연구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섯째, 교육 부담 완화이다. 이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을 내실화하고 낮은 학자금 대출 금리를 유지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할 수 있게 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취업준비생들의 사회 첫출발의 기회를 돕기 위하여 ‘(가칭) 청년 취업 후 상환대출제도’도 포함한다.

결국 이와 같은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는 국정과제 90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통해 주거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자산형성을 도모하고,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 및 창업기회를 지원하여 청년 취·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중앙부처의 협업을 통한 신산업 인재양성 및 대학 재학 청년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통한 원활한 사회진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국정과제 91은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으로 일자리 채용에서는 차별금지와 공정합의 보장, 자산형성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취약계층이 원활하게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도약준비금’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국정과제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중앙부처이며, 청년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의 사회진출 시차입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 세부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한 채용제도 마련이다. 본 정책은 채용 과정의 청년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성을 해소하여 공정문화의 제도적 확산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 추진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채용비리 사례를 단속하며, 신고접수된 채용비리 건의 직권조사, 교육 등을 수행한다. 결국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의 노동권 침해 시 원스톱 권리구제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포함하며, 불공정 채용사례를 추적 관리하여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홍보와 대국민 인식을 강화한다.

둘째, 자산형성의 지원이다. 본 정책은 청년들이 적합한 동산에 대하여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는 것으로 만기 시에 목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본 금융상품에서는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셋째, 취약청년 출발 지원이다. 취약층 청년들을 지원하는 ‘(가칭)청년도약준비금’ 신설을 검토하며, 니트(NETT)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소년 그리고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은 채용에 대한 불공정한 제도개선 및 관련 비리 근절로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통하여 자립하며, 청년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으로 이들에게 공정한 사회진출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3) 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는 정책과정에서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정책 추진체계와 관련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재구조화하며, 청년에게 불합리한 법제도를 정비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과 조기자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관련한 주요 중앙부처는 국무조정실과 법제처이다.

첫째, 청년참여 확대이다. 본 정책은 국정 전반에 청년들의 정책참여 인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190여 개의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을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다. 이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정보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며, 정책담당자와 정책수혜자인 청년 간의 쌍방향 소통 강화, 청년들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지원체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청년센터 및 중앙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참여기회와 정보제공을 보다 확대한다.

셋째, 청년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협업의 강화이다. 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넷째, 청년정책 인프라 지원 강화이다. 이는 청년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담연구기관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다.

다섯째, 청년관련 법제 개선이다. 이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청년 또는 취업 후 진학 청년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제도 그리고 청년들의 조기자립에 걸림돌이 되는 자격제도 등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이 같은 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는 청년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로 정책 효능감과 청년들의 정책참여 인식 제고 및 중앙부처와 민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원을 연결하여 정책효과를 보다 높이는 것이다. 또한 일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취업 후 진학하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 정부의 청년관련 국정과제를 보면 청년들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을 자산형성의 어려움, 일자리 부족에 대한 신산업 연계,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공정한 채용문화 형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한계점은 존재한다. 첫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대한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향후 보완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자산형성에 취약한 대상을 면밀히 구분하지 못하면 다른 불공정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신산업 연계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일정 기간에 매우 제한적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이 이에 대한 정책효과를 유지할 지속적인 정책 발굴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이루어지는 청년의 정책참여가 청년정책네트워크 혹은 정부 및 지자체의 위원회 할당 참여로 이루어지지만 위원회 참여의 청년할당을 높이는 것이 실제 일반 청년의 대표성이 있는 참여와 연결되는지는 충분히 고민되어야 한다.

2) 공정을 위한 정책 분야별 청년정책

지금까지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서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정책 영역별로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청년정책은 주로 일자리 분야, 주거 분야, 교육 분야, 복지·문화 분야, 참여·권리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이에 다음에서는 관계부처 합동(2020)이 제시하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에 따른 일자리 분야, 주거 분야, 교육 분야, 복지·문화 분야, 참여·권리 분야에 따라 공정사회를 위한 청년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일자리 분야

먼저 일자리 분야 정책으로는, 첫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이다. 구체적으로 니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교육,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한국형 니트(NEET) 지표를 개발하여 청년 구직포기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2022년부터는 고용복지서비스망을 구축하여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현행 101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전국 70개 중형고용센터, 출장소를 연계하여 촘촘한 정책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여성청년을 대상으로 구직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158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경력단절 예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여성청년들의 진로설계와 지원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민간협업 멘토링을 활성화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청년재직자 지원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재직 여건 조성을 위하여 ①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1,200만원), ②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 3,000만원), ③ 내일채움공제(5년, 2,000만원 이상)를 통한 목돈마련을 지원한다. 그리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대한 훈련비를 지원하여 ‘K-디지털 인재양성’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같은 정책을 통해 신기술 중심의 산업계

주도 청년맞춤형 훈련, 식품외식 분야 인턴십, 도시재생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청년인재를 배출하여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는다.

둘째,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이다. 구체적으로 창업에 실패할 경우, 저신용자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기업인의 신속한 신용회복 및 재창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재창업 사업화자금은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교육, 멘토링, 보육공간 제공 등 패키지식 운영을 통해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의 재창업을 지원한다. 또한 분야별 창업지원을 강화하여 농어업의 경우, 농지, 자금 등 종합 지원을 통하여 청년농업인 1만 명 이상을 2025년까지 육성하며 청년여업인 창업을 지원하여 2025년까지 1,000명 이상 육성한다. 또한 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하여 전통시장 내 청년 점포와 문화체험, 쇼핑, 지역민 소통 등이 융합된 복합몰을 2025년까지 50곳, 약 1,000명을 조성한다. 청년, 영세소상공인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내 상가를 주변 시세의 감정가 기준 50~80%로 이하로 제공하며 전통문화 분야 활동비, 창업 교육, 게임 산업 청년창업자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체감형 우수 환경 아이디어 발굴 등 환경 분야 청년창업도 발굴하여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일하는 모든 청년들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고위험, 저소득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을 추진하며 배달기사, 쿠팡, 대리기사의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공정한 일터마련을 위하여 청년노동권익을 보장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하여 사실조사,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의무 미이행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또한 청년 다수 고용 업종에 대하여 임금채불 빈도가 잦은 사업장을 근로감독하며, 배달 앱 연동 맞춤형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운영, 교통사고 다발지역 접근 시 알람 등을 제공하여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공정채용 기반 구축과 직장문화 개선이다. 구체적으로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필기 또는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며, 블라인드 채용을 정착하는 것이다. 블라인드 채용은 2025년까지 1,250개 중소기업과 민간 확산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공정채용

컨설팅'을 강화하여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 공공부문 대상 채용단계별 지원하며, 필요사항에 따른 집중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다. 그리고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한다. 임금수준·복지혜택, 고용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친화기업을 확산하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청년친화기업을 매년 1,100여 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하고, 재정·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단계별 정착, 가족돌봄 및 재택 등 유연근무 확대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주거 분야

다음은 청년들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도모하는 주거 정책이다. 첫째, 청년주택 공급 확대이다. 청년 1인 가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장기간 거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주거유형에 따라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업무, 문화시설 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을 30% 이상 운영한다. 청년특화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창업인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 문화, 일자리를 연계한 지역 혁신허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한 목적의 공적임대주택은 도심 등 우수입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친환경마감재, 통학차량 대기장소 등 특화설계가 적용된 신혼특화단지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등 육아·보육시설을 갖춘 주택이다.

둘째,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이다. 이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정책으로 20대 미혼청년이 학업, 구직 등을 사유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분리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청년들이 학업과 구직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5년까지 40만 가구에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청년전용 대출상품은 금리 1.2~2.1%의 전세자금, 1.0~1.3%의 월세자금 대출로 제공한다. 그리고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하여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혜택을 모두 적용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운영한다. 또한 이 같은 청년의 주택마련 사업의 금융정책들은 성과분석 후 금리수준, 조세특례연장 등을 일괄 검토한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며, 생애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을 이사회도 가능토록 개선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통해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고시원,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취약청년을 집중 지원한다.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노후고시원, 반지하주택과 같은 취약 주거지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에 근본적 개선을 추진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노후고시원, 반지하주택 매입 후 청년주택으로 재건축, 리모델링하며 열악한 반지하주택 중 자가의 경우에는 도배, 장판, 창호 수선 급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감독관 도입, 대학역세권 인근 집중 단속, 지역건축안전센터 중심으로 불법 방조개기 점검등을 실시하며, 청년이 집중 거주하는 고시원은 지자체별 최소 실 면적, 창 설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넷째,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이다. 구체적으로 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정보를 제공·상담하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한 주거비 마련과 독립 후 정착 등을 종합 지원하는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유주택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지방 광역시 중심지에 교육, 일자리, 주거, 문화가 어우러지는 융합특구를 조성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지속적인 균형발전 노력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에 달하며, 특히 청년의 수도권 유입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지방 광역시 5곳 도심에 개발 하드웨어와 기업지원 소프트웨어를 집적한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공간 주거플랫폼을 조성하는 정책이다.

(3) 교육 분야

앞선 일자리와 주거정책 이외에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돕는 교육정책도 상당수 추진되고 있다. 첫째는 고른 교육기회 보장으로 대학생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20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하고 기초, 차상위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늘려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그리고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고, 학자금 저금리대출 및 상환부담 경감을 지속한다. 또한 저소득층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을 2020년 기준 17.7%에서 2025년도에는 20%로 확대한다.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 및 농업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 등록금은 전액, 취업준비금은 200만원을 지원하고 인문학, 예체능 등 분야별 핵심인재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고졸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대학 미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정

책을 추진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2020년에 11,200명에서 2021년에는 13,000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청년에 대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하여 2020년에 8,000명의 지원 대상을 2021년에는 15,000명으로 늘리고 성과분석을 통해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둘째, 청년의 미래역량을 증진하는 대학교육 정책들이다. 대표적으로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다. 지역 대학, 지자체, 연구기관, 산업계 등이 연계하여 지역혁신,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며, 지역 대학별 강점 결합 및 역할 분담을 통해 교육과정, 학위 등을 공동 추진하며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 기반 산업 등을 고려하여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취업, 정주 지원을 한다. 또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는 혁신공유 대학 지정·운영을 통해 신기술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특히 이는 융복합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전공에 관계 없이 신기술 분야 이수가 가능하다.

셋째,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확대이다. 먼저, 디지털 신산업과 관련하여 청년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주력산업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석박사 청년인재 양성, 국내 대학에 산학 융합 스마트랩 구축·실습, 박사급 청년인재 100여명 에 대한 3년간 집중지원 및 산업계 진출 유도를 추진한다. 또한 2025년까지 그린뉴딜 촉진을 위한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에너지 R&D 전문인력 양성과 농업 빅데이터 수집·분석 등 스마트 농업 전문가 육성, ICT 기반 스마트 수산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또한 문화관광, 미디어,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문화관광, 첨단기술 융합 콘텐츠 교육 강화 및 대학 연계 미디어 교육 확대, IP 빅데이터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2025년까지 확대 추진한다.

넷째, 공정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을 위하여 고졸 기초인재 양성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계, 학생 수요기 반 직업계고 학과 개편지원을 2025년까지 500개 지원하며, 기초기술 인재육성을 위한 부처 연계형 직업계고 지원을 지속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2개 부처, 정보통신 등 10개 분야에서 424개교 직업계고 지원을 하며, 환경 분야 5개교 및 발명, 특허 17개교의 특성화고 지정 및 확대를 2025년까지 확대한다.

(4) 복지·문화 분야

청년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복지·문화 분야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사회출발 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를 개편하여 저소

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사업을 2개로 통합하고 청년특화 서비스·인센티브 추가로 지원대상을 2025년 10만 명까지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기준중위소득 40%를 대상하며,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기준중위소득 50%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대상 근로소득공제금은 월 10만원을 지급하며, 민간매칭금 추가지원은 월 2만원 및 근로활동 유예기간, 적립 중지기간 확대 등의 통장유지조건 완화를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청년특화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및 수요자별 사례관리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자립성공률을 제고한다. 이와 더불어 청년 부채 부담 경감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 저신용 청년 등을 대상으로 금리상품을 3.6~4.5%로 지속 지원하는 햇살론youth 정책이 있으며, 대학생·미취업청년의 채무부담을 취업 시까지 덜어주기 위해 특례지원 대상 및 상환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채무조정특례정책이 있다. 본 특례는 만 29세까지의 대학생, 미취업청년을 만 34세로 상향하며, 미취업청년은 최장 4년 상환유예를 5년으로 확대하는 정책이다.

둘째, 청년의 건강증진 관련 정책이다. 먼저, 마음건강사업은 청년정신건강 특화사업을 통해 청년정신질환 초기발견, 상담, 치료까지 전주기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는 2020년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특화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를 유도하였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 청년을 대상으로, 초기상담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을 통해 청년들의 위험사례를 관리하고 심리적, 경제적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20~30대 여성 맞춤형 검진도구 개발 및 자살예방 정책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그리고 청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의 중독으로부터 사전 예방하고 조기 치료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며 그 대상을 20~30대 직장가입자·세대 주에서 2019년에는 직장·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까지 확대하였다. 17개 시도별 청년사업단을 선정하여, 청년 눈높이에 맞는 신체·정신건강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셋째,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이다. 먼저, 보호종료청년 지원 강화로 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이후 청년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과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보호종로 3년 이내 청년 8천 명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보호종로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임대료를 지속 지원하고 공공주거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19세부터 24세까지의 가출, 학교

밖 청년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립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쉼터에서 퇴소한 가출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 신설을 추진하였다. 또한 25세부터 34세의 저소득 청년 한 부모에게 월 5만원~10만원의 아동양육비 추가지원 등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 탈북청년에 대해 한국어, 진로직업교육, 이중언어 인재 발굴, 개별·집단상담, 1:1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전국 97개소의 가족센터 중심 기초지자체, 민간단체 협업체계 구축, 심리상담·커뮤니티 참여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청년 1인 가구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강화 및 19세부터 24세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지원을 통하여 청년 장애인 지원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24세 미만 또는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근로인센티브 제공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넷째,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을 위한 정책이다. 먼저 문화콘텐츠 분야, 역량 있는 청년의 도전과 혁신을 응원하기 위하여 청년, 중소 콘텐츠기업에 ‘모험투자펀드’ 등을 통해 청년 고용, 창업 초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콘텐츠 투자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참여하는 한, 중, 일 e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세계시장을 선도할 신기술 기반 게임 개발을 통해 패키지를 키우는 게임문화 확산 및 저변을 확대한다. 또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기반 비대면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중음악, 융복합 콘텐츠 상용화 지원 및 온라인 플랫폼 활용 대중음악 콘텐츠 제작·홍보 지원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다양한 주제의 만화콘텐츠 창작지원 및 웹툰 창작, 교육사업 공유공간인 ‘웹툰융합센터’도 조성하고 있다. 또 문화콘텐츠 자원을 활용한 고품질 차세대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과 신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년이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리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생활이 저해되지 않도록 모든 저소득층에 2022년부터 청년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연 10만원씩을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청년들의 문화공간도 확충하고 있다. 청년들이 10분 이내에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 및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 제공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년들이 일상생활과 사회문제 해결에 인문가치를 접목시키는 창의적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인적 기반 및 창작 경험이 부족한 청년문화 예술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예술인 지원 자격을 완화하여 신진 청년예술인 등용문 마련 및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개발 및 청년 유튜브 등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청년 대상 문화 소재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지역문화 홍보 등 문화PD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1인 창작자를 위해 도서관 등에 소규모 창작공간 조성 및 디지털 광고콘텐츠 제작비 등을 지원한다.

(5) 참여·권리 분야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하는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에서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전 과정에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의 위원회 중에서 청년위원을 30%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년위원이 제안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논의 후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청년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삶과 직결된 대학 내 등록금 위원회, (가칭)청년주택특별회의 등 비법정위원회에 청년들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모든 정책 분야에 걸쳐 청년참여 확대 및 정책 반영·환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청년참여단, 온라인 청년패널 등을 각 부처 및 지자체로 넓혀 청년 거버넌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의 정책제안 의견을 접수하여 해당 부처에 제도개선을 상시 권고한다. 이와 더불어 청년 거버넌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청년 고충 발굴, 청년주도 정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여 연 1회 제도개선 및 이행 현황 점검보고를 하고 있다.

둘째, 청년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내실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청년 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법령을 정비하여 종합적·체계적 청년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지정·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 실태조사, 중앙과 지자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추진실적 분석평가 등을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능력개발, 주거, 금융, 문화, 국제협력 등을 점검한다. 또한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 조례 정비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분야별 지원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그리고 지역 청년정책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지자체가 지역의 청년 특성에 맞춰 제안한 정책을 정부가 심사지원하여 자치역량 제고 및 중앙-지방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정립한다. 즉, 지자체 상향식 추진방식을 도입해 성과를 거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모델을 일자리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복지 등 전 분야로 확장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수립과 자치분권 청년정책 지원사업 추진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지표(Youth Life Index)를 개발하여 청년 삶 기준선과 새로운 지표를 마련한다. 현 청년정책 관련 대다수 지표는 일자리, 주거,

소득에 집중하고 있어 제한점이 있으므로 청년이 지속가능한 입체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지표를 개발한다.

셋째,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이다. 청년이 모든 청년정책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하나로'(온라인), '청년마당'(오프라인)을 구축, 확대한다. 즉, 중앙 부처 및 광역지자체 정보서비스를 연계하고 기초지자체, 정보서비스를 연계하여 2023년에는 온라인 하나로 구축·확대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청년마당은 청년의 활동공간 수요 충족과 청년참여 및 직접 운영을 하여 기 조성된 공간의 다양성을 최대한 인정하면서 진로·마음 상담 및 청년정책 제공, 안내 등 필수기능을 수행한다. 청년이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쉽게 확인하고 이용하여 청년데이터 축적·관리를 통해 맞춤형 정책 발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카드도 운영한다. 그리고 청년 역량과 지역사회 활력을 키우기 위해 지역 문화공간 조성, 지역관광 홍보, 활성화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넷째,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이다. 대표적으로 노동, 금융, 주거 청년 권익보호가 그것이다. 즉, 청년의 삶과 밀착되어 있으나 정규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 금융, 주거 등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노동의 임금체불, 작업장 폭력, 금융의 보이스 피싱, 대출사기, 깡통전세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제시한다. 이에 오프라인으로는 대학일자리센터, 지역청년공간, 근로권의 및 근로보호센터 등과 연계하며, 온라인으로는 웹(PC), 앱(모바일), 교육콘텐츠를 제작·배포한다. 그리고 청년의 인권 보호, 권익향상을 위한 인권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고 청년이 참여하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서 탈피하여 청년이 주제와 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청년주도형 국제교류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4. 소결

본 절에서는 공정에 대한 개념 정의와 유형, 범위를 살펴보고 이를 청년정책과 연계하였다. 또한 국정과제에서 드러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공정에 대한 철학적 이론을 도입하여 최근의 청년정책을 되짚어 보았다. 롤즈, 노직, 드워킨, 센 등이 제시한 공정의 개념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어떠한 관점과 기준을 적용하는지 알아보았다.

롤즈의 공정 개념을 통해 접목해볼 수 있는 것은 청년지원정책으로서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노직의 기준을 적용하면 최소수혜자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최소수혜자를 위한 사회적 선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청년정책 가운데에서도 취약청년정책에 대한 논의와 맞닿아있다.

한편, 드워킨이 제시한 자원의 평등은 청년들 가운데 엄빠찬스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어 있으며, 합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출발선의 차등을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는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온다. 끝으로, 셴이 언급한 개별 정의론의 경우 모든 공간과 변수에서 평등을 추구할 수 없으며, 추구하더라도 실현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청년층 내에서도 다양한 정책대상과 부처 입장에 따라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개념이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청년을 둘러싼 공정 이슈에 대해서 개념적인 차원의 분석을 통해 그동안 청년정책에 있어서 사람들이 정의하는 공정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발생하는 정책 평가상의 혼란을 줄여보고자 하였다.

청년은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이행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세대 차원에서도 다차원적인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 특성에 덧붙여 공정 또한 다양한 정의를 지니고 있어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논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공정에 대한 개념화와 기준을 정립하고, 정책 주체별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공정 개념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청년정책은 ‘공정한 이행(또는 사회진출)’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폭넓은 의미를 가지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제3장 우리 사회의 ‘공정’과 ‘청년정책’: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 1. 2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우리 사회의 공정
- 2.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청년정책과 공정
- 3. 소결

1. 2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우리 사회의 공정

1) 분석 개요

본 장은 청년들의 공정성 인식 지형과 그 결정요인들을 탐구하기에 앞서, 전 연령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선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과 관련된 이슈는 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2017년 서울교통공사 가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합의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이를 비판하였다(뉴시스, 2017; 동아일보, 2018; SBS, 2017). 또한, 2020년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많은 청년들이 반감을 표현하였다(중앙일보, 2020; YTN, 2020). 이 두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직 전환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이렇듯, 이 연구에서는 공정성 논의가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여, 다른 세대에 비해 특히 청년세대가 공정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고자 한다.

공정성과 관련된 시민들의 태도 지형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2021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회통합실태조사 설문자료를 활용한다. 그 이유는, 이 설문자료에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각 영역과 관련된 세부적인 분야에서의 공정성 평가 문항을 포함하고 있고, 응답자들의 소득 및 학력과 같은 사회경제적 속성, 그리고 사회 신뢰 등의 문항을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시민들, 특히 다른 세대에 비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

11) 이 장은 길정아 연구교수(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원), 황현정 부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윤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집필하였음.

인식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공정성의 실현을 위한 합의 기준을 마련하며, 궁극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청년들의 합의와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적실한 청년정책 입안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그들의 사회적 태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2) 2차 데이터 분석 결과

(1) 응답자 특성

분석에서 연구대상은 2021년 기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연령대 별 비율은 19~29세 16.4%, 30~39세 15.4%, 40~49세 18.7%, 50~59세 19.8%, 60세 이상은 29.7%로 구분되어 있다.

표 III-1.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8,077	100.0
19~29세	1,327	16.4
30~39세	1,245	15.4
40~49세	1,511	18.7
50~59세	1,597	19.8
60세 이상	2,397	29.7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 사회 전반적인 공정성의 인식

한편, 공정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2019년 청소년 통계에서도 13~24세 청소년의 46.3%만이 ‘우리 사회는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19~24세는 45.3%가 “우리 사회는 공정하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II-2. 청소년의 사회관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

단위: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4점)
성별	남	2940	5.3	47.0	45.4	2.4	2.45
	여	2689	5.6	47.0	45.3	2.0	2.44
연령별	13~18세	2328	5.8	43.4	48.9	1.9	2.47
	19~24세	3300	5.1	49.5	42.9	2.4	2.43
전체		5628	5.4	47.0	45.4	2.2	2.44

* 출처: 김기현 외(2021).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p.107

연령별로 나타난 사회 전반에 대한 공정 인식도 살펴보면 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있어 4점 만점에 평균 2.5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구분해서 보면 19~29세가 2.5점, 30~39세가 2.47점, 40~49세 2.54점, 50~59세 2.55점, 60세 이상이 2.58점으로 사회 전반의 공정성을 평가하였다. 특히, 19~29세의 경우 ‘매우 공정하다’로 응답한 비율이 1.9%, 30~39세가 2.9%로 20~3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확연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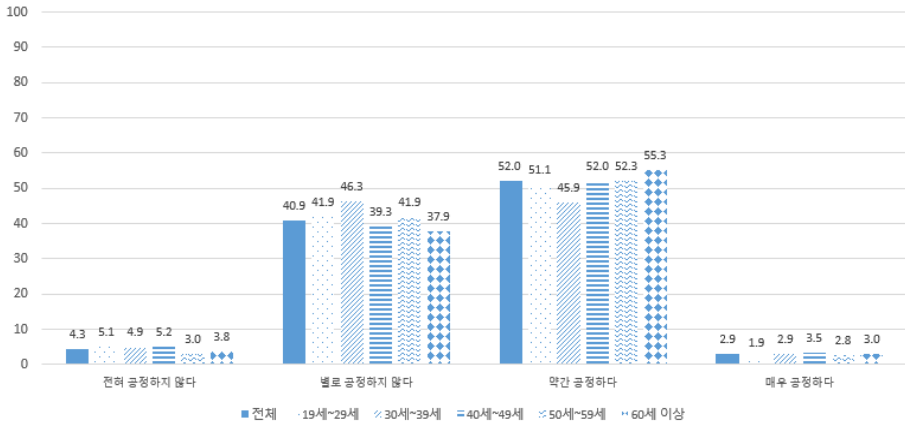
표 III-3. 사회 전반적인 공정성의 인식

단위: %, 점

구분	사례수(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4점)
전체	8,076	4.3	40.9	52.0	2.9	2.53
19~29세	1,328	5.1	41.9	51.1	1.9	2.50
30~39세	1,245	4.9	46.3	45.9	2.9	2.47
40~49세	1,511	5.2	39.3	52.0	3.5	2.54
50~59세	1,596	3.0	41.9	52.3	2.8	2.55
60세 이상	2,396	3.8	37.9	55.3	3.0	2.58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단위: %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그림 III-1. 사회 전반적인 공정성의 인식

(3) 15개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가. 15개 영역별 공정성의 인식

사회 영역을 15개로 세분화하여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사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교육 기회(2.88), 보건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2.84),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2.7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영역은 지역균형 발전(2.54), 법집행(2.54),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2.53), 언론보도(2.5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2.52), 정치활동(2.47)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I-4. 15개 영역별 공정성의 인식

단위: %, 점

영역	사례수 (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4점)	순위 ¹²⁾	상하 구분 ¹³⁾
교육기회	8,076	1.6	19.5	68.0	10.9	2.88	1	상
취업기회	8,077	8.5	37.3	42.2	11.9	2.58	7	상
고용형태에 따른 대우	8,078	6.9	35.9	49.5	7.8	2.58	8	상
주거의 기회	8,077	6.7	36.0	50.8	6.5	2.57	9	상

영역	사례수 (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4점)	순위 ¹²⁾	상하 구분 ¹³⁾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8,078	4.5	30.4	49.9	15.1	2.76	3	상
과제 및 납세	8,074	6.0	36.7	44.8	12.5	2.64	6	상
지역 균형 발전	8,077	5.8	42.4	44.2	7.6	2.54	10	상
법집행	8,077	8.9	37.1	44.8	9.2	2.54	11	상
정치활동	8,077	11.4	38.2	42.9	7.5	2.47	15	하
성별에 따른 대우	8,076	4.8	34.6	50.6	10.0	2.66	5	상
언론 보도	8,076	8.4	39.1	44.5	8.1	2.52	13	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8,078	7.5	41.3	43.2	8.0	2.52	14	하
경제사회적인 분배 구조	8,077	7.4	39.8	44.5	8.2	2.53	12	동일
병역 의무 이행	8,078	4.8	30.0	53.5	11.6	2.72	4	상
보건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8,076	1.8	22.9	64.7	10.6	2.84	2	상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나. 주요 영역별 공정성의 인식

주요 영역별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교육기회 영역에 있어서는 40~49세(2.90)가 가장 높게 공정성을 인식한 반면, 30~39세(2.85)는 교육기회에 대한 공정성에 있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평가를 하였다. 취업기회에 있어서는 교육기회와 동일하게 40~49세(2.61)가 가장 높게 공정하다고 본 반면, 30~39세(2.52)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취업기회의 공정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한편, 고용형태에 따른 대우 영역에 있어서는 19~29세(2.55)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공정성에 있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주거의 기회에 있어서는 50~59세(2.54)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공정성 인식 점수가 낮았다. 50~59세가 앞서 교육과 취업기회 영역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공정성에 대해 높게 인식한 반면, 주거에 있어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인식한 것에 있어 이후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영역에 있어서는

12) 평균을 기준으로 높은 평균 순으로 순위를 작성함. 공정한 영역이라고 생각할수록 순위가 높게 나타남.

13) 사회 전반적인 공정성 인식 평균 점수를 기준(2.53)으로, 높은 경우 상, 낮은 경우 하, 동일한 경우 동일로 표기함.

30~39세(2.71)가 가장 낮게 공정성을 인식한 반면, 40~49세(2.82)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 밖에도 과제 및 납세 영역에서는 50대(2.67)와 60대 이상(2.65)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공정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균형발전 영역에 있어서는 60세 이상(2.57)은 공정성을 높게 인식한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평균이하의 점수를 매겨 지역균형발전 영역에 있어 공정성 인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법집행 영역에 있어서는 19~29세(2.47), 30~39세(2.52)으로 평균(2.54)보다 낮은 인식 정도를 보여주었다. 정치활동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전체 평균이 낮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50~59세(2.42)가 가장 낮게 공정성을 인식한 것은 다른 영역과 비교할 때 특이점으로 꼽을 수 있다.

언론보도 영역에 있어서는 30~39세(2.46)으로 전체 평균(2.52)보다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영역에 있어서는 30~39세(2.46)가 평균(2.52)보다 공정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영역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영역에 따라 공정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것과 더불어 연령대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연령에 비해서 30~39세의 경우 우리 사회 전반 뿐 아니라 영역별 공정 인식에 있어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년의 자립을 이행하는 시기가 20대에서 30대로 이동함에 따라 취업, 주거마련 등 경제적으로 자립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험 등이 공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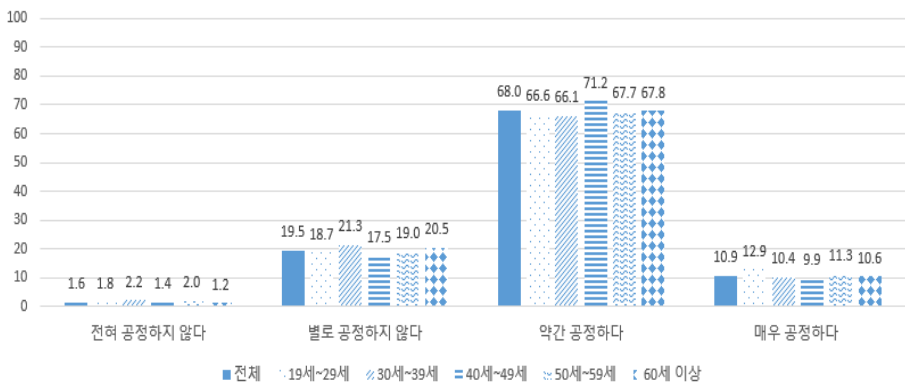
표 III-5. 교육기회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단위: %, 점

구분	사례수(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4점)
전체	8,076	1.6	19.5	68.0	10.9	2.88
19~29세	1,327	1.8	18.7	66.6	12.9	2.91
30~39세	1,245	2.2	21.3	66.1	10.4	2.85
40~49세	1,511	1.4	17.5	71.2	9.9	2.90
50~59세	1,597	2.0	19.0	67.7	11.3	2.88
60세 이상	2,396	1.2	20.5	67.8	10.6	2.88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단위: %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그림 Ⅲ-2. 교육기회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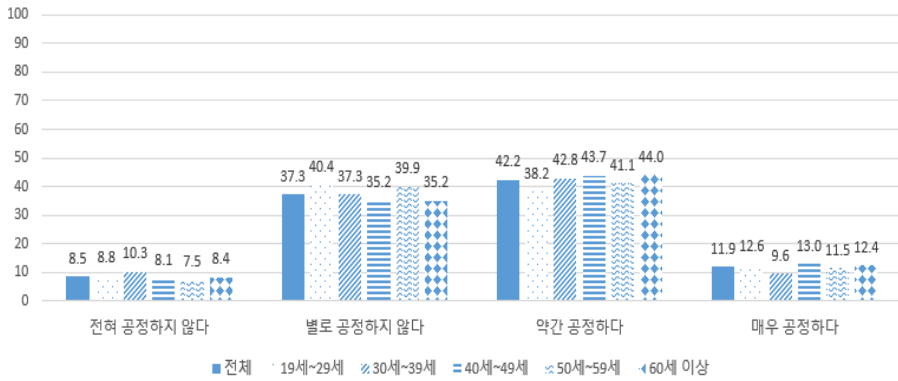
표 Ⅲ-6. 취업기회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단위: %, 점

구분	사례수(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4점)
전체	8,077	8.5	37.3	42.2	11.9	2.58
19~29세	1,327	8.8	40.4	38.2	12.6	2.55
30~39세	1,245	10.3	37.3	42.8	9.6	2.52
40~49세	1,510	8.1	35.2	43.7	13.0	2.61
50~59세	1,597	7.5	39.9	41.1	11.5	2.57
60세 이상	2,398	8.4	35.2	44.0	12.4	2.60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단위: %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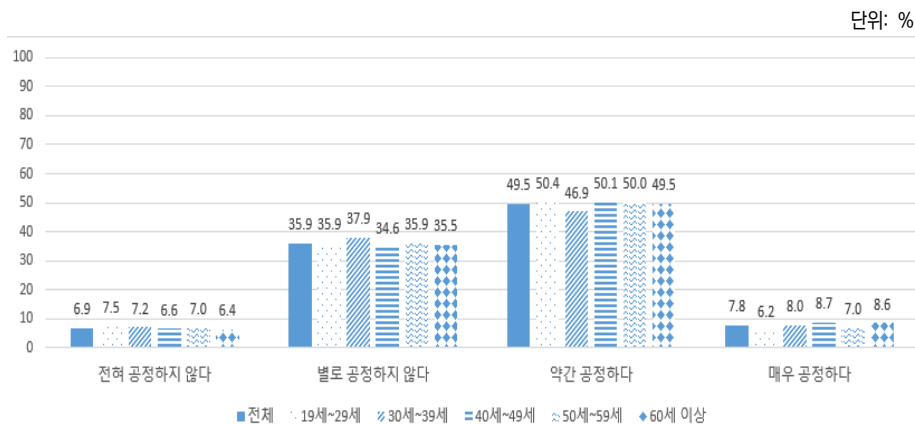
그림 III-3. 취업기회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표 III-7. 고용형태에 따른 대우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단위: %, 점

구분	사례수(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4점)
전체	8,078	6.9	35.9	49.5	7.8	2.58
19~29세	1,327	7.5	35.9	50.4	6.2	2.55
30~39세	1,245	7.2	37.9	46.9	8.0	2.56
40~49세	1,511	6.6	34.6	50.1	8.7	2.61
50~59세	1,597	7.0	35.9	50.0	7.0	2.57
60세 이상	2,398	6.4	35.5	49.5	8.6	2.60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그림 III-4. 고용형태에 따른 대우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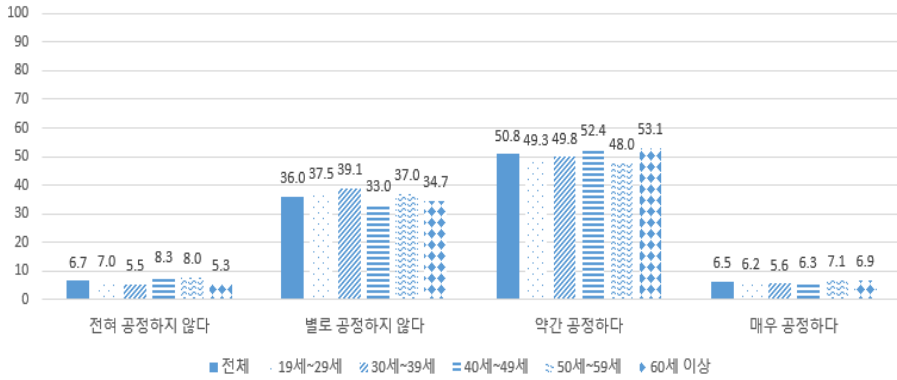
표 III-8. 주거의 기회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단위: %, 점

구분	사례수(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4점)
전체	8,077	6.7	36.0	50.8	6.5	2.57
19~29세	1,327	7.0	37.5	49.3	6.2	2.55
30~39세	1,246	5.5	39.1	49.8	5.6	2.55
40~49세	1,510	8.3	33.0	52.4	6.3	2.57
50~59세	1,597	8.0	37.0	48.0	7.1	2.54
60세 이상	2,397	5.3	34.7	53.1	6.9	2.62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단위: %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그림 III-5. 주거의 기회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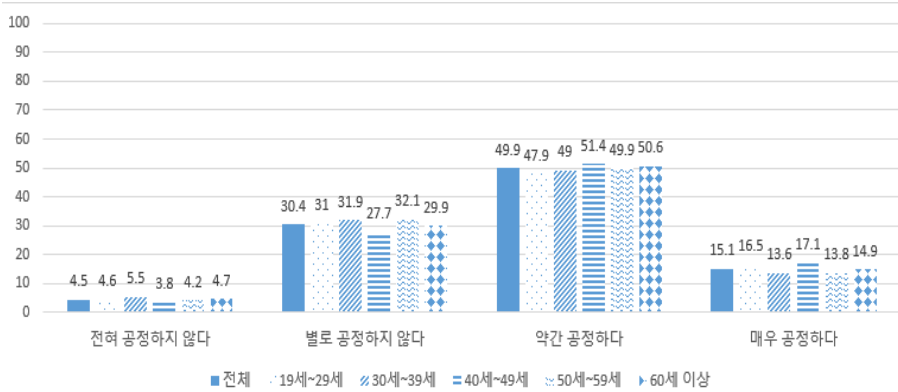
표 III-9.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단위: %, 점

구분	사례수(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4점)
전체	8,078	4.5	30.4	49.9	15.1	2.76
19~29세	1,328	4.6	31.0	47.9	16.5	2.76
30~39세	1,246	5.5	31.9	49.0	13.6	2.71
40~49세	1,511	3.8	27.7	51.4	17.1	2.82
50~59세	1,596	4.2	32.1	49.9	13.8	2.73
60세 이상	2,397	4.7	29.9	50.6	14.9	2.76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단위: %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그림 III-6.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표 III-10. 과제 및 납세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단위: %, 점

구분	사례수(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4점)
전체	8,074	6.0	36.7	44.8	12.5	2.64
19~29세	1,327	5.4	38.4	43.6	12.5	2.63
30~39세	1,245	6.3	37.3	44.4	11.9	2.62
40~49세	1,511	6.5	38.0	42.9	12.6	2.62
50~59세	1,595	5.8	34.7	46.5	13.0	2.67
60세 이상	2,396	5.9	35.9	45.7	12.5	2.65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표 III-11. 지역균형발전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단위: %, 점

구분	사례수(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4점)
전체	8,077	5.8	42.4	44.2	7.6	2.54
19~29세	1,327	5.1	43.4	44.9	6.6	2.53
30~39세	1,245	8.1	42.0	41.8	8.1	2.50
40~49세	1,511	5.5	43.0	44.0	7.5	2.53
50~59세	1,597	5.9	43.5	42.9	7.7	2.52
60세 이상	2,397	5.0	40.8	46.2	8.0	2.57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표 III-12. 법집행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단위: %, 점

구분	사례수(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4점)
전체	8,077	8.9	37.1	44.8	9.2	2.54
19~29세	1,328	8.7	42.1	42.1	7.1	2.47
30~39세	1,245	10.2	37.4	42.5	9.9	2.52
40~49세	1,510	7.7	37.0	47.2	8.0	2.56
50~59세	1,597	9.6	36.7	43.1	10.6	2.55
60세 이상	2,397	8.5	34.3	47.2	9.9	2.59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표 III-13. 정치활동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단위: %, 점

구분	사례수(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4점)
전체	8,077	11.4	38.2	42.9	7.5	2.47
19~29세	1,327	10.6	40.8	41.6	7.1	2.45
30~39세	1,246	12.2	38.5	42.1	7.1	2.44
40~49세	1,511	11.4	36.0	42.8	9.9	2.51
50~59세	1,596	12.7	39.1	41.8	6.5	2.42
60세 이상	2,397	10.6	37.3	44.9	7.2	2.49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표 III-14. 언론 보도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단위: %, 점

구분	사례수(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4점)
전체	8,076	8.4	39.1	44.5	8.1	2.52
19~29세	1,326	6.9	41.0	44.3	7.8	2.53
30~39세	1,245	11.0	39.9	40.9	8.2	2.46
40~49세	1,511	7.7	41.1	43.1	8.1	2.51
50~59세	1,598	8.6	38.4	45.6	7.4	2.52
60세 이상	2,396	8.1	36.7	46.5	8.7	2.56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표 III-15.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단위: %, 점

구분	사례수(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4점)
전체	8,078	7.5	41.3	43.2	8.0	2.52
19~29세	1,328	8.4	41.6	41.3	8.7	2.50
30~39세	1,245	9.3	43.4	38.9	8.4	2.46
40~49세	1,511	7.6	42.2	42.6	7.6	2.50
50~59세	1,597	6.3	41.1	44.7	7.9	2.54
60세 이상	2,397	6.9	39.8	45.8	7.6	2.54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표 III-16.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영역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

단위: %, 점

구분	사례수(명)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4점)
전체	8,077	7.4	39.8	44.5	8.2	2.53
19~29세	1,327	6.9	42.5	42.3	8.3	2.52
30~39세	1,246	8.8	40.6	43.7	6.8	2.49
40~49세	1,511	7.8	38.2	46.7	7.3	2.53
50~59세	1,596	6.6	40.4	43.4	9.6	2.56
60세 이상	2,397	7.4	38.6	45.6	8.5	2.55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4)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취업기회보장(3.99)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그 외 고등교육기회확대(3.92)와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3.92)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III-17.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단위: %, 점

방안	사례수(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5점)
고등교육 기회 확대	8,077	0.8	4.7	21.7	47.0	25.8	3.92
취업기회 보장	8,078	0.7	4.5	20.1	44.8	29.9	3.99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8,078	0.7	4.2	23.5	45.1	26.5	3.92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나. 영역별·연령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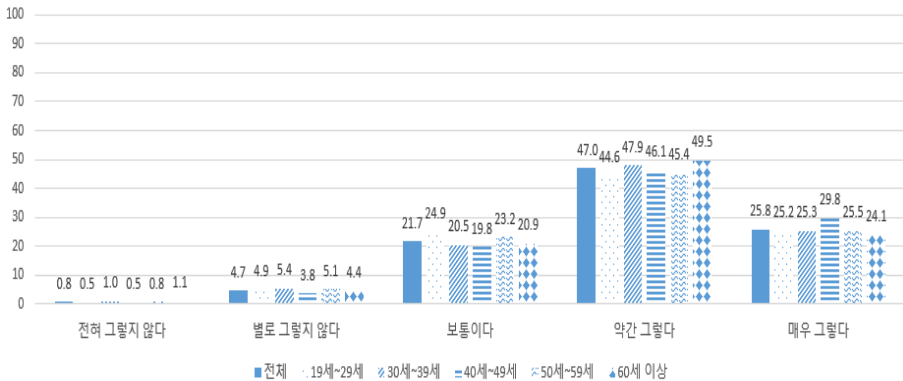
영역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고등교육기회 확대에 대해서는 40~49세(4.01)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19~29세(3.89)가 가장 낮은 인식을 보였다. 취업기회 보장에 있어서도 40~49세(4.04)로 필요성을 높게 강조한 반면, 50~60대(3.96)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였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도 40~49세(3.96)는 그 필요성을 높게 제기하였지만 60세이상(3.90)과 19~29세(3.91)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다.

표 Ⅲ-18.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구분	사례수(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
전체	8,077	0.8	4.7	21.7	47.0	25.8	3.92
19~29세	1,327	0.5	4.9	24.9	44.6	25.2	3.89
30~39세	1,245	1.0	5.4	20.5	47.9	25.3	3.91
40~49세	1,511	0.5	3.8	19.8	46.1	29.8	4.01
50~59세	1,597	0.8	5.1	23.2	45.4	25.5	3.90
60세 이상	2,397	1.1	4.4	20.9	49.5	24.1	3.91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그림 Ⅲ-7.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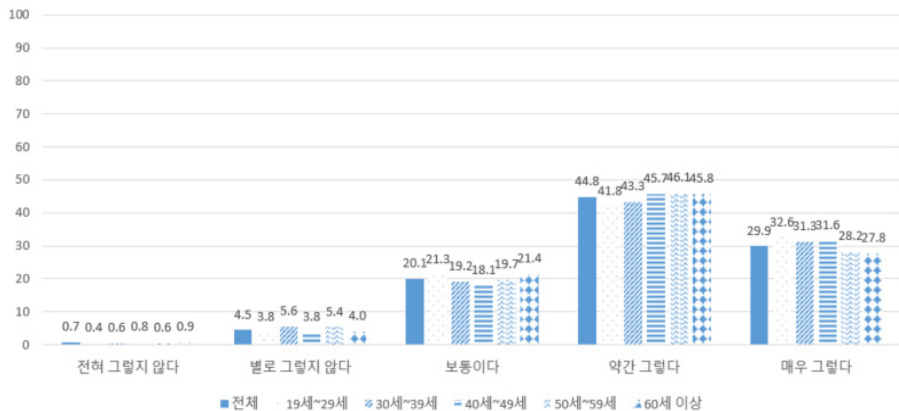
표 Ⅲ-19.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취업기회 보장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구분	사례수(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
전체	8,078	0.7	4.5	20.1	44.8	29.9	3.99
19~29세	1,327	0.4	3.8	21.3	41.8	32.6	4.03
30~39세	1,246	0.6	5.6	19.2	43.3	31.3	3.99
40세~49세	1,511	0.8	3.8	18.1	45.7	31.6	4.04
50세~59세	1,597	0.6	5.4	19.7	46.1	28.2	3.96
60세 이상	2,397	0.9	4.0	21.4	45.8	27.8	3.96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단위: %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그림 Ⅲ-8.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취업기회 보장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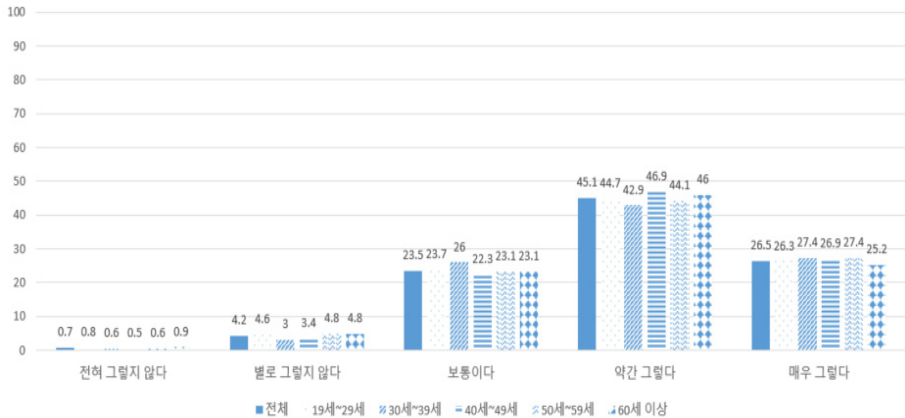
표 III-20.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구분	사례수(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5점)
전체	8,078	0.7	4.2	23.5	45.1	26.5	3.92
19세~29세	1,328	0.8	4.6	23.7	44.7	26.3	3.91
30세~39세	1,246	0.6	3.0	26.0	42.9	27.4	3.94
40세~49세	1,511	0.5	3.4	22.3	46.9	26.9	3.96
50세~59세	1,596	0.6	4.8	23.1	44.1	27.4	3.93
60세 이상	2,397	0.9	4.8	23.1	46.0	25.2	3.90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단위: %



* 자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그림 III-9.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한 인식

2.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청년정책과 공정

1) 연구개요

(1) 분석의 목표

언론은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여러 측면 중 특정한 측면을 선택, 강조 또는 배제함으로써 현실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Scheufele, 1999). 이러한 언론의 재구성은 사회 구성원들이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Entman, 1993). 이 연구에서는 한국 언론이 한국 사회의 청년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의 틀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언론이 한국 사회에 청년과 공정 이슈에 대해 제시하는 프레임이 무엇이며, 이러한 프레임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한국 주요 일간지의 사설을 분석했다. 신문 사설은 언론사가 독자에게 적극적으로 자사의 관점을 제시하는 수단으로, 다른 매체와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논조와 가치관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동완, 이창현, 2022). 따라서 사설 분석을 통해 각 언론사들의 해당 이슈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해당 이슈가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청년 이슈를 둘러싼 각 언론사들의 사설을 분석함으로써 청년 이슈에 대해 언론사가 취하고 있는 관점과 청년 이슈에 대해 사회에서 담론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컴퓨테이셔널한 분석 방법을 사용해 대규모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텍스트 분석의 경우 과거에는 분석 유목을 설정하고, 교육받은 코더가 텍스트를 읽으며 분류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 경우, 1) 분석에 코더나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어 타당성이 떨어지고, 2) 분석 유목을 미리 지정함으로써 이전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프레임이 도출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또, 인간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의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는 효율적이지 않다. 이 연구는 컴퓨테이셔널한 연구방법인 토픽 모델링과 의미 연결망 분석을 활용해 휴먼 코더를 사용한 텍스트 분석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있는 정부부처의 보도자료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보도자료 분석을 통해 정부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해당 가치가 어떤 메시지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언론사는 정부부처가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취재를 하고, 이에 언론사와 기자의 관점, 추가 정보 등을 더해 기사로 만든다. 언론사가 제시하는 정부, 정책 관련 담론들의 시작이 보도자료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보도자료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정부부처가 청년과 관련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구성해 전달하고자 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각 정부부처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내재된 지향성을 탐구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2) 선행연구

한 사회의 중요한 이슈나 의제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신문 사설을 분석해왔다. 사설 분석은 주로 담론 분석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곽영신과 류용재 (2021)는 2017년부터 5년간 한국의 주요 일간지 10곳에서 게재된 사설 중 “청년 + 공정” 키워드로 검색된 129건의 사설을 비판적 담론 분석 방식으로 분석했다. 담론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공정 담론이 각 계층 및 집단의 이익과 목표, 의제에 따라 그 의미가 왜곡되고 있는 양상을 바탕으로, 공정이 고정되거나 평면적인 개념이 아닌 복잡성과 다원성을 지닌 개념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또한, 손영준과 홍주현 (2019)의 연구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북중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열린 2018년 4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4개월여 동안 진보 매체인 경향신문, 한겨레와 보수 매체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설을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해 비교했다. 이지영 (2019)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육정책 관련 신문 사설을 비판적 담론 분석을 시행하여 보육정책 담론의 담론 수행에는 시기에 따라 주요 담론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담론은 담론 생산자에게 유리한 담론을 부각해 사회의 지배적 담론에 대한 지지와 대항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보육정책 담론은 시기에 따라 특징적인 사회·문화적 맥락과 상호 작용하여 공고화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토픽 모델링을 접목해 신문 사설의 프레임을 분석하기도 한다. 김원섭, 남윤철, 신종화 (2015)의 연구에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 보도한 사설을 분석해 한국 언론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입장을 파악했다. 해당 언론사에서 보도한 기업관 관련 사설 2년치를 담론 분석 및 토픽 모델링 방식으로 분석해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 기업에 대해 명확하게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박승정, 전진오, 김선우, 김성태(2017)의 연구에

서는 박근혜 정부 4년간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사설을 토픽 모델링으로 분석해 이슈 소유권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조선일보는 국회, 정당, 복핵, 경제, 지명직 인사 등과 관련해서 점유율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정치, 경제 및 복핵 관련 공안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반면 한겨레는 우리 사회의 주요 정치, 사회, 경제 부문의 문제가 있는 상황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새로운 토픽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도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이처럼 공적 이슈를 다루고 있는 언론 사설을 분석함으로써 언론이 해당 이슈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구성하는지 고찰할 수 있다. 언론이 어떠한 지점에 대해 강조하고, 이야기 구성 방식은 어떠한지, 사안을 바라보는 틀이 어떠한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이슈가 이 사회에서 논의되는 방식에 대해 탐색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참고해 “청년” 관련 이슈가 언론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공중에게 전달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2) 언론사 사설 분석

(1) 데이터 수집

2013년 1월 1일~2023년 8월 31일 기간 동안 국내 주요 언론사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사설 중 “청년”을 키워드로 한 사설 기사를 수집했다.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빅카인즈 서비스를 이용해 5개 주요 언론사의 ‘청년’ 관련 사설 웹페이지 주소 리스트를 구축한 후, 각 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끌어오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2018년 이전의 사설은 빅카인즈에 제공하고 있지 않아 별도로 조선일보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추가 수집했다. 해당 기간 동안 게재된 총 1,822건의 사설을 수집했다. 조선일보가 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이 각각 384건, 327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래 <표 III-21>은 연도별 각 언론사가 보도한 청년 관련 사설 수이다. 전체적으로 2015년에 가장 많은 청년 관련 사설이 작성되었고, 조선일보는 2021년 100건의 청년 관련 사설을 게재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표 III-21. 연도별 언론사 보도 청년 관련 사설 수

단위: 건

언론사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경향신문	11	7	46	53	31	30	35	31	20	37	26	327
동아일보	20	5	49	43	41	42	30	24	62	42	26	384
조선일보	21	19	62	50	41	63	61	50	100	61	44	572
중앙일보	17	9	49	35	33	37	24	24	21	17	19	285
한겨레	3	8	44	14	33	29	28	24	28	30	13	254
합계	72	48	250	195	179	201	178	153	231	187	128	1822

(2) 연구방법

가. 데이터 전처리

신문기사와 같은 텍스트 데이터는 분석을 위한 전처리 작업이 필요하다. 전처리 작업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문서를 단어 단위로 토큰화(tokenization)한다. 한글의 경우 형태소 단위의 토큰화 작업이 필요하다. 형태소 단위로 단어를 자른 후 명사 단어만을 추출했다.

이후, 토큰화된 텍스트 중 불필요한 텍스트를 삭제하는 정제화 작업을 했다. 정제화 작업에서 먼저 단어들 중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조사나 의존명사, 숫자, 구두점 등을 삭제했다. 마지막으로 정규화 작업을 통해 불규칙하게 활용된 단어를 어근을 중심으로 통일시키고, 띄어쓰기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불규칙한 단어들의 형식을 통일한다. 이후 전처리가 끝난 텍스트 데이터를 문서와 단어의 조합으로 구성된 행렬인 DTM(Document-Term Matrix)로 구성한다. DTM을 살펴본 후 희소 단어를 삭제하거나 추가 정제 작업을 진행했다.

나. 데이터 분석전략

가) 토픽 모델링

이 연구는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청년 이슈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시각을 탐구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 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토픽 모델링은 대규모의 비정형 텍스트 문서에서 의미 있는 주제(topic)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이다(Blei, Ng, & Jordan, 2003). 토픽 모델

링은 문서 단어 행렬인 DTM을 바탕으로 문서에 잠재해 있는 주제들의 등장 확률을 추정한다(백영민, 2017). 토픽 모델링에서는 문서를 단어의 집합(bag-of-word)으로 정의하고, 각 단어가 어떠한 문서에 나타날 확률은 해당 문서가 잠재하고 있는 주제에 기반한다. 특정한 단어들이 문서에서 함께 등장하는 확률을 바탕으로 해당 문서가 어떠한 주제를 어느 정도의 확률로 잠재하고 있는지 추정하는 것이다 (Blei, Ng, & Jordan, 2003; 백영민 2017). 예를 들어, 우리는 부동산 관련 문서에서는 아파트, 집값, 전세 등의 단어가 함께 자주 등장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만약 어떠한 뉴스 기사에 아파트, 집값, 전세의 단어가 함께 등장한다면 그 기사는 높은 확률로 부동산이라는 주제를 잠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토픽 모델링의 여러 기법 중 구조적 토픽 모델링(Structural Topic Modeling, STM)을 활용해서 청년 이슈 관련 사설을 분석했다. STM은 가장 먼저 개발된 토픽 모델링 기법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에서 문서 단위의 특징이 주제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법이다 (Roberts, Stewart, & Tingley, 2019). STM은 문서 내 단어의 동시 출현 비율에 기반해 잠재된 주제의 분포를 추정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도출된 주제(토픽)들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하고, 문서의 저자나 시기 등의 문서가 가지는 요인들이 주제의 분포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Roberts et al., 2019). STM을 사용해서 분석할 경우, 문서 데이터가 가지는 요인에 따른 주제의 분포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문에 따른 특정 주제의 발현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STM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1) 10년간 한국 주요 일간지들의 사설은 어떠한 주제들을 통해 청년 이슈를 논의해왔는지 확인하고, 2) 사설에서 도출된 청년 이슈의 각 주제들이 시기별, 언론사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각 언론사가 시기에 따라 어떠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청년 이슈 어젠다를 제시해왔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시기별 주제의 분포 변화는 청년 관련해서 주요 사건 사고, 또는 정책 입안 등이 일어난 시점과 연결해 분석할 수 있다.

나) 의미 연결망 분석

의미 연결망 분석은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의 방법을 텍스트 분석에 차용한 것이다.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의 각 노드를 단어로 치환하고, 단어 간의

동시 출현 빈도를 활용해 연결망을 그리고, 이를 통해 텍스트들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이다(권호천, 2017; 차민경, 권상희, 2015). 특정 단어들이 공동으로 자주 등장한다면, 이를 연결하고 그 연결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귀납적으로 의미를 추론하는 분석 방법이다(권호천, 2017). 또, 의미 연결망 분석은 중심성을 계산해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 단어가 가지는 역할과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권호천, 2017).

이 연구에서는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해 사설에서 나오는 단어들의 연결망을 그리고 그 연결 패턴을 파악해 이슈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고, 그 주제가 어떠한 단어들로 연결되어 담론을 이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의미 연결망 분석과 토픽 모델링 분석을 함께 결합하여, 토픽 모델링에서 도출된 주제별로 각 주제가 어떤 단어들로 구성되어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토픽 모델링에서 추출된 각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설이 가지는 의미 구조와 이것이 잠재하고 있는 주제를 더욱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3) 토픽 모델링 연구결과

가. 토픽 수 결정

토픽 모델링 분석에서는 토픽의 수를 연구자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토픽 수를 너무 적거나 많이 설정할 경우 토픽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개별 토픽의 특징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토픽을 정의하기 어려워진다. 적절한 토픽의 수는 다양한 토픽의 수를 설정한 다수의 모델을 실행한 후, 각 모델의 Exclusivity, Held-out likelihood, Lower bound, Residuals, Semantic coherence 등 진단 척도 값을 비교해 결정한다. Exclusivity, Held-out likelihood, Semantic coherence는 높을수록 좋은 모형, Lower bound, Residuals는 낮을수록 좋은 모형이다. 아래 그림 【그림 III-10】은 토픽의 수를 2에서 50까지 2단위로 증가하며 토픽 모델링을 실시했을 때 각 모형의 적절성을 진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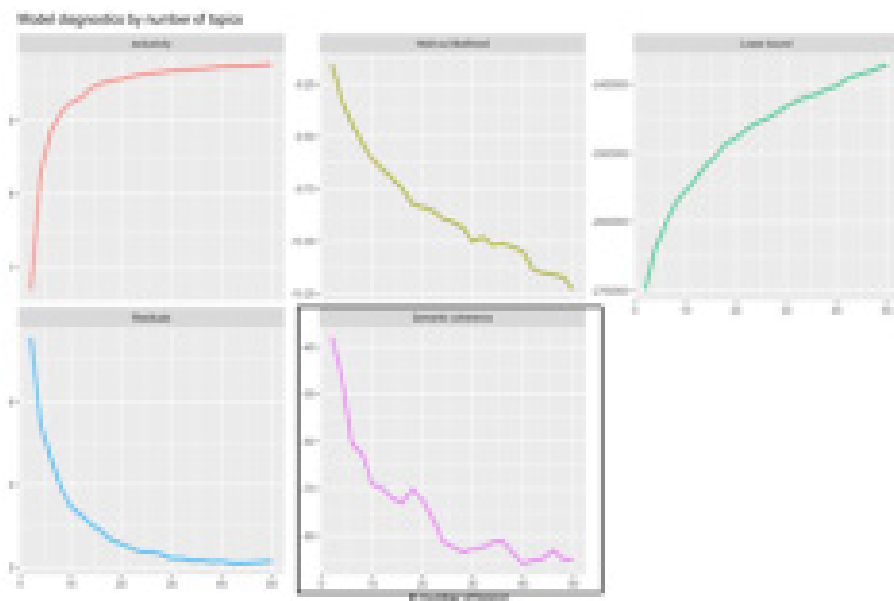


그림 III-10. 토픽 모델링에 따른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검증 결과, Semantic coherence를 제외하고는 토픽 결정에 필요한 정보 값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Semantic coherence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8개의 토픽에서 상승하는 패턴이 관찰되기 때문에 18개 토픽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나. 토픽의 구성

STM의 분석 결과 도출된 18개의 토픽은 다음 <표 III-22>와 같다. 각 토픽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단어를 바탕으로 토픽의 이름을 부여했다. 주요 단어는 Highest Prob 값과 FREX 값을 기준으로 상위 20개의 단어를 제시했다. Highest Prob 값은 특정 토픽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은 단어를 뜻한다. FREX 값이 높은 단어는 특정 토픽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으면서, 다른 토픽과 해당 토픽을 구분할 수 있는 단어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청년”은 모든 토픽에서 Highest Prob 값이 높을 수 있지만 FREX 값은 높지 않을 것이다. 모든 토픽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정 토픽을 다른 토픽과 구분하는 역할을 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토픽별로 대표 단어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I-22>와 같다.

첫 번째 토픽인 ‘청년과 정치’는 대표, 정치, 청년, 정당, 의원, 진보정당, 세대교체, 비례대표, 공천, 최고위원 등을 주요 단어로 가지고 있는 정치 관련 토픽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토픽을 높은 비율로 가지고 있는 기사들은 아래와 같다. 청년 정치인의 등장과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주요 발언 등에 대한 주제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구직과 취업’ 토픽은 청년, 일자리, 취업, 고용, 구직, 농업, 취업, 창업, 구직자 등을 주요 단어로 가지고 있다. 청년의 일자리와 취업에 대한 주제로 추측할 수 있다. 주요 기사들을 살펴보면, 청년 고용장려금 관련 사설(“[사설] 정부가 줄 돈 제때 못 주는 ‘재정 부도’, 기업부도보다 더 심각”), 청년 실업률 관련 사설(“[사설] 日 대졸자 취업을 97%, ‘고용 참사’ 靑은 자화자찬”) 등이 이 주제를 담고 있다.

세 번째 ‘주택정책’에서는 주택, 정부, 청년, 부동산, 집값, 세입자, 임대차, 다주택자, 분양 등 주택과 관련한 주제를 담고 있다. 청년의 전세사기, 주거 안정 등과 관련한 기사들이 해당 토픽을 포함한 주요 기사로 나타났다.

이어서 네 번째 ‘임금과 실업률’은 일자리, 고용, 정부, 경제, 취업자, 최저임금, 통계 등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된 주제 중에서도 특히 최저임금과 실업률에 대한 토픽이다. 주요 기사를 살펴보면, 경제 위기로 촉발된 청년의 실업이나 국가 경제지표의 악화와 관련된 사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섯 번째 ‘노동환경과 산업재해’ 토픽의 주요 단어는 노동자, 노동, 안전, 정규, 구의역, 서울 메트로, 컨테이너 등이다. 지난 몇 해 동안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청년의 산재 사건들과 노동환경과 관련한 주제로 볼 수 있으며, 주요 기사들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밖에도 ‘대학과 교육’, ‘채용비리’ 등 청년 이슈와 연계되는 토픽별 주제가 그룹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과 교육’에서는 대학, 교육, 교사, 강사, 학생, 교육청 등으로 단어들이 가리키는 주제는 청년들의 교육과 대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용비리’에서는 채용, 수사, 경찰, 검찰, 조씨, 진술, 건조물, 청탁 등으로 주요 뉴스를 살펴봐도 취업비리, 불공정 채용 등의 이슈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청년을 주제로 한 사설을 기반으로 토픽별 그룹핑을 한 결과 최근 청년 이슈로 등장한 사건들과 긴밀한 연결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22. 18개 토픽별 대표 단어

토픽	토픽 이름	구분	단어
Topic 1	청년과 정치	Highest Prob	대표, 정치, 청년, 정당, 의원, 공천, 총선, 후보, 보수, 선거, 국민의힘, 들이, 민주, 국민, 여성, 사람, 대선, 정의, 비례대표, 이준
		FREX	진보정당, 세대교체, 비례대표, 공천, 최고위원, 이준석, 위성, 당원, 정당, 영입, 전당대회, 당대표, 안씨, 비례대표제, 종진, 더민주, 보수, 경선, 정수, 진보
Topic 2	구직과 취업	Highest Prob	청년, 일자리, 취업, 고용, 정부, 기업, 들이, 지원, 실업률, 채용, 중소기업, 문제, 사회, 대기업, 대책, 구직, 창업, 지난해, 희망, 창출
		FREX	구직, 농업, 취업, 창업, 구직자, 대졸, 펀드, 중소기업, 준비생, 실업률, 박람회, 취업률, 희망, 청년, 취업난, 공채, 자격증, 고용보험, 실업, 귀농
Topic 3	주택정책	Highest Prob	주택, 정부, 청년, 부동산, 집값, 정책, 서울, 공급, 전세, 시장, 아파트, 사업, 대책, 들이, 대출, 임대주택, 가구, 공공, 주거, 시민
		FREX	세입자, 임대차, 다주택자, 분양, 전세금, 집주인, 임대주택, 전세, 아파트, 집값, 주택, 임대, 매물, 강통, 월세, 재개발, 무주택자, 입주자, 누구나집, 분양가
Topic 4	임금과 실업률	Highest Prob	일자리, 고용, 정부, 경제, 최저임금, 소득, 정책, 취업자, 통계, 실업률, 청년, 감소, 성장, 이후, 증가, 인상, 세금, 지난해, 상황, 올해
		FREX	취업자, 최저임금, 통계, 분기, 체감, 감소, 단기, 지표, 자영업, 증가, 연속, 부진, 실업률, 최악, 자영업자, 일자리, 실업자, 수치, 기록, 소득
Topic 5	노동환경, 산업재해	Highest Prob	노동자, 노동, 안전, 정규, 청년, 위험, 죽음, 정부, 들이, 업무, 작업, 산재, 현장, 사회, 사망, 재해, 사고, 기업, 중대, 책임
		FREX	구역역, 서울메트로, 컨테이너, 산재, 김용균씨, 재해, 스크린, 처벌법, 안전, 죽음, 하청업체, 외주, 사고, 이선희씨, 블랙, 노동자, 하청, 작업, 산업재해, 평택항
Topic 6	노동조합	Highest Prob	노조, 정규, 현대, 민노총, 청년, 일자리, 공장, 파업, 전환, 정부, 고용, 채용, 요구, 기득권, 들이, 대기업, 조합원, 노동, 자동차, 회사
		FREX	단체협약, 민노총, 파업, 현대, 노조, 조합원, 노조원, 생산직, 귀족, 서울교통공사, 공장, 인천공항공사, 기아차, 세습, 연봉, 점거, 민노총이, 자동차, 인천공항, 총파업
Topic 7	사회문제	Highest Prob	정부, 가상, 화폐, 북한, 거래, 들이, 한국, 사회, 문제, 청년, 교황, 가족, 피해자, 우리, 미국, 국민, 기업, 인권, 국내, 발표
		FREX	교황, 프란치스코, 화폐, 추방, 가상, 배상, 위안부, 웹미어, 꽃동네, 민가협, 홍콩, 징용, 강제동원, 신부, 종교, 병역, 거래, 가톨릭, 인권, 롯데그룹
Topic 8	대통령 선거	Highest Prob	후보, 공약, 대선, 국민, 이재, 정책, 국민의힘, 청년, 선거, 들이,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주자, 기본, 유권자, 대통령, 문제, 대표, 토론, 지사
		FREX	후보, 공약, 지사, 주자, 이재, 선대, 대선, 토론회, 안철수, 토론, 유권자, 기본, 대선후보, 유력, 여가, 국민의힘, 비전, 총장, 선거운동, 의당
Topic 9	의회와 정치	Highest Prob	국회, 의원, 대표, 민주, 법안, 야당, 처리, 국민, 원내, 여당, 여야, 문제, 청년, 총선, 민생, 정치, 위원장, 통과, 새누리당, 연합
		FREX	원내, 처리, 세비, 법안, 국감, 확정, 본회의, 임시국회, 새정치, 정기국회, 의원, 방지방, 민주, 선거구, 연합, 친박, 상임위, 국회, 새누리당, 테러

토픽	토픽 이름	구분	단어
Topic 10	고용과 청년	Highest Prob	임금, 정규, 고용, 기업, 정부, 청년, 피크, 채용, 정년, 대기업, 일자리, 도입, 근로자, 연장, 공공기관, 노동자, 노동, 들이, 공무원, 공기업
		FREX	피크, 임금, 정년, 시간제, 호봉, 인턴, 임금체계, 인건비, 직무, 공기업, 공공기관, 연장, 근로자, 신규, 도입, 불이익, 공공부문, 통상임금, 제가, 대기업
Topic 11	노사협의	Highest Prob	개혁, 노동, 노사, 정부, 사회, 정규, 대표, 합의, 노동계, 대화, 문제, 노동시장, 청년, 경사, 노위, 논의, 참여, 대타협, 경제, 국회
		FREX	경사, 노위, 대타협, 노사, 공무원연금, 기구, 한국노총, 대화, 노동계, 합의안, 노사정위원회, 민주노총, 합의, 한국노총이, 개혁안, 의결, 개혁, 협상, 타협, 불참
Topic 12	저출산과 고령화	Highest Prob	사회, 청년, 연금, 인구, 문제, 저출산, 노인, 소득, 대책, 정부, 국민연금, 고령화, 국가, 정책, 출산, 경제, 부담, 미래, 감소, 결혼
		FREX	출산율, 저출산, 출산, 고령화, 국민연금, 연금, 빈곤, 결혼, 합계출산율, 노인, 인구, 고령, 노후, 보험료, 육아, 출생, 육아휴직, 연령, 아이, 경제협력개발기구
Topic 13	대한민국	Highest Prob	우리, 미국, 대한, 사회, 세계, 들이, 정부, 시민, 나라, 청년, 촛불, 국민, 평화, 올림픽, 운동, 정치, 역사, 국가, 민주주의, 미국
		FREX	광복, 올림픽, 한복, 임정, 통일, 민족, 장군, 촛불, 창간, 평화, 분단, 독립, 테니스, 우승, 우크라이나, 평창, 민국, 수산, 영웅, 남북
Topic 14	대통령	Highest Prob	대통령, 국민, 정부, 국정, 대통령의, 경제, 청와대, 장관, 정책, 인사, 문제, 문제, 정권, 당선인, 박근혜, 지지율, 야당, 후보자, 개혁, 과제
		FREX	당선인, 대통령의, 국정, 대통령, 인수, 청와대, 후보자, 국정운영, 소통, 임명, 지지율, 취임, 연설, 내각, 당선자, 인사, 청와대가, 개헌, 인선, 청산
Topic 15	대학과 교육	Highest Prob	대학, 교육, 학생, 교사, 문제, 들이, 학교, 정부, 지방, 사회, 필요, 때문, 교수, 인재, 수도권, 과정, 정책, 방안, 등록금, 중앙
		FREX	교사, 강사, 학생, 대학, 교육청, 인문학, 교육, 학교, 학과, 등록금, 학력, 임용, 교원, 수업, 초등학교, 사설, 정원, 탈북자, 지방, 이력서
Topic 16	정부 예산과 재정	Highest Prob	정부, 조원, 예산, 재정, 세금, 추경, 지원, 내년, 국가, 국민, 복지, 부채, 청년, 지급, 올해, 금리, 지원금, 만원, 사업, 편성
		FREX	조원, 부채, 세수, 채무, 편성, 지원금, 금리, 예산, 지출, 재정, 나랏빚, 국제, 추경, 재난, 현금, 선심, 증액, 건전, 살포, 예산안
Topic 17	채용비리	Highest Prob	채용, 수사, 경찰, 검찰, 청년, 의혹, 장관, 사건, 사실, 정권, 조국, 혐의, 감사, 대통령, 의원, 아들, 청탁, 공정, 비리, 정부
		FREX	조씨, 진술, 건조물, 청탁, 중진공, 수사, 검찰, 대자보, 비리, 강원랜드, 혐의, 조국, 감사, 기소, 침입, 아들, 재판, 특혜, 경찰, 조작
Topic 18	경제와 산업	Highest Prob	경제, 기업, 규제, 성장, 한국, 정부, 개혁, 투자, 세계, 우리, 산업, 일자리, 미국, 정책, 노동, 혁신, 해외, 수출, 대기업, 중국
		FREX	규제, 수출, 반도체, 해외, 법인세, 성장률, 글로벌, 저성장, 성장, 스타트, 경쟁력, 투자, 활력, 규제개혁, 무역, 육성, 삼성, 전자, 산업, 잠재

다. 토픽의 분포

분석 기간 동안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주제는 ‘일자리-임금과 실업률’이다. 그다음으로 ‘일자리-구직과 취업’, ‘정부 예산과 재정’, 그리고 ‘주택정책’이 뒤를 이었다. 이것은 해당 기간 동안 경제 관련 주제가 언론에서 주목을 받았음을 나타낸다. 한국의 주요 5대 일간지는 청년과 관련된 문제 중 경제적인 이슈, 특히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를 가장 자주 다루었으며, 일자리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언론이 일자리를 중요한 주제로 다루었기 때문에 뉴스를 접하는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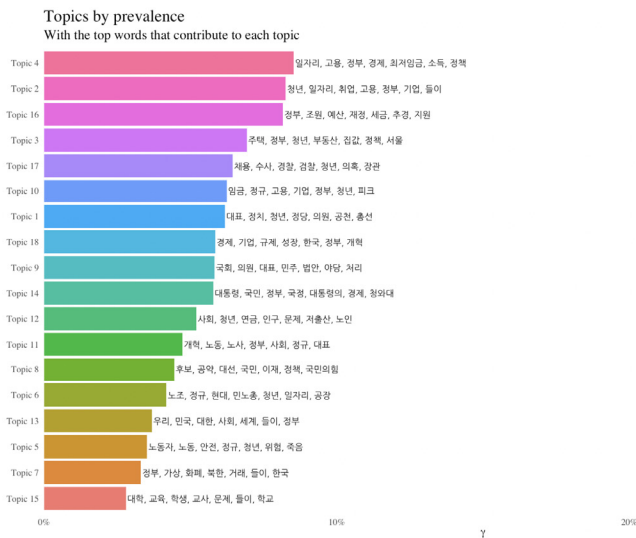


그림 III-11. 토픽 단위 구조적 토픽 모델링(STM) 분석 결과

라. 토픽 간 관계

각 토픽의 주요 단어와 주요 기사들을 살펴보면, 전체 토픽들 중 일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 관련 주제, 정치 관련 주제 등 유사한 주제들로 군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 토픽 모델링(STM) 분석은 토픽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할 수 있어, 상관관계 값을 바탕으로 토픽 간 군집을 그려 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 【그림 III-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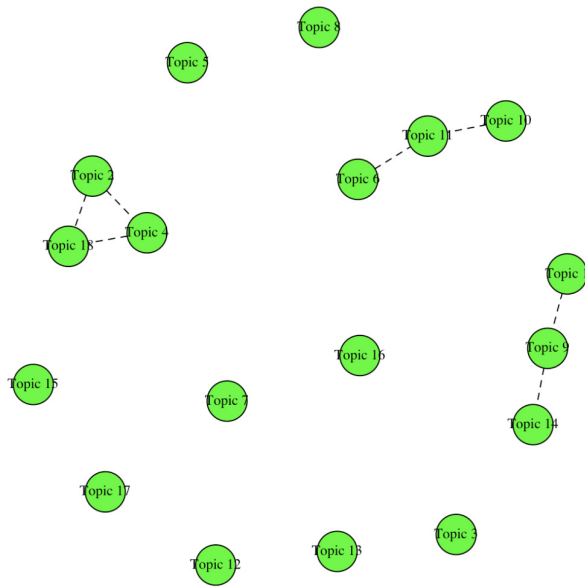


그림 III-12. 토픽 단위 클러스터링 분석 결과

【그림 III-12】를 보면, 총 3개의 클러스터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클러스터는 일자리 중에서도 취업 관련으로 토픽2 ‘구직과 취업’, 토픽4 ‘임금과 실업률’, 토픽18 ‘경제와 산업’이 하나의 군집 형태를 이루었다. 두 번째 또한 일자리 관련 영역으로 토픽6 ‘노동조합’, 토픽10 ‘고용과 정년’, 토픽11 ‘노사협약’로 묶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클러스터가 청년 일자리 중에서도 구직과 취업, 실업에 관한 현황을 중심으로 하는 특징을 지닌다면 두 번째 클러스터는 고용된 청년의 노동권 보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는 취업 형태 등 노동문제와 관련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세 번째 군집은 토픽1 ‘청년정치’, 토픽9 ‘의회정치’, 토픽14 ‘중앙정부와 청년정책’으로 클러스터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최근 청년 정치인의 숫자가 증가하고, 청년들의 중앙정부 위원회 참여 증대, 의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등 청년층에 대한 이슈가 정치체제와 긴밀한 연결성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의미 연결망 분석 결과

토픽 모델링의 결과에서 도출된 각 토픽에서 많이 나타난 주요 단어들을 중심으로 단어들의 의미 연결망을 살펴보았다. 18개의 토픽에서 출현 확률이 가장 높은 순으로 각각 7개의 단어를 뽑아 단어들이 토픽을 중심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았다. 의미 연결망 분석의 결과는 아래 【그림 III-13】과 같다.

시각화된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0년간 5개 주요 일간지 청년 관련 사설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청년”과 “정부”이다.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과 정부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일자리 관련 단어들이 존재하고, 일자리와 맞물려 노동, 정규(직), 고용, 기업과 같은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결망에서도 청년 의제 중 가장 중요한 의제가 일자리와 관련된 주제임을 알 수 있다.

“청년”을 중심으로는 대표, 의원과 같은 단어와 연결되며 정치적인 토픽의 군집을 형성하고 있고, 한편으로 노동자, 위험, 안전, 죽음 등이 산업재해에 대한 토픽으로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청년이 문제와 연결되면 저출산, 노인, 인구와 같은 저출산문제와 교육, 학업, 학생과 같은 교육문제 두 가지로 연결된다. 청년과 관련해서 사설이 언급한 두 가지 문제가 저출산과 교육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를 중심으로는 정책과 경제 두 가지 주요 단어가 연결된다. 정책은 소득, 최저임금 등의 정책과 연결되고, 또 청와대, 대통령, 국민 등과 연결돼 정치 주제의 군집도를 구성하고 있다. 경제는 규제, 성장, 추경 등 정부 재정 및 경제 상황과 같은 군집으로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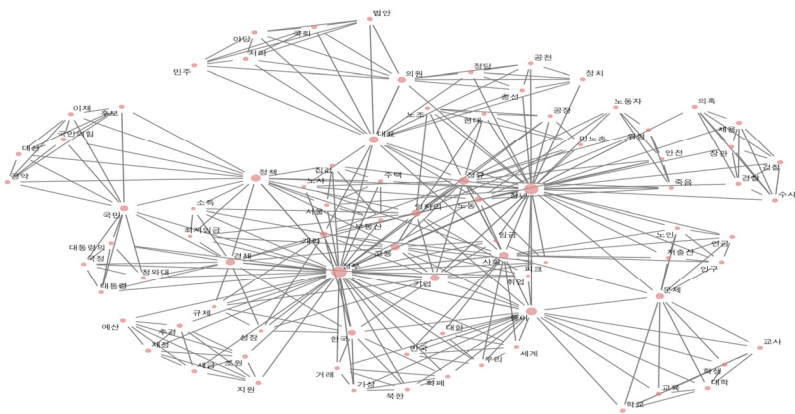


그림 III-13. 주요 신문사 사설 ‘청년’ 키워드 중심 의미 연결망

3) 정부부처 보도자료 분석

(1) 데이터 수집

최근 3개월(2023년 5월 1일~7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무조정실 청년포털,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중 제목 또는 내용에 “청년”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보도자료를 수집했다. 유관 부서에서 ‘청년’ 대상 또는 ‘청년’을 주제로 실행하는 정책, 행사 등 다양한 주제로 보도자료가 수집됐다. 보도자료는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수집했다. 총 592건의 보도자료를 수집했다. 각 부처별로 수집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해당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가 301건으로 가장 많은 보도자료를 발표했고, 뒤를 이어 국토교통부가 120건, 보건복지부가 115건을 발표했다.

표 III-23. 부처별 보도자료 수

단위: 건

부처	보도자료 수
국무조정실 청년포털	37
고용노동부	301
교육부	19
국토교통부	120
보건복지부	115
합계	592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각 부처가 발표한 보도자료 속 등장 단어를 출현 빈도와 tf-idf 값을 산출해 각 부처가 전달하고자 한 주요 청년 의제를 파악하고자 했다. tf-idf 값은 각 단어의 출현 빈도(term frequency)와 역문서 빈도(inversed document frequency)를 곱한 값으로, 단어의 출현 빈도에 각 단어가 출현한 문서 수를 기준값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다. 쉽게 말해 모든 문서에서 동일하게 많이 출현한 단어와 특정 문서에서만 많이 출현한 단어가 있다면, 특정 문서에서만 많이 출현한 단어에 가중치를 더 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검색했기 때문에 모든 문서에 “청년”이 포함될 것이므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청년”일 것이다. 또 영어의 관사와 같이 의미가

없으나 모든 문서에 포함되는 단어들은 빈출하지만 특정한 주제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어보다는 많이 등장하되, 주제를 담고 있는 단어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단어의 등장 빈도와 tf-idf 값을 동시에 고려해 보도자료의 주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보도자료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 가능한 형태의 텍스트로 정리한 후, 토픽 모델링 분석과 유사한 방식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 토큰화하였다. 특수문자, 숫자 등 불용어를 삭제하고, 한글 형태소를 기반으로 문장들을 토큰화한 후, 명사 단어들만을 수집했다. 이렇게 수집된 단어 뭉치를 바탕으로 최빈 단어, tf-idf 상위 단어를 뽑고, 상위 단어를 바탕으로 워드 클라우드와 연결망 그래프를 그렸다.

정부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주요 단어들의 의미 연결망을 그려 단어들의 구조를 파악해보고자 했다. 다음 【그림 III-14】는 전체 보도자료의 의미 연결망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청년을 중심으로 지원이 주요 단어로 연결되어 있다. 청년과 지원은 필요, 확대, 정부, 대상, 다양, 추진, 계획 등의 단어와 밀접하게 연결되며 군집을 이루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특정한 사업이나 정책, 행사 등의 홍보 또는 안내를 위한 보도자료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일자리, 고용, 기업, 취업 등의 단어가 주요하게 연결되며 정부부처들에서도 청년에 대한 주요 의제로 일자리 관련 메시지를 주로 전달해왔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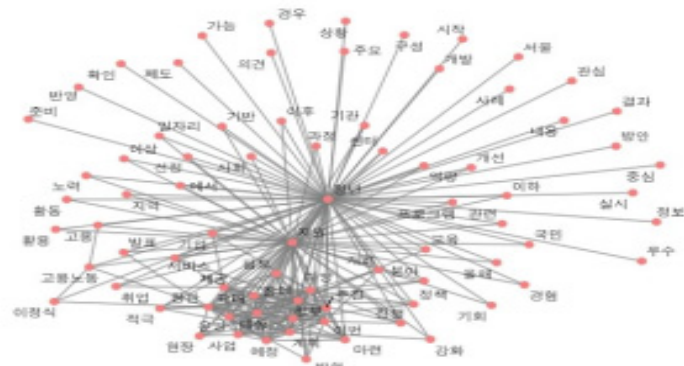


그림 III-14. 3개월(23. 5~23.7) 중앙부처 ‘청년’ 보도자료 의미 연결망

(3) 연구결과

가. 국무조정실 청년포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청년포털)의 주어 단어는 빈도 기준으로는 청년, 정책, 지원, 참여, 정부, 확대 등으로 정부 청년정책을 설명하는 주요 단어로 나타났다. tf-idf 중심으로 보면 인턴, 공작소, 심사, 기업 등이 주요 단어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청년포털의 주요 사업이었던 청년공작소와 주요 취업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보도자료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워드 클라우드 분석과 의미 네트워크 연결망 분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청년참여, 정보, 정책제안 등 청년 대상으로 주요 부처의 청년정책 사업을 소개하는 역할과 동시에 청년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Ⅲ-24.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포털 주요 단어의 빈출 횟수 및 tf-idf

빈출		높은 tf-idf	
단어	빈도	단어	tf-idf
청년	1136	인턴	0.35
정책	340	공작소	0.30
지원	193	심사	0.30
참여	165	기업	0.27
정부	102	제안	0.25
과제	100	검토	0.23
확대	95	주제	0.22
계획	87	과제	0.21
사업	87	연구기관	0.21
경험	84	채용	0.21
다양	74	가구	0.20
예정	72	공모전	0.20
추진	71	지역	0.19
들이	67	보좌역	0.18
진행	67	정책조정위원회	0.18
평가	66	선정	0.17
하기	66	최종	0.16

빈출		높은 tf-idf	
국무	65	평가	0.15
조정실	63	위원	0.15
채용	63	기후	0.15
분야	62	연사	0.14
반영	58	발제	0.14
주거	57	타당성	0.14
인턴	56	경험	0.14
교육	54	사업	0.14
부처	53	만원	0.13
일자리	50	확대	0.13
위원	49	회의	0.13
지역	49	창업	0.13
기업	48	기술	0.12



그림 III -15.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청년포털) 최빈 단어 워드 클라우드

이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청년포털) 보도자료 단어 간 의미 연결망을 분석해 보았다. 청년포털의 경우 청년, 참여, 정책이 주요하게 연결되고, 부처, 정부, 국무, 조정실이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책조정실의 청년포털은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수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기보다는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자주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사용한 단어도 많지 않고, 단어 간의 독특한 연결이나 특수한 단어의 출현도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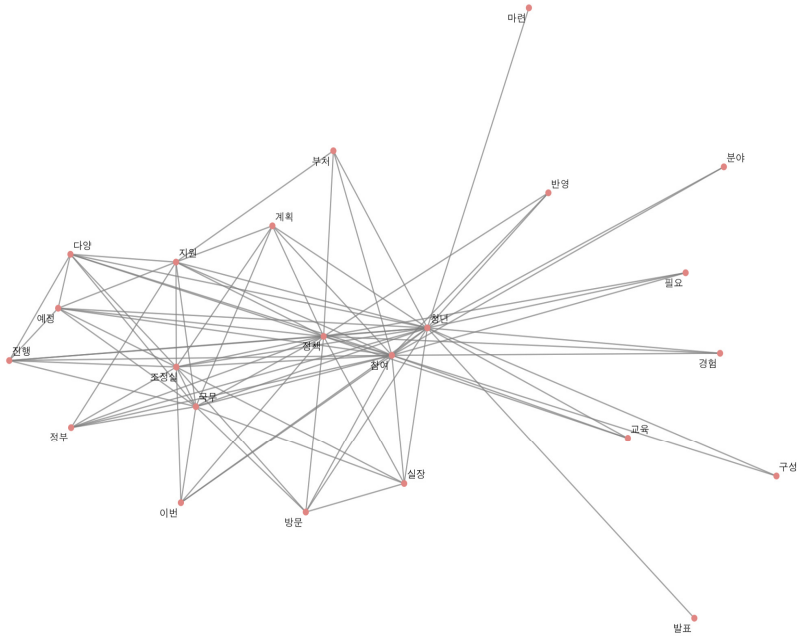


그림 III-16. 국무조정실 청년포털 의미 연결망

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서 관찰된 주요 단어는 청년, 지원, 기업, 취업, 고용, 채용 등으로 나타났다. tf-idf를 통해서 보면 해외취업이 가장 중요한 단어였고, 이 외에 채용, 기업, 공단, 취업의 순으로 중요했다. 고용노동부가 해외취업 및 취업 관련 주제를 보도자료로 자주 배포했음을 알 수 있다. 부처 성격상 채용과 취업, 특히 해외취업 관련 메시지를 주로 배포했다.

표 III-25. 고용노동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주요 단어의 빈출 횟수 및 tf-idf

빈출		높은 tf-idf	
단어	횟수	단어	tf-idf
청년	2089	해외취업	2.34
지원	1629	채용	2.18
기업	1134	기업	1.96
취업	1082	공단	1.74
고용	1056	취업	1.63
채용	811	일자리	1.59
일자리	745	사회적기업	1.59
참여	670	디지털	1.57
고용노동	612	경험	1.44
서비스	597	고용	1.35
제공	559	근로자	1.35
사업	553	근로시간	1.33
경험	471	프로그램	1.30
운영	455	서비스	1.28
프로그램	435	지원	1.27
확대	417	사업	1.25
현장	409	구직자	1.24
센터	387	센터	1.21
다양	385	직업	1.20
정부	382	공정	1.18
분야	372	취업자	1.18
계획	357	면접	1.18
직업	350	참여	1.16
교육	345	국민	1.11
선정	331	기사	1.11
역량	328	노동	1.10
장관	327	임금	1.09
구직자	326	훈련	1.08
산업	323	선정	1.08
디지털	315	산업	1.07



그림 III-17. 고용노동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최빈 단어 워드 클라우드

다음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과 지원, 고용노동, 고용, 제공, 취업, 기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군집을 이루고 있다. 부처의 주요 사업은 고용과 관련된 것이고 청년 관련해서도 고용과 채용 관련 메시지를 가장 많이 전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이정식 장관의 행보와 관련된 보도자료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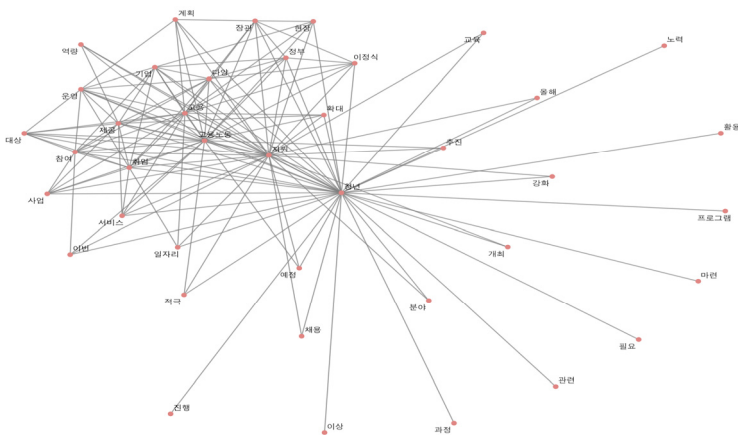


그림 III-18. 고용노동부 청년정책 의미 연결망

다. 교육부

빈출 단어를 통해 살펴보면 교육부는 청년보다 교육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 이 외에도 지원, 창업, 대학, 학생 등 교육과 관련된 일반적인 단어와 취업에 대한 단어가 많이 관찰됐다. tf-idf 값을 기준으로 보면 창업, 청소년, 청년, 자문단 등의 단어가 중요 단어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교육부에서는 청년과 관련해서 창업과 관련된 어젠다를 많이 제기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 교육과 청년이 가장 중심에 중요한 단어로 나타난 가운데 지원, 창업, 대학의 단어가 크게 나타나 있다.

표 III-26. 교육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주요 단어의 빈출 횟수 및 tf-idf

빈출		높은 tf-idf	
단어	횟수	단어	tf-idf
교육	143	창업	0.30
청년	103	청소년	0.25
지원	76	청년	0.19
창업	61	자문단	0.18
대학	58	평화	0.16
학생	55	유네스코	0.16
정책	44	대출	0.15
취업	38	예산	0.15
예정	37	기숙사	0.14
청소년	34	정책	0.14
대학생	31	금융권	0.14
지역	31	결선	0.14
취업률	30	평균	0.14
분야	29	모니터	0.14
대비	28	포럼	0.13
졸업자	28	창업가	0.13
들이	27	채용	0.13
참여	27	교육개혁	0.12
대출	26	정신	0.12
사회	26	미래교육	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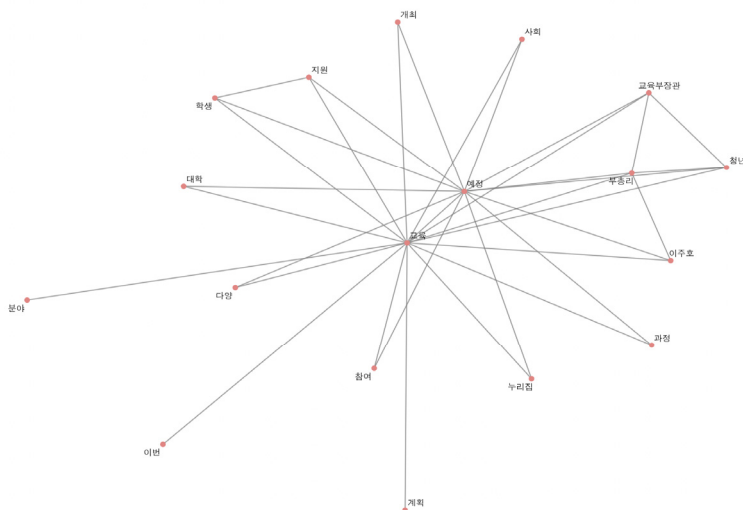


그림 III-20. 교육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의미 연결망

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도 가장 많이 관찰된 단어는 청년이고, 그다음으로 국토, 지원, 교통, 주택 등이 자주 출현하는 단어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중심으로 다루는 주제 관련 단어들이 자주 관찰됐다. tf-idf 값을 기준으로는 기업, 정책, 공급, 청약, 전세 등이 주요 단어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의 주거정책과 관련된 주제들을 보도자료로 많이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27. 국토교통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주요 단어의 빈출 횟수 및 tf-idf

빈출		높은 tf-idf	
단어	횟수	단어	tf-idf
청년	795	기업	0.87
국토	559	정책	0.68
지원	556	공급	0.66
교통	504	청약	0.63
주택	431	전세	0.63

빈출		높은 tf-idf	
공급	343	신혼	0.63
사업	335	철도	0.62
계획	316	매입	0.61
주거	268	부부	0.61
장관	253	주택	0.61
관리	245	사업	0.54
추진	238	지구	0.54
예정	232	임대주택	0.52
정책	232	안전	0.51
지역	228	지역	0.49
기업	217	국민	0.49
확대	217	관리	0.48
마련	214	항공	0.46
국민	195	새싹	0.45
도시	180	모집	0.44
전세	179	주거	0.44
안전	174	공사	0.44
개선	169	활동	0.43
공공	167	입주자	0.42
다양	162	도시	0.42
분야	161	한국	0.42
참여	160	가구	0.41
하기	158	디지털	0.41
가구	150	채용	0.41
이번	148	분야	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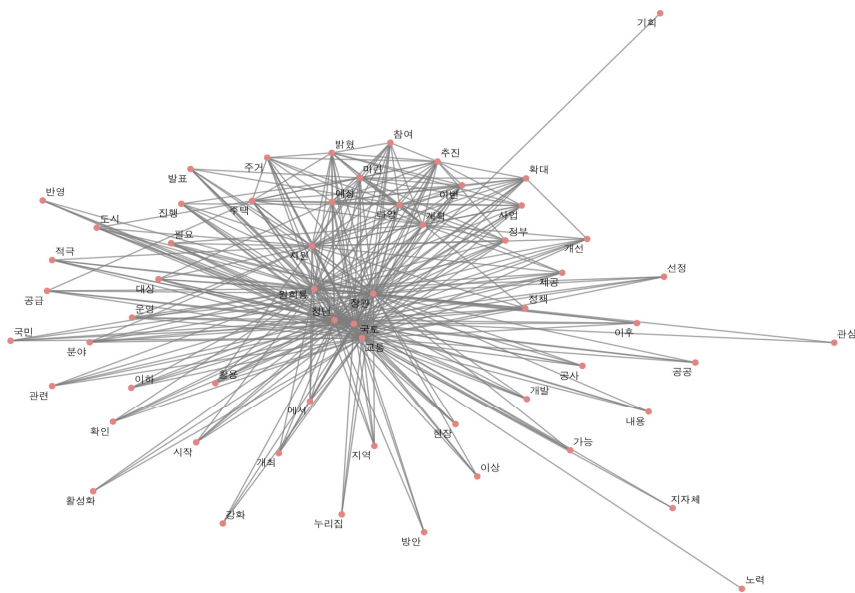


그림 III-22. 국토교통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의미 연결망

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서 빈출한 단어는 지원, 청년, 서비스, 자립, 보건복지부 등이었다. tf-idf 값을 기준으로 주요 단어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자립, 사회서비스, 연금, 자살 등이 주요 단어였다. 보건복지부의 청년 관련 주요 이슈는 자립과 연금, 자살예방 등과 관련이 있으며 관련 정책과 행사들이 보도자료로 자주 배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주요 사업은 취약계층 청년자립이나 복지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II-28. 보건복지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주요 단어의 빈출 횟수 및 tf-idf

빈출		높은 tf-idf	
단어	횟수	단어	tf-idf
지원	906	국민연금	1.42
청년	827	자립	1.01

빈출		높은 tf-idf	
서비스	422	사회서비스	0.87
자립	365	연금	0.87
보건복지부	355	자살	0.84
사회	297	개혁	0.79
아동	266	돌봄	0.74
제공	252	의견	0.72
복지	249	사업단	0.72
확대	240	서비스	0.71
사업	237	고독	0.68
돌봄	236	아동	0.67
준비	219	간담회	0.66
강화	217	저출산	0.63
대상	217	자살예방	0.63
국민	216	사업	0.60
지역	216	복지	0.57
추진	211	준비	0.52
자살	207	사업장	0.51
필요	195	지역	0.51
정부	194	제공	0.49
정책	193	시설	0.49
국민연금	181	어린이	0.48
계획	180	지원	0.48
사회서비스	175	정책	0.48
발굴	171	국민	0.48
체계	170	신청	0.47
하기	162	발굴	0.47
마련	159	노숙인	0.47
가구	158	차관	0.47



그림 III-23. 보건복지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최빈 단어 워드 클라우드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의미 연결망【그림 III-24】에서는 청년, 지원, 보건복지부가 중심 단어로 나타났다. 지원에서 보건, 돌봄, 복지로, 또 서비스, 사회, 필요, 계획 등으로 연결된다. 보건복지부의 주요 업무인 복지와 돌봄서비스 관련 단어들이 자주 함께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추진, 계획, 정부, 대상 등 정책의 실행과 관련된 단어들이 자주 함께 등장했기 때문에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도 관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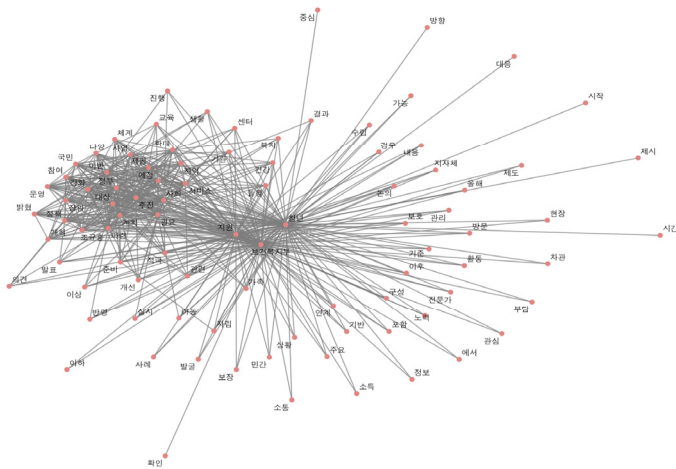


그림 III-24. 보건복지부 청년정책 보도자료 의미 연결망

바. 정부부처별 보도자료 중요 단어 비교

5개 부처의 전체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최빈 단어를 확인해 보았다.【그림 III-25】의 워드 클라우드는 5개 부처의 전체 보도자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100개의 단어로 그린 것이다.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청년을 중심으로 지원, 교통, 국토, 주택이 자주 등장한 단어이다. 이 외에도 주거, 계획, 사업 등 국토교통부 정책과 관련 있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상대적으로 많은 보도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청년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I-25. 정부부처 청년정책 보도자료 전체 최빈 단어 워드 클라우드

다음으로 부처별로 상위 빈출 단어와 부처별 tf-idf 값을 비교했다. 【그림 III-26】은 부처별 최빈 단어 10개와 tf-idf 상위 단어 10개를 뽑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빈출 단어를 살펴보면 모든 부처에서 “청년”이 1위 또는 2위로 많이 관찰됐다. 또, “지원”이 1~3위로 많이 출현한 단어로 나타났다. 모든 부처에서 청년 또는 무엇인가를 지원하는 정책 또는 사업 등이 보도자료를 통해 가장 많이 전달된 메시지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업무 등과 관련된 단어가 최빈 단어로 관찰됐다.

각 부처별로 해당 부처에서만 많이 관찰되는 주요 단어를 확인하기 위해 부처를 기준으로 tf-idf 상위 단어를 【그림 III-27】과 같이 선정하였다. 즉, tf-idf가 높은 단어는 특정 부처에서만 많이 관찰돼 해당 부처의 메시지를 다른 부처와 구분해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상위 단어들을 살펴보면, 먼저 청년포털에서는 공작소, 국무, 조정실, 청조위 등 포털의 주요 사업과 부처 이름이 주요 단어로 나타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자, 조선업, 노동시장, 훈련과정 등이 주요 단어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는 취업률, 모니터, 부총리, 유네스코 등이 주요 단어로 관찰됐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 입주자, 지구, 매입, 철도 등이 주요 단어였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예방, 고독, 자살, 국민연금, 질환 등이 주요 단어로 관찰됐다. 이 결과를 통해 각 부처가 주요하게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한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다. 청년포털의 경우에는 인턴공작소와 관련된 정책이 보도자료로 많이 배포됐고,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의 훈련, 해외취업 등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취업률에 대해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왔고, 국토교통부는 청약 관련 사안을 주요한 어젠다로 전달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주요 청년 관련 주제는 자살예방, 고독 등과 관련된 정책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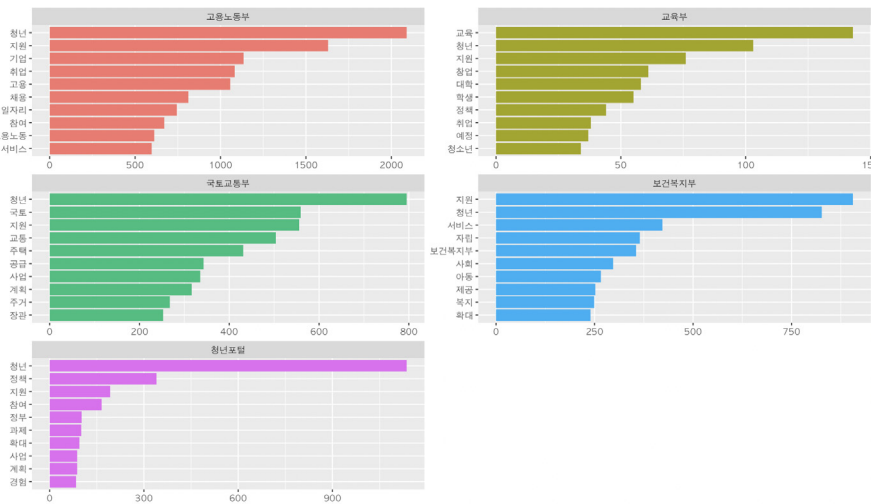


그림 III-26. 부처별 청년정책 보도자료 Top10 빈출 단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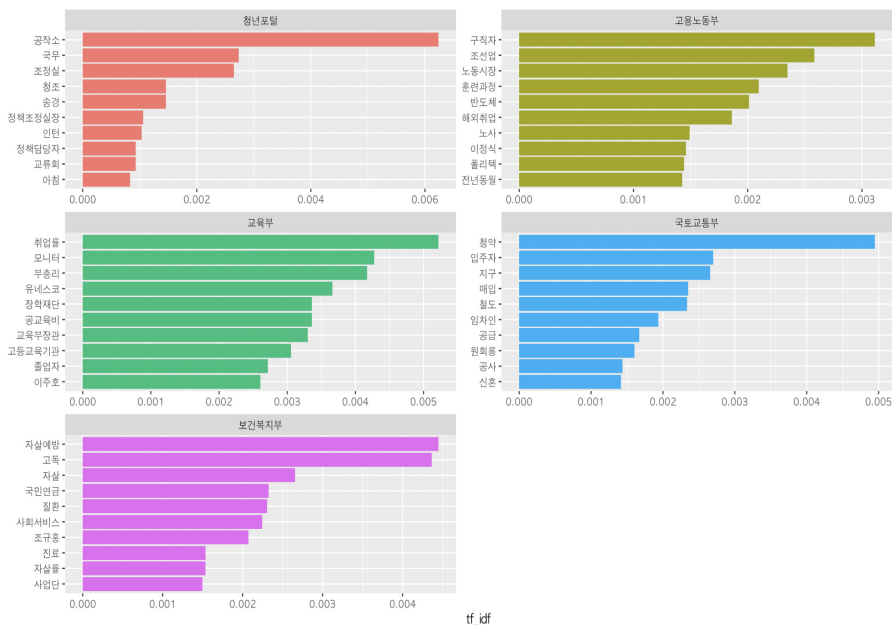


그림 Ⅲ-27. 부처별 주요 단어 비교: tf-idf 분석

정부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주요 단어들의 의미 연결망을 그려 단어들의 구조를 파악해보고자 했다. 아래 【그림 Ⅲ-28】은 전체 보도자료의 의미 연결망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청년을 중심으로 지원이 주요 단어로 연결되어 있다. 청년과 지원은 필요, 확대, 정부, 대상, 다양, 추진, 계획 등의 단어와 밀접하게 연결되며 군집을 이루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특정한 사업이나 정책, 행사 등의 홍보 또는 안내를 위한 보도자료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일자리, 고용, 기업, 취업 등의 단어가 주요하게 연결되며 정부부처들에서도 청년에 대한 주요 의제로 일자리 관련 메시지를 주로 전달해왔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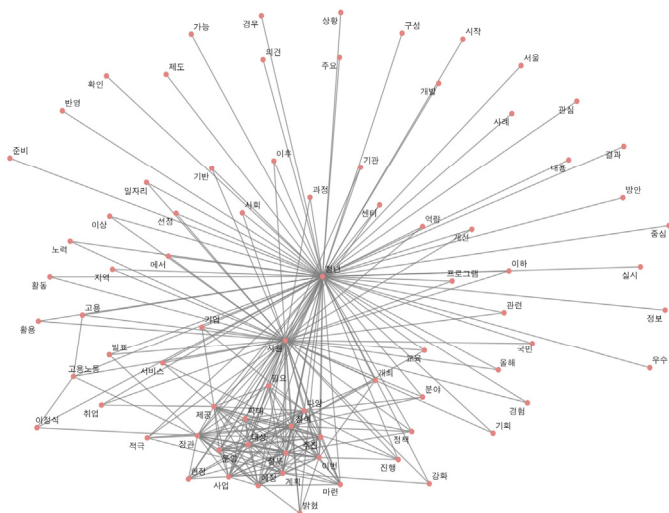


그림 Ⅲ-28. 정부부처 청년정책 보도자료 키워드 중심 전체 의미 연결망

3. 소결

본 장에서는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와 주요 언론사 사설, 그리고 부처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공정과 청년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 프레임과 부처 성격을 반영하는 청년정책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도를 살펴보기 위해 2차 데이터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시행한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통해 공정성과 관련된 시민들의 태도 지형을 살펴보았다. 이는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본 데이터를 통해 청년 응답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공정 혹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공정성의 어떤 요인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총 15개의 세부영역에 따른 공정성 인식을 살펴본 결과, 30대 응답자들의 공정성 인식이 가장 낮은 반면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의 공정성

인식이 가장 높았다. 영역별로 공정성 인식에서도 30대 응답자들의 공정성 인식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주로 청년층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형성되어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한편, 소득별 공정성 인식은 다른 집단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20~30대의 젊은 응답자 집단에서는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보다 공정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소득수준이 높은 젊은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공정성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년층 내에서도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인식하고 평가함에 있어 소득집단별로 서로 다른 이해를 보여주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청년에 대해서 어떠한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언론사의 사설과 유관 정부부처의 보도자료 텍스트를 분석했다. 주요 언론사와 정부부처가 청년 이슈와 관련해 제시하고 있는 의제와 청년 이슈를 바라보는 해석의 틀을 살펴보았다.

2013년 1월 1일~2023년 8월 31일 주요 일간지 언론사 사설 중 “청년”을 키워드로 가지고 있는 사설 기사 총 1,822건을 수집해 구조적 토픽 모델링과 의미 연결망 분석을 실시했다. 토픽 모델링 결과 1,822건의 사설에서 18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18개의 토픽은 다시 경제적 토픽, 정치적 토픽, 노동 관련 토픽, 기타 토픽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18개의 토픽 중 가장 많이 등장한 토픽은 ‘임금과 실업률’이었다. 이는 경제 위기로 촉발된 청년의 실업과 국가 경제지표의 악화 등과 관련된 논의를 담고 있는 주제이다. 다음으로 ‘구직과 취업’이 많이 출현했고 ‘정부 예산과 재정’, ‘주택 정책’ 등의 토픽이 뒤를 이었다.

사설 기사를 중심으로 의미 연결망 분석을 한 결과, 토픽 모델링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결망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한 단어는 ‘청년’과 ‘정부’로 이를 중심으로 일자리 관련 단어들이 한 군집을 이루고, ‘청년’, ‘정부’,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 정규(직), 고용, 기업과 같은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5개의 주요 언론사는 청년 이슈에 대해 주로 경제와 관련한 프레임을 사용해 논의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언론은 청년 이슈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의제를 경제적인 측면에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일자리 부족 문제, 즉 실업률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촉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 또는 지지 등을 해왔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2023년 5월 1일~2023년 7월 31일 동안 국무조정실 청년포

털,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중 제목 또는 내용에 “청년”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보도자료를 수집해 분석했다.

5개 부처 총 592개의 보도자료에서 명사 단어들을 추출하여 최빈 단어, tf-idf 값 분석, 의미 연결망 분석 등을 실시했다. 5개 부처는 ‘청년’과 관련해서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5개 부처의 보도자료에서 모두 주요하게 등장한 단어는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것이다. 정부부처의 ‘청년’ 관련 주요 메시지는 청년층의 자립, 성장 등을 위한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원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각 정부부처의 보도자료의 최빈 또는 tf-idf 값에 따른 중요도가 높은 단어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의 청년포털, 고용노동부, 교육부에서는 취업, 창업과 같은 일자리 관련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로 나타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 보급 및 지원과 관련한 단어들, 보건복지부에서는 자립 지원 및 자살예방, 연금과 관련한 단어들이 주요 단어로 나타났다. 부처들의 보도자료에서는 청년은 지원 또는 보호의 대상으로 다루어짐을 알 수 있었고, 정책들은 지원과 보호를 위해 구성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언론과 정부부처가 바라보는 ‘청년’에 대한 관점을 탐색해 보았다. 언론 사실을 통해 언론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청년’에 대한 주요 이슈는 일자리였다. 언론이 인식하는 가장 핵심적인 청년의 문제는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적 문제이다. 현재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 문제이며, 이 문제의 해결이 사회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언론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은 정부부처의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과 관련해 가장 활발히 논의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일자리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부처와 언론사가 동시에 해당 의제에 대해 주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중의 의제 역시 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 이슈는 지속적으로 주요 의제로 등장하며 정부의 여러 정책과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며, 공정 이슈와도 결부되어 정책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 — 제4장 청년 당사자 관점에서의 ‘공정’ :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 1. 청년 관점에서 본 ‘공정’: 설문조사
- 2. 청년 관점에서 본 ‘공정’: 심층면담
- 3. 소결

본 연구에서는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청년정책의 방향과 목표, 전략, 주요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책대상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1:1 심층면담(IDI) 조사방법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1. 청년 관점에서 본 ‘공정’: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먼저, 청년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공정에 대한 기본 인식과 더불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만 19~34세의 청년이고, 조사내용은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인식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기본 틀로 삼아 영역별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도록 구성하였다¹⁵⁾.

설문 구성은 청년정책 참여 여부와 청년에 대한 연령 및 세대에 대한 인식, 청년의 삶 전반 및 영역별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에 대한 인식, 필요성, 평가 및 우선지원 대상 등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공정의 의미와 기준, 우리 사회 공정 인식, 청년정책 영역별 공정 인식, 청년자립 및 사회적 성취에 따른 인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끝으로 청년정책 영역별(주거, 일자리,

14) 이 장은 이윤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고, 김지민 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작업을 하였음.

15) 구철회(2022)의 연구에서도 청년 대상의 조사를 통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에 따른 신뢰를 변수로 삼아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파악하여 청년들이 정책에 대한 인식과 기대수준, 취업에 따른 공정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년들의 경제적 수준, 청년정책의 기대수준, 청년정책에 따른 신뢰인식에 대해 유의미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적실성 있는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교육, 복지·문화, 참여)로 구분하여 공정에 대한 인식 및 평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정과제와 부처별 청년정책으로서 교육, 일자리, 주거로 분류하여 해당 영역의 정책에서 드러나는 ‘공정’에 대한 인식, 청년정책에 따른 요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청년세대가 바라보는 공정의 관점을 재정립한다.

(1) 조사대상

2023년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 시점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만 18~34세 일반국민이다. 2020년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인 19~34세 및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투표 가능 연령 변동(기존 만 19세 이상→개정 만 18세 이상) 등을 고려하여 18~34세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1년도, 2022년도 조사와 동일하게 2023년 조사대상 연령은 조사기준일(2023년 6월 1일) 기준 18~34세이다. 표본 규모는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최종 조사 결과 총 2,074 표본을 수집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분석대상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현재 상태				무직자
			학력	취업 상태			
				고졸	대학(원) 재학	대학(원) 졸업	
전체		(1,938)	26.7	22.9	50.4	51.0	12.1
성별	남자	(1,002)	31.8	25.7	42.5	50.7	11.7
	여자	(936)	20.9	19.7	59.3	51.2	12.5
연령	만 19~24세	(634)	23.8	59.8	16.4	20.6	19.6
	만 25~29세	(663)	28.5	9.4	62.1	62.4	12.2
	만 30~34세	(641)	27.7	0.7	71.6	68.9	4.7
도시규모	대도시	(1,183)	24.8	24.4	50.8	51.5	10.9
	중소도시	(434)	29.7	19.3	51.0	53.5	11.5
	농어촌	(321)	29.6	22.2	48.3	45.6	17.1
학력	고졸 이하	(494)	100.0	0.0	0.0	57.6	12.6
	대학/대학원 재학	(445)	0.0	100.0	0.0	4.5	17.2
	대졸 이상	(999)	0.0	0.0	100.0	68.6	9.4

구분		사례수	현재 상태				
			학력	취업 상태			무직자
				고졸	대학(원) 재학	대학(원) 졸업	
직장유형	민간	(1,207)	32.1	7.6	60.3	71.9	17.6
	정부/공공기관	(125)	15.2	5.9	78.9	89.4	10.6
	프리랜서	(30)	40.2	17.1	42.7	18.1	20.3
	일자리 없음	(576)	16.7	59.4	23.9	0.0	0.0
주거 상태	동거	(1,160)	23.7	32.5	43.8	45.4	13.5
	비동거/독립	(778)	31.1	8.9	60.0	59.0	9.9
주거점유 형태	자가	(111)	23.4	2.7	73.9	56.1	6.4
	전·월세	(640)	31.9	10.1	58.0	59.3	10.5
	기타	(27)	39.8	4.2	56.0	63.5	8.8
	부모 동거	(1,160)	23.7	32.5	43.8	45.4	13.5
부모 소득수준	낮은 편	(254)	43.7	22.7	33.6	43.6	16.8
	중간	(1,589)	24.6	22.1	53.3	53.2	11.5
	높은 편	(95)	10.2	38.7	51.2	32.1	7.2
청년정책 지원 여부	있음	(90)	19.0	34.7	46.3	45.3	11.7
	없음	(1,848)	27.1	22.3	50.6	51.2	12.1

(2) 조사내용

표 IV-2. 청년대상 설문조사 구성

대영역	소영역	내용(항목)	문항 번호
청년정책 참여 여부		• 청년정책 지원 여부	• 문87
		• 청년활동 참여 여부	• 문88
		• 청년정책 참여 분야	• 문89
청 년 인 식	청년 연령	• 청년 연령기준 인식	• 문90
		• 청년세대 인식	• 문91
		• 기성세대 인식	• 문92
	청년 삶	• 현재 청년세대 어려움	• 문93
		• 현재 청년세대 분야별 어려움	• 문93-1
	청년정책	• 청년정책 이해 정도(영역별)	• 문94
		• 청년정책 필요성	• 문95
		• 청년정책 평가	• 문96
		• 청년정책 지원 대상	• 문97

대영역	소영역	내용(항목)	문항 번호
공정성	공정성 인식	• 공정성 의미	• 문98
		• 우리 사회 공정성 인식	• 문99
		• 공정 분야 순위	• 문100
		• 공정 실현을 위한 필요 정책	• 문101
		• 청년의 자립 및 사회적 성취 인식	• 문102
	영역별 공정성 인식	• 청년정책(일자리) 인식	• 문103
		• 청년정책(주거) 인식	• 문104
		• 청년정책(교육) 인식	• 문105
		• 청년정책 복지·문화 인식	• 문106
		• 청년정책 정치·사회 참여 인식	• 문107

(3) 조사 절차

가. 예비조사

2023년 청년 사회 첫출발 실태조사의 조사 설계 및 실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되었다. 본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조사방법, 신규 문항을 중심으로 한 응답자 반응, 실사 환경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비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는 종이설문을 활용한 1:1 개별면접법(Face to Face Interview)으로 진행한 후 문항 소요시간 및 난이도,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 신규 문항에 대한 의견 등 조사내용과 조사 진행 관련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해 응답자에게 간단한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예비조사 표본은 본 조사 대상자와 동일한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총 50부¹⁶⁾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조사표의 난이도나 설문 자체의 불편함 정도는 높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조사는 평균 38분 정도 소요되었다. 2022년도 예비조사 당시 전체 소요시간 평균 41분에서 3분 정도 단축된 결과이며, 1시간 이상 소요된 응답자도 2022년 8명에서 2023년 0명으로 줄어들었다.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의 이유로는 오래된 경험(교육 여부, 일자리 시작 시기 등)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 기관/정책을 경험해보지 않아 응답이 어렵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 개인 및 민감정보에 대한 불쾌감과 전반적으로 설문이 길어 지루해서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16) 총 50부 설문은 성별, 연령대, 취업 여부, 혼인 여부를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예비조사 진행 후 나온 주요 의견을 토대로 신규 문항을 중심으로 정책 설명, 구체적 제도, 각종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제시하고 이해가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는 예시문을 추가하였다. 난이도가 있는 개념에 대해서는 면접원이 현장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조사지침서에 설명을 보충하였으며, 교육 시 해당 내용을 강조하여 진행하였다.

이상의 예비조사를 통해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조사표의 신뢰도와 타당도, 조사 문항과 사용된 용어의 난이도와 편집 가독성, 대략적인 조사 응답 시간과 그 외 조사 진행 관련 전반에 걸친 예상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본 조사에 반영하였다.

나. 본 조사

2023년도 본 조사는 집계구를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조사원은 집계구 내에 있는 가구에 방문하여 대상 여부 확인 후 1:1로 조사 대상자와 접촉, 대면하여 태블릿PC 내 사전 구현된 설문을 통해 면접을 진행하는 태블릿PC를 활용한 가구방문 개별면접 기법(TAPI: 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으로 수행되었으며, 가구 방문 시 조사대상 연령대 가구원의 부재 또는 응답자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종이설문을 활용한 유치 조사를 병행하였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조사원칙, 조사표 내용 및 응답방법, 조사 진행방식 등 조사원에 의한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발된 조사원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집체 교육을 2023년 6월 8일, 6월 9일, 6월 12일 실시하였다. 교육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 연구진 참여하에 조사회사 담당 연구진이 조사 배경 및 목적, 집계구 활용 및 가구 방문 시 적격 대상 확인, 진행 절차별 유의사항, 2023년도 조사의 특징 등을 교육하는 조사 개요 파트, 설문 문항별 의미, 용어 정의, 보기문항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표 교육 파트, 조사 도구인 태블릿PC를 활용하여 본 조사 프로그램에 실제로 접속하여 가구 정보 입력, 조사 화면 접속 및 진행을 실습해 보는 TAPI 프로그램 교육 파트, 총 3개 파트로 약 3시간가량 진행되었다.

실제 조사가 수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조사원은 사전에 배부된 집계구 내의 유형에 맞는 가구를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조사대상, 내용 및 목적을 설명한 후 조사 참여를 요청하였다. 필요에 따라 도심 지역의 경우 아파트 관리소, 읍면 지역의 경우 동·반장, 이장

등에게 조사 공문을 제시하며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다. 이후 해당 가구 내에 본 조사대상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는지, 있다면 성별과 연령대별로 몇 명이 거주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채택 중인 가구원에 대해 다시 각각 조사 협조를 구한 후 태블릿PC를 활용한 개별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만약 적격 연령대 가구원 중 방문 당시에 부재 중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재방문 일정을 정하고 다시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유치 형태의 조사를 희망할 경우 조사표 인쇄물 및 조사 가이드를 유치한 후 다음 회수 일정을 정하여 이후에 방문, 회수하도록 하였다. 유치한 조사표를 회수 시할 때 조사원은 빠진 응답은 없는지, 로직상 잘못된 응답이 없는지 등을 현장에서 1차로 육안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직접 응답자에게 질의하여 수정하였으며, 유치된 조사표 내용을 TAPI 설문에 입력 시 사전 설정된 로직에 맞지 않는 경우 전화 통화 등을 통해 확인 후 수정 입력하였다. 모든 조사대상 가구원에 대해 조사표가 이상 없이 완결되면 조사대상 가구원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4) 조사 일정

본 조사의 상세 일정은 다음 <표 IV-3>과 같다. 면접원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담당 연구원 진행하에 집체 교육 형태로 6월 8일, 6월 9일, 6월 12일 지역별로 진행하였다. 실사는 총 8주간 진행하였다.

표 IV-3. 조사 일정

추진 업무 내용	일시	비고
표본설계	2023. 05. 09 ~ 2023. 06. 01.	표본설계 및 집계구 추출, 요도 출력 진행
예비조사	2023. 05. 16. ~ 2023. 05. 23.	총 50부 조사 완료
조사방법(TAPI) 프로그램 개발	2023. 05. 08. ~ 2023. 06. 21.	설문, 인터뷰어, 매니저 개발
실사 준비	2023. 05. 10. ~ 2023. 06. 20.	조사원 선발, 교육자료 준비 후 인쇄, 조사물품 배포
조사원 교육	2023. 6. 8 / 2023. 6. 9 / 2023. 6. 12	오프라인 집체 교육 (6월 8일 대구, 부산/ 6월 9일 광주, 대전 6월 12일 서울)
조사표 최종 확정	2023. 6. 20.	교육 중 수정사항 및 최종검수 반영
본 조사 진행	2023. 6. 21. ~ 2023. 8. 16.	8주 진행

추진 업무 내용	일시	비고
가중치 작업	2023. 8. 17. ~ 2023. 9. 08.	데이터 및 접촉일지 활용, 18~34세 / 19~34세 연령 기준 비율 가중치, 모집단 가중치 작업
데이터 클리닝 및 데이터 검수	2023. 8. 17. ~ 2023. 9. 15.	2023. 09. 0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 방문 후 데이터 검수 실시

2) 분석 결과

이 절에서는 청년 응답자(19~34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한다. 특히, 이 조사에는 청년들의 공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와 연관된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특히 공정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 중 어떤 영역에 보다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1) 청년이 인식하는 공정 개념

청년 응답자들은 과연 공정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림 IV-1】은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문항을 기술한 것이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공정성의 핵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3%였고, 모든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23.9%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이 공정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14.3%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청년들은 단순히 결과로서의 공정성보다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과정에서의 공정한 절차가 마련되는 것에 보다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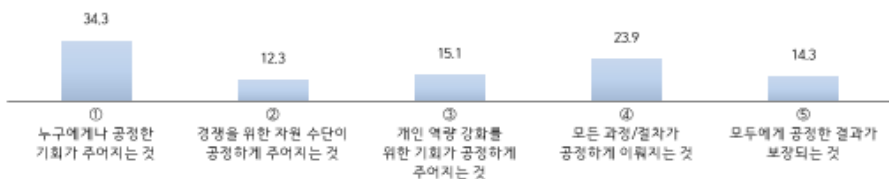


그림 IV-1. 청년이 인식하는 공정 개념

표 IV-4. 청년이 인식하는 공정 개념

구분		사례수	인식하는 공정 개념				
			①	②	③	④	⑤
전	체	(1,938)	34.3	12.3	15.1	23.9	14.3
성별	남 자	(1,002)	33.2	12.2	15.5	25.0	14.2
	여 자	(936)	35.7	12.5	14.7	22.8	14.4
연령	만 19 ~ 24 세	(634)	34.0	12.4	14.6	22.0	16.8
	만 25 ~ 29 세	(663)	36.0	11.7	16.2	23.2	13.0
	만 30 ~ 34 세	(641)	33.0	12.9	14.4	26.6	13.1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36.9	12.9	15.1	21.0	13.9
	중 소 도 시	(434)	29.0	11.1	16.0	31.6	12.4
	농 어 촌	(321)	32.1	11.9	13.7	24.1	18.2
학력	고 졸 이 하	(494)	36.7	10.7	15.3	24.3	13.1
	대학/대학원 재학	(445)	30.3	14.4	15.6	22.1	17.5
	대 졸 이 상	(999)	34.9	12.3	14.8	24.6	13.4
고용형태	임금근로자-정규	(982)	33.6	12.5	14.7	26.2	12.9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42.5	6.5	17.5	19.3	14.2
	비임금근로자	(142)	34.9	11.8	12.0	26.8	14.6
	일자리 없음	(576)	32.1	14.6	15.5	21.2	16.6
직장유형	민 간	(1,207)	34.8	11.8	14.8	25.3	13.4
	정부/공공기관	(125)	38.6	7.5	16.2	24.6	13.1
	프 리 랜 서	(30)	41.3	12.3	16.2	18.6	11.6
	일자리 없음	(576)	32.1	14.6	15.5	21.2	16.6
주거 상태	동 거	(1,160)	32.5	13.4	14.6	23.7	15.8
	비동거 / 독립	(778)	37.1	10.8	15.7	24.2	12.1
주거점유 형태	자 가	(111)	33.8	11.9	20.9	27.0	6.5
	전 · 월 세	(640)	37.6	10.7	14.6	23.9	13.2
	기 타	(27)	36.7	9.8	24.3	20.9	8.4
	부 모 동 거	(1,160)	32.5	13.4	14.6	23.7	15.8
부모소득 수준	낮 은 편	(254)	36.2	14.2	13.1	24.0	12.5
	중 간	(1,589)	34.0	11.9	15.3	24.4	14.3
	높 은 편	(95)	33.9	14.6	18.5	13.8	19.3
청년정책 지원 여부	있 음	(90)	25.4	13.0	21.2	25.0	15.5
	없 음	(1,848)	34.8	12.3	14.8	23.9	14.2

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 ② 경쟁을 위한 자원수단이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 ③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 ④ 모든 과정/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 ⑤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

(2) 우리 사회에 대한 공정 인식

【그림 IV-2】는 응답자들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문항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2.6%, 별로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1.2%로서 총 43.8%의 응답자들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9.5%로 나타났다.

한편, 다소 공정하다는 응답은 16.3%, 매우 공정하다는 응답은 0.3%를 기록하여 총 16.6%의 응답자들이 우리 사회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청년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이들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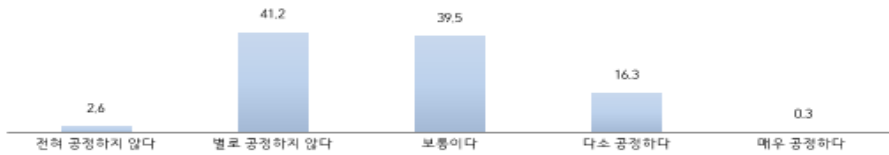


그림 IV-2. 우리 사회에 대한 공정 인식

표 IV-5. 우리 사회에 대한 공정 인식

구분		사례수	우리 사회 공정 인식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평균 (점/5점)
전 체		(1,938)	2.6	41.2	39.5	16.3	0.3	2.7
성별	남 자	(1,002)	2.9	41.4	38.8	16.3	0.4	2.7
	여 자	(936)	2.3	40.8	40.3	16.3	0.2	2.7
연령	만 19~24 세	(634)	2.1	39.4	39.7	18.1	0.8	2.8
	만 25~29 세	(663)	3.6	44.2	37.8	14.3	0.1	2.6
	만 30~34 세	(641)	2.2	39.8	41.2	16.8	0.1	2.7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2.0	38.3	42.1	17.3	0.3	2.8
	중 소 도 시	(434)	4.3	47.0	32.1	16.4	0.2	2.6
	농 어 촌	(321)	2.6	43.9	40.1	12.8	0.6	2.7
학력	고 졸 이 하	(494)	2.8	41.8	40.7	14.4	0.4	2.7
	대 학 / 대 학 원 재 학	(445)	2.6	39.4	37.4	19.8	0.9	2.8
	대 졸 이 상	(999)	2.6	41.6	39.9	15.8	0.1	2.7

구분		사례수	우리 사회 공정 인식					평균 (점/5점)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고용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2.3	41.3	39.5	16.8	0.1	2.7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3.6	50.7	35.0	10.4	0.3	2.5
	비임금근로자	(142)	3.4	34.5	49.0	13.1	0.0	2.7
	일자리 없음	(576)	2.7	38.7	39.0	18.7	0.9	2.8
직장유형	민 간	(1,207)	2.5	41.9	39.6	16.0	0.1	2.7
	정부/공공기관	(125)	4.2	41.3	43.3	11.3	0.0	2.6
	프 리 랜 서	(30)	3.1	59.0	32.6	2.8	2.6	2.4
	일자리 없음	(576)	2.7	38.7	39.0	18.7	0.9	2.8
주거 상태	동 거	(1,160)	2.6	40.9	38.4	17.5	0.5	2.7
	비동거/독립	(778)	2.7	41.5	41.1	14.6	0.1	2.7
주거점유 형태	자 가	(111)	3.5	39.5	37.0	19.2	0.7	2.7
	전 · 월 세	(640)	2.5	42.4	41.2	13.9	0.0	2.7
	기 타	(27)	4.5	25.9	55.7	14.0	0.0	2.8
	부 모 동 거	(1,160)	2.6	40.9	38.4	17.5	0.5	2.7
부모소득 수준	낮 은 편	(254)	4.6	47.0	32.5	15.9	0.0	2.6
	중 간	(1,589)	2.2	40.9	40.9	15.6	0.4	2.7
	높 은 편	(95)	4.0	27.4	35.7	32.0	0.9	3.0
청년정책 지원 여부	있 음	(90)	5.0	32.9	40.0	21.2	0.8	2.8
	없 음	(1,848)	2.5	41.6	39.5	16.1	0.3	2.7

(3)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지 않은 분야

그렇다면, 청년 응답자들은 주로 어느 분야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래의 【그림 IV-3】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응답자 중, 일자리와 관련한 분야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43.7%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였다. 뒤이어서, 20.0%의 응답자들이 주거와 관련하여 이를 공정하지 않은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육에 있어서는 8.2%가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지 않은 영역이라 응답하였다.



그림 IV-3.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지 않은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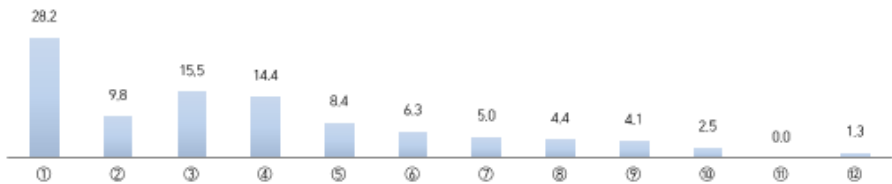
표 IV-6.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지 않은 분야

구분			사례수	공정하지 않은 분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권리	기타	없음
전	체	(1,938)		43.7	20.0	8.2	11.4	11.7	0.0	5.0
성별	남	자	(1,002)	43.7	19.7	8.9	10.3	12.3	0.0	5.1
	여	자	(936)	43.8	20.2	7.4	12.6	11.1	0.1	4.9
연령	만 19 ~ 24 세		(634)	43.0	19.2	10.1	9.2	13.3	0.0	5.2
	만 25 ~ 29 세		(663)	44.8	20.8	7.9	11.7	10.5	0.1	4.2
	만 30 ~ 34 세		(641)	43.3	19.8	6.6	13.2	11.6	0.0	5.6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45.0	18.1	8.2	12.5	11.0	0.1	5.2
	중 소 도 시		(434)	38.4	22.4	10.0	10.3	15.3	0.0	3.6
	농 어 촌		(321)	46.3	23.3	5.7	8.9	9.8	0.0	6.0
학력	고 졸 이 하		(494)	50.0	18.0	7.2	11.3	10.5	0.0	3.0
	대학/대학원 재학		(445)	39.9	19.6	10.8	9.8	13.6	0.0	6.5
	대 졸 이 상		(999)	42.2	21.1	7.5	12.2	11.6	0.1	5.4
고용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43.2	19.7	7.6	12.5	12.3	0.1	4.7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42.4	23.2	10.5	9.3	12.7	0.0	1.8
	비 임금 근로자		(142)	41.0	22.4	6.9	18.9	7.7	0.0	3.1
	일 자 리 없음		(576)	45.9	18.5	8.5	8.4	11.4	0.0	7.3
직장유형	민 간		(1,207)	42.3	20.8	8.1	12.9	12.3	0.1	3.6
	정 부 / 공 공 기 관		(125)	43.3	20.0	9.4	10.1	10.1	0.0	7.1
	프 리 랜 서		(30)	62.0	11.5	2.6	11.1	2.0	0.0	10.8
	일 자 리 없음		(576)	45.9	18.5	8.5	8.4	11.4	0.0	7.3
주거 상태	동 거		(1,160)	44.5	18.9	7.4	11.0	12.8	0.0	5.3
	비 동 거 / 독 립		(778)	42.6	21.4	9.2	12.0	10.1	0.1	4.6
주거점유 형태	자 가		(111)	44.2	18.0	6.6	15.9	10.9	0.0	4.5
	전 · 월 세		(640)	42.4	22.3	9.6	11.4	9.9	0.1	4.3
	기 타		(27)	40.5	13.5	10.1	11.1	13.1	0.0	11.7
	부 모 동 거		(1,160)	44.5	18.9	7.4	11.0	12.8	0.0	5.3

구분				사례수	공정하지 않은 분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권리	기타	없음
부모소득 수준	낮	은	편	(254)	41.9	21.9	9.7	11.4	10.9	0.2	3.9
	중		간	(1,589)	44.5	19.6	8.0	11.1	11.6	0.0	5.2
	높	은	편	(95)	36.0	19.9	7.2	16.7	16.7	0.0	3.6
청년정책 지원 여부	있		음	(90)	33.8	24.4	6.7	14.7	6.5	0.0	13.9
	없		음	(1,848)	44.2	19.7	8.2	11.2	12.0	0.0	4.6

(4)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청년정책

다음의 【그림 IV-4】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청년정책이 필요한지를 질문한 문항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채용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를 강화할 것을 28.2%의 응답자가 선택함으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직무능력·성과 중심 임금보상 체계의 개편이 중요한 청년정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5.5%로 높게 나타났다. 이 두 가지 범주는 결국 취직 및 승진을 비롯한 일자리 영역에 대해 청년들이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 영역 가운데 청년 대상 채용에 있어서 공정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이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책적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채용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강화 ② 국가자격시험 운영 실태 모니터링 ③ 직무능력·성과 중심 임금보상체계 개편 ④ 공공분양·임대주택 개선 및 확대 ⑤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⑥ 부정입학·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⑦ 장학금 등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 ⑧ 복지제도 부정수급 관리감독 및 제재강화 ⑨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문화 사각지대 해소 ⑩ 청년정책 관련 정보제공 및 공간지원 ⑪ 기타 ⑫ 없음

그림 IV-4.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청년정책

표 IV-7.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청년정책

구분		사례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청년정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전	체	(1,938)	28.2	9.8	15.5	14.4	8.4	6.3	5.0	4.4	4.1	2.5	0.0	1.3
성별	남 자	(1,002)	29.1	11.1	15.2	13.3	8.3	6.0	5.1	4.7	3.7	2.5	0.0	1.1
	여 자	(936)	27.3	8.4	15.8	15.5	8.4	6.8	5.0	4.1	4.7	2.5	0.0	1.4
연령	만 19~24세	(634)	29.6	10.6	15.0	13.1	6.4	6.9	7.1	3.3	3.6	2.8	0.0	1.7
	만 25~29세	(663)	29.9	10.4	14.9	13.1	9.5	6.0	4.9	4.5	3.4	2.4	0.0	1.1
	만 30~34세	(641)	25.3	8.5	16.6	16.9	9.2	6.1	3.2	5.3	5.5	2.4	0.0	1.1
도시규모	대 도시	(1,183)	28.0	10.3	15.3	14.0	9.3	7.7	4.7	4.2	3.1	2.0	0.0	1.5
	중 소 도시	(434)	30.8	9.5	12.8	14.3	6.1	4.1	6.7	5.5	6.2	3.5	0.0	0.4
	농 어 촌	(321)	25.8	8.4	19.8	15.7	8.2	4.4	4.1	3.6	5.1	3.1	0.0	1.7
학력	고 졸 이 하	(494)	27.2	9.8	15.8	14.1	9.2	5.2	4.9	4.9	4.3	3.7	0.0	0.8
	대학/대학원 재학	(445)	29.8	11.3	14.7	13.3	7.1	6.3	7.7	3.5	3.4	1.7	0.0	1.3
	대 졸 이 상	(999)	28.1	9.1	15.7	15.0	8.6	7.0	3.8	4.5	4.4	2.3	0.0	1.5
고용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28.6	10.4	16.2	13.1	9.1	6.3	4.4	4.2	4.2	2.1	0.0	1.4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30.3	5.4	16.8	16.6	8.3	4.8	5.6	5.7	4.0	1.6	0.0	0.9
	비임금근로자	(142)	28.4	8.7	16.3	16.7	8.9	5.9	2.9	4.9	3.0	4.3	0.0	0.0
	일 자리 없음	(576)	26.7	10.9	13.4	15.0	7.1	7.1	6.5	4.0	4.5	3.2	0.0	1.6
직장유형	민 간	(1,207)	29.1	9.4	16.4	14.4	9.0	6.2	4.4	4.4	3.8	2.2	0.0	0.9
	정부/공공기관	(125)	23.8	11.0	15.0	12.8	8.9	5.0	4.6	4.5	6.0	3.9	0.0	4.4
	프 리 랜 서	(30)	41.1	0.0	21.2	4.5	7.1	2.9	4.8	11.9	6.5	0.0	0.0	0.0
	일 자리 없음	(576)	26.7	10.9	13.4	15.0	7.1	7.1	6.5	4.0	4.5	3.2	0.0	1.6
주거 상태	동 거	(1,160)	29.5	10.0	16.4	12.3	7.5	6.5	5.8	3.8	4.0	2.7	0.0	1.5
	비 동 거 / 독립	(778)	26.4	9.6	14.2	17.4	9.7	6.1	4.0	5.2	4.3	2.3	0.0	0.9
주거점유 형태	자 가	(111)	28.5	9.7	12.8	18.8	4.5	6.2	3.7	8.6	4.0	3.1	0.0	0.0
	전 · 월 세	(640)	26.3	9.8	14.2	17.3	10.3	6.0	4.0	4.7	4.5	1.9	0.0	1.0
	기 타	(27)	18.6	2.0	19.2	12.5	17.2	9.0	3.8	5.0	0.0	8.8	0.0	3.8
	부 모 동 거	(1,160)	29.5	10.0	16.4	12.3	7.5	6.5	5.8	3.8	4.0	2.7	0.0	1.5
부모소득 수준	낮 은 편	(254)	26.9	9.0	15.1	17.7	9.7	5.2	4.4	4.6	4.4	2.4	0.0	0.4
	중 간	(1,589)	28.4	9.8	15.5	13.4	8.2	6.7	5.1	4.5	4.3	2.6	0.0	1.5
	높 은 편	(95)	28.8	13.1	17.2	21.0	7.1	3.0	5.7	2.0	0.0	1.4	0.0	0.6
청년정책 지원 여부	있 음	(90)	16.5	12.6	21.1	19.8	9.7	2.8	6.4	1.2	4.7	0.0	0.0	5.2
	없 음	(1,848)	28.8	9.7	15.2	14.1	8.3	6.5	5.0	4.5	4.1	2.7	0.0	1.1

① 채용비리 관리강독 및 제재 강화 ② 국가자격시험 운영 실태 모니터링 ③ 직무능력·성과 중심 임금보상체계 개편 ④ 공공분양 임대주택 개선 및 확대 ⑤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⑥ 부정입학·비리 관리강독 및 제재 강화 ⑦ 장학금 등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 ⑧ 복지제도 부정수급 관리강독 및 제재 강화 ⑨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문화 사각지대 해소 ⑩ 청년정책 관련 정보제공 및 공간지원 ⑪ 기타 ⑫ 없음

(5) 청년의 자립 및 사회적 성취에 따른 공정 인식

【그림 IV-5】는 청년들이 자립 및 사회적 성취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노력으로 인해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인지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청년 응답자들은 부모의 지원 없이 각자의 노력만으로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개인의 성공이 부모의 지원을 비롯한 가정환경보다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바가 더욱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 두 그래프는 개인의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공이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 비판적인 의견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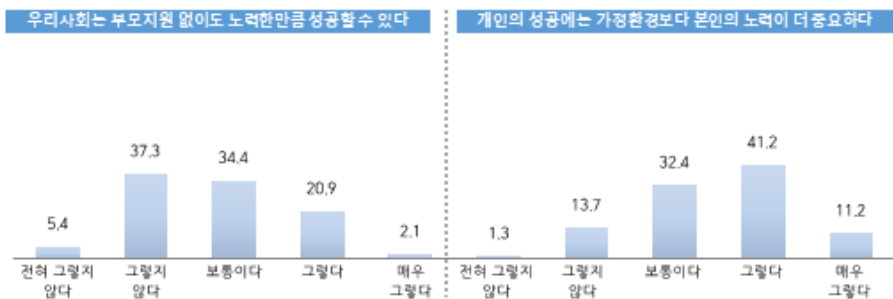


그림 IV-5. 청년의 자립 및 사회적 성취에 대한 인식 (계속)

표 IV-8. 청년의 자립 및 사회적 성취에 대한 인식 (계속)

구분		사례수	우리 사회는 부모지원 없이도 노력한만큼 성공할 수 있다						개인의 성공에는 가정환경보다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5점)
전		체 (1,938)	5.4	37.3	34.4	20.9	2.1	2.8	1.3	13.7	32.4	41.2	11.2	3.5
성별	남	자 (1,002)	6.5	36.7	34.2	20.1	2.5	2.8	1.4	14.4	32.0	40.8	11.4	3.5
	여	자 (936)	4.1	37.9	34.7	21.8	1.6	2.8	1.3	13.0	33.0	41.7	11.0	3.5
연령	만 19 ~ 24 세	(634)	5.3	35.0	37.4	19.8	2.6	2.8	1.6	11.8	32.7	42.8	11.0	3.5
	만 25 ~ 29 세	(663)	5.9	37.0	32.5	22.8	1.8	2.8	1.0	14.7	30.5	42.7	11.1	3.5
	만 30 ~ 34 세	(641)	5.0	39.7	33.5	20.0	1.8	2.7	1.4	14.6	34.3	38.2	11.6	3.4

구분			사례수	우리 사회는 부모지원 없이도 노력한만큼 성공할 수 있다					개인의 성공에는 가정환경보다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6.1	35.8	33.9	22.9	1.3	2.8	1.5	11.8	33.3	44.1	9.3	3.5
	중 소 도 시	(434)	4.5	44.8	36.1	12.1	2.5	2.6	1.3	17.0	30.8	39.9	11.0	3.4
	농 어 촌	(321)	4.1	32.5	34.0	25.3	4.1	2.9	0.6	16.6	31.5	32.7	18.5	3.5
학력	고 졸 이 하	(494)	6.0	32.3	35.5	23.3	2.9	2.9	0.8	12.2	34.0	39.5	13.5	3.5
	대학/대학원 재학	(445)	6.7	35.2	34.2	20.5	3.4	2.8	1.7	11.1	31.8	43.9	11.5	3.5
	대 졸 이 상	(999)	4.5	40.8	33.9	19.8	1.0	2.7	1.4	15.8	31.9	40.9	10.0	3.4
고용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4.6	37.3	35.7	20.6	1.8	2.8	1.4	14.7	32.5	40.4	11.0	3.5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6.4	37.7	34.2	19.8	1.9	2.7	0.6	10.9	28.7	45.9	13.9	3.6
	비임금근로자	(142)	2.8	35.4	35.3	24.9	1.6	2.9	0.0	11.3	28.5	43.9	16.3	3.7
	일 자 리 없 음	(576)	7.0	37.5	32.0	20.8	2.7	2.8	1.8	13.9	34.9	40.1	9.2	3.4
직장유형	민 간	(1,207)	4.7	37.1	35.4	20.9	1.8	2.8	1.1	13.3	32.4	41.5	11.7	3.5
	정부/공공기관	(125)	3.7	38.6	33.4	22.5	1.8	2.8	0.8	18.3	21.8	43.0	16.2	3.6
	프 리 랜 서	(30)	7.8	31.6	44.0	16.6	0.0	2.7	2.8	13.7	28.7	43.7	11.1	3.5
	일 자 리 없 음	(576)	7.0	37.5	32.0	20.8	2.7	2.8	1.8	13.9	34.9	40.1	9.2	3.4
주거 상태	동 거	(1,160)	5.2	37.4	34.5	21.0	1.9	2.8	1.5	12.9	33.9	40.1	11.6	3.5
	비 동 거 / 독 립	(778)	5.8	37.0	34.2	20.7	2.3	2.8	1.0	15.0	30.3	42.9	10.7	3.5
주거점유 형태	자 가	(111)	4.6	38.3	36.2	18.4	2.5	2.8	0.0	16.5	34.9	39.5	9.1	3.4
	전 · 월 세	(640)	5.9	37.4	33.9	21.0	1.8	2.8	1.2	14.4	30.3	43.6	10.4	3.5
	기 타	(27)	6.5	20.2	34.8	19.8	18.7	3.2	0.0	24.1	10.6	39.5	25.8	3.7
	부 모 동 거	(1,160)	5.2	37.4	34.5	21.0	1.9	2.8	1.5	12.9	33.9	40.1	11.6	3.5
부모소득 수준	낮 은 편	(254)	12.1	40.8	24.4	20.8	1.9	2.6	2.9	16.0	36.2	36.4	8.4	3.3
	중 간	(1,589)	4.3	37.1	36.4	20.4	1.8	2.8	1.1	13.6	31.9	42.3	11.1	3.5
	높 은 편	(95)	4.4	27.4	30.4	30.4	7.4	3.1	0.0	9.4	29.9	36.5	24.2	3.8
청년정책 지원 여부	있 음	(90)	5.5	18.2	43.2	28.2	4.9	3.1	1.3	7.3	33.2	46.6	11.6	3.6
	없 음	(1,848)	5.4	38.2	34.0	20.5	1.9	2.8	1.3	14.1	32.4	41.0	11.2	3.5

이를 청년 응답자들의 공정성 인식과 연관 지어 살펴보았다. <표 IV-9>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가 부모의 지원 없이도 개인의 노력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우리 사회를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0.2726$). 또한, 개인의 성공에는 가정환경보다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우리 사회를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0.1323$). 본인의 노력에 의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내면 [그림 IV-6]과

같다. 두 요인 모두 청년 응답자들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데에 양(+)의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청년 응답자들은 개인의 배경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노력에 따라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보다 공정한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표 IV-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회와 절차에서의 공정성에 보다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결과와도 일관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표 IV-9. 사회에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과 사회의 공정성 인식: 피어슨 상관계수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사회는 부모의 지원 없이도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	0.2726 (p=0.0000)
개인의 성공에는 가정환경보다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0.1323 (p=0.0000)

위에서 살펴본 상관계수를 산점도와 회귀적합선으로 나타낸 것은 다음의 【그림 IV-6】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 사회가 부모의 지원 없이도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할수록 공정성 인식이 긍정적이므로 산점도의 방향 및 기울기가 양(+)의 방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성공에는 가정환경보다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바가 높을수록 공정성 인식이 긍정적이어서 산점도의 방향 및 기울기가 양(+)의 방향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청년 응답자들은 개인의 노력에 따른 마땅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요건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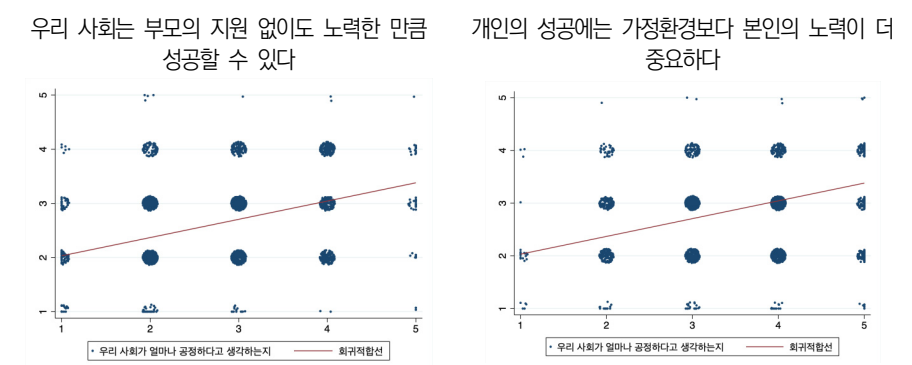


그림 IV-6. 사회에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과 사회의 공정성 인식: 산점도

한편, 청년들의 경우 자립과 사회적 성취와 관련한 요인에 있어서 부모에 따른 환경이 중요한 만큼, 부모의 지원과 독립과 관련한 문항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 인력 등의 자원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35.2%)이 부정적으로 답변한 응답률(21.6%)보다 높았다.

한편, 자녀가 취직, 창업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질문에 있어서는 57.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청년층이 인식하는 사회적 자립, 성인으로서의 이행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은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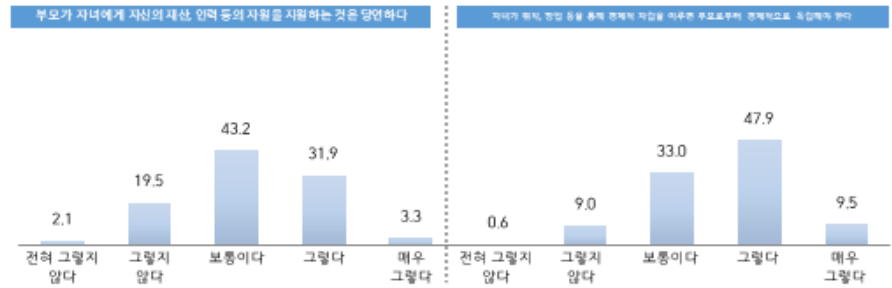


그림 IV-7. 청년의 자립 및 사회적 성취에 대한 인식 (계속)

표 IV-10. 청년의 자립 및 사회적 성취에 대한 인식 (계속)

구분		사례수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 인력 등의 자원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녀가 취직, 창업 등을 통해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5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5점)
전 체		(1,938)	2.1	19.5	43.2	31.9	3.3	3.2	0.6	9.0	33.0	47.9	9.5	3.6
성별	남 자	(1,002)	2.8	19.1	43.1	31.4	3.6	3.1	0.7	9.3	32.3	47.4	10.3	3.6
	여 자	(936)	1.3	20.0	43.2	32.6	2.9	3.2	0.5	8.6	33.9	48.5	8.6	3.6
연령	만 19~24 세	(634)	2.6	16.7	44.7	31.1	4.9	3.2	0.8	10.6	34.4	45.3	8.9	3.5
	만 25~29 세	(663)	1.6	20.2	42.6	32.6	2.9	3.2	0.8	9.2	32.6	46.9	10.5	3.6
	만 30~34 세	(641)	2.1	21.7	42.2	32.0	2.0	3.1	0.3	7.2	32.0	51.5	9.0	3.6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2.0	18.8	43.3	32.7	3.2	3.2	0.9	9.2	35.2	45.6	9.0	3.5
	중 소 도 시	(434)	2.9	24.6	41.7	27.7	3.0	3.0	0.2	9.4	26.7	55.0	8.7	3.6
	농 어 촌	(321)	1.4	15.6	44.4	34.8	3.8	3.2	0.0	7.8	33.3	46.8	12.0	3.6

구분	사례수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 인력 등의 자원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녀가 취직, 창업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5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5점)	
학력	고 졸 이 하	(494)	2.6	18.6	43.6	32.0	3.1	3.1	0.7	11.3	33.1	45.1	9.8	3.5	
	대 학 / 대 학 원 재	(445)	3.0	16.3	42.5	32.1	6.2	3.2	0.4	10.5	32.7	45.3	11.2	3.6	
	대 졸 이 상	(999)	1.4	21.5	43.2	31.8	2.0	3.1	0.7	7.1	33.1	50.6	8.5	3.6	
고용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2.0	20.5	43.3	31.4	2.9	3.1	0.8	6.8	33.0	50.3	9.1	3.6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1.5	24.1	36.4	33.6	4.4	3.2	0.7	12.3	33.6	43.5	9.9	3.5	
	비임금근로자	(142)	4.0	19.9	42.3	30.6	3.3	3.1	0.0	8.5	29.5	49.4	12.6	3.7	
	일자리 없음	(576)	2.0	16.0	45.9	32.6	3.5	3.2	0.5	11.5	33.7	45.2	9.1	3.5	
직장유형	민 간	(1,207)	2.3	21.7	41.8	31.0	3.2	3.1	0.6	8.2	33.2	48.4	9.6	3.6	
	정부/공공기관	(125)	0.0	15.3	45.1	36.5	3.0	3.3	0.6	6.2	29.1	54.0	10.0	3.7	
	프 리 랜 서	(30)	2.8	13.6	38.6	40.1	4.9	3.3	2.8	6.2	25.6	55.9	9.5	3.6	
	일자리 없음	(576)	2.0	16.0	45.9	32.6	3.5	3.2	0.5	11.5	33.7	45.2	9.1	3.5	
주거 상태	동 거	(1,160)	2.1	16.4	43.2	34.7	3.6	3.2	0.8	10.4	34.7	46.0	8.1	3.5	
	비동거/독립	(778)	2.1	24.2	43.1	27.9	2.8	3.1	0.4	6.9	30.6	50.7	11.4	3.7	
주거점유 형태	자 가	(111)	1.0	26.2	39.9	32.1	0.9	3.1	0.0	7.0	29.9	53.5	9.6	3.7	
	전 · 월 세	(640)	2.2	24.4	43.1	27.2	3.1	3.1	0.4	6.8	31.0	50.3	11.5	3.7	
	기 타	(27)	5.2	9.4	55.5	27.9	1.9	3.1	0.0	11.2	22.3	50.9	15.6	3.7	
	부 모 동 거	(1,160)	2.1	16.4	43.2	34.7	3.6	3.2	0.8	10.4	34.7	46.0	8.1	3.5	
	낯 은 편	(254)	2.4	21.5	46.3	25.9	3.9	3.1	0.7	10.7	35.9	42.3	10.3	3.5	
부모소득 수준	중 간	(1,589)	2.2	19.4	42.8	32.8	2.9	3.2	0.6	8.9	32.8	49.2	8.4	3.6	
	높 은 편	(95)	0.0	15.4	39.8	35.9	8.9	3.4	0.0	5.5	26.3	41.8	26.3	3.9	
청년정책 지원 여부	있 음	(90)	2.4	13.0	44.2	38.7	1.8	3.2	0.0	5.1	39.6	42.6	12.6	3.6	
	없 음	(1,848)	2.1	19.9	43.1	31.6	3.3	3.1	0.7	9.2	32.7	48.2	9.3	3.6	

한편, ‘내가 지금까지 얻은 사회적 성취에는 부모의 도움이 컸다’는 응답에 44.8%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9.9%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전체 54.7%가 현재 자신들의 사회적 성취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과 지원을 많이 받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청년들이 경쟁을 통해 무엇인가를 획득할 때 스스로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부모 영향이 상당수 투입되었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적 성취를 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얻은 사회적 성취에는 부모의 도움이 컸다



그림 IV-8. 청년의 자립 및 사회적 성취에 대한 공정 인식

표 IV-11. 청년의 자립 및 사회적 성취에 대한 공정 인식

구분		사례수	내가 지금까지 얻은 사회적 성취에는 부모의 도움이 컸다					평균 (점/5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938)	1.3	9.2	34.9	44.8	9.9	3.5
성별	남 자	(1,002)	1.2	9.6	35.6	43.5	10.1	3.5
	여 자	(936)	1.3	8.7	34.1	46.3	9.6	3.5
연령	만 19~24세	(634)	1.6	7.8	31.1	49.1	10.5	3.6
	만 25~29세	(663)	1.2	10.6	34.7	43.0	10.4	3.5
	만 30~34세	(641)	1.0	9.0	38.8	42.6	8.7	3.5
도시규모	대 도시	(1,183)	1.2	8.9	37.3	43.0	9.6	3.5
	중 소 도시	(434)	1.5	10.8	26.8	52.7	8.1	3.6
	농 어 촌	(321)	1.2	8.1	37.0	40.7	13.1	3.6
학력	고 졸 이 하	(494)	1.6	11.2	40.3	38.2	8.7	3.4
	대학/대학원 재학	(445)	1.3	6.9	29.4	47.9	14.5	3.7
	대 졸 이 상	(999)	1.1	9.1	34.5	47.0	8.4	3.5
고용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1.5	9.7	37.3	42.4	9.1	3.5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0.7	7.3	34.0	48.3	9.6	3.6
	비임금근로자	(142)	0.7	11.4	29.0	49.5	9.5	3.6
	일 자리 없음	(576)	1.1	8.5	32.6	46.4	11.4	3.6
직장유형	민 간	(1,207)	1.3	9.8	35.9	43.9	9.1	3.5
	정부/공공기관	(125)	0.6	6.3	36.6	46.3	10.2	3.6
	프 리 랜 서	(30)	2.8	6.3	30.6	48.3	12.0	3.6
	일 자리 없음	(576)	1.1	8.5	32.6	46.4	11.4	3.6
주거 상태	동 거	(1,160)	1.1	8.9	32.9	45.8	11.3	3.6
	비 동 거 / 독 립	(778)	1.5	9.5	37.8	43.5	7.8	3.5

구분			사례수	내가 지금까지 얻은 사회적 성취에는 부모의 도움이 컸다					평균 (점/5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주거점유 형태	자 가	(111)	2.1	6.2	34.1	51.4	6.1	3.5	
	전 · 월 세	(640)	1.4	10.2	38.3	42.0	8.1	3.5	
	기 타	(27)	0.0	5.0	37.8	52.0	5.2	3.6	
	부 모 동 거	(1,160)	1.1	8.9	32.9	45.8	11.3	3.6	
부모소득 수준	낮 은 편	(254)	3.1	13.5	40.7	35.3	7.5	3.3	
	중 간	(1,589)	1.0	8.6	33.9	46.8	9.7	3.6	
	높 은 편	(95)	0.0	4.4	34.2	39.5	21.8	3.8	
청년정책 지원 여부	있 음	(90)	3.4	8.5	37.3	43.1	7.7	3.4	
	없 음	(1,848)	1.2	9.2	34.8	44.9	10.0	3.5	

(6)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그림 IV-9】는 교육정책에 있어서 응답자들의 공정 인식을 살펴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43.8%의 응답자들이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1%,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6.3%였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3.0%, 그렇다는 응답은 35.8%로 나타났다. 한편,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제일 높았으며, 뒤이어 보통 수준이라는 인식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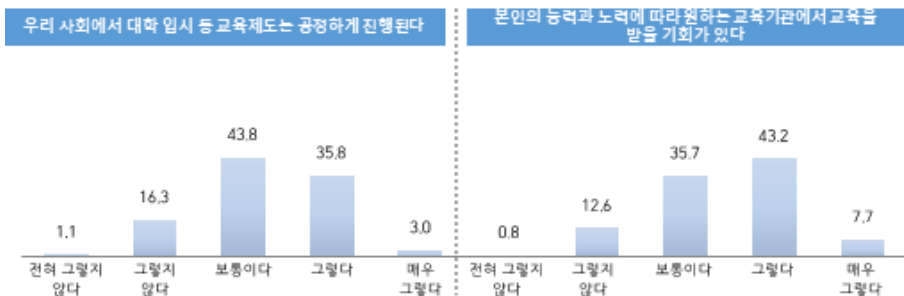


그림 IV-9.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표 IV-12.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수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 등 교육제도는 공정하게 진행된다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5점)
전		체	(1,938)	1.1	16.3	43.8	35.8	3.0	3.2	0.8	12.6	35.7	43.2	7.7	3.4
성별	남	자	(1,002)	1.0	16.8	42.5	36.0	3.7	3.2	0.6	13.4	35.5	42.0	8.5	3.4
	여	자	(936)	1.2	15.7	45.2	35.5	2.3	3.2	1.0	11.8	35.9	44.5	6.8	3.4
연령	만 19 ~ 24 세		(634)	0.8	13.8	44.2	37.6	3.7	3.3	0.7	10.7	32.5	48.4	7.6	3.5
	만 25 ~ 29 세		(663)	1.7	17.4	42.1	36.5	2.4	3.2	0.8	13.1	39.1	39.4	7.6	3.4
	만 30 ~ 34 세		(641)	0.9	17.6	45.1	33.3	3.1	3.2	0.9	14.1	35.2	41.9	7.9	3.4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1.1	15.0	42.0	39.1	2.9	3.3	0.7	11.2	36.2	44.3	7.6	3.5
	중 소 도 시		(434)	1.0	22.1	46.8	27.0	3.1	3.1	0.5	15.8	35.0	41.3	7.4	3.4
	농 어 촌		(321)	1.4	13.3	46.3	35.6	3.5	3.3	1.4	13.5	34.9	41.5	8.6	3.4
학력	고 졸 이 하		(494)	0.9	13.7	47.6	34.6	3.1	3.3	0.9	10.3	43.2	37.3	8.3	3.4
	대학/대학원 재학		(445)	1.1	13.8	40.5	41.0	3.6	3.3	0.3	9.6	31.1	50.0	9.0	3.6
	대 졸 이 상		(999)	1.2	18.8	43.3	34.0	2.7	3.2	1.0	15.3	33.8	43.1	6.8	3.4
고용형태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0.9	18.2	43.0	34.7	3.2	3.2	0.7	14.6	35.8	41.6	7.3	3.4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0.8	12.8	46.2	36.7	3.5	3.3	0.8	10.7	36.2	46.3	6.0	3.5
	비임금근로자		(142)	0.0	12.2	36.6	49.0	2.2	3.4	0.4	8.5	33.8	50.0	7.4	3.6
	일 자리 없음		(576)	1.9	15.5	46.0	33.8	2.8	3.2	1.1	11.2	35.7	42.9	9.2	3.5
직장유형	민 간		(1,207)	0.8	16.5	42.2	37.5	3.1	3.3	0.6	12.8	35.8	43.4	7.3	3.4
	정부/공공기관		(125)	1.1	18.7	49.5	26.8	3.9	3.1	1.7	18.3	32.7	42.7	4.5	3.3
	프 리 랜 서		(30)	0.0	12.7	45.4	38.2	3.7	3.3	0.0	13.1	40.7	38.1	8.1	3.4
	일 자리 없음		(576)	1.9	15.5	46.0	33.8	2.8	3.2	1.1	11.2	35.7	42.9	9.2	3.5
주거 상태	동 거		(1,160)	0.9	14.7	43.3	38.2	2.9	3.3	0.5	12.5	35.1	43.2	8.7	3.5
	비 동 거 / 독 립		(778)	1.4	18.7	44.5	32.2	3.2	3.2	1.2	12.9	36.6	43.1	6.3	3.4
주거점유 형태	자 가		(111)	0.0	22.2	43.9	32.8	1.1	3.1	0.0	11.5	40.4	44.9	3.2	3.4
	전 · 월 세		(640)	1.7	18.6	44.0	32.3	3.4	3.2	1.5	13.2	36.4	42.2	6.6	3.4
	기 타		(27)	0.0	5.0	60.3	28.1	6.5	3.4	0.0	8.3	23.4	58.6	9.6	3.7
	부 모 동 거		(1,160)	0.9	14.7	43.3	38.2	2.9	3.3	0.5	12.5	35.1	43.2	8.7	3.5
부모소득 수준	낮 은 편		(254)	2.5	22.4	44.2	28.2	2.7	3.1	1.4	14.6	37.2	41.3	5.5	3.4
	중 간		(1,589)	0.9	15.6	44.0	36.7	2.9	3.3	0.7	12.6	35.8	43.7	7.3	3.4
	높 은 편		(95)	1.2	9.2	38.9	44.2	6.6	3.5	0.0	7.6	28.8	39.5	24.0	3.8
청년정책 지원 여부	있 음		(90)	1.3	15.9	31.1	46.0	5.6	3.4	1.4	6.7	35.4	48.4	8.1	3.6
	없 음		(1,848)	1.1	16.3	44.4	35.3	2.9	3.2	0.8	12.9	35.7	42.9	7.7	3.4

(7)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공정 인식

위의 항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림 IV-10】에서부터 【그림 IV-12】에서는 각각 일자리 정책, 주거정책, 교육정책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본 결과를 나타냈다.

먼저, 공정하지 않은 영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에서 자격증 취득, 면접 합격, 임금협상 등의 모든 고용절차는 채용비리나 불공정 특례 없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1.5%,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25.5%로, 총 27.0%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맞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회가 충분하다’는 질문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자가 41.5%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4%,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4.8%였다.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6.7%, 그렇다는 응답의 비율은 24.7%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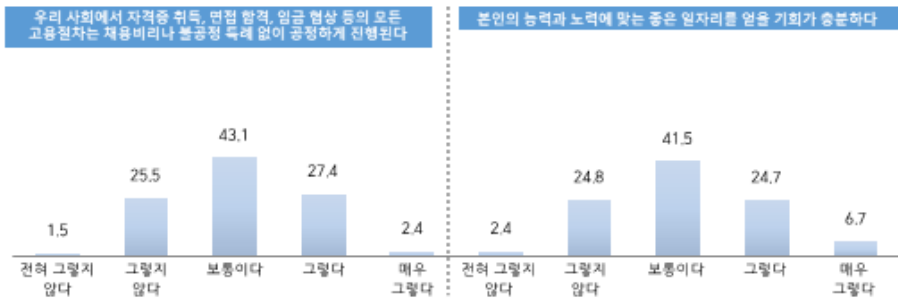


그림 IV-10. 청년 일자리 정책(채용절차)에 대한 공정 인식 (계속)

표 IV-13. 청년 일자리 정책(채용절차)에 대한 인식 (계속)

구분		사례수	우리 사회에서 자격증 취득, 면접 합격, 임금협상 등의 모든 고용절차는 채용비리나 불공정 특례 없이 공정하게 진행된다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충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5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5점)	
전 체		체 (1,938)	1.5	25.5	43.1	27.4	2.4	3.0	2.4	24.8	41.5	24.7	6.7	3.1	
성별	남 자	(1,002)	1.4	26.0	43.6	26.7	2.3	3.0	2.4	26.1	41.0	23.2	7.2	3.1	
	여 자	(936)	1.6	25.0	42.7	28.2	2.5	3.1	2.5	23.2	41.9	26.4	6.0	3.1	
연령	만 19 ~ 24 세	(634)	1.0	24.3	43.8	28.0	2.9	3.1	1.8	24.2	43.1	24.0	6.9	3.1	
	만 25 ~ 29 세	(663)	2.6	27.0	40.9	27.9	1.7	3.0	2.4	24.7	40.7	24.8	7.4	3.1	
	만 30 ~ 34 세	(641)	0.9	25.2	44.8	26.4	2.6	3.0	3.1	25.3	40.7	25.2	5.7	3.1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1.2	22.8	44.2	29.6	2.2	3.1	1.8	23.4	40.4	28.0	6.3	3.1	
	중 소 도 시	(434)	2.6	35.8	39.1	20.2	2.3	2.8	4.5	29.6	40.8	20.8	4.4	2.9	
	농 어 촌	(321)	1.4	21.5	44.8	29.2	3.1	3.1	2.0	23.1	46.1	18.0	10.8	3.1	
학력	고 졸 이 하	(494)	0.8	22.5	47.1	27.0	2.6	3.1	1.7	26.0	39.2	26.4	6.7	3.1	
	대학/대학원 재학	(445)	1.4	22.9	43.5	29.2	3.0	3.1	2.2	20.7	45.2	23.4	8.6	3.2	
	대 졸 이 상	(999)	1.9	28.3	40.9	26.9	2.0	3.0	3.0	25.9	41.0	24.4	5.7	3.0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정규직	(982)	1.3	26.7	42.6	27.4	2.0	3.0	1.7	24.8	41.6	25.3	6.6	3.1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238)	1.1	26.9	47.0	22.1	2.8	3.0	4.3	25.3	39.9	25.9	4.6	3.0	
	비임금근로자	(142)	1.4	19.2	41.0	36.0	2.5	3.2	3.7	25.3	37.9	29.2	4.0	3.1	
	일 자 리 없 음	(576)	2.1	24.6	43.0	27.5	2.8	3.0	2.7	24.3	42.7	22.0	8.2	3.1	
직장유형	민 간	(1,207)	1.1	25.8	42.6	28.2	2.2	3.1	2.0	24.7	41.1	26.3	6.0	3.1	
	정부/공공기관	(125)	2.6	28.6	46.8	19.1	2.8	2.9	5.0	29.3	37.3	21.1	7.3	3.0	
	프 리 랜 서	(30)	3.2	19.7	52.3	24.9	0.0	3.0	6.3	17.8	49.9	22.7	3.2	3.0	
	일 자 리 없 음	(576)	2.1	24.6	43.0	27.5	2.8	3.0	2.7	24.3	42.7	22.0	8.2	3.1	

다음에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대해 응답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지역인재할당제(54.9%)와 블라인드 채용 확대(63.4%) 정책에 대해서 50% 이상의 응답자들이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인재할당제와 블라인드 채용 사례가 청년들이 볼 때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블라인드 채용의 경우 성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의 경우 그렇다(52.1%)와 매우 그렇다(12.0%)로 전체 64.1%가 블라인드 채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그렇다(47.6%), 매우 그렇다(14.9%)로 62.5%가 해당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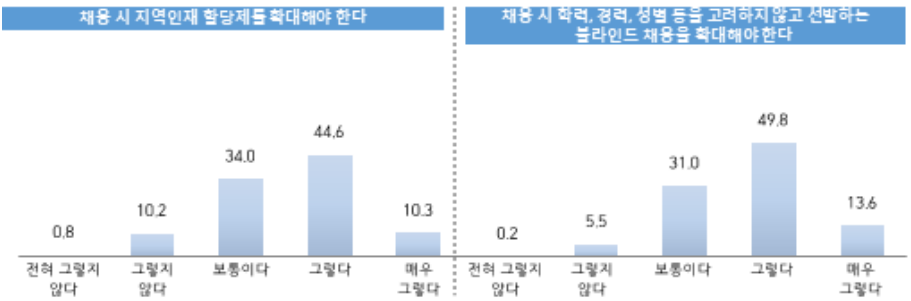


그림 IV-11. 일자리 정책(제도운영)에 대한 공정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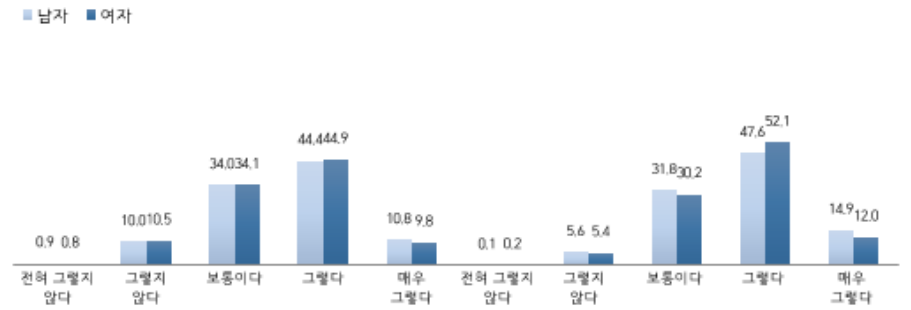


그림 IV-12. 성별에 따른 일자리 정책(제도운영)에 대한 공정 인식

표 IV-14. 일자리 정책(제도운영)에 대한 공정 인식

구분		사례수	채용 시 지역인재할당제를 확대해야 한다						채용 시 학력, 경력, 성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5점)
전 체		(1,938)	0.8	10.2	34.0	44.6	10.3	3.5	0.2	5.5	31.0	49.8	13.6	3.7
성별	남 자	(1,002)	0.9	10.0	34.0	44.4	10.8	3.5	0.1	5.6	31.8	47.6	14.9	3.7
	여 자	(936)	0.8	10.5	34.1	44.9	9.8	3.5	0.2	5.4	30.2	52.1	12.0	3.7
연령	만 19 ~ 24 세	(634)	0.8	8.4	35.5	44.4	10.9	3.6	0.0	5.6	29.4	49.5	15.5	3.8
	만 25 ~ 29 세	(663)	0.6	11.3	33.6	44.6	9.9	3.5	0.0	5.3	32.8	48.3	13.7	3.7
	만 30 ~ 34 세	(641)	1.1	10.8	33.0	44.9	10.2	3.5	0.5	5.6	30.9	51.5	11.6	3.7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0.5	9.3	33.9	45.6	10.6	3.6	0.1	4.4	31.1	50.9	13.5	3.7
	중 소 도 시	(434)	1.6	15.5	31.9	42.4	8.6	3.4	0.4	7.8	32.2	45.2	14.4	3.7
	농 어 촌	(321)	0.8	6.4	37.4	43.7	11.7	3.6	0.0	6.3	29.4	51.6	12.7	3.7
학력	고 졸 이 하	(494)	1.1	9.7	35.0	43.6	10.7	3.5	0.0	6.8	32.3	45.9	15.1	3.7
	대학/대학원 재학	(445)	0.1	9.6	32.4	45.5	12.4	3.6	0.0	5.2	29.8	49.3	15.7	3.8
	대 졸 이 상	(999)	1.0	10.8	34.3	44.7	9.2	3.5	0.3	5.0	31.0	52.0	11.8	3.7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정규직	(982)	0.9	10.5	33.5	45.8	9.3	3.5	0.1	5.2	32.7	49.0	13.0	3.7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238)	0.0	13.0	27.9	46.4	12.7	3.6	0.0	4.6	28.0	53.6	13.8	3.8
	비임금근로자	(142)	0.9	6.5	35.0	44.2	13.5	3.6	0.0	3.6	33.6	51.5	11.3	3.7
	일 자 리 없 음	(576)	1.1	9.5	37.2	41.8	10.4	3.5	0.4	6.8	28.8	49.1	14.9	3.7
직장유형	민 간	(1,207)	0.7	10.9	31.6	46.8	9.9	3.5	0.1	5.0	31.5	50.6	12.8	3.7
	정부/공공기관	(125)	1.1	7.5	38.2	40.5	12.7	3.6	0.0	4.7	34.7	45.4	15.1	3.7
	프 리 랜 서	(30)	0.0	3.1	55.1	24.5	17.3	3.6	0.0	2.9	39.1	46.1	12.0	3.7
	일 자 리 없 음	(576)	1.1	9.5	37.2	41.8	10.4	3.5	0.4	6.8	28.8	49.1	14.9	3.7

(8)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공정 인식

끝으로, 【그림 IV-13】은 주거정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공정성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주택분양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은 공정하다’는 응답에 45.8%의 응답자들이 이를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1.8%,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18.4%로 나타나 총 20.2%의 응답자가 주거정책 가운데 주택분양이나 임대차 계약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3.0%, 그렇다는 응답은 30.9%로 기록되어, 33.9%의 응답자가 주거정책 영역에서의 공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본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원하는 주거환경의 집에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질문한 문항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자는 33.2%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7.6%,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8.0%로 35.6%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원하는 주거환경에서 살기 어렵다는 응답을 하였다.

반면에 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4.9%,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6.2%로 31.1%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원하는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심층면담에서도 나타났듯이 주거 매매와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공적영역에서는 보호해줄 수 있을 뿐 매매나 임대 계약에 있어서는 자신의 능력, 노력으로 행하는 사적영역에서의 행위라는 인식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에 따른 반증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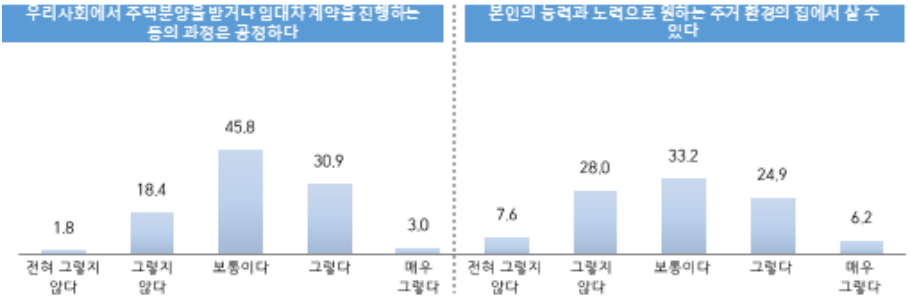


그림 IV-13.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공정 인식

표 IV-15.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공정 인식

구분		사례수	우리 사회에서 주택분양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등의 과정은 공정하다						본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원하는 주거 환경의 집에서 살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5점)
전체		(1,938)	1.8	18.4	45.8	30.9	3.0	3.2	7.6	28.0	33.2	24.9	6.2	2.9
성별	남	자 (1,002)	2.1	19.4	44.5	30.8	3.3	3.1	7.9	27.8	33.0	24.4	6.9	3.0
	여	자 (936)	1.6	17.3	47.3	31.0	2.7	3.2	7.4	28.3	33.5	25.5	5.3	2.9
연령	만 19 ~ 24 세	(634)	2.6	16.3	48.3	29.9	2.9	3.1	7.0	26.2	34.4	27.6	4.9	3.0
	만 25 ~ 29 세	(663)	1.6	19.7	43.4	32.1	3.3	3.2	8.6	27.8	33.8	22.8	7.0	2.9
	만 30 ~ 34 세	(641)	1.4	19.1	46.0	30.6	2.9	3.2	7.3	30.1	31.5	24.5	6.6	2.9

구분	사례수	우리 사회에서 주택분양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등의 과정은 공정하다							본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원하는 주거 환경의 집에서 살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5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5점)	
도시규모	대 도 시	(1,183)	1.9	17.4	44.9	33.3	2.5	3.2	6.9	26.7	33.3	27.3	5.8	3.0	
	중 소 도 시	(434)	2.0	25.1	45.7	23.6	3.6	3.0	11.0	34.0	30.4	20.4	4.2	2.7	
	농 어 촌	(321)	1.4	13.2	49.6	31.8	4.0	3.2	5.7	24.8	36.7	22.5	10.3	3.1	
학력	고 졸 이 하	(494)	0.9	16.8	49.3	29.7	3.2	3.2	6.9	25.9	34.6	25.5	7.0	3.0	
	대학/대학원 재학	(445)	3.1	15.6	46.7	31.2	3.5	3.2	6.1	24.0	35.9	28.3	5.7	3.0	
	대 졸 이 상	(999)	1.8	20.5	43.6	31.4	2.7	3.1	8.7	31.0	31.2	23.1	5.9	2.9	
주거 상태	동	(1,160)	2.2	17.1	44.2	33.5	3.0	3.2	7.0	26.0	33.1	26.5	7.4	3.0	
	비 동 거 / 독 립	(778)	1.3	20.2	48.3	27.0	3.1	3.1	8.6	31.0	33.4	22.6	4.4	2.8	
주거점유 형태	자 가	(111)	2.7	25.9	38.3	32.4	0.7	3.0	12.6	27.4	28.8	27.3	4.1	2.8	
	전 · 월 세	(640)	1.2	19.6	49.3	26.5	3.4	3.1	7.9	31.5	34.4	21.8	4.3	2.8	
	기 타	(27)	0.0	12.8	64.4	18.2	4.6	3.2	9.7	33.0	25.7	23.7	8.0	2.9	
	부 모 동 거	(1,160)	2.2	17.1	44.2	33.5	3.0	3.2	7.0	26.0	33.1	26.5	7.4	3.0	
부모소득 수준	낮 은 편	(254)	2.9	23.1	46.8	24.7	2.5	3.0	13.9	28.8	31.1	21.7	4.5	2.7	
	중 간	(1,589)	1.8	17.8	46.1	31.6	2.7	3.2	6.6	28.9	33.4	25.1	6.0	3.0	
	높 은 편	(95)	0.0	14.6	37.4	37.9	10.1	3.4	6.5	8.4	36.5	33.8	14.8	3.4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청년 응답자들은 청년정책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대해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공정 인식에 대한 응답에서도 보통 수준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56.1%인 점을 고려할 때 청년들이 인식하는 공정 인식은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과 비교했을 때 상당 수준 높은 편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한편, 각 영역별 항목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 중, 특히 일자리와 관련된 영역에서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년 응답자들이 일자리 분야가 가장 공정하지 않은 영역이라고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로서, 청년들은 공정성 이슈에 있어 일자리 분야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공정에 대한 체감을 가장 높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년 관점에서 본 ‘공정’: 심층면담

1) 조사 개요

설문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 청년들의 경험에 기반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 대상 1:1 심층면담(IDI)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청년들의 의견도 집중해서 청취할 수 있도록 그룹을 구성하였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은 설문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청년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한 이후, 청년정책 참여 여부 및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 등을 고려하여 청년이 인식하고 체감하는 공정에 대한 인식과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자신이 경험한 불공정 사례 등을 중심으로 청년의 삶 전반에 걸쳐 영역별(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문화, 참여) 상황에 대입하여 청년층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IV-16. 청년 대상 1:1 심층면담 구성 및 내용

주요 요소	내 용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중 면담 대상 청년 선발
면담참여자 수	1:1 면담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청년정책 수혜 경험 유무 및 연령, 성, 지역, 소득별 청년 특성 등을 고려
면담방식 (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개별 혹은 집단면담)	반구조화된 면접방식을 통한 집단면담
면담시간 및 횟수	1인당 60분씩 1회 면담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면접 시 녹음하여 전사
면담자	연구진
심층면담 내용(안)	◦ 청년의 공정 인식 태도 ◦ 공정에 대한 기준 인식 ◦ 청년정책 영역별(교육, 일자리, 주거 등) 공정 인식 ◦ 청년정책 영역별(교육, 일자리, 주거 등) 공정 평가 ◦ 청년 삶에서의 불공정 경험 사례 ◦ 청년의 사회진입과정에서 필요한 공정 기준 등

2) 심층면담조사 참여자 특성

심층면담조사를 위한 참여자 구성은 일정 조건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면담 참여자는 온라인 설문조사 때 심층면담 참여 여부를 추가로 질문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을 하였다. 그 이후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조건을 토대로 사전에 안내를 하고 면담 참여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한 이후, 참여자를 선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직업, 주거형태 및 청년정책 참여 여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연령은 19~29세와 30~34세를 기준으로 삼아 각 연령 쿼터가 50%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현 주거지역과 더불어 성장시기 거주한 지역,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참여자들의 교육(입시) 현황을 살펴보는 것에 고민을 기울였다. 이는 공정에 대한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로서 자신이 속한 상황에 따라 공정을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에 착안하였다. 또한 정부신뢰도가 공정을 평가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시행한 청년정책 참여 여부 또한 참여자를 제외하는 데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총 12명의 심층면담조사 참여자가 선정되었다. 이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IV-17. 심층면담조사 참여자 특성

연번	성별	연령	학력	현 거주지역 (성장지역)	근로형태	주거 형태	청년정책 참여 여부
1	남	29	대졸	서울(수도권)	무직	자취	아니오
2	여	25	대졸	서울(비수도권)	정규직	자취	예
3	여	30	대졸	경기(수도권)	비정규직	동생과 동거	예
4	여	26	대재	서울(수도권)	무직	부모와 동거	예
5	남	22	대재	경기(비수도권)	비정규직	자취	아니오
6	여	31	대졸	전남(수도권)	정규직	자취	예
7	남	34	고졸	경북(비수도권)	비정규직	부모와 동거	예
8	남	29	대졸	서울(수도권)	정규직	자가소유	예
9	여	33	대졸	전남(비수도권)	비정규직	자가소유	아니오
10	여	32	대졸	부산(비수도권)	무직	전세거주	아니오
11	남	32	대졸	전남(비수도권)	정규직	자취	예
12	남	24	대졸	제주(비수도권)	무직	부모와 동거	아니오

그 밖에 심층면담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이는 사회의 공정가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특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준다.

표 IV-18. 심층면담 참여자 특성

연번	성별	연령	근로형태	청년정책 참여	개인 특성
1	남	29	무직	아니오	비수도권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로 서울권 대학 진학을 함. 현재 서울에 자취하면서 공기업 취업 준비 중임
2	여	25	정규직	예	비수도권 지역에서 예체능 전공으로 대입을 준비하고 지방대에 진학을 함. 현재 서울에서 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상황이며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음. 취업 준비 기간에 정부에서 온라인 상품권을 지원해주는 사업에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음
3	여	30	비정규직	예	수도권(경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권 대학 진학을 함. 현재 학원강사(프리랜서)를 하면서 동생과 경기도에서 함께 자취하며 대기업 취업과 결혼 준비 중임. 대학 졸업 이후 취업 준비를 할 때 구직지원금과 청년 대상 전세대출 지원 사업을 신청한 경험이 있음
4	여	26	무직	예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권 대학 진학을 함. 인문학(불어) 전공에서 산업공학으로 전과하여 편입을 한 이후 졸업 예정된 상황임.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임
5	남	22	비정규직	아니오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수도권 대학 진학을 함. 예체능계로 진학하였지만 군복무 이후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임
6	여	31	정규직	예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서울권 대학을 졸업함. 해외기업 근무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지방 이전한 공기업에 취업하여 동일 지역에서 자취 중임. 이직을 준비하는 기간 중 정부의 취업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
7	남	34	비정규직	예	서울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 지방으로 이사감. 고졸 취업으로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현재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취업 기간 중 계약이 변경되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음. 계속해서 지방에서 거주할 의사가 있음. 취업준비를 할 때 지자체에서 청년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음

연번	성별	연령	근로형태	청년정책 참여	개인 특성
8	남	29	정규직	예	수도권에서 태어나 고졸 취업을 하면서 사이버대학을 졸업함. 투잡을 통해 모은 목돈으로 수도권에 자가(아파트)를 가지고 있음. 아파트를 매매할 때 청년대출을 이용한 경험 있음
9	여	33	비정규직	아니오	경기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2년제)을 졸업해서 간호사(정규직)로 근무하다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둠. 현재는 파트타임으로 간호사를 하고 있으나 출산·양육으로 휴직을 계획하고 있음
10	여	32	무직	아니오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근 지역 내 전문대(3년제)를 졸업하고 이후 취업(정규직)과 동시에 방송통신대(4년제)를 졸업함. 현재는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직장을 그만둔 상황임
11	남	32	정규직	예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역 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직장(비정규직)에 취직함. 이후 서울에서 자취를 하다가 다시 지방으로 이직(정규직)을 하게 되어 이사를 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청년창업 경험도 있음
12	남	24	무직	아니오	지방에서 태어나서 대학도 지역대학에 입학함. 재수할 때 서울에 있는 입시학원을 다녔으며 그 당시에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대입 준비를 하였음. 현재는 공익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후 임용고시 준비 예정임

3) 심층면담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의 심층면담은 설문조사의 내용을 심화해서 살펴보고자 설문문항의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하였다.

표 IV-19. 면담조사 항목

구분	면담조사 내용
공정 개념	본인이 생각하는 공정이란 개인/사회 차원에서의 공정
공정 경험 및 인식	공정/불공정 경험 사례 공정/불공정 구분 인식 이유
교육 관련 현황	(대학 재학 이상) 대학입시 과정에서의 어려움(수능, 수시 등), 대학입시에 대한 공정성 인식, 입학 이후 대학 생활에서의 어려움, 대학 평가에서의 공정성 등 (대학 미진학) 미진학 사유 및 인식, 고졸 취업에 대한 경험 및 평가

구분	면담조사 내용
교육 경험 및 인식	공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공교육에 대한 인식 사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사교육에 대한 인식 대학 뿐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서 경험한 공정성 인식 우리 사회의 입시 기회의 공정성 인식 및 평가 일자리 진입 이전 교육(훈련 포함)에 대한 공정성 인식 및 평가
교육 관련 정책 인식 및 요구	정부 및 지자체 청년정책(교육 관련) 참여 여부 정책 참여 시 공정성에 대한 인식 정책 미 참여 시 교육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현재 시행 중인 교육정책, 청년정책에 대한 공정 인식 취약계층 대상 교육정책, 청년정책에 따른 공정 인식 향후 개선 사항
일자리 관련 현황	면담자의 취·창업 상태 (취·창업자) 취·창업과정에서의 어려움, 취·창업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공정성 인식, 취·창업 이후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 직장 내 승진 등 평가에서의 공정성 등 (미취업자) 미취업 이유, 취업 시도 여부, 취·창업 과정 및 절차에서의 어려움, 취·창업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공정성 인식 - 취·창업 준비 과정에서 스펙 마련을 위한 노력
일자리 경험 및 인식	취·창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 관련 전반에서 경험한 공정성 인식 우리 사회의 취·창업 기회의 공정성 인식 및 평가 일자리 진입 과정에 대한 공정성 인식 및 평가 현 정부에서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정책, 사업 등 이해 정도)
일자리 정책 인식 및 요구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공정 인식 청년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정책에 따른 공정 인식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 정책 참여 여부 정책 참여 시 공정성에 대한 인식, 일자리 정책 사업 경험 및 효용성 정책 미 참여 이유 및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향후 개선 사항
주거 상황	주거 상태, 동거인 및 비용 지원 여부 - 주거 비용 및 부담 정도 집의 의미, 이주 의향 및 선호 조건
주거 경험 및 인식	주택 구입 의사 및 시기 주거지 선택 시 기준 주택 가격에 대한 인식 청년들의 주거 마련을 위한 기성세대의 도움에 대한 인식
주거정책 인식 및 요구	현재 시행 중인 주거정책에 대한 공정 인식 청년 취약계층 대상 주거정책에 따른 공정 인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거정책 참여 여부 정책 참여 시 공정성에 대한 인식, 주거정책 사업 경험 및 효용성 정책 미 참여 이유 및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향후 개선 사항

4) 심층면담 분석 결과

심층면담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청년들의 경험과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1) 공정

가. 공정에 대한 인식

가) 결과보다 기회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동등한 도전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
절차적으로 합리적이고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진행되면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결과적인 측면보다는 시작, 과정 차원에서 기회 제공에 가치를 부여하는 측면이 강하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합리성에 대한 추가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부분들을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출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여성들의 경우 기회 제공 측면을 우선시하는 반면(여: 35.7%, 남: 33.2%) 남성들은 과정에서의 절차 측면을 강조(여: 22.8%, 남: 25.0%)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저는 시작점의 공정인 것 같아요. 결과는 자기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애초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 (20대 수도권 여자 4)
- 공정이라는 개념은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거 같고 일상에서 저희같은 사람들이 쓸 때는 뭔가 부당하게 특혜를 받는 사람을 목격했을 때 쓰는거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공정은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고 합의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게 중요한거 같아요(30대 비수도권 여자6)
- 합리적인 것도 이걸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기준에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면 불공정하고 이렇게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공정한 것 같아요. (20대 수도권 여자 2)
- 공정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와 가능성인거 같아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어느 정도 공정한 사회가 됐다고 생각해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대학 잘 가는거 말고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성공한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돈 잘벌고 성공하는거 보면 기회가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유튜브, SNS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자기가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20대 수도권 남자5)

한편, 이와 같이 관점이 다른 차원의 사례도 존재하였다. 우리 사회 내 출발선이 동일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었다. 이와 같은 답변을 한 청년의 경우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는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면도 보였다.

- 복지적인 측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발선을 같게 해주는 거는 저는 옳다고 생각은 하지만, 출발선이 다른 거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분노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20대 비수도권 남자 12)

출발선에 대한 공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드워킨의 ‘자원의 평등이론’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출발선상에서 자원을 평등하게 분배하되, 이후 경쟁과정에서 당사자 본인의 선택 결과에 따라 발생한 불평등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불운에 따른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제시한 내용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청년들이 인식하는 합리성에 대한 논의가 상식(통념)에 기반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다른 세대와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2차 데이터 결과(세대 간 비교)와의 비교가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또한 미디어/정치권에서 보이는 청년세대의 공정성은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설문과 면담자료를 토대로 볼 때 청년들이 추구하는 공정 또한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기회 보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대적으로 다름을 인정한 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공정에 대한 관점 가운데 Greenberg(1987)가 제시한 절차공정성(조직공정성)은 공정성이 상대적인 차원에서 조직 내에서 구성원이 받는 대우에 대한 느낌이나 인식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청년들이 인식하는 공정은 절차공정성에 대한 세부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정해진 조직(공동체)에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감정적인 차원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절대적인 가치로서 존재하기보다는 상대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차등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 공정은 맞는건 맞고 다른건 다르다고 인정해주는거, 너나 나나 다른 것도 인정해주고

맞는 것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틀린게 아니라 다르다 그런 느낌같아요
(30대 비수도권 남자 11)

- 공정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저 같으면 이게 공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20대 수도권 남자 8)
- 저는 남들과 다른 게 다 똑같은 때 결과가 다르면 그건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20대 비수도권 남자 12)
- 저의 경우를 보면 부모님의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족 생활 수준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국가장학금 같은 거나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는 우선순위에서 놓치게 되니까, 제가 앞으로 생활을 한다고 해서 신혼부부 우대 등과 같이 청년 우대 지원정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아주 유복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런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은 아쉽죠. 이해는 하나, 모두 다 받을 수 없다는 걸 이해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또, 몇 백 몇 천이 아쉬운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선순위에서 제외가 되면,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20대 비수도권 남자 12)
- 사실 그게 딜레마예요. 모두한테 공정하려면 그런 거 상관 없이 다 받아야 되는데 그건 안될 것 같아요. 진짜 서류상으로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나도 취약계층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누가 봐도 취약계층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차이 기준점은 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거에 해당이 0.1% 차이로 내가 못 받게 되더라도 그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기준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괜찮아지면 그 기준점을 완화시켜주겠죠. 30% 받던 사람들이 50%가 되고 70%, 80%가 되는 식으로 기준점은 낮출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대 비수도권 여자 10)
- 공정이라고 하는 무조건 불만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불만이 어떻게 보면 나 좀 여유로운데 나 못 받았어 재네 받는 거 배 아픈 게 불만이더라고요.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 그룹을 나눠서 차이를 두고 거기에 맞게 조금씩 이 제도가 달라야 지원하는 게 달라야 효과가 같은 효과를 내서 받는 입장에서 비슷한 효과를 내서 차이를 격차간에 차이를 줄이고 비슷하게 성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공정이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대 수도권 여자 3)

공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때 절차적, 결과적 차원에서 공정 기준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차적인 차원에 대해서 상당수 청년층이 공정 개념을 제시하였다. 한편, 절차적인 차원의 공정을 세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특히 상대적인 관점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특징이 드러났다. 이는 동일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위치에 따라서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에 청년정책에 대한 공정성 평가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영역에 따라 청년들이 체감하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정에 대한 평가 잣대의 엄격한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나. 공정에 대한 경험

가) 공정한 사회에 대한 낮은 기대심리

사회구조, 체제에 있어서 변화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그러한 현실을 비판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가까울수록 공정에 대한 기대감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심재휘 외, 2022). 이와 같은 부분들은 공정한 사회에 대한 회의주의로 빠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가는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의 공정이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또한 개인의 능력과 선택의 결과가 아닌 주어진 환경과 불운에 따라 발생한 어려움에 있어서는 공정의 잣대에 차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공정을 절차적 차원에서 정당한 분배의 개념으로 볼 때 차등적 배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할 수 있지만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취약계층 청년들의 삶에 대한 회의주의와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한 동력으로서 차등적 우대정책이 일정한 수준에서는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군대에 있을 때 집안이 좋은집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군대에서 핸드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 친구만 핸드폰을 사용하고 다른 기회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편하게 생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공정하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그냥 대단한 아버지를 두었구나. 별생각 없었고 부러웠는데 부럽진 않았어요. 부러워하는 감정도 의미가 없으니까 부러워한다고 제가 그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딱히 안했어요(20대 수도권 남자 5)

-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공정하지 않고 공정에만 포커스를 두면 부모님의 재력도 불공정하고 받는 교육 환경도 불공정하고 자기가 다닌 학교의 선생님, 주변 친구들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나중에 대학교 가서 취업할 때도 성별, 나이에서도 불공정하고 자기 인맥이나 집안도 불공정하고 다 불공정한데 불공정하다고 그냥 다 포기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하면 그래도 엄청 성공하고 잘나가진 않더라도 밥벌이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20대 수도권 남자1)
- 공정을 해야 뭔가 노력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내가 죽어라 해도 극복할 수 없는 거라면 박탈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20대 수도권 여자 4)
- 예를 들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공정하다는게 모두 공평해야 하는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정해진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 차이를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공정은 자기가 하는 만큼 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어떠한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지 않으면서 같이 뭐랄까 동등하게 아니면 수직이면 수직으로 그 상황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정한거 같아요. 구분은 되어야 하지만 차별은 되지 않는게 공정한거 같아요(30대 비수도권 여자 9)
- 공정하다는 걸 어릴 때도 많이 나왔던 학교에서도 들었던 건데 공평과 공정의 차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공정과 생각하는 게 모든 그러니까 국민이 있으면 100명이 있으면 100명한테 똑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건 공정이 아니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론적으로 배워왔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진짜 모든 100명한테 똑같은 걸 똑같은 기준으로 제시하면 그건 좋은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라는 답변을 느꼈어요. 제가 속한 계층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과 별개로 정말 간단하게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더라도 애들한테 다 10명을 놓고 수업을 하는데 10명마다 갖고 있는 지식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제가 모두에게 똑같은 수준으로만 수업을 했을 때 결국 흡수하는 양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많이 흡수하고 어떤 아이는 조금 흡수하고 이걸 혜택으로 따지면 어떤 아이는 이 기준으로 많이 가져가고 어떤 아이는 조금밖에 못 가져가는 아이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지속될수록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애네들 학습을 할 때도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뒤서 그룹을 나눠서 맞게 해야 모두에게 같은 좋은 효과가 오는 걸 느꼈어요. (30대 수도권 여자3)

한편 다음과 같이 관점이 다른 차원의 사례도 존재하였다.

- 저는 이 사회의 이런 체계가,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돈 없는 사람들은 조금 부족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도 다르게 나오고 이런 것을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제가 가진 수준에서 제가 노력을 했을 때 딱 합당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불공정하다는 거를 조금, 아까도 제가 계속 말할 때 아쉽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저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 똑같은 점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원래 갖고 있던 신념 또는 이념이라서 불공정하다고는 저는 느끼지는 않습니다. (20대 비수도권 남자 12)

청년층 대상의 정부정책을 중심으로 공정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개념상 혼란을 가져오는 부분이 모두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정책인가에 대한 측면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생각을 토대로 공정을 강조하는 사회를 희망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공정한 사회가 도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에서 공정가치를 강조하면서 시행하는 정책들의 성격이 기회나 절차적인 공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결과적인 차등(양극화)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치중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미디어/정치적 공약 등을 통해 강하게 비춰지고 있어 청년층에게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2) 교육

가. 교육 경험 특성

가) “수도권 vs. 비수도권”으로 구분되는 교육 인프라의 차등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에 있어 공통적으로 지역을 선택하였다. 대체적으로 비수도권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청년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교육 인프라에 대한 동경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대학입시 제도가 공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청년들이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집중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최근에 지방이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지역 소재 대학 출신자에게 채용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공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동시에 자신이 대학입시를 준비할 때 이에 대한 정보나 계획이 없었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 제도가 신설된 것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을 시행하는 것 또한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해서 충분한 유예기간이나 지원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고등학교를 지방에서 나왔는데 저희 지역에는 입시학원이 지역 내 많이 없어 독점으로 있는 곳을 당연히 다녔거든요. 학원을 다녀야 정보도 얻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되게 고심해서 학원을 고르고 성적도 학원에서 관리해주고 부모님들이 학원도 다 비교 분석해줘서 갔다고 들었어요. 특히 미술은 어떤 학원을 고르고 어떤 선생님한테서 배우냐에 따라서 합격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지방에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공정한 출발 기회가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20대 수도권 여자 2)
- 대학입시에서 농어촌 지역을 쓰려면 정말 지방에 가서 인프라도 없는 학교를 다니면서 모든 그런 불편함을 겪어야 하고 확실히 교육의 질이 다를 수 있겠다고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전형은 인원을 적게 뽑고 있어서 농어촌 지역 전형 1명 이런 식으로 인원수가 적으니까 큰 불만은 없었어요. 다만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는 사교육의 돈을 쓴 전형이라고 생각해요. 취약계층 전형보다 재외국민 전형을 보면 중간에 중고등학교 외국으로 유학갔다와서 거기서 쭉 사는게 아니라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입시 때 대학을 쉽게 가는 발판으로 삼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렇게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함을 느꼈던거 같아요(30대 수도권 여자 3)
- 서울 사는 친구들이 교육의 질이 조금 더 좋고 그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경제 사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접근성 같은 게 조금 떨어지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방에 사는 게 아쉽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20대 비수도권 남자 12)

한편, 교육에 있어 지역 불균등의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지역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수도권 지역과 동일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도 있었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불편함을 감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공정, 평등 개념을 접목시키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선택의 문제라 지역 균등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본인도 지방 내려가면 되니까 그 혜택 받고 싶으면 내려가면 되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남는 거잖아요. 본인이 선택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평등이랑 연관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인에 대한 평등은 없는 것 같거든요. 모두 똑같은 기준을 하나로 정해서 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30대 비수도권 남자 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15조 지역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에 따르면 대학과 지방 소재 기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로 제시되어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측면도 나타난다. 또한 「지방대 육성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최근에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글로벌대학 사업에 있어서도 비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나. 교육 경험 인식

가) 개인의 노력이 전제된다면 상대적으로 공정한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교육체계 교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시스템이 공정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교육에 대한 계층 이동이 과거에 비해서는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현재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만으로 계층 이동, 특히 과거처럼 급격한 상승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한편, 개인의 노력에 기반한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만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정도가 주어진 환경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을 하였다.

- 애초에 집안의 경제적 사정 같은 게 다르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교육이나 순전히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불공정하지만 시스템 자체는 어느 정도는 공정해서, 충분히 계층 이동이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꼭 없다고 해서 좋은 학교를 못 갈 것이냐 이렇게 볼 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20대 비수도권 남자 12)
-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은 높지 않고, 단계적으로 있다고 했을 때 여러 단계를 뛰어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양극화도 심해지고 계층 간 이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교육으로 그렇게 넓게 가는 건 어려우나,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다른 단계를 갈 수 있는 발판은 마련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학벌이 중요한 이 사회에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

을 하거든요. 그렇게 좋은 학교를 가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이. 저는 그런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20대 비수도권 남자 12)

- 학력이 직장 내에서도 작용하는 파워가 큰 것을 볼 때 교육을 통해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건 공정하다고 봐요. 본인이 어쨌든 노력으로 이뤄낸 거니까요. 예를 들어 명문대 입학한 모든 사람들이 다 사교육을 받은 건 아니고 본인 힘으로 좋은 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하기도 했고 본인의 노력으로 가능한 거니까요.(30대 비수도권 여자 6)

한편, 교육에 대한 계층 이동 가능성에 있어 교육의 시작 환경에서부터 차이를 비판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존재하였다. 처음부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며 그 결과 또한 개선될 수 없기에 점차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주로 현재 구직 중이거나 구직을 포기한 청년을 대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 교육뿐 아니라 일자리, 주거 영역에 있어서 공정까지 실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공정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딱히 사례는 없는데 요즘에는 대학입학부터가 학원을 얼마나 다니고 집에서 지원을 얼마나 해주는지부터 시작해서 수시 전형도 그렇고 외국인 전형도 그렇고 거기서부터 차이가 발생하는 데 또 대학 레벨에 따라서 접할 수 있는 세계도 다르잖아요. 지인 인맥도 그렇고 넣을 수 있는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애초에 시작부터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20대 수도권 여자 4)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영역에 비해서 교육은 상대적으로 공정한 규칙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주어진 환경 차이에 따른 기회 불균등을 인정하는 경향도 동시에 나타났다. 심층면담 결과, 이러한 차이는 주로 청년이 처한 상황적 영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취약계층에 가까운 청년의 경우, 공정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취약계층 대상 교육의 공정성

가) 취약계층에 대한 본질은 어디에... 편법이 판치는 교육정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영역, 즉 대학입시에서 우대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당연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적으로 지역을 기준으로 대학입시에서 지역균형선발 등을 목적으로 가산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입시에서 지역변수를 중요하게 생각한 만큼 교육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한 지역에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우대는 공정하다고 인식하다는 측면이 있었다. 지역균형선발이 현재 제도상 정원 외로 소수 학생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에 있어 크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이 제도를 악용해서 입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또한 교육 기회에 있어서 시간 개념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대학입시에서 재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조차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가능한 것이고, 이는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흥미로운 점은 재외국민 전형과 같이 중상류층 자녀 대상으로 적용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상위계층 자녀 중심의 재외국민 전형에 대해 편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보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똑같이 수능시험을 못 봐도 재수라는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과 아예 선택할 수 없는 사람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기회를 갖는 것에 있어 불공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재수하는 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취약계층은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20대 비수도권 남자 12).
- 대학입시에서 농어촌 지역을 쓰려면 정말 지방에 가서 인프라도 없는 학교를 다니면서 모든 그런 불편함을 겪어야 하고 확실히 교육의 질이 다를 수 있겠다고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전형은 인원을 적게 뽑고 있어서 농어촌 지역 전형 1명 이런 식으로 인원수가 적으니까 큰 불만은 없었어요. 다만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는 사교육의 돈을 쓴 전형이라고 생각해요. 취약계층 전형보다 재외국민 전형을 보면 중간에 중고등학교 외국으로 유학갔다와서 거기서 쭉 사는게 아니라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입시 때 대학을 쉽게 가는 발판으로 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편함을 느꼈던거 같아요(30대 수도권 여자 3)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행한 결과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교육

영역은 과거 기억에 의존해서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다만 본인의 취업과정에서 대학 선택의 결과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특히 교육시스템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 부분은 이론적인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3) 일자리

가. 일자리 경험 특성

가)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취업·진로

대학입시와 더불어 취업에 있어서도 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요즘과 같이 취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 청년들의 학력과 스펙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년들의 경우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한 시간과 돈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 자신이 경제활동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현 구직시장에서 자신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원하는 직업을 위해 도전하거나 잦은 이직을 통해 시간적 부담을 갖게 되고 일자리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고 달성하는데까지 시간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해요 경제적 차이가 절대적이긴 해요. 제 주변해도 다 졸업하고 거의 10년은 안됐지만 졸업하고 시간이 꽤 지난 시점에서 대학, 과동기들 취업을 보면 경제가 여유로운 친구들은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걸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교수가 하고 싶어서 박사의 길을 가겠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경우만 가능해요. 집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 가능하고 그렇게 학위를 마치면 남들보다 다이렉트로 높은 직책으로 들어가니까 취업의 시작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죠. 저같은 경우는 4학년 때 취업을 하고 안될 거 같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시간을 더 끌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포기하고 강사의 길로 가거나 다른 친구들도 보면 눈을 낮춰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이럴 때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릴 때가 아니니까 어디든 빨리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하는게 중요하죠.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방향과 시간을 많이

좌지우지 하는 것 같아요. 집안이 여유로운 친구들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빨리갔고
그게 아닌 친구들은 돌아서 간다고 생각해요(30대 수도권 여자 3).

- 진짜 구직준비를 하는게 결국 다 돈이더라구요. 제 주변 친구들도 보면 인강으로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하는게 사실상 정해진 기간 안에 하기 어렵더라구요. 많은
학원을 다녀야 하고 많은 자격증도 있어야 하고 어느 기업을 준비해야할지 조사에서
부터 면접 준비까지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정보 자료에 퀄리티가 돈을 쓰는 것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구직활동도 계속 부모님께 지원을 받아야 하는
데 일반적으로 부모님 지원을 받는게 눈치도 보고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다보니
국가에서 구직 지원금을 주는 것은 도움이 되었어요(30대 비수도권 여자 3)

구직과정에서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에 있어서 경제적인 수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MZ세대의 이직이 잦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평가가 언론을 통해 자주 노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에 진입하는 시간이 연장되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부모의 경제적인 수준이 구직과정에서 시간과 돈을 지원받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취업에서 중요한 정보까지도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취업 결정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와 인맥

취업을 하기 위한 요인으로 본인의 스펙을 쌓는 것 이상으로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접근되는 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선·후배로 연결된 학연이나 부모 인맥을 통한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한편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접하는 취업 정보와 인맥의 격차 또한 학력, 경제적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여겨져 공정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식하지만 이에 대해서 크게 비판의식을 갖는 사례는 없었다.

-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이뤄지는거 같진 않아요.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내가 어떠한 학교에 있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차이가 있어요. 외국계 회사의 경우는 공식적인 과정보다는 그 회사에 있는 선배가
우리 회사에 사람 필요한데 너 한번 지원서 내볼래 하는 방식이 공식적으로 많이
이뤄진다고 하더라구요. 소위 스카이 출신 대학 선배들이 그런 회사에 많이 있으면
결국 그 출신들이 많이 갈 수 있는거죠. 가고 싶은데 공고조차 보지 못하고 선배

소개로 왔으면 그들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아예 이 정보를 몰랐던 사람들은 진입조차 어려운 거니까..(30대 비수도권 여자 6)

- 사실 취업에서 좋은 정보라는 건 결국 실제 그 회사를 들어가본 사람들, 취업자한테서 나오는거예요.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는 퀄리티가 떨어지죠. 과거에는 취업한 사람들을 만나려면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거나, 좋은 학벌, 인맥등이 필요했어서 정보를 얻는게 결국 노력만으로는 어려웠어요. 그래도 요즘은 블라인드, 커리어 같은 사이트도 있고 유튜브도 많아져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많아졌다고 생각해요(30대 비수도권 여자 3)
- 일단 공정한 사회라는 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평가가 돼야 되는데 시작은 다르더라도 평가는 똑같이 원서를 낸 시점은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전에 내부 정보를 알아내고 미리 접속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20대 수도권 남자 8)
- 일자리가 많지 않은 건지 제가 공고를 잘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제가 말했던 경남 쪽은 아예 간호사회에 들어가면 거의 다 올라오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나 잡코리아처럼 구인구직하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많지 않고 정보도 많이 없고 그래서 여기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일을 찾는 게 좀 더 쉬웠으면 좋겠다.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사를 오니까(30대 비수도권 여자 10)

취업에 있어서 정보와 인맥의 중요도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일자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맥 내에서 채용이 이뤄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축적되면 채용 기준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되고 인맥과 차별된 정보가 없는 청년은 자신이 준비한 노력에 비해 결과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우려가 발생한다.

- 특히 지방 사회일수록 인맥에 따라서 똑 같은 점수라면 그래도 아는 애가 나오니까 그런 모르는 애보다는 아는 애 이런 식으로 학연 아니면 고등학교 저기 후배 이런 식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인맥이 중요한거 같아요.(30대 비수도권 남자 7)

정부 차원의 정책에 있어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실제 청년층이 체감하는 취업에서 필요한 정보는 해당 기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비공식 정보로 인식하고 있어 정책에 대한 효용성이 낮게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 최근에는 기관/기업에 다니는 직원 정보를 유료화하여 제공하는 사설 플랫폼도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취업과정에서 공식적인 채널로 다수에게 제공되는 정보만으로도 원하는 기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기업/기관 취업정보를 개방해서 공유하고 탈락한 사람들에게 탈락 이유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 등도 참고해볼 수 있다.

나. 지역 일자리(공공기관/공기업 지방이전) 관련

가) 공기업/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역차별과 불공정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방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거하여 지방이전 공기업/공공기관에서 지역 출신자 대상 채용 비율이 증가하면서 그에 대한 장점도 존재하는 반면 역반응도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 출신 전형의 경우 이들이 대학 입학할 때는 시점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였던 점에 있어서 취업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측면이 나타났다. 반면에 지방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수도권 쏠림현상이 감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은 일자리와 주거와 연결되는 측면으로서 공기업/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선순환 효과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 어쩔수 없죠. 취업 준비할때는 서울에 있는게 시험이나 면접도 많이 볼 수 있고 정보도 서울에 많으니까 그런건 좋은데 공기업을 준비하다보니 서울에 있는게 도움이 안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공기업에서는 지방대 출신 인재들을 몇퍼센트 이상 뽑고 이런 규정이 있는거예요. 제가 대학 갈 때는 그런 규정을 아예 몰라서 제가 대한 간 이후에 생긴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공정하지 않나.. 아예 시행하려면 유예기간을 뒤서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이 규정을 보고 지방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미 서울로 진학한 지방출신 사람들은 그냥 이미 와버렸는데 다시 자퇴하고 나갈 수도 없고 그 점이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20대 남자 수도권 남자1)
-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하면서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고등학교까지 졸업한 토박이 친구들이 그 회사에 지원했을 때 가점이 크게

나타나더라구요. 그 사람들을 위한 전형이 따로 있는거 같고.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는 그들을 위한 청년고용정책처럼 느껴졌어요.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는.. 저는 그 지역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들었어요.(30대 비수도권 여자 6)

- 무엇보다도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살고 수입을 생산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생활하긴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30대 비수도권 남자 7)

지방의 경우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해결된다면 수도권으로 쏠림현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에서도 단순히 일자리에만 국한해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청년의 삶 전반을 고려해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지방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 환경을 구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수도권 안으로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그래야 서로 중간점을 찾아 출퇴근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 수도권으로 몰리는 거 같아요. 집을 구하는 것도 결정짓는 건 결국 직장인데 지방으로 갈 수 없는 이유도 직장이 너무 한정적이고 별로 없다보니까 못가는거죠. 사실 지방에 직장이 많으면 내려가지 말라고 해도 내려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일을 구하고 뗄하는 과정에서 모든게 다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니가 어쩔 수 없는거 같아요(30대 비수도권 여자 3)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정책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들의 관점에서 교육, 일자리, 주거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해당 정책들이 발표된 시점으로부터 시행될 때 청년들이 체감하는 영향력이 매우 크게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생애주기 차원에서 연결되는 정책의 경우 세대별, 영역별 등 종합적·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나) 취약계층 청년 대상 취업 지원에는 우호적이지만 정원 외 채용이 더 공정
취약계층 청년 채용은 대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반채용 정원에 포함되는 것에 있어서는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학입시에서 취약계층(지역균형 등)에 대한

지원 측면보다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취약계층 전형에 있어서는 현행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채용 기준이 마련될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생활이 힘든 분들한테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가장이면 알바도 하면서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 내 생활비도 해야 되고 취업에 필요한 비용도 자기가 충당해야 되는데 20대 대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해 주는 건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같은 경쟁자지만 그렇게 그거 도와준다고 제가 불공정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그러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식으로 지원은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 그래도 TO는 굉장히 적고 지원자는 수백, 수천 명인데 TO를 쪼개서 생활이 힘든 분들한테만 완전 편하게 그분들은 바로 입사할 수 있는 정도의 혜택을 주는 건 일반 지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정하고 그분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국가에서는 그냥 취업할 수 있도록 서비스만 지원해주면 되는 거지 직접 나서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먼저 바로 혜택을 줘서 뽑거나 이런 건 굉장히 역차별인 것 같아요(20대 수도권 남자 1)

한편,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에는 동의하지만 다음과 같이 어떠한 청년층이 취약계층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현행 청년기본법과 청년정책을 살펴보면 초기에 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노력이 증가하였다. 다만 특정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총체적인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시급한 사례를 먼저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다수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청년 취약계층의 범위 설정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해주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취약계층에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일단 증명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잖아요. 취약계층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전에 본인이 공부한 수능 점수나 그런 걸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외에 할 게 없으니까 기회가 안 주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교육이나 그거랑 연계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 (20대 수도권 남자 8)

청년 취약계층 대상 취업 우대정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 기업/기관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

가) 고졸 취업이나 중소기업 취업, 프리랜서의 삶에서 공정은 사치

고졸 취업자들의 경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있어서 취업 이후 연차가 발생해도 대졸 취업자와 비교할 때 대우가 다르다는 점에서 공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취업한 이후 보수나 야근수당, 연차 등 법적으로 보장되는 당연한 제도뿐 아니라 기본적인 복지 사항 등을 비교할 때 중소기업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법적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 이들에게 공정이라는 개념은 다른 세계에서 적용되는 것이라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 고졸 취업의 경우 연봉제로 시작하게 되면 아무리 경력이 있어도 신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요. (20대 수도권 남자 8)
- 직장을 보면 연차를 쓰는거에 눈치를 안보는 회사가 좋은회사 인거 같아요. 법으로 정해진 연차제도인데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 대기업의 경우는 연차를 쓰는데 크게 눈치를 보지 않아요. 내 할일을 다했다면 당연히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게 맞는데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같은 프리랜서는 연차가 아예 없어요. 그냥 아파도 가야하고 무슨일이 있어도 내가 맡은 일은 해결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거 같아요. 야근수당도 마찬가지로 이구요. 중소기업의 경우 야근수당도 안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돈은 적게 주면서 일은 많이 하라는게 내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법도 대기업에만 한정되어서 적용되는 법인거 같아요(30대 비수도권 여자 3)
- 옛날에는 무조건 당연히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결혼도 하면 좋겠고, 결혼하면 애도 생기면 좋겠지만 과거에 비해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육아휴직도 할 수 있는 환경의 직장을 다니는게 쉽지 않다보니 그런 결정은 많이 못하게 되는거 같아요.(30대 비수도권 여자 3)
- 이직준비를 하고 대기업을 들어가고 싶은 이유도 결국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결혼을 하게되고, 결혼을 한 이후에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대출을 해야하고, 대출이 유리한 조건이 되기 위해서 제 조건을 만들어가는데 시간을 쓰는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프리랜서인 상태보다는 어딘가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 회사에 근속한 연수가 어느 정도 되고 내가 받는 급여가 높을수록 대출도 한도가 높아지

니까..그래야 저도 제 집마련을 하는데 기회가 더 넓어지니까 아직 다음단계는 결혼과 집 마련인거죠. 제 친구의 경우도 중소기업을 다닐 때는 소개팅이 안들어오다가 대기업으로 이직한 이후에 소개팅이 많이 들어와서 결혼준비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세대도 안정된 미래를 얻기 위해서 계속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30대 비수도권 여자 3)

- 중소기업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의 의미가 크게 없어요.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쉽고 외부 영향을 많이 받다보니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해도 회사가 없어지면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하고, 인간관계로 해결하려는 경우도 많아요. 노조라는게 있다고 해도 노동부에서 작은 영세 기업들은 검사, 조사 한번 나온적이 없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해야하는데 힘도 없고 돈도 없다보니 포기하게 되었죠. 노동부라는 곳이 법을 지켜 줘야 하는데 저와 같은 사람들끼리 있는 곳은 적용을 받지 못하니 이러한 작은 회사들은 법 시스템이 세상에 필요없다는 것을 당시에 느꼈어요. 이러한 상황속에서 공정은 사치죠.(30대 비수도권 남자 7)

-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고 하면 말리고 싶어요. 제가 해보니 까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연차를 고려할 때 저임금이고, 작년만해도 격주 휴무가 많았어요. 계약상 연장근로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장을 못 받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에서의 경험을 후배들한테 해줄 때 후배들이 많이 물어 보는게 돈을 많이 벌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그럴 때 좀 더 대기업으로 가라, 영세업체로 가면 복지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정보가 많이 없다보니까 고졸 취업을 할 때 일단 아무곳이나 입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경험해보는게 중요하지만 많이 힘들죠(30대 고졸 비수도권 남자 7)

한편, 취업을 이른 나이에 한 청년들의 경우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다른 청년들에 비해 우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경우 생애주기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제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물론 청년층의 삶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생애주기 과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를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 아무래도 저같이 전문직으로 시작한 경우는 일찍 취업해서 벌어들인 돈이 있으니까 일반 대학 나온 친구들과 비교해 보면 훨씬 빠른 편이죠. 제 친구를 보면 돈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취직도 늦고, 취직을 해도 초봉이 낮으니까 자기가 쓰는 생활비가 많이 나가서 모으는 돈이 없다보니 금전적으로 결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30대 비수도권 전문직 여자 9)

정부 차원에서 청년층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취업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취업 이후 삶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첫 일자리로 시작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본 결과, 첫 직장생활을 중소기업에서 한 경우, 이직을 통해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대기업 취업 준비를 하는 것에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고졸 취업자들의 경우, 취업 이후 상황은 더욱 열악했으며 지방에서 고졸 취업자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다니는 경우 기본적인 노동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의 경우 공정한 채용, 노동권 보장 등을 주장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타협해서 체념하고 현실에 적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타까웠다.

라. 일자리 정책 개선 요구사항

가) 공정채용을 위한 현행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청년층이 인식하는 공정채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낮았다. 청년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미디어에서 많이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떠한 정책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 또한 공정채용에 대한 질문에 있어 많은 경우가 현재 공기업 채용 시 사용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와 무관한 경우가 많아서 공정한 시스템인지 모르겠다는 의견과 이러한 시험을 왜 보는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많았다.

모든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정한 채용을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로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어떻게 지원받는지 모르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과 더불어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용이 기대하는 것보다 낮은 부분들 또한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일단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니까 주변 친구들도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내일배움카드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할인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정책들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면 나이대가 맞는 애들한테 Email이라도 주는 게 좋지 않을까(20대 수도권 남자 8)
- 채용 과정을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공기업 채용해서 서류가 1단계이고, 2단계에서 NCS를 보고 하는데 모든 직무와 상관없이 IQ 테스트 같은 NCS를 적용하는게 과연 공정한 시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도 채용사이트를 봤는데 조리사를 뽑는데도 NCS를 보더라고요. 이걸 효율적인 부분도 아닌거 같고 공정도 잘 모르겠고.. 그 시험은 결국 실력이라기보다는 운이 많이 작용하는거 같은데 그걸 공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30대 비수도권 여자 6).
- 제가 느끼기에는 주변 친구들이 일자리를 고를 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뭔가, 자기가 원하거나 그 정도 받고 싶은 거랑 일자리 수준이랑, 실제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일자리랑 받을 수 있는 대우의 갭이 많이 큰 것 같아요.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는 상황을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았어요. 따라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정책사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20대 비수도권 남자 12)

한편, 취업에 있어서 공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정부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진 경우도 존재하였다. 개인의 역량과 능력을 중심으로 취업 시장에서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졌다. 이때 국가나 정부의 역할은 개인의 능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채용시스템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다면 당연히 그 갭은 메워질 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는 그걸 굳이 나라나 기업에서 하는 것은 아닌거 같아요.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면 국가는 개인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그 성장한 역량을 바탕으로 개인이 자신에게 부족한 역량들을 만들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그런 이익이 올라가면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채워지는 선순환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비수도권 남자 12)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청년마다 개인차가 존재하였다. 면담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개인의 역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에는 문제가 있으며, 국가는 개인들이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마련해주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들어 선거 시즌이 오면 각 정당에서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이슈화하는데 이러한 청년정책을 실제 청년층에서는 얼마나 반가워하고 기대하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주거

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거 격차

가) 비수도권 지방 거주자의 딜레마: 경제적 여건 및 사회적 관계 vs 주거 인프라
집값만을 기준으로 볼 때는 비수도권 지방에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빈약한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교육, 일자리, 복지 인프라 등을 고려하면 지방 거주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 면담참여자 대부분이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거나 직장 사택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지방에서의 거주를 쉽게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한편, 일자리가 확보되어 안정된 소득이 보장된다면 지방에서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저는 지방에서 계속 살다보니 청약도 되는게 훨씬 쉽고 지방 청약은 수도권에 비하면 수월하죠. 그래도 지방에서도 치열한 지역이 있어서 저는 거기 피해서 왔어요. 그리고 지방의 경우 기업에서 사택을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주거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30대 비수도권 여자 9)
- 광주로 내려온 이유가 서울은 집값도 비싸서 서울에서 결혼과 이런걸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불가능할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집값이 지방과 비교했을 때 3-4배 정도 비싸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려운거죠(30대 비수도권 남자 11)
- 지방에서 10년 넘게 살다보니 친구들도 여기에서 생기고 아는 사람들도 이쪽에 있어서 더 편한게 많아요.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아무래도 아버지도 지방에 있고 하니 도움받을 때 좋기도 하고 해서 결혼하고 살 집을 찾을 때도 지금 이 지역에서 구하려고 합니다(30대 비수도권 남자 7)

한편, 다음과 같이 관점이 다른 차원의 사례도 존재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은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10분의 1 수준이에요. 지금 지방 소멸이니 뭐니 하면서 청년정책이라고 아파트도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식으로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죠.(30대 비수도권 남자 7)
- 병원, 교육, 문화시설 등의 인프라가 부족해서 여기에서 계속 살 수 있을지는 고민이에요.(30대 비수도권 여자 9)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할 때 지역 간 편차는 입시-취업-결혼-자녀양육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청년층의 경우도 수도권 집값이 매우 높아 현실적으로 자가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년들의 경우 최근 지방(비수도권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제는 일자리가 확보되었을 때였다. 또한 결혼하고 자녀출산, 양육 등 다음 단계에서의 삶을 고려할 때 지방에서 겪게 되는 불편함을 어떻게 감안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였다.

나. 주거공간 경험 인식

가) 안정된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 필수 조건이 된 내 집 마련

자가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여기면서도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결혼과 자녀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위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었다. 청년층의 주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면담참여자들과 이야기를 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부모세대의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부모세대에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희망,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현재 청년세대의 경우 자기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거나 현실과 타협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로 보인다.

- 지금은 전세로 살고 대출이 없고 애들이 어려서 괜찮은데 좀 더 크면 첫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거든요. 그 때가 되면 자가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어요(30대 비수도권 여자 10)

- 자카로 집을 마련해서 살고 싶어요. 지방이기는 해도 신축을 사기는 너무 어려워요. 한국 사회에는 부동산을 너무 자산 개념으로 봐서 투자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거라 저는 거주용으로 구매하는거라 구축을 구매해서 리모델링해서 사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30대 비수도권 남자 11)
-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거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전 과거에 비해서 비혼이나 딩크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미디어가 발달해서 그렇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결혼하고 애 낳고 싶어 하는 쪽이 더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우선적으로 필요해요. 부모님 세대는 단칸방에서 시작하면 되지 남자 혼자 벌어도 너희 다 키웠다고 여전히 말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다 그런 입장이 아니예요. 우리도 직업이 있고 돈벌이가 있어야 뭐가 있어야 직업도 안정적이어야 애를 낳지 애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가지만 동시에 집도 좋은 곳에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게 쉬운일이 아니죠(30대 수도권 여자 3)
- 이직준비를 하고 대기업을 들어가고 싶은 이유도 결국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결혼을 하게되고, 결혼을 한 이후에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대출을 해야하고, 대출이 유리한 조건이 되기 위해서 제 조건을 만들어가는데 시간을 쓰는거 같아요. 결국 우리세대도 안정된 미래를 얻기 위해서 계속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30대 수도권 여자 3)

청년층의 결혼, 자녀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한 영향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청년층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인하여 경제적인 자립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것에 부담을 크게 가졌다. 이는 청년들의 부모세대에 미래로 계획할 수 있었던 생애주기 과정들이 현 청년들은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 보다는 현재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결혼과 출산의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소득이 일정 이상 되는 계층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들이 이와 같은 현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주거공간에 대한 공정 인식

가) 정부정책 중 공정 인식도 최하위는 주거정책

청년층을 대상으로 할 때 교육(대입)이나 일자리 영역보다 주거 영역에서 공정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정부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 또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부동산 정보가 불균형하게 제공되고 있고, 자가 마련에 있어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진 것을 꼽았다. 또한 부모세대의 경제력에 따라 증여받지 않는 한 청년세대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 정보를 찾는 건 본인의 능력이니가 입사나 취업 과정에 있어서는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입장벽도 높아졌고 가격도 크고 사기꾼도 많아졌어요. 주식시장도 부동산도 정보가 불충분하고 기울어져서 기회가 공정하지 않게 생각되어요(20대 수도권 남자 8)
- 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기회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부여되도록 하는 것은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구요. 주택 가격 같은게 변동도 워낙 심하고 무엇보다도 주거정책을 받는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20대 비수도권 남자 12)
- 주거의 경우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증여를 받을 수 있는냐가 굉장히 크게 시작점에서 작용하는거 같고 정말 아무것도 받지 않고 내가 경제활동 시작하고부터 돈을 모아서 주거공간을 마련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거 같아요(30대 비수도권 여자 6)

한편, 주거의 경우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도 상당수 있었다. 교육과 일자리 영역과는 다르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금융 흐름에 따라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운영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지원정책을 하면 된다는 시각이었다. 주거정책의 경우, 공정가치를 적용할 때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암시하기도 하는 부분이다.

- 자기 능력이 되면 선택 차이라서 돈 많은 사람들은 신축을 구매하겠지만 은행대출이 없으면 구매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래도 정부에서 30년 대출을 해주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영역이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30대 비수도권 남자 11)

- 특정 주거 비용 완화라고 하면 너무 복지가 과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가가 하는 주거정책이 좀 아쉽다 또는 어느 정도 부족할 수도 있다, 주변에서 체감이 잘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주거정책을 시행하면 자본주의 사회 기반으로 볼 때 거시적인 관점에서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을 조금 확대하는 수준이 가장 적절하다고 봐요. 굳이 주거 안정을 위해 돈으로 어떻게 더 지원을 해야 된다 이거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20대 비수도권 남자 12)

부동산의 경우 개인 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느 선까지 제한할 수 있을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또한 부모 증여의 경우도 증여세를 납부하고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어떠한 개선을 제안할 수 있을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라.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주거정책 요구사항

가) 수요자 맞춤형 지원정책 설계 및 추진

현재 청년층들이 원하는 주거정책은 면담참여자들의 사례를 토대로 볼 때 주로 전세사기 예방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적극적인 주거정책 마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전세사기도 많잖아요. 그런 걸 예방할 수 있게 상담 같은 걸 해서 제가 준비한 서류나 제가 알아보고 있는 과정들이 맞게 잘 가고 있는 건지 도움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세는 중요하면서도 이게 맞나? 생각을 계속하는데 사실 부모님이 봐주신다고 해도 정확하진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전문가가 주변에 없으니까 지인, 선배, 부모님이 전부였거든요. 사기 위험 같은 건 저희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지 않아요(20대 수도권 여자 2)
- 저는 결혼도 생각하고 있는데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집을 찾으려고 나라에서 어떤 정책들을 보게 되잖아요. 오히려 싱글일 때는 수혜자가 될 수 있는데 결혼을 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1인가구를 위해서 더 많은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출산이나 결혼 이런 청년들 결혼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정책들이 유효한 정책인지 잘 모르겠어요.(30대 비수도권 여자 6)
- 1인가구 청년 대상으로 많은 지원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 결혼한 경우 부부 소득으로

합산하다보니 많은 경우 지원을 못 받아요. 물론 지금 제 연령대에서 결혼을 했다는 건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는 거지만 그래도 청년 지원을 받는 경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워요(30대 비수도권 여자 9)

- 오히려 싱글일때는 수혜자가 될 수 있는데 결혼을 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출산이나 결혼을 장려한다고 하는데 실제 정책들이 유효한지 모르겠어요(30대 비수도권 여자 6)

한편,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주거정책의 경우 다른 영역과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어 공정에 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도 있었다. 또한 청년층의 경우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최근 청년 주거정책 대상이 취약계층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부모가 증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청년의 경우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택의 경우 입지나 주거공간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 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기회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부여되도록 하는 것은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주택 가격 같은게 변동도 워낙 심하고 무엇보다도 주거정책을 받는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20대 비수도권 남자 12)
- 주변에서 봤을 때 정부 지원정책 도움을 받아 집을 산 사람보다는 돈 아끼고 대출 많이 해서 집을 구했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도 LH 같은 데서 해주는 그런 거 보면, 좋은 집들도 있지만 입지나 주택상태를 볼 때 아쉬운 점들이 있더라구요. 정부에서 아무리 전세 대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걸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자가를 마련하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집을 얻기 원하는 청년 대상으로는 정부 정책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20대 남자 비수도권12)

정부 차원에서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대상 주거정책의 차이를 살펴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수요 충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주거정책에 있어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서 청년정책에 한정해서 해당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였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 부모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청년 등 경제적

으로 여유 있는 청년들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 지원의 범위를 청년 전체로 확장해서 진행하기보다 취약계층 청년의 범주를 명확하게 정해서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

심층면담 결과, 청년층의 공정에 대해서 인식하는 측면과 더불어 교육, 일자리, 주거정책 영역에서의 공정 기준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취약계층 청년과 지방 청년을 둘러싼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청년층이 생각하는 공정에 대한 기준과 맞물려서 어떠한 방향과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청년층의 공정과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시행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청년의 범위는 청년기본법상에서 기준하는 19~34세 청년으로 한정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공정성과 관련된 청년층의 태도 지형을 살펴보았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 응답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공정은 기회의 공정성, 절차의 공정성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으며, 공정의 요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견 표현, 가정형편 및 성별에 관계없는 동일한 대우와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노력에 따른 성공을 보장하는 사회라고 생각할수록 우리 사회를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일자리와 관련된 영역이 가장 공정하지 않은 영역이라는 인식이 일관되게 나타났고, 이는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 필요성에 대해 가장 크게 공감하는 것과 연계되어 일자리 정책에 있어 공정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일자리 영역에서의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전환이 사회 전반의 공정성 인식을 높이는 데 가장 눈에 띄는 영향력을 가져다 줄 거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심층면담에서는 성별, 지역, 학력, 일자리 형태, 혼인 여부, 청년정책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특성을 지닌 청년들의 삶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청년의 경험에 근거한 청년정책과 공정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 담은 심층면담은 설문조사에서 깊게 드러나지 않은 측면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먼저, 공정에 대해서 출발선에 대한 기준, 절차상 공정에 있어서 청년층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언론에서는 청년층이 전반적으로 공정 이슈에 민감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그 내부에서도 다양한 층위로 공정을 기대하고 평가하는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게 펼쳐져 있었다. 특히, 취약계층에 가까운 청년일수록, 현재 취업 준비 중이거나 취업을 포기한 청년일수록 공정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지역 요인이 교육, 일자리, 주거 영역에 있어 전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입시에 있어서도 가장 크게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지역이었다. 지방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청년들의 경우 다수가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여 입시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얻지 못하였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는 특히 예체능 계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취업에 있어서도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으로 진입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한 경우, 직장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등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해당 지역에 적응해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대체적으로 구직을 위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청년들이 거주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으로 가는 것에 청년층의 불안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지방의 경우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해결된다면 지방으로 이주하겠다는 청년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처럼 일자리와 청년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청년친화적 인프라가 지방 도시들을 중심으로 구축된다면 수도권 쏠림현상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층면담 결과, 지방 이주를 위한 요건을 살펴볼 때 단순히 일자리에만 국한해서 해결된다고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청년의 경우, 일자리를 중심으로 거주지를 선택하고 이동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지만, 청년의 삶 전반을 고려한 만족도는 청년친화적인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높아졌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이 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방에서 일자리를 얻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친화적 생태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

○ — 제5장 청년정책 주체 간 ‘공정’에 대한 인식 차이 : 전문가 의견조사 및 정책세미나

- 1. 전문가 관점에서 바라본 ‘공정’: 의견조사
- 2. 청년정책 주체 간 ‘공정’ 인식 차이: 정책세미나
- 3. 소결

청년정책 주체 간 ‘공정’에 대한 인식 차이 : 전문가 의견조사 및 정책세미나¹⁷⁾

1. 전문가 관점에서 바라본 ‘공정’: 의견조사

지금까지 청년들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청년들의 실태조사 의견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본 5장에서는 학계 및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청년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2023년 8월 7일에서 8월 25일까지 관련 전문가들의 소속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하여 집락 및 할당 추출을 통해 모집한 2,000여 명 중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2주간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23년 8월 1일 본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NYPI-202308-HR-고유-053-01)을 받았다. 그 결과, 총 155명이 응답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의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청년 인프라와 같은 청년정책의 영역, 국정과제 90(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정과제 91(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국정과제 92(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및 각 국정과제의 세부내용에 대한 유형별 계층적 의사결정법(AHP) 문항 및 중요도-성과도(IPA) 문항이다.

1)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 개요

본 조사에서는 중요도-성과 분석(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의 영역, 현재 추진 중인 국정과제의 세부내용,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

17) 이 장은 최용환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이윤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집필하였음.

을 위한 세부정책 대안에 대해 9점 척도(1~9점)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도와 실행정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IPA 매트릭스 분석이 이루어졌다. IPA 매트릭스는 유지강화(I사분면), 중점개선(II사분면), 점진개선(III사분면), 지속유지(IV사분면) 네 영역으로 구분된다【그림 V-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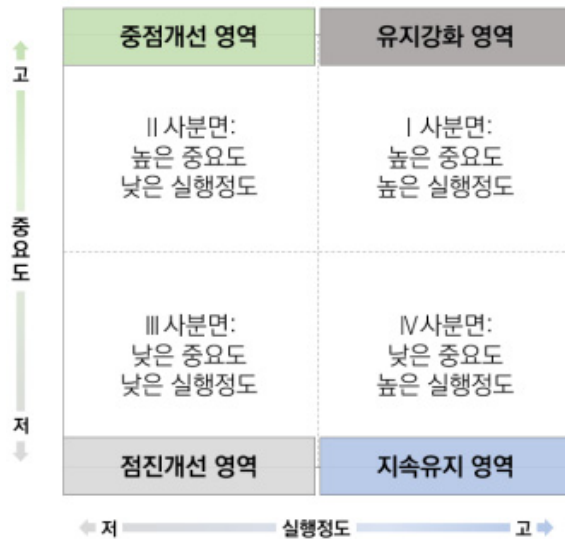


그림 V-1. IPA 매트릭스

I 사분면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청년정책의 영역, 현재 추진 중인 국정과제의 세부내용,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세부정책 대안이면서 동시에 현재 충분히 실행되며 성과를 보이고 있는 위치이다. 중요도와 성과 모두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 및 강화해야 할 영역에 해당한다. II 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으나 그 실행정도가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는 위치이다. 이는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영역에 해당한다. III 사분면은 중요도와 실행정도가 모두 낮은 상태를 나타내는 위치이다. 이 위치는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분류된다. IV 사분면은 중요도는 낮은 반면 실행정도는 높은 위치이다. 이는 지속유지 영역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AHP 분석을 실시하여 어느 정책 영역이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에 더 중요한지와 현 정부의 청년 관련 국정과제 중 어느 과제가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에

더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전문가들은 각각의 주요 사항에 대해 정성적 지식에 기초하여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중요도 판단 결과는 가중치로 계산되었다.

2)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방법 및 내용

전문가 의견조사의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공정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현안과 이슈, 정부 국정과제의 쟁점 사안들에 대한 계층적의사결정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문항을 구성하였다. 계층적의사결정법(AHP)은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다루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와 비교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방법이다(Saaty, 2008).

즉, AHP는 쌍별비교와 항목 간 부분구조에서의 최적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복잡성을 감소시켜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이끈다(Vashist & Dey, 2016). 실제로 Korpela & Tuominen(1996)은 이 기법이 의사결정 전략관리에서 유용하며 정책의 성과수준을 높이는 결정적 영향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산정하는 효과적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전문가 대상으로 중요도-성과도(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중요도-성과도 분석(IPA)을 통하여 공정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현안과 이슈, 정부 국정과제의 쟁점 사안의 중요도와 실행정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IPA 매트릭스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전국 청년정책 실무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조사시작 1개월 전에 청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소속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하여 집락 및 할당 추출을 통해 모집된 2,000여 명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집락 및 할당 추출을 통해 모집된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대한 전문가 집단별 무작위 추출하고 이들에 대하여 계층적 의사결정법(AHP) 문항과 중요도-성과도(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문항을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조사시기는 2023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유효표본은 150명 내외를 목표하였다. 조사내용은 공정한 청년정책의 영향요인과 현안 이슈, 청년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생활, 참여 등과 관련한 현안 국제과제의 추진 정책들과 향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3) IPA 분석 결과

(1) 청년정책 영역에 관한 IPA

청년정책의 영역들 중 청년을 위한 공정사회 기여의 달성도와 중요도 분석을 위해 총 5개 문항(9점 척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자리(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일터 안전망 강화,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 개선), 주거(청년주택 공급 확대,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주거취약 청년 집중 지원, 청년친화형 주거 모델 보급), 교육(학자금 지원 등 고른 교육 기회 보장,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온택트 교육 기반 구축), 복지·문화(사회출발 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청년 건강 증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청년 인프라(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주도성 확대, 청년정책 추진 기반 마련 및 내실화,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가 각 문항에 해당한다.

우선 <표 V-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달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4.7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복지·문화(4.26), 청년 인프라(3.82), 일자리(3.77) 순이며, 주거(3.71)가 가장 낮다. 이러한 경향은 학계 전문가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전문가 대상의 조사 결과와도 유사하다. 비록 기타 전문가 그룹의 세부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교육 분야와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높은 달성도를 보이고 주거, 일자리, 청년 인프라 분야에서는 낮은 달성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V-1. 청년정책 영역의 공정사회 기여 달성도 (9점 척도)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학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기타
사례수		(155)	(77)	(73)	(5)
일자리		3.77	3.62	4.00	2.80
주거		3.71	3.62	3.89	2.40
교육		4.72	4.81	4.75	3.00
복지·문화		4.26	4.32	4.23	3.80
청년 인프라		3.82	3.84	3.90	2.20

이러한 달성도와 함께 역시 9점 척도로 측정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7.1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교육(6.83), 주거(6.75), 복지·문화(6.12) 순이며, 청년 인프라(5.84)가 가장 낮다. 이러한 경향은 학계 전문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전문가, 기타 전문가 대상의 조사 결과와도 유사하다. 특히 일자리 관련 청년정책은 공정사회 기여에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도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V-2>와 같다.

표 V-2. 청년정책 영역의 공정사회 기여 중요도 (9점 척도)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학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기타
사례수		(155)	(77)	(73)	(5)
일자리		7.10	7.04	7.10	8.00
주거		6.75	6.73	6.73	7.40
교육		6.83	6.77	6.86	7.40
복지, 문화		6.12	5.90	6.29	7.20
청년 인프라		5.84	5.87	5.77	6.40

이와 같이 공정사회에 기여하는 청년정책 영역에 대한 달성도와 중요도를 정성적으로 판단 및 평가한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2】와 같다. 달성도와 중요도의 각 평균값은 4.06과 6.53이며, 이를 기준으로 4개 영역(중점개선, 유지강화, 점진개선, 지속유지)으로 구분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림 V-2. 청년정책 영역의 공정사회 기여 IPA 결과

구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서 유지강화해야 할 청년정책 영역에는 교육 분야가 해당된다. 그리고 현재 낮은 달성도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중점개선 영역에는 총 두 가지가 해당된다. 일자리와 주거 분야 청년정책 영역이 그것들이다.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청년 인프라 관련 정책이 해당한다. 달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아서 지속유지해야 하는 영역에는 복지·문화정책 분야가 포함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중점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일자리와 주거 분야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중적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일자리의 경우 달성도와 중요도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가장 크기 때문에 더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현재 추진 중인 국정과제의 세부내용에 관한 IPA

현재 추진 중인 국정과제의 세부내용에 관한 달성도와 중요도 분석을 위해 총 13개 문항(9점 척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내 집 마련(국정과제 90), 취업지원 혁신(국정과제 90), 청년창업 기반 강화(국정과제 90), 미래역량 강화 지원(국정과제 90), 교육 부담 완화(국정과제 90), 공정기반 구축(국정과제 91), 자산형성 지원(국정과제 91), 취약 청년 출발 지원(국정과제 91), 청년참여 확대(국정과제 92),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국정과제 92), 지방 및 민간 협업(국정과제 92), 청년정책 인프라(국정과제 92), 법제 개선(국정과제 92)이 각 문항에 해당한다.

먼저 <표 V-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달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 부담 완화(국정과제 90)(4.8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자산형성 지원(국정과제 91)(4.33), 공정기반 구축(국정과제 91)(4.25), 취약청년 출발 지원(국정과제 91)(3.90) 순이며,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국정과제 90)(3.08)이 가장 낮다. 이러한 경향은 학계 전문가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전문가 대상의 조사 결과와도 유사하다. 비록 기타 전문가 그룹의 세부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교육 부담 완화(국정과제 90), 자산형성 지원(국정과제 91), 공정기반 구축(국정과제 91)에서 상대적으로 달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V-3. 국정과제 세부내용의 달성도 (9점 척도)

내용 \ 집단	전체	소속기관		
		학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기타
사례수	(155)	(77)	(73)	(5)
내 집 마련(국정과제 90)	3.08	2.94	3.30	2.00
취업지원 혁신(국정과제 90)	3.66	3.42	3.99	2.60
청년창업 기반 강화(국정과제 90)	3.55	3.38	3.79	2.80
미래역량 강화 지원(국정과제 90)	3.68	3.55	3.92	2.40
교육 부담 완화(국정과제 90)	4.80	4.83	4.85	3.60
공정기반 구축(국정과제 91)	4.25	4.30	4.36	2.00
자산형성 지원(국정과제 91)	4.33	4.35	4.45	2.20
취약청년 출발 지원(국정과제 91)	3.90	4.22	3.66	2.40
청년참여 확대(국정과제 92)	3.67	3.82	3.62	2.20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국정과제 92)	3.70	3.71	3.75	2.60
지방 및 민간 협업(국정과제 92)	3.54	3.52	3.62	2.60
청년정책 인프라(국정과제 92)	3.31	3.39	3.26	2.80
법제 개선(국정과제 92)	3.59	3.55	3.75	1.80

이와 함께 국정과제 세부내용의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기반 구축(국정과제 91)(7.0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취업지원 혁신(국정과제 90)(6.97), 내 집 마련(국정과제 90)(6.96), 취약청년 출발 지원(국정과제 91)(6.91) 순이며, 청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국정과제 92)(6.20)이 가장 낮다. 이러한 경향은 학계 전문가 대상의 조사와 유사하며,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전문가와 기타 전문가 대상의 조사 결과와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유사하다. 대체로 공정기반 구축(국정과제 91)(7.03), 취업지원 혁신(국정과제 90)(6.97), 내 집 마련(국정과제 90)(6.96) 등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요도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V-4>와 같다.

표 V-4. 국정과제 세부내용의 중요도 (9점 척도)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학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기타
사례수		(155)	(77)	(73)	(5)
내 집 마련(국정과제 90)		6.96	6.77	7.26	5.60
취업지원 혁신(국정과제 90)		6.97	7.06	6.81	7.80
청년창업 기반 강화(국정과제 90)		6.59	6.55	6.64	6.40
미래역량 강화 지원(국정과제 90)		6.68	6.70	6.67	6.40
교육 부담 완화(국정과제 90)		6.66	6.66	6.66	6.60
공정기반 구축(국정과제 91)		7.03	7.18	6.86	7.00
자산형성 지원(국정과제 91)		6.30	6.30	6.32	6.00
취약청년 출발 지원(국정과제 91)		6.91	7.04	6.75	7.20
청년참여 확대(국정과제 92)		6.32	6.39	6.23	6.60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국정과제 92)		6.20	6.30	6.18	5.00
지방 및 민간 협업(국정과제 92)		6.37	6.57	6.29	4.40
청년정책 인프라(국정과제 92)		6.51	6.60	6.47	5.80
법제 개선(국정과제 92)		6.52	6.45	6.62	6.20

국정과제 세부내용에 대한 달성도와 중요도를 중심으로 평가한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3】과 같다. 달성도와 중요도의 각 평균값은 3.77과 6.62이며, 이를 기준으로 중점개선 영역, 유지강화 영역, 점진개선 영역, 지속유지 영역으로 구분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림 V-3. 국정과제 세부내용의 IPA 결과

구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서 유지강화해야 할 국정과제 세부내용에는 총 세 개가 포함되었다. 교육 부담 완화(국정과제 90), 공정기반 구축(국정과제 91), 취약청년 출발 지원(국정과제 91)이 그에 해당한다. 그리고 현재 낮은 달성도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중점개선 영역에도 총 세 가지가 포함되었다. 내 집 마련(국정과제 90), 취업지원 혁신(국정과제 90), 미래역량 강화 지원(국정과제 90)이 그에 해당한다.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총 여섯 가지가 포함되며, 여기에는 청년창업 기반 강화(국정과제 90), 청년참여 확대(국정과제 92), 청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국정과제 92), 지방 및 민간 협업(국정과제 92), 청년정책 인프라(국정과제 92), 법제 개선(국정과제 92)이 해당된다. 달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아서 지속유지해야 하는 영역에는 자산형성 지원(국정과제 91)이 포함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중점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내 집 마련(국정과제 90), 취업지원 혁신(국정과제 90), 미래역량 강화 지원(국정과제 90)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개선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세부정책 대안에 관한 IPA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세부정책 대안의 달성도와 중요도 분석을 위해 총 10개 문항(9점 척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채용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국가자격시험 운영 실태 모니터링, 직무능력/성과 중심 임금보상 체계 개편, 공공분양/임대주택 개선 및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부정입학/학사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장학금 등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 복지제도 부정수급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문화 사각지대 해소, 청년정책 관련 정보제공 및 공간지원이 각 문항에 해당한다.

먼저 <표 V-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달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학금 등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5.2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국가자격시험 운영 실태 모니터링(5.03), 채용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4.76), 복지제도 부정수급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4.75) 순이며, 상대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3.68)가 가장 낮다. 이러한 경향은 세부적으로 학계 전문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전문가, 기타 전문가 대상의 조사 결과와도 유사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장학금 등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 국가자격시험 운영 실태 모니터링, 채용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의 달성도가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표 V-5.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세부정책 대안의 달성도 (9점 척도)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학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기타
사례수		(155)	(77)	(73)	(5)
채용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4.76	4.56	5.10	3.00
국가자격시험 운영 실태 모니터링		5.03	4.94	5.21	4.00
직무능력/성과 중심 임금보상 체계 개편		3.99	3.94	4.15	2.40
공공분양/임대주택 개선 및 확대		4.19	4.06	4.42	2.80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3.68	3.88	3.56	2.20
부정입학/학사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4.43	4.62	4.40	2.00
장학금 등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		5.23	5.38	5.21	3.40
복지제도 부정수급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4.75	4.87	4.74	3.00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문화 사각지대 해소		4.34	4.60	4.21	2.40
청년정책 관련 정보제공 및 공간지원		4.66	4.88	4.49	3.80

이와 함께 세부정책 대안의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분양/임대주택 개선 및 확대(6.9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6.94), 직무능력/성과 중심 임금보상 체계 개편(6.93), 장학금 등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6.92) 순이며, 청년정책 관련 정보제공 및 공간지원(6.01)이 가장 낮다. 이러한 경향은 세부적으로 학계 전문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전문가, 기타 전문가 대상의 조사 결과와도 유사하다. 대체로 공공분양/임대주택 개선 및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직무능력/성과 중심 임금 보상체계 개편 등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V-6>과 같다.

표 V-6.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세부정책 대안의 중요도 (9점 척도)

내용 \ 집단	전체	소속기관		
		학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기타
사례수	(155)	(77)	(73)	(5)
채용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6.65	6.82	6.52	5.80
국가자격시험 운영 실태 모니터링	6.15	6.18	6.12	6.20
직무능력/성과 중심 임금보상 체계 개편	6.93	7.14	6.71	6.80
공공분양/임대주택 개선 및 확대	6.99	7.03	6.93	7.20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6.94	6.99	6.84	7.80
부정입학/학사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6.54	6.51	6.48	7.80
장학금 등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	6.92	6.88	6.99	6.40
복지제도 부정수급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6.19	6.26	6.15	5.60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문화 서비스 확대 해소	6.74	6.82	6.64	6.80
청년정책 관련 정보제공 및 공간지원	6.01	6.09	5.84	7.20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세부정책 대안에 대한 달성도와 중요도를 중심으로 평가한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4】와 같다. 달성도와 중요도의 각 평균값은 4.51과 6.60이며, 이를 기준으로 4개 영역(중점개선 영역, 유지강화 영역, 점진개선 영역, 지속유지 영역)으로 구분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림 V-4.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세부정책 대안의 IPA 결과

구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서 유지강화해 야 할 국정과제 세부내용에는 총 두 개가 포함되었다. 채용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와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가 해당된다. 그리고 현재 낮은 달성도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중점개선 영역에도 총 네 개가 포함되었다. 직무능력/성과 중심 임금보상 체계 개편, 공공 분양/임대주택 개선 및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문화 사각지대 해소가 해당된다.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한 가지 포함되며, 여기에는 부정입학/학사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가 해당된다. 달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아서 지속유지해야 하는 영역에는 총 세 가지가 포함되었다. 국가자격시험 운영 실태 모니터링, 복지제도 부정수급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청년정책 관련 정보제공 및 공간지원이 그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중점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직무능력/성과 중심 임금보상 체계 개편, 공공분양/임대주택 개선 및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문화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개선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AHP 분석 결과

(1)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영역의 상대적 중요성

전문가들이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판단한 결과에 따르면, 그 가중치는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문화’, ‘청년 인프라’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가중치로 계산된 일자리는 35.4%이고, 교육은 27.2%, 주거는 15.7%, 복지·문화는 11.1%, 청년 인프라는 10.6%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영역은 일자리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청년 인프라보다 24.8%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림 V-5】는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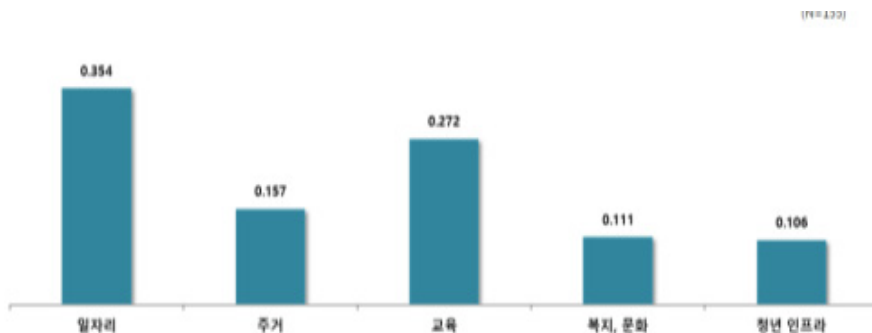


그림 V-5. 공정사회 진출을 위한 정책영역의 중요성 (전체 AHP)

세부적으로 전문가별로 정책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가중치 차이를 보면, 전체적인 중요도 양상은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다소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모든 전문가 그룹에서 일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어서 교육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이는 항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학계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전체 가중치와 동일하게 청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타 전문가에서는 복지·문화가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은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V-7. 공정사회 진출을 위한 정책영역의 상대적 중요성 (전문가별 AHP)

내용 \ 집단	전체	소속기관		
		학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기타
사례수	(155)	(77)	(73)	(5)
일자리	.354	.375	.330	.377
주거	.157	.143	.173	.149
교육	.272	.267	.282	.197
복지, 문화	.111	.111	.111	.120
청년 인프라	.106	.104	.104	.156

(2)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국정과제의 상대적 중요성

전문가들이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국정과제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판단한 결과에 따르면, 그 가중치는 ‘국정과제 90’, ‘국정과제 91’, ‘국정과제 92’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국정과제 90은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이며, 국정과제 91은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국민권익위원회·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이고, 국정과제 92는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국무조정실·법제처)이다. 이 중 가장 높은 가중치로 계산된 국정과제 90은 56%이고, 국정과제 91은 26.3%, 국정과제 92는 17.7%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정과제는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국정과제 90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국정과제 92보다 38.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그림 V-6】은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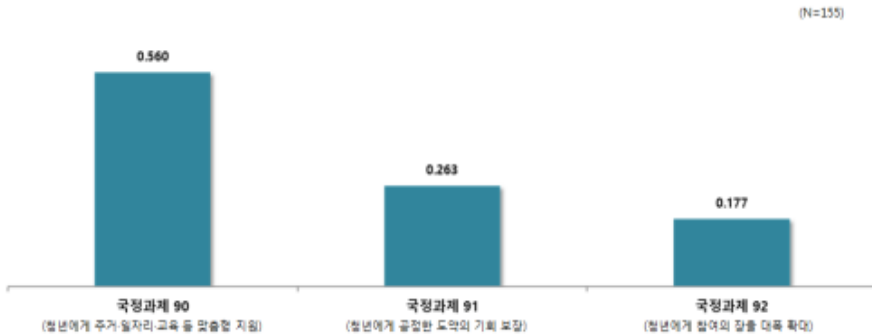


그림 V-6.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국정과제의 상대적 중요성 (전체 AHP)

세부적으로 전문가별로 국정과제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가중치 차이를 보면, 전체적인 중요도 양상은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다소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모든 전문가 그룹에서 국정과제 92를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학계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전체 가중치와 동일하게 국정과제 90을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지만, 기타

전문가에서는 국정과제 91을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표 V-8>은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V-8.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국정과제의 상대적 중요성 (전체 AHP)

내용 \ 집단	전체	소속기관		
		학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기타
사례수	(155)	(77)	(73)	(5)
국정과제 90	.560	.577	.557	.344
국정과제 91	.263	.277	.234	.470
국정과제 92	.177	.146	.209	.186

2. 청년정책 주체 간 ‘공정’ 인식 차이: 정책세미나

‘공정’ 키워드는 정책 주체별 관점에 따라 해석 및 관점의 폭이 상당히 큰 개념 중 하나이다. 따라서 공정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공정성을 키워드로 정책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공급자(정부)와 수요자(청소년, 청년,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공정’ 개념의 차이와 이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근거로 앞서 제시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학계 전문가와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 근무자 간의 청년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차이를 보이는 결과도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공급-수요 차원에서 연계성을 맺고 있는 주체 간의 공정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준비하였다. 지금까지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논의는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각 주체별로 공정을 평가하는 것은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공정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하나로 정의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신이 입지한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공정을 정책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정책 목표가 공정 구현이 될 경우, 정책을 둘러싼 주체들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어 수행, 운영하고 실제 정책 수요자에게 전달되어 체감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르게 해석되고 평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정책 주체인 청년-전문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년정책에

서의 공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1) 운영 개요

청년,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정책세미나를 통해 ‘공정’에 대한 개념 공유를 거쳐 다양한 주체가 인식하는 ‘공정’의 의미와 범주를 살펴보았다. 참여한 청년들의 경우 청년정책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경험이 있는 청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일반 청년의 경우 앞서 심층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므로 정책세미나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활동 경험이 있는 청년들로 구성하였다. 전문가와 공무원 또한 청년정책 관련 연구나 정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자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정책세미나를 통해 청년과 정부 공무원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장(場)을 준비하여 정책 당사자와 입안자 간의 ‘공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특히, 청년의 사회진출 시점을 중심으로 정책 당사자인 청년과 정부 공무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청년정책의 방향성 수립과 ‘공정’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공하였다.

표 V-9. 청년-전문가-공무원 정책세미나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비 고
참여자	• 청년, 청년정책 전문가, 청년정책 담당 공무원 (최근 5년 동안 청년정책 연구 및 업무 종사자 및 청년정책 활동 참여 청년 대상 선정)	
참여자 구성	• 영역별 전문가(교육, 일자리, 주거, 자립) 5인 청년 당사자(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포함) 4인 청년정책 담당 공무원 2인 총 11인	
조사내용	• 청년정책과 공정성에 대한 개념 정의 청년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생활, 참여 등과 관련한 현안 국정과제의 추진 정책들과 향후 정책 방향 공정과 영역별 정책사업 간의 연계 정도 등	
조사방법	• 총 3회에 걸쳐 의견 수렴 및 세미나 개최	
조사시기	• 2023년 8~10월	

2)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을 둘러싼 정책 주체 간의 인식을 살펴보고 상호 간 사고 공유를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이에 따라 청년과 정책전문가, 관련 정책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세미나를 통해 각 주체별로 인식하고 있는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정책세미나는 총 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1회와 2회차에서는 공정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살펴보고, 국정과제(90~92)에서 청년층 대상의 정책 지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각 영역별 공정에 대한 지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회차에서는 1~2회차에서 논의된 주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한 이후, 청년정책에서의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청년, 전문가, 공무원 정책세미나에서 주로 다뤄진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V-10. 청년-전문가-공무원 정책세미나 논의 주제

정책세미나 논의주제(1~2회)	정책세미나 논의주제(3회)
• 본인이 생각하는 공정의 의미와 공정/불공정을 구분하는 기준은? • 국정과제에서 제시하는 공정의 지향과 목표는? • 부처별/영역별 청년정책 사업에서 지향하는 공정의 목표는 유사한가? •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있어 공정 실현을 위한 노력과 체감 정도는? • 정부와 정책 당사자인 청년 간 정책에서의 공정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그 이유는? • 본인이 생각하는 청년정책에서 지향하는 공정의 기준과 방향성은?	•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 국정과제(90~92번) 청년정책 구현을 위한 부처 간 추진체계 및 연계방안 • 생애주기를 고려한 청년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아이디어 • 취약계층 청년 지원방안 •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청년 삶 격차 감소를 위한 지원방안

이와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둘러싼 관련 주체 간의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시도가 중요한 것은 ‘공정’이라는 주제가 앞선 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명확한 개념이 수립되거나 정의된 사항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해석되고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주제에 대한 답변을 구조화하고 상호 주체 간 공유하는 작업은 의의가 있다.

1~3회차에 걸쳐 수합된 내용은 텍스트로 정제하여 해당 질문 주제에 따른 질적 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각 그룹간 강조하는 개념을 구조화하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구조화한 내용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세미나 회의록을 텍스트화하고 코딩작업을 한 이후, 넷마이너 프로그램을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은 언어적 표현을 보다 구조화해서 단순히 개인 입장에 따른 논의에서 더 나아가 언급된 내용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노력을 시도한 것이다.

3)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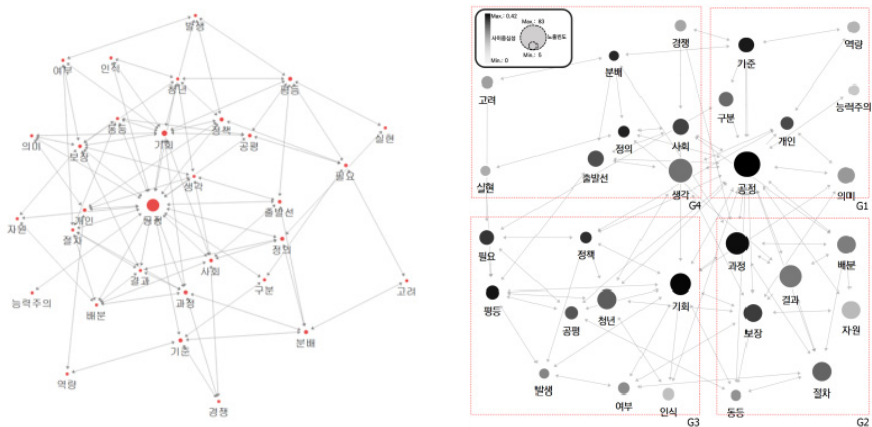
정책세미나 1회차에서는 개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이를 공유하였다. 2회차에서는 1회차에서 논의된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상호 간 의견을 교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각 직군에 따라서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는 측면이 있었다. 한편, 청년과 전문가 집단 가운데에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각 그룹 내에서도 다소 의견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경험한 내용에 기반하여 주제에 대한 입장을 보였다.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개념화 작업을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각 주제에 따른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논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1) 공정과 불공정에 대한 구분

공정을 둘러싼 논의는 전반적으로는 기회, 결과, 과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한 평등과 공평 간의 개념을 둘러싼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특히, 공정에 대해서 기회와 결과적 차원에서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집중 논의하였다.

공정이란 각 개인의 차이와 상황에 따라 발생한 불평등한 출발선을 보완하여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에 대한 동의가 높았다. 즉, 절차적인 차원에서 누구에게나 정보와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책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공정의 의미는 단선적으로는 기회의 공정, 과정의 공정, 결과의 공정 등으로 구분 지을 수 있으나, 정책과 삶의 현장에서는 기회, 과정, 결과가 단선적으로 나뉘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기도 하였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공정의 의미는 포괄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공정과 불공정의 구분은 또 다른 출발선에 공정하게 다다르게 하는가로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 즉, 어떤 한 출발점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할 만큼 그 이전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면 불공정하다는 논의도 지속되었다. 또한 결과적으로 분배적 측면에서 공정을 살펴보는 집단에서는 사회적 출발선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공정가치가 궁극적으로는 사회 내 경쟁에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2) 국정과제(90~92)에서의 청년정책 공정지향 목표

한편, 국정과제에서 제시하는 목표와 실제 구현되는 정책 목표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국정과제의 국가장학금의 경우, 청년의 교육 부담 완화와 취업준비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제도로서 청년세대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제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이행될 때는 소득분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해석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정책을 제공하는 정부와 지원을 받는 수요자로서 청년, 그리고 이를 해석하는 전문가 사이에서 공정 개념을 정의하고 평가하는 관점 차이로 보기도 하였다.

또한 국정과제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공정’이란 청년정책의 한 가지 목표로서 이해된 ‘공정’, 즉 청년들의 “공정한 사회진출(또는 이행)”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는 그룹도 존재하였다. 이는 본 연구과제에서 공정 개념의 특징을 바라보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은 사회진출을 앞두고 초기에 이를 시행하는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사회에서 어떠한 시작점을 제공하고 운영하는가와 연관되어 있다.

국정과제(90~92)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개념에 따른 중요 비중을 고려할 때 크게 다섯 개의 그룹으로 구분해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청년정책이 국정과제에 최초로 포함되게 된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접근하는 시각이 있었다. 공정이라는 가치보다도 청년정책에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는 그룹이었다. 두 번째로는 국정과제에서도 나타나듯이 공정 개념 자체를 강조하면서 지향점으로서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청년그룹에서는 국정과제의 청년정책을 공정하게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청년세대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끝으로, 국정과제 세부내용에서 공정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그룹도 존재하였다. 교육, 일자리, 주거 영역 등에서의 공정가치 구현 방안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구체적 정책 사례로서 ‘내 집 마련’ 정책을 예로 들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 중에 과연 ‘내 집 마련’을 실제로 고려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토대로 현재 청년세대에서 내 집 마련을 시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사회경제적 계층과 특정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에 다수가 동의하고 이에 따른 정책 개선,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를 통해 출발할 수밖에 없는 다수의 청년들은 정작 전세사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정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영역별로 세부사업들 중에는 교육 부담 완화, 자산형성 지원, 취약청년 지원, 정책과정 참여 확대 등 ‘공정’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해서 청년정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거시적 차원에서의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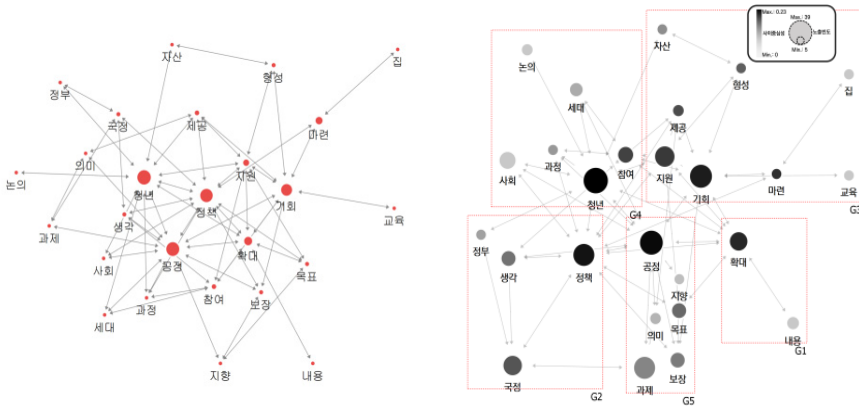


그림 V-8. 국정과제(90~92)에서의 청년정책 공정지향 목표 인식

(3) 청년-전문가-공무원이 생각하는 청년정책에서의 지향점

공정에 대한 개념 이해를 토대로 각 참여 주체가 인식하는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정과제에서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는 기회의 평등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두드러지는 반면, 과정이나 결과의 평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집중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에 앞서 제시한 것과 반대되는 시각도 존재하였다. 청년들은 불평등한 출발선을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정과 결과의 격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정부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회진출 과정에서 결과적 차원으로 법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출발선을 보장해도 이에 따른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어려우며, 다수의 청년층이 얻은 결과를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오히려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청년세대에게는 지역에 따른 격차(수도권, 비수도권), 일자리 특성(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등에 따른 격차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청년정책을 대상으로 상이한 평가를 제시하였다. 이는 개인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공정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인 동시에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와 상황에서 청년정책을 바라보는가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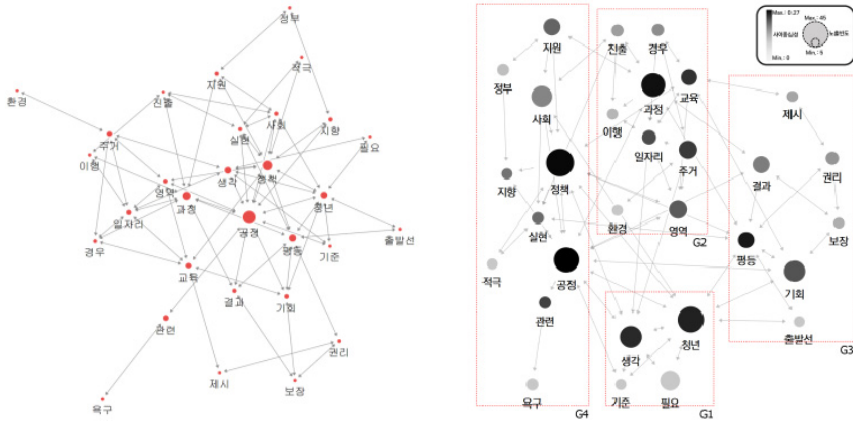


그림 V-9. 청년-전문가-공무원이 생각하는 청년정책에서의 지향점

(4) 주체별로 인식하는 현행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청년정책에서 강조하는 공정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서 다수가 주로 ‘기회 확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이행기 과정에서 적절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 청년층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취지로 운영된다고 보기도 하였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영역에서는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자리(경험) 접근 기회를 확대하며, 채용과정 불공정성 해소와 같은 일반적 관행이나 절차를 개선하고, 창업 지원을 통해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주거와 금융 영역에서는 공급과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상품을 통해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는 것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한편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청년정책의 경우, 중산층 진입 기회가 가능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로 제도가 논의되다 보니 청년층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청년들에 대한 고려나 논의가 부족하다는 측면도 있다는 입장도 있었다. 반면에 교육 받을 권리, 일할 권리, 안전한 주거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경우 ‘세대 내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는 보편 차원에서의 청년 지원에서 더 나아가 취약계층 청년으로 확장해서 청년의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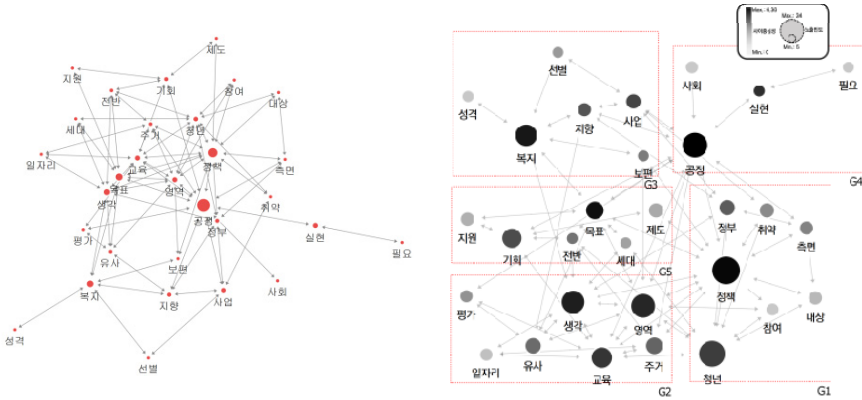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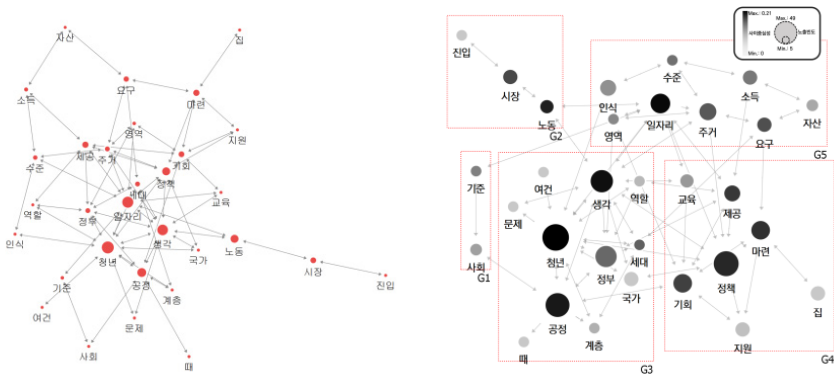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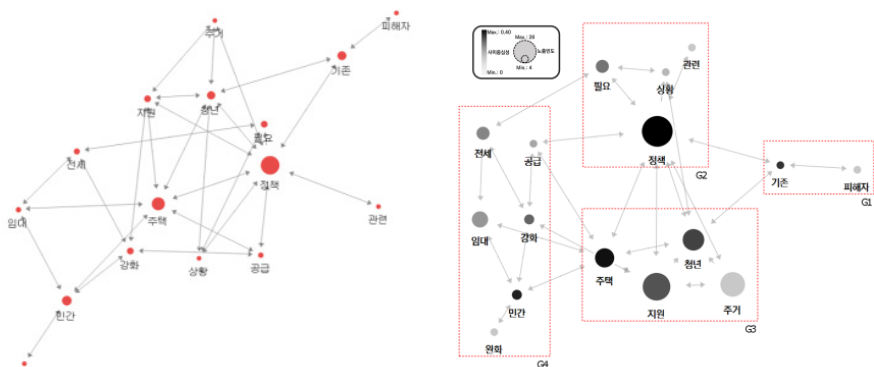


그림 V-10. 주체별로 인식하는 현행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특히, 영역별로 볼 때 흥미로운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일자리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과 비교할 때 양적, 질적으로 가장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는 앞서 진행한 설문과 심층면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듯이 청년정책에서의 일자리는 공정 개념을 논의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주거 영역의 경우도 정부의 주거 공급뿐 아니라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킨 전세사기와 같이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적인 차원에서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수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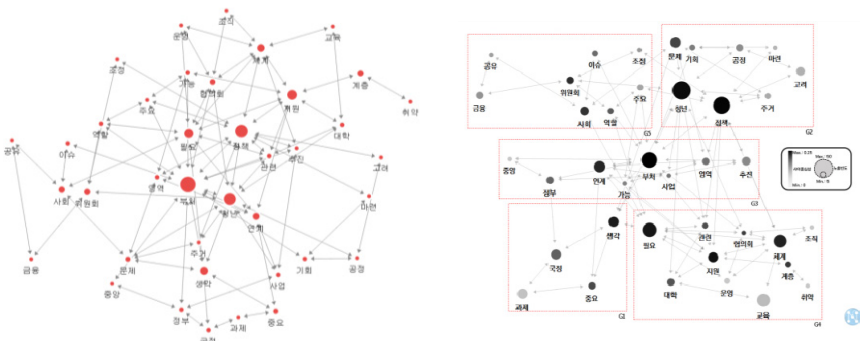
일자리 영역



주거 영역

그림 V-11. 영역별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지금까지는 청년 당사자 관점에서 주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부처 중심으로 시행되는 사업에서의 공정에 대한 개념과 인식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부처 사업이 중심으로 위치하면서 공정은 행정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와 영역별로 구현되는 사업으로 크게 구분되어 나타나는 특이점을 보였다.



(5)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법적·제도적 차원 인식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이 '23년 개정됨에 따라 방향성과 목표가 재정립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청년참여가 강조되면서 정책도 함께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이라는 기준을 토대로 살펴보면 영역별 정책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을 보완해갈 것인가에 따른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책세미나 참여자들도 채용, 주거 등 영역에 따라 법제 차원에서 공정이 어떻게 보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청년기본법」을 보면 청년정책 내에서도 적용 대상 범위에 따라 간극이 존재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19~34세를 제외한 취약계층 연령층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을 이외 연령 집단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까닭에 청년을 제외한 핵심노동 연령층에서 각종 청년 지원정책이 역차별로 여겨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와도 맞물리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에서 지정하는 청년 연령이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서 중앙과 지방에서의 청년정책 지원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정책 지원 필요성이 절정에 달한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책 수혜의 크기를 점증, 점감하는 방식 등으로 기본법상에 규정된 청년(19~34세) 이외 집단이 겪는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23년 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에 '취약계층 청년'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된 부분도 눈여겨볼 만하다.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기존의 조항들(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금융생활 지원)에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보편성 기초의 청년정책에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 변경의 흐름 속에서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년정책의 성격상 중앙과 지방의 연계가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중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조항으로 한 것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와 같이 임의조항으로 제시될 경우, 실제 각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에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공정과 연결된 부분으로서 채용과 관련해서는 국정과제도 강조하고 있듯이 실제 정책에서도 구현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채용절차법 등 입시 및 채용에서의 비리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질서법인 까닭에 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 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는 결국 판사의 판결 역량 및 성향, 국민 정서,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 처벌에 대한 공정,

응분 등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공감하였다.

또한 채용과 관련하여 법적적인 차원에서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적용범위를 기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서 단계적으로 더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현장 사례를 통해 볼 때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채용절차에서 구직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직무에 무관한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위반 사례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법률 내용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행정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주거와 자산형성과 관련하여 청년층은 기성세대와의 경험, 정보 등의 불균형이 심각한 까닭에 각종 기만행위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는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지식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풀어내어 홍보하고 법적, 절차적 대리인의 업무 범위 및 책임 소재를 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 의심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정보 공개, 위험 고지 등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도 지역 간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에 있어 일자리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 등을 강화하여 지방에서 거주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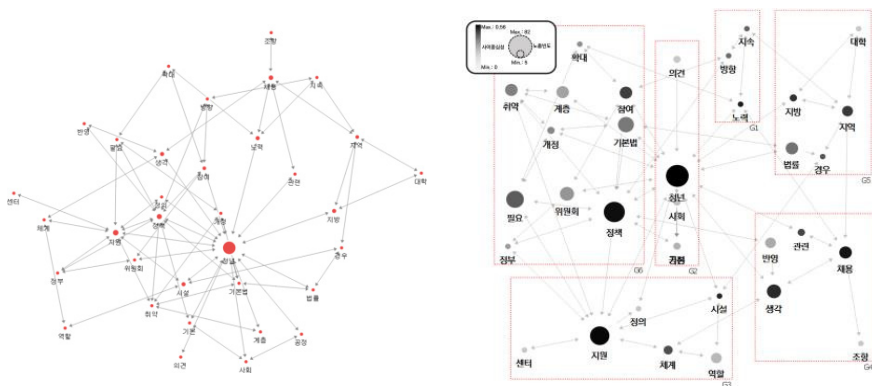


그림 V-13. 청년정책 사업에서 지향하는 공정에 대한 인식

(6) 생애주기에 따른 청년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아이디어

청년정책의 특성 상 특정 부처만의 업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처 간 협업과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노력은 주요부처 내주요 부처 내 설치된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설치되(권익위·법제처 제외)과 연계해서 볼 수 있다. 또한 청년정책 전담조직(9개)은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2주 단위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청년정책 주요 부처의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데에 유효하고 진일보한 추진체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이 노력만으로는 부처 간 정책 칸막이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에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의 협의회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청년기본법」 개정과도 관련하여 전 부처 청년보좌역이 정책 수립과정에서 부처 간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혀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부처별로 활동하는 청년들 간에도 소통할 수 있는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있어서도 상당수가 동의를 하였다. 이와 같은 형태의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때 간담회나 이슈레이징(issue raising)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범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회의 장을 정례화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에 따른 근거로 주거정책을 들기도 하였다. 청년 분야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거정책은 ‘내 집 마련’ 정책으로 국토부 자체적으로 수행 가능한 영역에 놓여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일부 금융 측면의 정책과 연계되었을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제 부처들과 협력해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주거정책의 방향이 ‘내 집 마련’에 국한되지 않고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세입자 권리 보장, 불공정 관행 개선 등 폭넓은 영역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소통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 저자산 계층 지원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와의 지원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임대차 영역의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법무부와의 공조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불법건축물 문제 등 행정적 단속·조치와 연관된 부분은 행안부와의 연계도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업무 지원 및 관련 연구나 논의가 필요한 측면에서 국무조정실의 역할도 중요하다. 더불어 부처 간의 협업 과정에서 청년 관점에서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한편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생애주기에 필요한 주요

정보인 대학입시, 취업, 주거 등 청년층이 교육 기회와 지위 경쟁 단계에서 정보를 얻는 가장 주된 경로는 온라인 플랫폼(커뮤니티, 포털, 전문사이트 등)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존 청년포털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되 해당 플랫폼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팩트 체크, 가짜정보 필터링 등의 노력은 정책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층면담에서도 청년층의 경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여기면서 중요한 자산이라고 언급한 만큼 입시, 취업, 주거공간을 얻는 과정에서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한편, 정보의 특성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접근성이 달라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입시·채용절차 등에서 활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서 입학사정관 전형 시 교외활동 배제, 개선된 블라인드 채용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전국적으로 표준화하여 각 지역 현장에서 청년과 접점을 형성하는 실행기관들로 하여금 청년들이 사회진출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균등하게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특히 청년정책에서 정보 전달체계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룹 간 영역별로 일상에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과 특정 계층 대상 간 공유되어 차등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보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나뉘서 제시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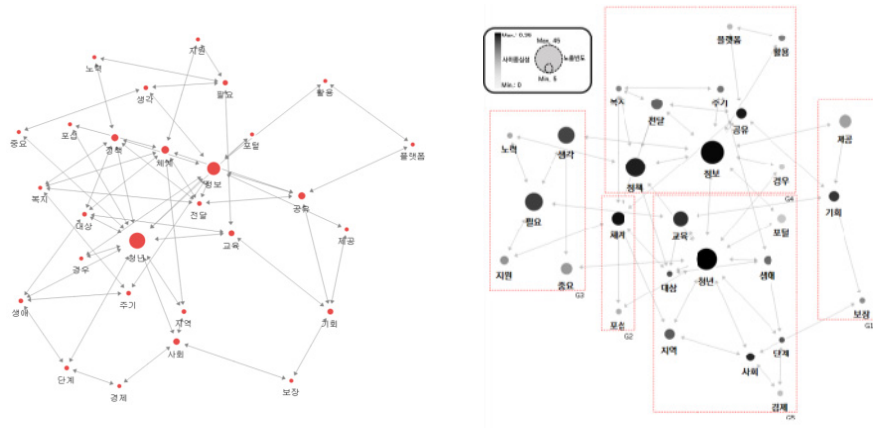


그림 V-14. 생애주기에 따른 청년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아이디어

(7) 청년정책 대상으로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

우선적으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청년정책을 기준으로 할 때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 지방도시 청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 다른 예로 자립준비 청년이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주거문제 안정이 가장 중요하며, 자립을 위한 교육과 직업능력 개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고립·은둔 청년의 경우, 심리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청년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청년 그룹별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단기, 중기의 로드맵을 만들어 부처 간 역할 분담을 하는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정의부터 합의된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 주제별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청년’과 ‘취약 청년’은 대상 범주를 설정하는데 다른 개념이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 중심의 지원방안 수립·집행은 불가피하지만 복지부 중심의 지원방안은 취약계층 청년으로 기존 복지 대상의 부수적 범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었다. 청년의 다층적 취약성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대상 범주 설정 시 기존 복지 대상으로 포괄되지 않는 취약 청년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취약 청년은 아직 제도로 포괄되지 못하고 있는 대상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정책 사각지대라고 할 때, 이들에 대한 발굴과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은 생태계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본 연구와 더불어 기존에 취약계층 청년으로 고립·은둔, 자립준비 등 청년은 그들을 지원하는 운동적 성격의 민간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집중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금융소외계층 등 미미하지만 청년 삶 생태계의 기초로서 민간 현장의 문제 또는 대상부터 발굴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기존의 전문가-공무원 중심으로 정책 수립, 시행 논의가 진행된 것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사례로도 볼 수 있다. 다양한 주체 간의 개방된 형태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때 청년층도 다각적인 시각에서 여러 사각지대 집단을 도출하고 이에 종합적인 해소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강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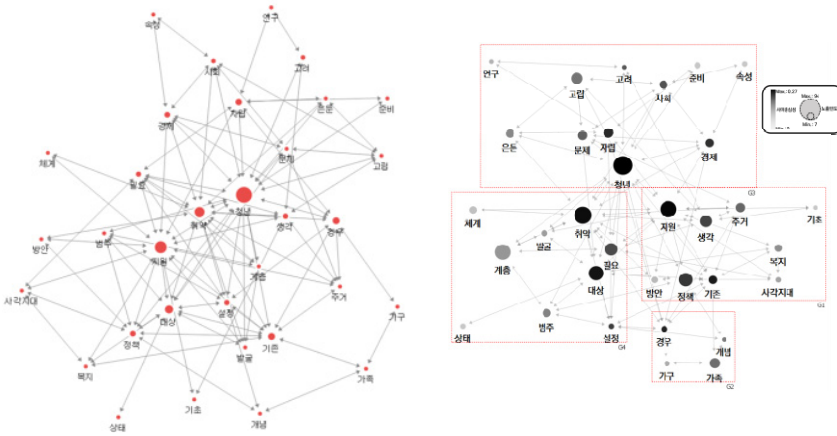


그림 V-15. 청년정책 대상으로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

(8) 청년정책 지역 불균형에 대한 인식

지역은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듯이 청년층의 교육, 일자리, 주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역 간 편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 인구·기능 분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인프라 투자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왔다. 그러나 결과 측면을 볼 때 청년의 양적인 수요에 맞춰 진행되다보니 수도권 청년 요구를 중심으로 정책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교육에서는 대학입시뿐 아니라 지방대학 졸업자가 취업을 위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역 간 인프라 차이를 개선하는 것은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교육 영역에서 현재 청년층(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도상의 중요한 변화는 2025년부터 도입될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체계이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관련에 행·재정 권한을 넘겨 지방대학의 교육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대학 학생들의 지역에서의 성공과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지역 간 일자리 불균형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며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는 인구정책, 산업정책, (대학)교육정책 등의 여러 가지 거시적 차원의 정책이 연계해서 적용되었을 때 조금이나마 문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았다. ‘광주형일자리’의 경우, 지역의 일자리가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 문제로

지적되어 온 문제를 다양한 영역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산업안전, 근로환경, 교통(주거지와 산단 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한 사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임금이나 인프라는 부족하더라도 수도권에 비해 낮은 주거비 등으로 인해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정책으로 체감될 수 있다. 앞서 진행한 지방에서 근무하는 청년과의 면담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지역 청년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주거 영역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비수도권에서 주거 지원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주거 측면에서 바라보면, 수도권에 다른 기회가 있는데 주거 때문에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을 강제하기보다는 산업이나 교육정책을 통해 비수도권에 기회를 확대하고, 수도권에 집중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수도권의 주거문제도 해결하고 비수도권의 자산 측면의 박탈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 국토 차원의 일자리 배치를 선행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배후 주거지를 개발하는 과거의 방식이 오히려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교육-일자리-주거 영역을 연계한 지역 간 균형을 위한 청년의 삶 체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심층면담에서 청년층 답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교육과 노동, 주거정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한 하나의 정책이 아닌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 세미나 참여자들도 공통적으로 필요성에 공감하였듯이 교육-노동-주거에 이르는 청년의 모든 생애를 하나의 연결선상에서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청년정책은 특정한 개별 부처의 추진으로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사업으로서 총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또한 청년층 인식과 관련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이미 확고한 ‘고정화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또한 생각해볼 문제이다. 청년층 대상으로 ‘서울 로망’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심지어 일자리까지 제공한다고 해도, 그 지역의 인프라나 문화 등의 격차는 서울과 비교 불가한 수준이기 때문에 인프라와 문화를 향유하고 싶다는 욕구로 인해 서울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반면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주관적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지역의 자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지역 격차라는 요인의 작동성보다 청년 본인이 처해있는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지에 따라 체감하는 격차나 불공정 인식이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 청년정책으로 지역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의 인프라나 개발 등을 따라가려는 행태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색깔을 덧입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자치권을 더 부여하고 자유경쟁을 함으로써 각 지역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연계형 취업, 지역 가산점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특화된 이유에 주력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원의 접근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 자체로서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이를 정책적으로 균등하게 맞추는 것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힘든 측면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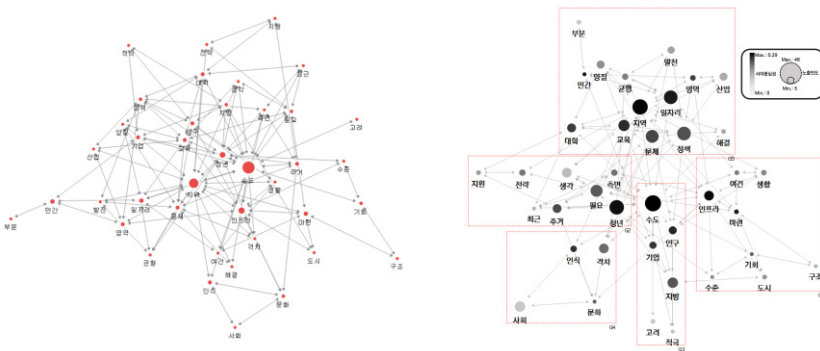


그림 V-16. 청년정책 지역 불균형에 대한 인식

3. 소결

본 장에서는 공정과 청년정책 주제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 간의 의견을 토대로 국정과제에서의 청년정책에 있어 공정을 중심으로 둘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정책 영역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AHP와 IPA 분석을 토대로 국정과제에서의

청년정책을 단위로 공정한 사회진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청년정책을 둘러싼 중요한 의사결정 주체로서 공무원과 전문가, 청년이 하나의 공론장을 구성하여 자신들의 시각에서 살펴본 공정과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 논의를 시도하였다. 정책세미나에서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되는 정책 주체가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고 공정과 청년정책을 둘러싼 개념 간의 텍스트 구조를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 그룹 단위로 어떠한 주제 개념이 도출되는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국정과제 90은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국정과제 92는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국조실·법제처)하는 과제를 가장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사회진출에 청년들의 참여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주거·일자리·교육 분야에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청년정책의 영역에 대한 IPA 분석에서도 일자리와 주거 분야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중적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으며, 국정과제의 세부과제에서도 내 집 마련(국정과제 90), 취업지원 혁신(국정과제 90), 미래역량 강화 지원(국정과제 90)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과제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하여 전문가들은 일자리 정책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청년 인프라, 복지, 문화는 상대적으로 청년의 공정과 다소 거리가 있는 중요도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청년정책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공정한 청년정책의 영향요인과 현안 이슈, 청년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생활, 참여 등과 관련한 현안 국정과제의 추진 정책들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성과와 중요도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였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청년정책의 공정성 제고 방향이 무엇인지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가지고 청년정책 분야의 각 전문가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검토하였다.

청년정책을 둘러싼 정책주체로서 청년-전문가-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세미나에서는 청년정책과 공정을 주제로 개인 또는 자신이 속한 그룹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먼저 공정 주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기회에 대한 공정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하였으나, 공정을 판단하는 공통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공정 개념을 상호 간에 이해하고 공유하는데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을 추구하는 청년정책 방향이나

방법에 있어서 거시적으로나마 합의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년정책으로서 교육과 일자리, 주거정책에 있어서도 각 정책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어 공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수립되는 것에 한계가 나타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정책 전반의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우선 이뤄지고, 그 안에서 공정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숙의도 요구된다. 또한 청년정책에서 공정에 대한 논의가 통일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 추진체계와 전달체계도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형성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공정 이슈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룬 주제는 취약계층 청년과 지역 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이었다. 취약계층 청년 또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논의부터 이루어졌다. 현재 청년정책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2023년 개정된 「청년기본법」은 향후 정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은둔·고립 청년, 자립지원 청년, 가족돌봄 청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취약계층 청년으로 규정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촘촘한 청년정책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연결되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는 지역 청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 일자리, 주거 영역 차원에서 문제점, 현황을 토대로 각 주제마다 가지고 있는 의견을 공유하면서 해당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간 격차를 감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측면에만 치우쳐 지방이전을 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교육과 일자리, 주거가 연계되어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예측 가능한 삶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본 장에서는 앞서 공정과 청년정책을 둘러싼 주제에 관련한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청년 대상 설문과 심층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정책 관련 주체(청년-전문가-공무원)들의 입장과 의견을 공유하고 상호 간의 생각을 이해하고 협의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청년정책과 같이 대상 중심의 정책의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정책을 디자인하고 수립, 운영하는 공무원과 전문가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 이슈와 같이 명확한 개념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사항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 제6장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주요 논의 및 정책제언

- 1. 정책 도출 과정 및 추진 방향·목표 설정
- 2. 정책 방향·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수립
- 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제언
- 4. 소결

1. 정책 도출 과정 및 추진 방향·목표 설정

1) 주요 분석 결과 요약

(1)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분석 → 성별, 연령별, 소득별 청년 공정성 인식 및 요인 파악, 다른 연령세대와의 공정 인식 비교 검증
- 2013~2023년 주요 일간지 언론사 사설 중 “청년”, “공정” 키워드·의미 연결망 분석 → 청년, 공정 이슈에 대한 언론(미디어) 프레임 및 군집(클러스터) 특징 도출
- 2023년 청년정책 주요 부처(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보도자료 분석 → 부처 단위 청년정책 영역별 추진 방향 및 목표 검증

(2) 설문조사 분석

- 전국 17개 시도 청년(19~34세) 대상 공정 기준 및 개념, 대상 차이에 따른 공정 적용에 대한 태도, 청년정책 영역별 공정에 대한 평가 → 기회 및 절차공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 성별·소득에 따른 공정가치 부여, 청년정책 중 일자리 영역에 가장 높은 공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실증 근거 마련

(3) 심층면담 분석

- 연령, 성, 지역, 학력, 직업, 청년정책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12명의 청년(19~34

18) 이 장은 이윤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김봉철 연구위원(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최용환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집필하고, 김지민 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작업을 하였음

세) 대상 1:1 심층면담 실시 → 공정에 대한 경험 인식, 교육-일자리-주거 경험에 따른 공정 기준 및 평가,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등 제시 →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실증 근거 마련

(4)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 청년정책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후 AHP/IPA 분석을 통해 국정과제에서의 청년정책 단위로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주요 요인 파악 → 청년정책에서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현안 이슈, 청년정책에 따른 향후 정책 방향 모색 → 국정과제 추진 정책과 청년정책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향 수립

(5) 청년정책 주체(청년-전문가-공무원) 간 정책세미나 분석

- 청년-전문가-공무원 11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개념 및 기준, 국정과제에서의 청년정책 운영 과정 평가, 영역별(교육-일자리-주거) 청년정책에 대한 공정가치 실현 방안 등 상호 간 인식 공유 및 협의 →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실증 근거 마련(의미 연결망 분석), 청년정책 관련 주체 간 소통 기회 확장 가능성 확인

2)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추진 방향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에 따라 제시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이전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교육, 일자리, 주거 영역 중심의 청년정책에 기반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향에 맞춰 설정하였다.

먼저, 모든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공정사회이다. 공정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논의할 때 과정, 절차 수준에서 공정한가에 대한 부분을 많은 청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심층면담 결과, 시작점이 다른 가장 큰 요인으로 부모의 경제력을 제기하였다. 이에 청년들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첫 번째 추진 방향으로 모든 청년들이 자신 스스로 미래를 꿈꾸고 형성해갈 수 있는 사회를 선정하였다.

두 번째는 모든 청년이 정당한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공정사회이다. 2차 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청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청년정책에서 공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개선을 요구한 영역은 일자리였다. 특히 구직, 채용과정에서 공정하게 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상당부분 이뤄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립과정으로서 일자리 영역에 보다 집중해서 추진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였다.

끝으로, 모든 청년이 자유롭게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공정사회이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들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질문을 구성하여 시행하였다. 그 결과, 청년층에서는 공정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신들의 능력/역량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크게 문제시 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을 최우선하여 다른 제약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자유롭게 펼치면서 경쟁하되 그 경쟁에서는 공정한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으로 마지막 추진 방향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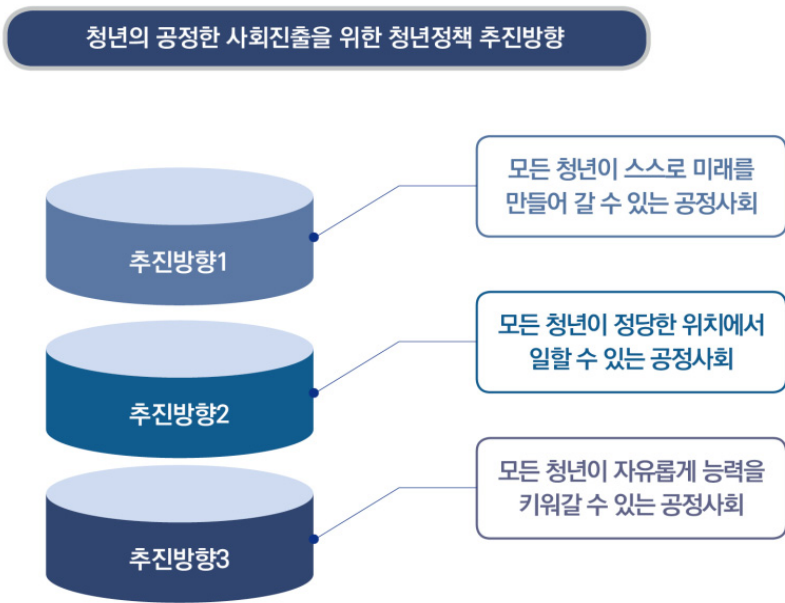


그림 VI-1.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정책 추진 방향

3) 정책제언 도출 과정

정책제언을 도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주제가 선정된 직후부터 청년층과의 면담뿐 아니라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중앙부처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과의 정책 실무연구협의회 등을 시행하면서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듣고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 일자리, 주거라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의 연구 영역과 그에 따른 세부목표를 선정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성 개념을 도출하고 2차 데이터와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 청년과 공정, 청년정책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그 이후 청년(19~34세) 대상으로 공정과 청년정책에 대한 설문과 심층면담을 통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학술세미나와 정책실무연구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하면서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정제하였다.

앞서 진행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강조하였던 청년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공정과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및 의견을 살펴보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먼저, 청년정책 전문가 대상으로 국정과제에 따른 영역별 청년정책에서 공정이 담고 있는 의미와 방향, 정책 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토대로 중요도-성과도 분석(IPA)과 AHP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이후, 지금까지 분석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년-전문가-공무원 세 주체 간의 정책세미나를 3회에 걸쳐서 시행하였다. 이는 공정 개념의 특성상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청년정책을 둘러싼 주체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정의 개념 가운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부분에서 인식의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과정이다. 또한 정부에서 수행하는 국정과제에서의 청년정책에 공정이 어떠한 목표와 방향성을 토대로 접목되고 실현되었을 때 청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5대 정책과제와 15개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과제 마련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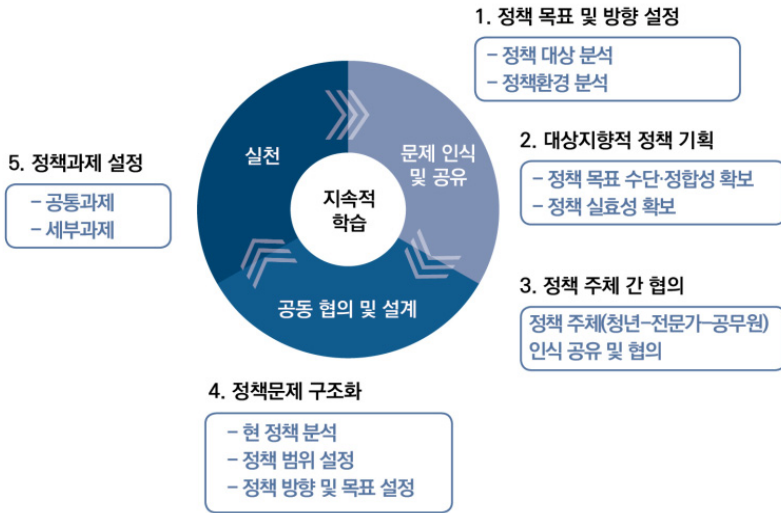


그림 VI-2.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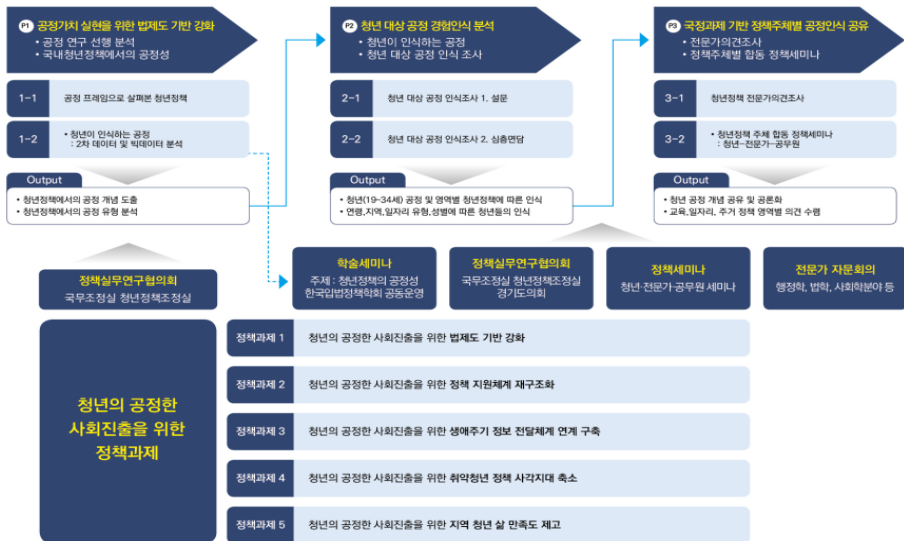


그림 VI-3. 연구 설계에 기반한 정책과제 도출 결과

4)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앞서 수립한 정책 추진 방향을 토대로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추진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 번째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청년정책 기반 강화이다. 정책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제적인 차원에서부터 토대가 성립되어야 한다. 특히 청년정책의 경우, 「청년기본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 될 것이다. 이에 청년친화적인 공정사회 마련을 위한 첫 번째 목표는 정책 기반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과제는기반 마련으로서 법제도 강화와 청년정책 지원체계 재구조화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목표는 청년층이 공정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청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청년-전문가-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세미나 논의 결과 청년층의 경우 교육-일자리-주거라는 일련의 생애주기 과정에서 공정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을 당연히 여기고 그에 따른 개선을 요구하기 보다는 체념하고 수긍하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이 보다 공정과 관련한 인식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청년 스스로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청년정책 지원체계 재구조화와 더불어 생애주기 전반에 따른 공공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세 번째 목표는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청년 삶 격차 해소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전문가 의견조사,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볼 때 청년층에서 공정을 개념화할 때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상대성이었다. 절대적인 차원에서의 공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상대적으로 청년층 내에서 혹은 다른 세대와 청년층 간에 공정이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특히, 취약청년과 지역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그룹의 청년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삶이 양극화되어가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취약청년 정책 사각지대 축소와 지역 청년의 삶 만족도 제고를 정책과제로 수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 【그림 VI-4】와 같이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추진 방향과 목표, 정책과제를 수립하였다.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추진방향·목표 및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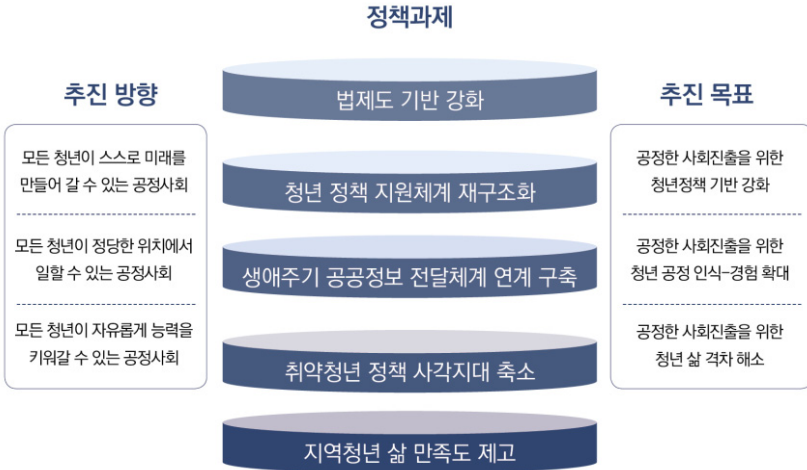


그림 VI-4.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에 따른 정책과제

2. 정책 방향·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수립

1) 5대 정책과제 및 세부실천과제

본 연구에서 수립한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5대 정책과제와 그에 따른 15개 세부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VI-1.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과제 및 세부실천과제

정책과제	세부실천과제
1. 법제도 기반 강화	1) 「청년기본법」 일부 개정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안) 일부개정 3) (가칭)「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법률안」 제정
2. 청년정책 지원체계 재구조화	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권한 및 의사결정 참여 시스템 강화 2) 부처별 위원회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참여대상 및 방식 확대 3) 청년친화적인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연계 강화

정책과제	세부실천과제
3. 생애주기 정보 생성 및 공유 전달체계 구축 강화	1) 기존 '청년포털' 홈페이지 구조 및 기능 재편성
	2) 중앙 및 지역 청년지원센터 연계 기능 강화
	3) 생애주기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공공정보 공유 및 컨설팅 통합 시스템 마련
4. 취약청년 정책 사각지대 축소	1) 취약계층 청년 기준 범위 재정립
	2) 교육-일자리-주거 연계 지원을 위한 실무 통합부처·부서(센터) 신설
	3) 취약계층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가칭)'시간을 달리는 청년'신설 운영
5. 지역 청년 삶 만족도 제고	1) 지역이주 청년 대상 (가칭)'이주지원바우처' 제공
	2) 지역 간 교육-일자리-주거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정책 지원 제도 개선
	3) 청년친화 일자리-주거 연계 커뮤니티 구축 운영

본 연구에서는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서 문헌분석 및 선행연구 검토,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진행,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AHP 분석, 청년-전문가-공무원 대상 정책세미나의 일련의 연구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였고, 각 정책과제의 운영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제도나 사업을 지속·연계하는 방안과 신규 제정 또는 발굴하는 방안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정책과제의 실현 방안을 높이기 위해서 국정과제에서 청년정책과의 연계 방안과 제1차 청년기본계획 수정(안)(21~25)과의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본 과제에서의 정책들을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수행하였다.

표 VI-2.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근거 및 운영방식

영역별 정책			근거	정책 도출 근거					
				문헌분석 및 선행 연구 검토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심층면담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청년 전문가 공무원 정책 세미나	
			운영방식						
			지속 연계	신규 확장					
1. 법제도 기반 강화									
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		●		●	●	

영역별 정책	근거		정책 도출 근거				
			문헌분석 및 선행 연구 검토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심층면담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청년 전문가 공무원 정책 세미나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일부개정	○					●	
3) (가칭)「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법률 안」 제정		○				●	
2. 청년정책 지원체계 재구조화							
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권 한 및 의사결정 참여 시 스템 강화		○		●			●
2) 부처별 위원회 청년정 책 제안 및 모니터링 참 여 대상 및 방식 확대		○		●	●	●	●
3) 청년친화적인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정 책 연계 강화	○		●	●		●	
3. 생애주기 정보 생성 및 공유 전달체계 구축 강화							
1) 기존 '청년포털' 홈페이 지 구조 및 기능 재편성	○				●	●	
2) 중앙 및 지역 청년지원 센터 연계 기능 강화	○				●		●
3) 생애주기의 원활한 이 행을 위한 공공정보 공 유 및 컨설팅 통합 시스 템 마련		○			●		●
4. 취약계층 청년정책 사각지대 축소							
1) 취약계층 청년 기준 범 위 재정립		○	●			●	●
2) 취약계층 청년 교육·일 자라-주거 연계 실무 통 합부처·부서(센터) 신설		○		●		●	
3) 취약계층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가칭) '시간을 달리는 청년' 신설 운영		○			●		

영역별 정책	근거	정책 도출 근거				
		문헌분석 및 선행 연구 검토	2차 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심층면담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청년 전문가 공무원 정책 세미나
5. 지역 청년 삶 만족도 제고						
1) 지역이주 청년 대상 (가칭)이주지원바우처 제공	○			●		●
2) 지역 간 교육-일자리-주거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정책 지원 제도 개선	○	●			●	
3) 청년친화 일자리-주거 연계 커뮤니티 구축 운영	○			●		●

2) 국정과제 청년정책과 본 연구의 정책과제와의 연계성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청년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국정과제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의견조사 때 세부과제로 구분하여 질문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과제 5개를 국정과제 영역과 연결해서 살펴봄으로써 정책과제에 대한 구체화된 논의를 통해 실천 방안을 마련하였다.

표 VI-3. 국정과제 청년정책과의 연계성

국정과제 및 영역별 정책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과제	1. 법제도 기반 강화 2. 청년정책 지원체계 재구조화 3. 생애주기 정보 공유 전달체계 구축 강화 4. 취약청년 정책 사각지대 축소 5. 지역 청년 삶 만족도 제고				
국정과제	세부과제	정책과제 1	정책과제 2	정책과제 3	정책과제 4	정책과제 5
국정과제 90 청년에게 주거· 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내 집 마련			●		●
	취업지원 혁신	●		●		
	미래역량 강화 지원			●	●	
	교육 부담 완화			●	●	

국정과제 및 영역별 정책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과제	1. 법제도 기반 강화 2. 청년정책 지원체계 재구조화 3. 생애주기 정보 공유 전달체계 구축 강화 4. 취약청년 정책 사각지대 축소 5. 지역 청년 삶 만족도 제고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공정기반 구축	●	●	●	●	●
	취약청년 출발 지원		●		●	
국정과제 92 청년 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청년참여 확대	●	●	●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	●		
	지방 및 민간 협업		●			●
	청년정책 인프라	●	●			
	법제 개선	●				

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21~'25)에 기반한 정책과제 실천 방안

본 연구에서는 23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을 토대로 제안하는 정책과제와의 연계점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통해 향후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다. 정책제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국토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경기도의회 등 다양한 협력 주체와 정책에 대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였다. 추후에도 관련 부처와 청년위원회, 청년단체뿐 아니라 국회와의 협의회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장해갈 것이다.

표 VI-4.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21~'25)에 기반한 정책과제 실천(안)

구분	지속	신규	확대
일자리	· 일하는 모든 청년 고용보험 가입 · 청년창업 기술중심 전환 및 주기 지원체계 강화 ※ 코로나 19 극복 위한 청년구직자 지원('25년까지 128만 명 +a)	· 청년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매년 일경험 프로그램 8만 +a 지원) · 청년친화적 공정 고용문화 확립	
본 연구 연계방안		· 생애주기 정보 공유를 위한 청년포털 통합 시스템 구축(공공정보 제공에 대한 질적 제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안) 일부개정 · (가칭)「청년의 공정한 사

구분	지속	신규	확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소통기능 강화 예) 공정채용 기준, 방식 설정을 위한 청년정책조정 위원회 내 (가칭)공정채용 위원회 신설	· «희진출을 위한 법률안» 제정
주거	· 청년 43.5만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 10% 감축	·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주택 균형 공급 (~'27년 58만 호)	
본 연구 연계방안	· 지역이주 청년 대상 (가칭)이주지원 바우처 제공	· 교육-일자리-주거 연계 지원을 위한 통합부서 신설 · 청년친화 안심 주거 커뮤니티 구축	
교육	·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온택트 교육 기반 구축	· 지방자치단체 주도 지역 혁신 맞춤형 인재 양성	· 미래사회 선도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본 연구 연계방안	· 생애주기 정보 공유를 위한 청년포 털 통합 시스템 구축(공공정보 제공 에 대한 질적 제고)	· 지역이주 청년 대상 (가 칭)이주지원바우처 제공	
복지·문화	· 매월 1회 문화가 함께하도록 기반 확대	·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청 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 원 확대	· 취약청년 긴급자금: '25년 까지 8,000억원 지원 · 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 청년 발굴·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본 연구 연계방안			· 취약계층 대상 범위 재조 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취약청년 대상 교육, 취 업 준비기간 지원 (가칭)시간을달리는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신설
참여·권리	·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청 년친화적 사회 기반 조성	·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 위 원회를 청년참여 위원회 로 지정
본 연구 연계방안	· 기존 '청년포털' 홈페이지 구조 및 기능 재편성 · 중앙 및 지역 단위 청년센터 기능 강화(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계 지원 시스템)	· 생애주기 정보 공유를 위 한 청년포털 통합 시스템 구축(공공정보 제공에 대 한 질적 제고) · 청년친화적인 중앙 및 지 방자치단체 연계 청년정 책 운영 시스템 마련	· 부처 단위 위원회 참여 청 년 및 일반 청년 대상 청 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시스템 확장

구분	지속	신규	확대
		· 청년친화 일자리-주거 연계 커뮤니티 구축	
공통방안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 교육-일자리-주거 연계 지원을 위한 실무 차원의 통합부서(센터) 신설 · 지역 간 교육-일자리-주거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정보 제공 및 컨설팅 서비스 확대 · 생애주기 정보 공유를 위한 청년포털 통합 시스템 구축(공공정보 제공에 대한 질적 제고)		

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제언

1) 법제도 기반 강화

■ 주요 내용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 취약계층 청년, 지역 청년 지원 확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일부개정 - 구직·채용 정보의 투명성 확보 · 가칭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법률안」 제정 - 취약계층 청년 범위 확대, 청년친화 인프라 구축
■ 관계 법령	· 「청년기본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 예산지원(안)	· 예산 현행 유지 (추가예산 X)
■ 추진체계(안)	· 국무조정실-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고용노동부

(1) 「청년기본법」 일부 개정 - 취약계층 청년, 지역 청년 지원 확대

가. 입법적 토대의 필요성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청년 관련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적 토대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입법적 토대가 마련된 경우에는 정책의 종합성과 체계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책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정책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등 재원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범위가 불명확했고, 청년정책의 심의·조정 주체가 불명확하여 관련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실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청년정책 실행에서의 총괄·조정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참고로 2020년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은 제17조 내지 제24조에서 청년정책의 범위를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제17조), 청년창업 지원(제18조), 청년 능력개발 지원(제19조), 청년주거 지원(제20조), 청년복지 증진(제21조), 청년 금융생활 지원(제22조), 청년 문화활동 지원(제23조), 청년 국제협력 지원(제24조)로 구분하고 세분화하여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각각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었고, 이 법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각각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총괄하고 심의·조정하도록 하였다.

나. 청년기본법에서의 공정가치 실현 관련 입법적 근거와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은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청년기본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이 법 제4조 제6항에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 이 법 제17조 제2항에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 마련’, 이 법 제22조 제2항에서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공정가치 실현과 관련한 몇 개 조항을 두고는 있으나 그 적용대상이 취약계층 청년에 한정되어 있고, 그 적용 범위와 법적인 효력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가치 실현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적 근거로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우선 청년기본법 제4조 제6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이 아닌 단순한 노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공정가치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청년만이

아닌 다른 청년과의 관계에서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인식되는 취약계층 청년 또는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취약계층 청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 나아가 공정가치 실현의 주요 분야인 청년창업 지원(제18조), 청년 능력개발 지원(제19조), 청년주거 지원(제20조), 청년복지 증진(제21조), 청년 문화활동 지원(제23조)에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기회의 우선적 제공이나 중점적 제공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다. 입법적 동향(청년자립 지원 법안)과 평가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공정가치 실현과 관련한 입법적 동향과 관련하여 최근 2023년 5월 4일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자립 지원 법안¹⁹⁾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법안의 주요 제안 이유는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이 취약성에 의해 차별 없이 삶의 질을 보장받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원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자립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법안 제2조 제1호는 청년을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제2조 제2호는 취약계층 청년을 청년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으로 정의하면서,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취약계층 청년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제1항)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 의무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취약계층 청년복지 증진의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제6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고 제7조에 따라 취약계층청년복지지원위원회를 총괄한다.

그리고, 이 법안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제8조), 취약계층 청년자립

19) 지난 5월 4일 ‘청년자립 지원법안’이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취약계층 청년복지 지원체계 등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6월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 청년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 지원대책이 실효적으로 마련되고 추진되기 위해서 동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청년기본법」은 가치나 이념 등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개별 법률의 부리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청년기본법에 ‘개별 법률’ 제정사항을 세부화하기 보다는 공정가치 실현 차원에서라도 청년의 삶을 둘러싼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권리적 접근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단순한 기본권을 넘어 ‘사회권적 기본권’이 각 분야별 가치와 정책적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원(제9조), 취약계층 청년가족 지원(제10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자립 지원 법안은 취약계층 청년의 복지증진에 관한 법안으로서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책의 총괄을 국무총리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추진의 종합성과 실효성이 다소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제8조), 취약계층 청년자립 지원(제9조), 취약계층 청년가족 지원(제10조)이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 입법 방안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공정가치 실현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현행 「청년기본법」 개정과 청년의 사회진출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법안 제정에 대한 측면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방안의 경우, 「청년기본법」이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법이기 때문에 청년정책의 각 분야에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공정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입법적 장점이 있다.

표 VI-5. 청년기본법 개정(안)

법률	현행조항	개정(안)
청년 기본 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 지역·소득 격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⑥제4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⑥제4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 지역,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률	현행조항	개정(안)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하고 진로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시간 마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주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자립·안정 및 주거공간뿐 아니라 지역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안전하게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 등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의3(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 등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소멸지역 청년·취약계층 청년지원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청년기본법> 에서 2023년 10월 8일 인출.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일부개정 - 구직·채용 정보의 투명성 확보

가. 입법적 토대의 필요성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청년 채용과 관련하여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적 토대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입법적 토대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의 종합성과 체계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책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정책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등 재원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

나. 입법 방안

채용절차법에 있어서는 2022년 기준으로년부터 공정채용법이 제정 준비에 있다. 이는 기존 「채용절차법」을 보완한 법적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채용법(안)이 보호대상이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청년 일자리 정책 측면에서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준비 중에 있었다. 그러나 2023년 현재 2023년 기준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연구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존 「채용절차법」의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과정을 살펴보면, 청년층 대상의 심층면담과 정책세미나 결과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청년들의 채용뿐 아니라 근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많이 나타났다. 현재 채용절차법에서는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5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청년층이 사회진입을 하는 직장에서 정당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채용 정보 채널에 대해서 청년층이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였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채용과정을 볼 때 정확한 채용 정보가 어떠한 것인지 몰라서 상당수의 청년층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식 채용 정보 이외에 인맥 등을 통해 제공되거나 유료화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한 정보가 상당수 있어 이와 같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청년층에 있어서 결과의 공정성 확보보다 기회, 절차 측면에서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들에게 기회, 절차의 공정을 요구하는 측면에 있어 ‘정보’는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이다. 따라서 청년층의 채용 관련 정보에 있어 평등한 접근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VI-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법) 개정(안)

법률	현행조항	개정(안)
채용 절차 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짐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짐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법률	현행조항	개정(안)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규) 구인자는 채용에 관한 정보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제공하고 그 외 방식을 통해서 채용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3) 가치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법률안」 제정 - 취약계층 청년 범위 확대, 청년친화 인프라 구축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공정가치 실현과 관련한 단일 법률을 만드는 방안이 있다. 이는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한 입법보다 체계성을 갖출 수 있으며 다양한 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어 입법의 실효성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정책 실행의 종합성·포괄성 측면에서 볼 때 입법적 장점이 있다. 다만 단일 법률의 제정은 개정에 비하여 입법적 난이도가 높고, 제정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가. 입법 방향

위에서 서술한 입법 방안을 고려할 때 개별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한 공정가치 실현은 개별 영역에서의 공정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할 뿐,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관한 규율이 어렵다. 따라서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방안과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공정가치 실현과 관련한 단일 법률을 만드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단일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청년기본법 개정에 비하여 입법 난이도가 높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입법적 방안을 통한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의 정책적 중요성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단일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각 분야에서 공정가치를 실현하게 하는 방식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제안 이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데, 특히 본격적인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세대에서의 공정에 관한 논의가 취업, 주거, 교육, 복지 등을 청년의 삶 영역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청년들의 삶을 볼 때, 개별 청년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예를 들어 부모자산, 개인 능력, 학력, 거주지 등으로 인하여 상당수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 청년들이 처해 있는 환경 등에 따른 사회진출에서의 출발점의 차이는 청년 간의 불평등 문제와 기회 박탈의 문제 등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빈부 격차 문제 등과 같은 더욱 큰 격차를 재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공정’을 중요한 핵심가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종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청년기본법에 기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청년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관련 정책의 수립과 조정 및 정책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과 실행 등에 관한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법률안」(가칭)의 주요 내용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법률안」(가칭)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취약계층 청년 등”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과

사회진출에 있어서 차별을 받거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과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취약계층 청년 등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 등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 등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지원정책 수립 절차에 취약계층 청년 등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취약계층 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청년지원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지원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지원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지원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청년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국무총리는 청년지원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취약계층 청년 등의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청년지원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지원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취약계층 청년 등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지원정책과 관련한 결정과정인 경우, 「청년기본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제8조(취약계층 청년 등에 대한 채용에서의 차별금지 등) ① 취약계층 청년 등에 대한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이나 불이익은 금지되며, 채용에서의 공정성이 준수되어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준용된다.

제9조(취약계층 청년 등에 대한 우대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지원을 시행함에 있어 취약계층 청년 등을 우대할 수 있다.

1. 주거·문화생활·교육·취업·의료·창업 등의 지원
2. 금융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능력개발, 권리 보호 및 기타 복지지원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 등에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 지원의 대상,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수행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내지 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취약계층 청년 등에 대한 지원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조성·관리·사용·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내지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 정책추진과 관련한 입법적 기대 효과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 정책추진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국가 차원에서의 청년의 자립지원에 초점을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 가능하다. 「청년기본법」에서 포함하고 있지 못한 내용을 세분화 함에 따라 보다 촘촘한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예산의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에 따른 재원확보 마련을 위해서도 용이하다.

더 나아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있어서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들도 국가 법률을 바탕으로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 및 실정에 맞는 관련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2) 청년정책 지원체계 재구조화

■ 주요 내용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권한 및 의사결정 참여 시스템 강화 • 부처 위원회 대상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시스템 확장 • 청년친화적인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 청년정책 운영 시스템 마련
■ 관계 법령	• 「청년기본법」 제13조, 제15조 2항, 3항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예산지원(안)	• 예산 현행 유지 (추가예산 X)
■ 추진체계(안)	• 국무조정실 → 각 부처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권한 및 의사결정 참여 시스템 강화

가. 필요성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조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역할과 범위가 고려되어 있다.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관련 부처 장, 지방자치단체장과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외한 경우, 선발 방식이나 기준 등에 있어서 청년 대표로서의 다양한 층위의 청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또한 영역에 따른 청년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행하고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위원회 외에도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다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정책 영역별로 심층적인 논의와 의사결정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나. 주요 내용

이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 부여를 통한 입지 강화를 위해서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 등을 체계화하고, 위원회 간 긴밀한 논의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정책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재편이 요구된다.

특히, 「청년기본법」 제15조 2항과 3항에서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위원회에서 청년을 10분의 3 이상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을 고려할 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청년정책에 있어서의 의사결정 권한을 확장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청년 일자리와 관련하여 공정채용법(안)의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계획했던 시일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처인 국토부 소속 위원회 청년위원들과 TF 형태의 수시위원회를 구축하여 해당 법안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가칭)공정채용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 위원 구성에 있어 성별에 대한 쿼터를 두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결과, 지역과 직군 간 청년 삶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성별뿐 아니라 지역과 직군에 따른 요인도 고려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 부처별 위원회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참여 대상 및 방식 확장

가. 필요성

23년 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정책을 다루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위원회의 경우 청년을 10분의 3 이상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부처 단위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강조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장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때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의견이 다양한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부처위원회 내 청년참여 확장과 더불어 부처 단위로도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 주요 내용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청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청년 정책네트워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년정책에 반영하고자 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담당자, 청년센터, 참여기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역 간 교류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대표되는 청년 위원 외에 보다 넓은 층위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정책 경험과 그에 따른 제안, 모니터링 등을 하면서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신설된 부처 단위 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 이외에도 부처 특성에 따라 영역별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해당 영역에 있어 관심이 있고, 부처 정책에 참여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지역별, 성별, 직군별 등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처 단위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가 형성된다면 소수 청년들의 참여가 아닌 다수 청년들의 요구와 의견이 적용되어 청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본다.

(3) 청년친화적인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연계 강화

가. 필요성

청년정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중앙으로 확장되어온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앙에서 수립하고 운영하는 정책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얼마나 잘 연계되고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면담을 진행한 결과, 지역 변수가 청년의

삶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취업, 주거를 결정하는 생애주기 과정에 있어서 지역은 청년층에서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한편,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인프라는 청년의 삶에 있어 점차 격차를 가져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간의 연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서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 특성 상, 구직 등의 이유로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의 경우 청년층 대상으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이뤄지지 못해서 지역이주를 한 이후에는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지역 청년 지원방안에서 더욱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겠지만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시행하는 청년정책 정보에 있어서도 통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 주요 내용

이를 위해서 앞서 법 제정 강화에서 23년 3월에 개정된 「청년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중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조항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와 같이 임의조항으로 제시되었을 경우, 실제 각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에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법제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청년정책 지원 예산이나 운영방식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중앙정부에서는 청년정책 지원이 열악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고, 이는 단순히 일자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학입시를 둘러싼 청소년기 교육, 취업을 위한 일자리, 내 집 마련에 있어서의 주거까지 전 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에서 시행하는 청년친화도시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을 확장해서 더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생애주기 정보 생성 및 공유 전달체계 구축 강화

■ 주요 내용	• 기존 ‘청년포털’ 홈페이지 구조 및 기능 재편성 • 중앙 및 지역 청년지원센터 연계 기능 강화 • 생애주기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공공정보 안내 및 컨설팅 통합 시스템 마련
■ 관계 법령	• 「청년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지방자치단체
■ 예산지원(안)	• 기존 청년포털 및 청년지원센터 지원 예산 증액
■ 추진체계(안)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 지방자치단체 청년지원센터

(1) 기존 ‘청년포털’ 홈페이지 구조 및 기능 재편성

가. 필요성

본 연구에서 청년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결과, 청년정책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경우 대부분 주변 지인을 통해 접하거나 소셜미디어(SNS) 홍보를 통해 지원하였다는 답변을 하였다.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포털 홈페이지는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그러나 실제로 청년층 사이에서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청년정책 지원 경험이 없는 청년층의 경우도 언론을 통해 청년 대상으로 정책 지원이 있다는 것을 접하게 되어도 어떻게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청년포털 홈페이지에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청년기관이나 단체 등)와 연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 간의 소통창구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가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과거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정해진 정보를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보제공자이자 소비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쌍방향 소통에 익숙하다. 즉, 자신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것과 더불어 정보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역할도 동시에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현재 청년포털의 경우 정보 저장소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다수의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나. 주요 내용

이에 청년포털의 기능을 확장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부처 단위 위원회 청년위원,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 그 밖에 지역 단위로 활동하는 청년들이 해당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볼 수 있다.

또한 해당 포털 홈페이지에 대한 운영·관리를 정부부처에서 전적으로 담당해서 운영하는 기보다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등 실질적으로 청년활동을 하고 있는 실무자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끝으로 소셜미디어(SNS)를 기반으로 한 청년정책 홍보 또한 위탁 업체보다는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순환 구조로 호스트 역할을 하는 방안도 제안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2024년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주축이 되어 청년포털 및 정부 공식 SNS를 운영하고, 이후 2024~2025년에는 제주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이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체계를 마련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해당 지역이 운영할 때 지역에 대한 소개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청년층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정책이 보다 청년 주도적으로 행해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청년층에 있어서 정보는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보를 공유하고 저장하고, 확산하는 것 또한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체를 통해 이뤄지기보다는 상호소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갈 때 청년층 내에서도 정보의 불균형에 따른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2) 중앙 및 지역 청년지원센터 연계 기능 강화

가. 필요성

「청년기본법」 제24조의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을 지역별로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청년층과의 면담과 정책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결과, 대부분의 청년들이 해당 지역 내 청년공간이나 시설을 이용해본 경험이 적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청년 특성상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하나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삶을 정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최근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이나 수도권의 주거비용을 포함한 생활비가 점점 높아지면서 다수 청년들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 간 이주를 한 청년들의 경우, 새로운 지역에서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특히 직장을 중심으로 지역 이동을 한 경우 일터 내 동료 외에는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나. 주요 내용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년기본법」의 청년지원센터 지정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역별로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청년지원센터의 성격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지역 단위로 운영된 청년단체나 청년시설 중심의 청년지원센터의 경우 운영 과정상에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지원에 대한 관심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가이드가 존재하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다.

따라서 청년지원센터가 지정되는 것 이상으로 중앙 및 지역센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공통 가이드라인이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하향식으로 가이드, 정보체계를 구성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역 단위로 운영한 센터에서도 지역 특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을 동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특정 몇 개 지역이 우수사례가 되어 다수 지역이 특정 지역 사례를 모델링하는 방안이 지양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통 운영 가이드는 공유하면서도 지역 자체 특성에 따라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센터의 운영 권한을 강화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활동에 대한 피드백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3) 생애주기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공공정보 안내 및 컨설팅 통합 시스템 마련 가. 필요성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많은 청년층이 구직과정에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이는 대학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책 소개를

해주고 지원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청년층과의 심층면담과 정책세미나를 통해 살펴본 결과, 청년층의 경우 청소년 시기부터 대학입시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소득에 따른 경제적 차이로 인하여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서부터 차등이 이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제도나 정책에 참여하는 시작점으로서 필요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련 정보의 경우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다수에게 공평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생애주기의 이행에 있어 필요한 교육, 일자리, 주거 정보 등에 있어서는 공공 차원에서 안내되고 공유,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근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생성하여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한 실적이다.

한편, 개인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청년층의 인기가 많지만 일부 가짜 뉴스를 생성하거나 특정 홍보를 위해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 청년층이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나. 주요 내용

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입시 정보, 평생교육 정보 등을 포함한 교육, 취업, 일자리에 해당하는 정부 정책이나 홍보,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청년층이 원하는 정보 요청을 할 경우,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DB와 같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참여하는 청년과 정책담당자를 연결해주는 쌍방향 매칭 플랫폼의 기능을 확장하여 일반 청년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강연 등을 온라인으로 개설해서 공유할 수 있는 세션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청년DB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원하는 기관 중심으로 정부위원회, 정책 평가, 정책 모니터링, 서포터즈 등 공공정책 활동에 한정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청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교육, 취업, 주거,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공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보다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청년층이 요구하는 공공정보를 확산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제가 마련될 것이다.

4) 취약계층 청년정책 사각지대 축소

■ 주요 내용	- 취약계층 청년 기준 범위 재정립 - 취약계층 교육-일자리-주거 연계 실무 통합 부처/부서(센터) 신설 - 취약청년 캡이어 프로그램 (가칭) '시간을 달리는 청년' 신설 운영
■ 관계 법령	「청년기본법」, 「청년자립지원법(안)」
■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 예산지원(안)	청년 취약계층(예: 고립은둔 청년, 자립준비 청년, 가족돌봄청년, 구직단념청년(NEET) 등) 지원 예산 연계 활용
■ 추진체계(안)	국무조정실 중심 청년정책 관련 부처 합동 연계

(1) 취약계층 청년 기준 범위 재정립

가. 필요성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청년기본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이 법 제4조 제5항에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 이 법 제17조 제2항에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 마련', 이 법 제22조 제2항에서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공정가치 실현과 관련한 몇 개 조항을 두고는 있으나, 그 적용대상이 취약계층 청년에 한정되어 있고, 그 적용 범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가치 실현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적 근거로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범위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법 적용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외로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청년 대상의 지원사업을 설계하면서 ① 돌봄(간병)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 ② 실업 또는 불안정고용 상태, ③ 사별(가족의 사망)을 경험한 상태, ④ 장애가 있거나 장기간 건강이 나쁜 상태, ⑤ 보호체계(care system)에 속한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사례는 2018년 영국 정부가 '청년 외로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연결 형성 기금

(Building Connections Fund) 청년 부문 사업의 일부로서 해당 사례를 참고할 때에는 외로움(loneliness) 또는 사회적 고립의 문제라는 포인트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고립·은둔 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에 포함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범주가 과거 소득 기준으로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점차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서 취약계층 청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였다.

나. 주요 내용

지금까지 정책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을 식별할 때 '연령'과 '소득'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이라는 범주에 포함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주요한 요인 이외에 다양하게 교차하는 요소들을 결합하는 접근법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나의 사례로 영 케어러로 일컫는 가족돌봄청년,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 청년 또한 취약계층 청년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대적·상황적 환경에 따라서 범위가 확장되는 흐름에서 한 가지 제안할 부분은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또한 취약계층 범위로 포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청년층의 취약성 특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그 유형 내에서 특별한 취약성 혹은 욕구를 기준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취약성의 특성을 크게 배경적 속성, 개인적 속성, 관계적 속성, 경제활동 및 경제적 속성의 네 개 유형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 번째, 배경적 속성을 기준으로 할 때 (사회경제적 지위) 빈곤, 기초보장수급, (가구구성형태)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 1인 가구, (가족 내 부양관계) 가족돌봄 청년, (부모의 부재) 자립준비 청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적 속성을 기준으로 하면 이주배경 청년, 장애 혹은 활동제약 청년, 경제선 지능 청년, 신체·정신적 건강취약 청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하였던 관계적 속성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이 포함되고, 끝으로 경제활동 및 경제적 속성을 기준으로 할 때 장기실업, 니트, 근로빈곤, 불안정 고용, 다중채무 청년 등이 취약계층 청년 범주로 포함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것은 하나의 사례로 청년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공정가치를 보다 구현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으로 구분되는 청년층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이상과 같은 분류에

다른 취약계층 청년의 유형을 공식화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청년자립 지원법안’에 반영하거나 정부 대책발표 등의 방법으로 대상을 공식적으로 정의해야 일선 전달체계를 통한 발굴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전달체계 중심으로 취약계층 청년을 발굴하고 사례 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해본다.

(2) 취약계층 청년 교육-일자리-주거 연계 실무 통합 부처/부서(센터) 신설 가. 필요성

앞서 제기하였듯이 취약계층 청년의 범주를 확장하는 방안에 이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일자리-주거-복지-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을 연결해서 지원할 수 있는 통합 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청년정책 총괄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대상 사업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등 실무 부처를 중심으로 청년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진체제로 운영될 경우 부처 간 협력이 유연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청년들이 불편을 감수하게 된다.

또한 부처 단위로 청년지원 예산이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어 부처 특성에 따라 사업 운영을 하는 데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역할로서 정책 간의 총괄, 조정 역할을 하는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의 경우도 특정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나. 주요 내용

이에 청년정책에 관한 실무를 주로 시행하는 부처/부서(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하나의 모델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제시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공존 하면서 교육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모델을 참고로 하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의 역할에 권한을 강화하여 (가칭)‘청년정책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다부처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청년정

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3) 취약계층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가칭) ‘시간을 달리는 청년’ 신설 운영

가. 필요성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청년층의 경우 교육과 취업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경제력이 상당히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경제력이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역할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까지 보장해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였다. 일례로, 최근에는 대학입시나 구직과정에서 재수를 선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는데 재수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경우 자신이 진로를 선택하고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차선을 선택하는 방식을 많이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선택은 향후 시간이 흐를수록 청년 간 경제적 격차를 더욱 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뿐 아니라 자아실현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삶의 질 전반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양산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학, 직장, 진로 등을 선택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해주는 갭이어(가칭 ‘시간을 달리는 청년’) 프로그램 신설을 제안한다.

나. 주요 내용

현재 운영되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 지원정책을 보면 교육에 있어서는 주로 직업계고를 졸업한 청년이나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을 선택한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다수이다. 취약계층 청년들이 더 넓은 선택지에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정 상황에 대한 지원에서 더 나아가 일반 청년들과 동일한 출발선에서 자신들의 진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유예해주는 정책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칭) ‘시간을 달리는 청년’ 프로그램은 갭이어 형태로써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고등학교 졸업 이후 1년, 대학 졸업 이후 1년을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 청년들은 곧바로 생계유

지를 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신청할 때 자신이 작성한 진로계획서를 토대로 사전 신청을 받아 원하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였을 때는 추가 지원금을 확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제안한다. 이는 기존의 취약계층 청년 지원 프로그램 틀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탐색하고 학교와 직장을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취약계층 청년정책과 확연한 차이를 가진다.

5)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지역 청년 삶 만족도 제고

■ 주요 내용	• 지역이주 청년 대상 (가칭)‘청년이주지원바우처’ 제공 • 지역 간 교육-일자리-주거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정책 지원 제도 개선 • 청년친화 일자리-주거 연계 커뮤니티 구축
■ 관계 법령	• 「청년기본법」, 「지역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 예산지원(안)	• 청년친화도시 예산 증액 활용
■ 추진체계(안)	• 청년친화도시 시범 사업 → 지역 확대

(1) 지역이주 청년 대상 (가칭)‘청년이주지원바우처’ 제공

가. 필요성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현재 상황에서 바라는 삶의 요소 중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응답자의 95.7%가 중요(매우 중요 49.2%, 중요 46.5%)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학력, 소득이나 자산 등에 비해 인적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중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에 대해 95.0%의 청년이 중요하다고 인식(매우 중요 40.7%, 중요 54.3%)하고 있어 부모의 경제력이나 교육수준, 나의 교육수준 등에 비해 성공에 있어서 인적 관계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년층의 경우 사회적 관계(사회적 자본)를 삶의 질 차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한다.

한편, 청년층의 지역 이동이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유년시절을 보낸 지역에서 청년기를 보내는 청년의 숫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대학이나 직장에 따라서 지역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지역 내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지역 생활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뿐 아니라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으로 인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청년 사례도 증가하면서 새로운 지역에서의 삶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체감하는 청년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나. 주요 내용

이와 같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을 이주한 청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칭)‘청년이주지원바우처’를 제안한다. 이는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에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내나 정서적 유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지원센터나 활동 등을 소개해주는 역할까지 확대해서 바우처를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청년이 직접 정보를 찾고,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지역 간 청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 있어서 청년이 떠난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해당 청년의 정보를 이주하는 지역으로 자동 연계함으로써 청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신규로 신청하는 번거로움도 방지할 수 있다.

(2) 지역 간 교육-일자리-주거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정책 지원 제도 개선 가. 필요성

최근 청년문제 중 하나로 양질의 일자리와 우수한 생활 여건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층 인구 쏠림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물가 등 생활비가 높아서 실질임금은 더 낮을 수 있음에도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리는 원인으로는 일자리 못지않게 민간 영역에서 공급-수요가 이루어지는 각종 생활 인프라의 차이가 결정적이라는 입장도 존재한다.

한편, 지역 간 격차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교육과 일자리이다. 교육의 경우에는 대학 간 학점 교류 등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더불어, 일자리 차원에서 기업 등의 지방 이전과 같은 분산전략 및 국토균형발전 개념의 거시적 측면

외에도 최근 변화되는 기업의 흐름과 노동의 변화 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22년 강득구 의원실(안양만안)에서 발표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기관 23곳 중 지역인재 채용률이 35% 미만인 기관은 5곳으로 나타났다. 지방과 수도권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인재 채용은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논의도 필요하다.

나. 주요 내용

선후관계를 따지기는 복잡하지만, 비수도권에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계획적으로 생활 인프라를 우선 구축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인구가 밀집하여 수요층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방향도 고민해볼 수 있다. 수도권 쏠림의 주된 원인으로 자녀 교육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지만,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더라도 이 외의 생활 인프라를 분산할 수 있다면 특정 시기에 교육을 마친 이들이 다시 지역으로 유턴하는 상황을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스마트워크, 리모트 워크(텔레워크) 시스템 구축 등으로 재택근무, 원거리근무 등 다양한 시도가 민간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위케이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지방청년 등을 리모트 워크 등의 형태로 고용하거나 위케이션 등을 통해 관계인구(생활인구)로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과 일을 병행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조사를 시행한 결과, 교육 영역에서 공정과 관련해서는 지역 간 격차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에 지역에 따른 구조적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이 임의조항(“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제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의 경우도 대학 입학에서의 우대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임의조항(의학 분야 제외)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일반 사기업의 채용과 사립 대학의 입학 요건을 강제할 수 없으나, 공공기관과 지방국립대학에 대한 지역인재 선발은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3) 청년친화 일자리-주거 연계 커뮤니티 구축

가. 필요성

본 연구에서 빅데이터 분석과 심층면담, 정책세미나를 통한 결과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와 주거가 상당히 강하게 연결성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의 경우 주거지역을 선정하는 가장 우선적인 요인이 직장의 위치였다. 이와 같이 청년세대에게 일자리와 주거 정책은 별개가 아닌 연계되어 진행되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직장과의 주거가 거리적으로 근접하거나 주거조건이 쾌적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상당부분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다수 청년의 경우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구하려 이동하지만 직장 권역 내에서 거주공간을 마련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장거리 출퇴근을 선택하거나 주거비용을 고려하여 안전이나 공간 조건이 좋지 않은 곳을 선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청년층 삶의 질은 좀처럼 향상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한편, 심층면담 결과에서 한 면담참여자(지방이전한 공기업에 취업해서 거주지를 지방으로 이동하였는데 거주비용에 있어서는 수도권에 있을 때보다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지역 내 인프라가 부족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다시 수도권에 있는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처럼 청년층에 있어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커뮤니티 마련은 청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나 외부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형태의 청년친화 커뮤니티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나. 주요 내용

'23년에 발표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통해서 청년친화적인 사회 기반 조성이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세부실천과제로서 청년친화 일자리와 주거 연계 커뮤니티 구축을 청년친화도시의 조건 중 하나로 제안한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년 대상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청년친화도시 유형 또한 여러 가지 타입으로 제시될 것으로 본다. 이 중 하나의 모델로 일자리와 주거공간의 연계를 통한

청년 커뮤니티 도입을 제안한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주로 혁신도시 형태인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고려할 때 직장 주변에 청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청년 공유주택이나 지역 활력 타운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청년층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주거 계약기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해서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수도권 내 직장을 다니는 청년의 경우, 수도권 권역 내 주거시설은 이미 포화상태인 경우가 많아 청년들이 원하는 조건의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경우, 정부에서 일정 주거공간을 매입하여 청년들에게 공유주거 형태로 임대형 기숙사를 마련하는 방안과 연계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청년친화형 주거 모델 보급 계획에 있는 만큼 직장장과 주거공간과의 동선을 효율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지역 내 청년지원센터 등을 입주시켜 자연스럽게 청년 커뮤니티를 구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구직준비 중인 청년들의 경우도 정책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구직 정보를 얻거나 취업 시험이나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이동해서 살아가는 청년의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인근 지역에서 공공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청년지원센터에의 접근성을 높여서 구직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정서적인 차원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는 사업도 제안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청년을 대상으로 각자의 수요를 고려한 일자리-주거 연계 방안은 자연스럽게 청년친화적인 커뮤니티로 구축되고, 해당 커뮤니티가 증가할 수록 청년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4. 소결

본 절에서는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 도출한 내용과 국정과제, 제1차 청년기본계획 수정(안) 등을 토대로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소개하였다. 연구 결과, 청년들이 인식하는 공정한 삶에서의 중요한 요인으로는 일자리와 주거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일자리 가운데 취업과 관련된 요인들이 청년층에서 민감한 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연구의 추진 방향과 목표, 정책과제와 세부실천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년이 희망하는 공정한 사회는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연구 추진 방향은 모든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정사회, 모든 청년이 정당한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공정사회, 모든 청년이 자유롭게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공정사회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추진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서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청년정책 기반 강화, 청년의 공정 인식-경험의 확대, 청년의 삶 격차 해소를 설정하였다. 그에 따라 법제도 기반 강화, 청년정책 지원체계 재구조화, 생애주기 공공정보 전달체계 연계 구축, 취약계층 정책 사각지대 축소, 지역 청년 삶 만족도 제고를 5대 정책과제로 선정하였다.

끝으로,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서 다음 【그림 VI-5】와 같이 영역별로 정책과제를 세분화하는 작업을 통해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자 향후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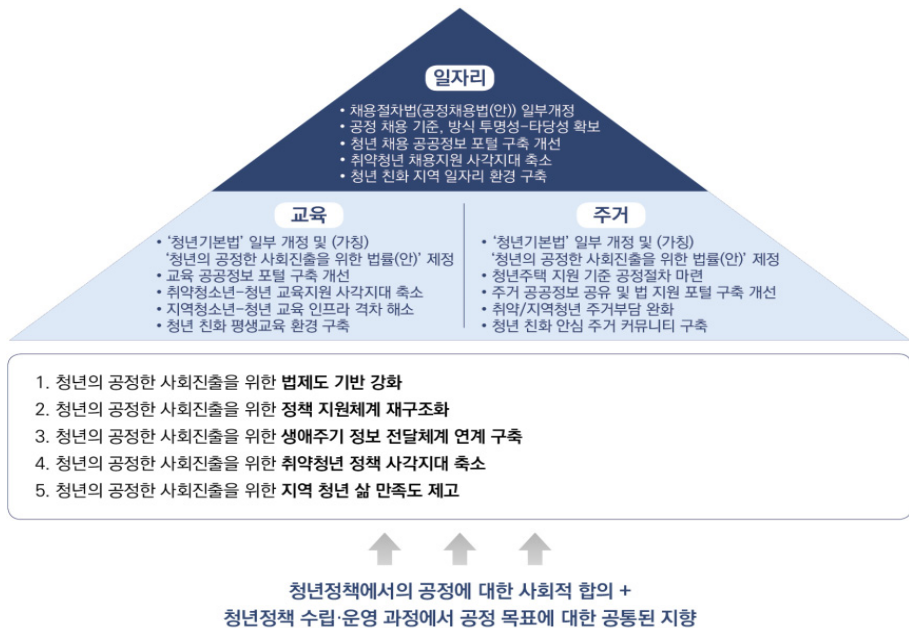


그림 VI-5.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영역별 정책과제

○———— 참고 문헌

참고문헌

- 강태중 (2018). ‘공정한’ 대입제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 재고.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이슈
페이퍼.
- 고동완, 이창현 (2022).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 관련 신문 사설의 뉴스 프레임 연구
: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11, 43-74.
- 곽영신, 류용재 (2021). 불평등 사회 속 공정 담론의 차원성: 청년 공정 관련 신문사설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한국언론학보**, 65권 5호, 5-45.
- 관계부처 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2020.12.
- 관계부처 합동 (2021). 청년특별대책. 2021.8.26.
- 관계부처 합동 (202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21~’25). 2023.03.
- 구철희 (2022). 청년의 정부 청년정책 신뢰수준 영향변인 분석: 사회·인구학적 특성, 청년
의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청년정책 기대수준, 청년취업 공정수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29(7), 309-326.
- 국정데이터조사센터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권호천 (2017). 사드(THAAD) 관련 신문기사의 의미 네트워크 분석. **언론정보연구**, 54
(2), 114-145.
- 김기현, 문호영, 황세영, 유민상, 김균희, 이용해(2021).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도균 (2020). 고령 노인의 인간 존엄성 존중: 자율성, 정체성, 취약성의 측면에서. **서울
대학교 법학**, 61(4), 5-36.
- 김범수 (2022). **한국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 공정한 나를 지켜줄 7가지 정의론-**,
경기; 아카넷.
- 김봉무 (2014). 카지노 종사원의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유효성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 영향- 조직유효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39(1), 63-84.
- 김석호 (2018). 우리 사회 속의 공정성: 한국사회의 세대 간 공정성. *지식의 지평*, 25, 1-19.
- 김석호, 오재호, 박효민, 하상응, 임동균, 최성수, 정고운, 심재만, 장서현, 김지영, 임채운 (2021). *공정한 사회의 길을 묻다*, 서울: 시공사.
- 김선기·정준영·채태준·강보배·송효원 (2019).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행연구*. 서울: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 김영수 (2012). *호텔의 보상과 조직구조특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연구*.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원섭, 남운철, 신종화 (2015). 한국 언론의 기업에 대한 입장: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의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제16집 2호, 51-86.
- 김은영, 김미란, 양성관, 임진택 (2013). *대학입학전형 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연구*. 서울:한국교육개발원.
- 김종진 (2023). 청년정책의 ‘청년’, 45세 또는 49세가 맞나. *경향신문 칼럼*. 2023.5.19. https://v.daum.net/v/20230519030405266?fbclid=IwAR3gHVifS7aMrvjnnZaJxYSumB7_79BR-xUJRGZ_AHTnrkmUlBPAB02YOXI에서 2023년 6월 28일 인출
- 뉴스스 (2017). “정규직 역차별 vs 무늬만 정규직” ... 서울시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진통.” (2017.11.05.) https://newsis.com/view/?id=NISX20171104_0000138363&clD=10801&pID=10800 에서 2023년 9월 21일 인출
- 대한민국정부 (2022).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2022.07.
- 동아일보 (2018). “무차별 정규직 전환 정책, 헌법 규정된 평등권 침해.”(2018.10.18.)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018/92448494/1> 에서 2023년 9월 21일 인출
- Robert Nozick (1974).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역 (1997).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박권일 (2021). 한국의 능력주의 인식과 특징. *시민과세계*, 38, 1-39
- 박승정, 전진오, 김선우, 김성태 (2017) 국내 주요 일간지의 대통령 이슈소유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LDA 토픽 모델링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0권 3호, 25-56.
- 박이대승 (2017). *‘개념’ 없는 사회를 위한 강의 - 변화를 향한 소수자의 정치전략*. 서울: 오월의봄.

- 박이대승, 윤태영, 정준영 (2021).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갈등사례 연구 - ‘공정’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특별시노사민정협의회.
- 박효민, 김석호 (2015). 공정성 이론의 다차원성, **사회와 이론**, 27(2), 219-260.
- 백영민 (2017). **R을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서울: 한올아카데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청년기본법> 에서 2023년 10월 8일 인출.
- 손영준, 홍주현 (2019) 한반도 핵 위기에 대한 신문 사설 프레임 비교 분석: 경향, 한겨레, 조선, 동아 4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치·정보연구**, 22권 3호, 175-210.
- 송진섭(2020). 공공기관 인재채용의 투명성에 관한 연구: 지역인재할당제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25(4), 195-214.
- 심재휘, 배정현, 이기혜 (2022). **청년세대의 공정성 인식 구조 분석**. 경기: 경기도 교육연구원 현안보고서.
- 윤태영, 박이대승, 정준영 (2020). **2020년 서울형 청년보장 정책의 이론적·법적 근거에 따른 개념 정립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
- 윤태영, 박이대승, 정준영, 이미라, 김수현 (2020), **서울-지역 협력강화 과제 발굴을 위한 청년 지역 격차 실태조사**. 서울: 서울특별시.
- 이상희, 임영대, 임세순 (2014). 조직공정성이 상사-부하 교환관계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연구 - 서울시내 특1급 호텔양식당 조리사를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16(3), 285-303.
- 이수지, 김유진, 손영우 (2007). 채용결과에 따라 절차공정성 및 상호작용 공정성이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0(2), 157-176.
- 이지영 (2019) 신문사설에 나타난 보육정책. **육아정책연구**, 13권 1호, 29-51.
- 정준영 (2020a). 권리 기반의 접근: 청년의 탈신비화를 위해. 김선기(편), **청년학개론: 청년연구자되기**(pp. 80-102). 서울: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 정준영 (2020b). 김선기, 임유진, 정보영, 정준영, 진형익, **UN YOUTH2030 전략과 한국 청년**(pp. 113-146).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정형철 (2020). **절차공정성 및 상호작용공정성이 자아존중감에 끼치는 효과: 채용방식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선일보 (2023). 지자체 48곳, 청년 나이 기준 40대로 올렸다. 2023.2.16. <https://www.koreaherald.com>

- 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2/16/RSNT34PHCZHVC3IRQUWPCLAW4/에서 2023년 6월 28일 인출
- 중앙일보 (2020).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은 평등 아닌 역차별”...청와대 청원 15만 돌파. “(2020.06.24.) <https://www.mk.co.kr/news/society/9400223> 에서 2023년 9월 21일 인출
- 차민경, 권상희 (2015). 언론의 ‘창조경제’에 대한 의제설정 의미 연결망 분석. *한국언론학보*, 59(2), 88-120.
- 최유, 홍성수, 장민선, 배건이 (2017).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방안 연구- 교육, 보건, 복지, 여성, 가족 분야. 세종: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 하상웅 (2021). [해외 서평]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낡은 의회중심주의를 대체할 강한 대통령제의 필요성. *의정연구*, 63, 187-194.
- 황경식 (2018). 존 롤스 정의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원칙. 서울: 쌤앤파커스.
- Adams, J.S. (1965). Inequity in Social-Exchange,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4), 267-299.
- Bies, R.J., & Moag, J.S. (1986). *Interaction Justice: Communication Criteria of Fairness*. In R.J.Lewicki, B.H.Sheppard and M.H.Bazerman(Eds.), *Research on negotiations in organizations(pp.43-55)*. Greenwich, CT: JAI Press.
-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Jan), 993-1022.
- Davis, J. A. (1959). A formal interpretation of the theory of relative deprivation. *Sociometry*, 22(4), 280-296.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EU[The European Union] (2018). *Resolution of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states meeting within the council on a framework for European cooperation in the youth field: The European Union youth strategy 2019-2027*.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456/1.

- EYF[European Youth Forum] (2019). *Strategic plan 2020-2023*. <https://www.youthforum.org/about>에서 2023년 6월 28일 인출
- Fishkin, Joseph (2016). 병목사회. 유가은(역). 서울: 문예출판사
- Folger, F., & Konovsky, M.A. (1989). Effects of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ice on reactions to pay raise decis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2, 115-130.
- Folger, R., Cropanzano, R., & Goldman, B. (2013).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justice and morality?. In *Handbook of organizational justice* (pp. 215-245). Psychology Press.
- Gallie, W. B. (1955-1956).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s.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56, 167-198.
- Gaus, G. F. (2000). *Political concepts and political theories*, Colorado: Westview Press.
- Greenberg, J. (1987). Relations to procedural injustice in payment distribution: Do the means justify the end?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2, 55-61.
- Hormans, G. C. (1961).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New York. NY: Harcourt.
- Korpela, J., & Tuominen, M. (1996). Benchmarking logistics performance with an application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Engineering Management, IEEE Transactions on*, 43(3), 323-333.
- Robert Nozick (1974).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 Roberts, M. E., Stewart, B. M., & Tingley, D. (2019). Stm: An R package for structural topic models.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91, 1-40.
- Saaty, T. L. (2008). Relative measurement and its generalization in decision making why pairwise comparisons are central in mathematics for themeasurement of intangible factors the analytic hierarchy/network process. *RACSAM-Revista de la Real Academia de Ciencias Exactas, Fisicas y Naturales. Serie A. Matematicas*, 102(2), 251-318.
- SBS (2017). “[취재파일] 정규직-무기계약직, 그들은 왜 적(敵)이 됐을까: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내용.”(2017.11.1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80694&plink=ORI&cooper=NAVER 에서 2023년 9월 21일 인출

Scheufele, D. A. (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49(1), 103-122.

OHCHR[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8). *Youth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HRC/39/33, United Nations.

Vashist, J. K ., & Dey, A. K. (2016). Selection Criteria for a Mode of Surface Transport: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pproach. *Amity Global Business Review*, 11, 86-95.

YTN (2020). “[더뉴스-더인터뷰]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후폭풍... ‘역차별’ 논란 쟁점은?” (2020.06.25.) https://www.ytn.co.kr/_ln/0102_202006251423262959 에서 2023년 9월 21일 인출

○ — 부 록

- 1. 설문조사 질문지
- 2. 심층면담 조사지
- 3. 전문가의견 조사

부록

부록 1. 설문조사 질문지²⁰⁾

PID							
-----	--	--	--	--	--	--	--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통계법 제34조(통계증서자의 의무)에 따라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각의 조사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활실태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조사기준일(2023년 6월 1일) 현재 만 18~만 34세(1988년 6월 2일~2005년 6월 1일)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23년도 청년통합조사인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위탁 수행기관의 표집틀에 근거하여 시행되었고, 조사지 일부에 본 연구 조사문항을 포함에 따라 조사지 제목에 '2023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로 기재되었음.

※ 아래 사항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면접원 ID		면접원 이름		응답자 이름	
주소(구/동)	시/도	구/시/군	동/읍/면	집계구 일련번호	
응답자 연락처	() - () - ()			생년 월일	년 월 일
주택 유형	1.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적을 것 : _____)				

구 분	남 성		여 성		합 계	
총 가구원 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가구원 수						
가구당 조사표 부수	조사대상 가구원 수 총 ()부 중 ()부 진행					

※ 조사원: 동일 가구인 경우라도 모든 설문지 표지에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미진행 가구원 사유		유치조사 진행 여부 ※ 해당되는 모든 내용에 표시	① 직접 만나서 조사 ② 설문 회수 시 만남 ③ 회수 후 전화로 응답확인 ④ 유치조사
------------	--	-----------------------------------	--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귀하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면접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하는 방법1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표시하는 방법2

숫자를 기입해야 할 때는 박스 안에 한 자리씩 기입해 주세요.

〈보기2〉

문A.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

1	0
---	---

 명)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3〉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3〉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4〉

문B.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B-1로 이동 ② 없다 → 문C로 이동

☞ 나는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설명문 반드시 참고

질문 아래 설명문(응답 기준, 용어 설명 등)이 있는 경우, 설명문을 읽고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해 주세요.

〈보기5〉

문C.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 문C-1로 이동 ② 없다 ➡ 문D로 이동

문88) 귀하는 2022년 한 해 동안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사업에 참여 혹은 지원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귀하가 참여 혹은 지원을 받으셨던 사업의 주관 기관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복수응답 가능)

☞ “청년정책”이란 청년 발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예: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대상 공적임대주택, 국가장학금, 청년 희망적금, 온라인 청년센터 등)

- ① 중앙정부(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처,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 ② 광역지자체(서울시청, 경기도청 등 특별시청·광역시청·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등)
- ③ 기초지자체(수원시청, 마포구청, 가평군청 등 시·군·구청 및 산하 공공기관 등)
- ④ 2022년 청년정책에 참여하지 않았다 ➡ **문C-1로 이동**

문8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청년활동에 지난 1년간(2022년 6월~2023년 5월)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 항	한 번도 없음	1년에 1~2회	2~3 개월에 1~2회	한 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이상
중앙 정부	(1) 중앙정부 청년참여기구(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보좌역, 청년참여단, 온라인청년패널, 2030 청년자문단 등) 참여	①	②	③	④	⑤
	(3) 국민청원, 국민동의청원, 국민제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의견 제안 및 동의	①	②	③	④	⑤
	(4) 중앙정부 청년 온라인플랫폼(온라인청년센터, 청년포털 등) 접속 및 상담, 참여	①	②	③	④	⑤
	(8) 정부 주최 청년공모사업이나 정책에 참여	①	②	③	④	⑤
광역/ 기초 지자체	(2) 지자체 청년참여기구(시도·시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원탁회의 등) 참여	①	②	③	④	⑤
	(5) 지자체 청년 온라인플랫폼(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경기청년포털 등)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①	②	③	④	⑤
	(6) 지자체 청년센터(청년 공간)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①	②	③	④	⑤
	(7) 청년 지역공동체 사업(청년 지역공동체, 청년마을 만들기, 청년 두레, 청년 자립마을, 지역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등) 참여	①	②	③	④	⑤
	(8) 지자체 주최 청년공모사업이나 정책에 참여	①	②	③	④	⑤

문90) 귀하가 2022년에 참여하신 청년정책은 어느 분야에 해당합니까? (복수응답 가능)

분야	설명문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2)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3)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4)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주거	청년의 주거부담이 줄어듭니다. (1) 청년주택 공급 확대 (2)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	
	(3) 고시원·반지하 거주 취약청년 집중 지원 (4)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교육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갑니다.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2)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3)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4)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복지·문화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1) 사회출발 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2) 청년건강 증진	
	(3)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4)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참여·권리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합니다. (1)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2)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3)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4)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 ① 일자리
- ② 주거
- ③ 교육
- ④ 복지·문화
- ⑤ 참여·권리

문91)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청년의 연령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만 19세~34세가 적절하다
- ② 만 19~39세로 개정이 필요하다
- ③ 만 15~29세로 개정이 필요하다
- ④ 기타(□□세~□□세로 개정이 필요하다)

문92) 귀하는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청년세대 (만 19~ 34세)	1. 청년세대는 우리 사회의 주역이다	5	4	3	2	1
	2. 청년세대는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5	4	3	2	1
	3.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5	4	3	2	1
	4. 청년세대는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5	4	3	2	1
기성세대 (만 35세~ 69 이상)	1. 기성세대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5	4	3	2	1
	2. 기성세대는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5	4	3	2	1
	3. 기성세대는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5	4	3	2	1
	4. 기성세대는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5	4	3	2	1
노인 (만70세 이상)	1.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5	4	3	2	1
	2.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5	4	3	2	1
	3.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5	4	3	2	1
	4.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5	4	3	2	1

문94) 귀하는 **현재 청년세대(만 19~34세)**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대체로 심각하다	보통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5	4	3	2	1

문95) 귀하는 **현재 청년세대(만 19~34세)**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일자리(취업, 창업, 근로 환경 등)
- 2) 주거(주택 분양, 임대차 계약 등)
- 3) 교육(학자금, 진학, 미래역량교육 등)
- 4) 복지·문화(자산형성, 마음건강, 취약계층 지원 등)
- 5) 참여·권리(정책결정, 시민 사회 참여, 지역 공동체 참여 등)
- 6) 청년 인프라(청년센터, 청년 지원 법령 등)
- 7) 기타()
- 8) 없음

문96) 귀하는 다음 각 분야의 정부 청년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청년정책 분야	잘 알고 있다	어느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잘 모른다
1. 청년정책 전반	4	3	2	1
2. 일자리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 일터 안전망 강화 -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 개선	4	3	2	1
3. 주거 - 청년주택 공급 확대 -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 주거취약 청년 집중 지원 -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4	3	2	1
4. 교육 - 학자금 지원 등 고른 교육 기회 보장 -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4	3	2	1
5. 복지·문화 - 사회출발 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 청년 건강 증진 -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4	3	2	1
6. 참여·권리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4	3	2	1

문97) 귀하는 다음 분야별 청년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매우 공감 한다	공감 한다	약간 공감 한다	보통 이다	별로 공감 하지 않는다	공감 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 하지 않는다
1. 청년정책 전반	7	6	5	4	3	2	1
2. 일자리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 일터 안전망 강화 -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 개선	7	6	5	4	3	2	1
3. 주거 - 청년주택 공급 확대 -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 주거취약 청년 집중 지원 -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7	6	5	4	3	2	1
4. 교육 - 학자금 지원 등 고른 교육 기회 보장 -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7	6	5	4	3	2	1
5. 복지·문화 - 사회출발 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 청년 건강 증진 -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7	6	5	4	3	2	1
6. 참여·권리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7	6	5	4	3	2	1

문98) 귀하는 다음 분야별로 정부가 **청년정책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 분야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약간 잘하고 있다	보통 이다	약간 못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매우 못하고 있다
1. 청년정책 전반	7	6	5	4	3	2	1
2. 일자리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 청년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 일터 안전망 강화 -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 개선	7	6	5	4	3	2	1
3. 주거 - 청년주택 공급 확대 -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 주거취약 청년 집중 지원 -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7	6	5	4	3	2	1
4. 교육 - 학자금 지원 등 고른 교육 기회 보장 -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7	6	5	4	3	2	1
5. 복지·문화 - 사회출발 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 청년 건강 증진 -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7	6	5	4	3	2	1
6. 참여·권리 - 정책결정과정엔 청년 주도성 확대 -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7	6	5	4	3	2	1

문99)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이 다음 중 **어떤 집단**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 취약계층 미취업자(저학력, 저소득층 등)
- 구직 단념자
- 경력 단절자
- 지방 거주 청년
- 고립·은둔 청년(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관계가 부재한 청년)
- 이주배경 청년(다문화 가정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자녀 등)
- 자립준비 청년(아동양육시설, 위탁 가정 등 보호 종료 청년)
- 가족돌봄 청년(질병, 장애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
- 기타 ()

문100) 귀하가 생각하는 ‘**공정성**’이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1)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
- 2) 경쟁을 위한 자원 수단이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
- 3)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
- 4) 모든 과정/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
- 5)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
- 6) 기타()

문101)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공정하다	다소 공정하다	보통이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전혀 공정하지 않다
5	4	3	2	1

문102) 다음 중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지 않은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선택)

- 1) 일자리
- 2) 주거
- 3) 교육
- 4) 복지·문화
- 5) 참여와 권리
- 6) 기타()
- 7) 없음

문103) 다음 중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청년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선택)

- 1) 채용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 2) 국가자격시험 운영 실태 모니터링
- 3) 직무 능력·성과 중심 임금 보상 체계 개편
- 4) 공공분양·임대주택 개선 및 확대
- 5)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 6) 부정입학·학사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 7) 장학금 등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
- 8) 복지제도 부정수급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 9)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10) 청년정책 관련 정보제공 및 공간지원
- 11) 기타()
- 12) 없음

문104) 청년의 자립 및 사회적 성취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사회는 부모의 지원 없이도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	5	4	3	2	1
2. 개인의 성공에는 가정환경보다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5	4	3	2	1
3.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 인력 등의 자원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5	4	3	2	1
4. 자녀가 취직, 창업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5	4	3	2	1
5. 내가 지금까지 얻은 사회적 성취에는 부모의 도움이 컸다	5	4	3	2	1

문105) 청년정책 중 **일자리**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사회에서 자격증 취득, 면접 합격, 임금 협상 등의 모든 고용 절차는 채용비리나 불공정 특례 없이 공정하게 진행된다	5	4	3	2	1
2.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충분하다	5	4	3	2	1
3. 채용 시, 지역 인재 할당제를 확대해야 한다	5	4	3	2	1
4. 채용 시, 학력, 경력, 성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5	4	3	2	1
3. 청년세대(19~34세)의 일자리(취·창업 지원)를 위해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	5	4	3	2	1

문106) 청년정책 중 **주거**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사회에서 주택 분양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등의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된다	5	4	3	2	1
2. 본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원하는 주거 환경의 집에서 살 수 있다	5	4	3	2	1
3. 청년세대(19~34세)의 주거지원을 위해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	5	4	3	2	1

문107) 청년정책 중 **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 등 교육 제도는 공정하게 시행된다	5	4	3	2	1
2.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	5	4	3	2	1
3. 청년세대(19~34세)의 교육을 위해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	5	4	3	2	1

문108) 청년정책 중 **복지·문화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사회의 복지 제도는 여러 사회적 집단에 대하여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다	5	4	3	2	1
2.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복지 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5	4	3	2	1
3. 본인이 원하는 문화 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5	4	3	2	1
4. 청년세대(19~34세)의 복지·문화지원을 위해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	5	4	3	2	1

문109) 청년정책 중 **참여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생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낼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어진다	5	4	3	2	1
2. 본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의 사회 참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5	4	3	2	1
3. 청년세대(19~34세)의 정치·사회 참여를 위해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	5	4	3	2	1

부록 2. 심층면담 조사지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심층면담 내용

구분	면담조사 내용
도입	인사 인터뷰 소개 및 주의사항 안내
교육 관련 현황	면담자의 학력 상태 (대학 재학 이상) 대학 입시 과정에서의 어려움(수능, 수시 등), 대학 입시에 대한 공정성 인식, 입학 이후 대학 생활에서의 어려움, 대학 평가에서의 공정성 등 (대학 미진학 및 중퇴) 미진학, 중퇴 사유 및 인식, 고졸 취업에 대한 경험 및 평가
교육 경험 및 인식	공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공교육에 대한 인식 사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사교육에 대한 인식 대학 뿐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서 경험한 공정성 인식 우리 사회의 입시 기회의 공정성 인식 및 평가 일자리 진입 이전 교육(훈련 포함)에 대한 공정성 인식 및 평가
교육 관련 정책 인식 및 요구	정부 및 지자체 청년정책(교육관련) 참여 여부 정책 참여 시 공정성에 대한 인식 정책 미 참여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대상 교육 사업, 대학 입시 경험 및 효용성 현 정부에서의 교육,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정책, 사업 등 이해 정도) 현재 시행중인 교육정책, 청년정책에 대한 공정 인식 취약계층 대상 교육정책, 청년정책에 따른 공정 인식 향후 개선 사항
일자리 관련 현황	면담자의 취·창업 상태 (취·창업자) 취·창업과정에서의 어려움, 취·창업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공정성 인식, 취·창업 이후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 직장 내 승진 등 평가에서의 공정성 등 (미취업자) 미취업 이유, 취업 시도 여부, 취·창업 과정 및 절차에서의 어려움, 취·창업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공정성 인식 - 취·창업 준비 과정에서 스펙 마련을 위한 노력
일자리 경험 및 인식	취·창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 관련 전반에서 경험한 공정성 인식 우리 사회의 취·창업 기회의 공정성 인식 및 평가 일자리 진입 과정에 대한 공정성 인식 및 평가 현 정부에서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정책, 사업 등 이해 정도)
일자리 정책 인식 및 요구	현재 시행중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공정 인식 청년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정책에 따른 공정 인식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 정책 참여 여부

구분	면담조사 내용
	정책 참여 시 공정성에 대한 인식, 일자리 정책 사업 경험 및 효용성 정책 미 참여 이유 및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향후 개선 사항
주거 상황	주거 상태, 동거인 및 비용 지원 여부 - 주거 비용 및 부담 정도 집의 의미, 이주 의향 및 선호 조건
주거 경험 및 인식	주택 구입 의사 및 시기 주거지 선택 시 기준 주택 가격에 대한 인식 청년들의 주거 마련을 위한 기성 세대의 도움에 대한 인식
주거 정책 인식 및 요구	현재 시행중인 주거 정책에 대한 공정 인식 청년 취약계층 대상 주거 정책에 따른 공정 인식 정부 및 지자체 주거 정책 참여 여부 정책 참여 시 공정성에 대한 인식, 주거 정책 사업 경험 및 효용성 정책 미 참여 이유 및 주거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향후 개선 사항

부록 3. 전문가의견 조사지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전문가의견조사 내용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전문가설문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청년과 관련한 정책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원에서는 2023년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청년정책 및 사회정책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과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의견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며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조사 결과는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개인응답 내용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며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연구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됩니다(통계법 제13조 및 제 14조).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수집된 핸드폰 번호는 설문응답 답례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집되며 관련 지급이 완료된 이후 폐기합니다.

2023년 8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수행기관: 지알아이리서치

조사문의: 김혁진 (02-6263-7013, khj8253@grikorea.co.kr)

연구진: 최용환 (044-415-2253, cyh77@nypi.re.kr), 이윤주 (044-415-2146, yjlee@nypi.re.kr)

I. 인구통계학적 특성

※ 다음은 설문에 응하는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골라 ✓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1]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문 2]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문 3] 근무 지역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광주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세종특별자치시
⑨ 경기도 ⑩ 강원도 ⑪ 충청북도 ⑫ 충청남도
⑬ 전라북도 ⑭ 전라남도 ⑮ 경상북도
⑯ 경상남도 ⑰ 제주특별자치도

[문 4] 귀하의 최종 학력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전문대학 졸업 ② 대학교 졸업 ③ 석사 수료 ④ 석사 졸업
⑤ 박사 수료 ⑥ 박사 졸업 ⑦ 기타()

[문 5] 귀하께서 소속된 기관은 무엇입니까?

- ① 학계(교수 및 연구직) ② 정부부처 및 기타 공공기관
③ 기타

[문 6] 귀하의 업무 경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1년 이내 ② 1년 이상 ~ 2년 미만 ③ 2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4년 미만 ⑤ 4년 이상 ~ 5년 미만 ⑥ 5년 이상 ~ 6년 미만
⑦ 6년 이상

II.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중요도, 성과조사

[문 7] 귀하가 생각하는 '공정성' 이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
- ② 경쟁을 위한 자원 수단이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
- ③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
- ④ 모든 과정/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
- ⑤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
- ⑥ 기타()

[문 8] 귀하는 우리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공정하지 않다
- ② 별로 공정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공정하다
- ⑤ 매우 공정하다

[문 9] 귀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구분	매우 공정하지 않다 ← 보통 → 매우 공정하다								
1) 일자리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일터 안전망 강화,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주거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주거취약 청년 집중 지원,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교육 : 학자금 지원 등 고른 교육 기회 보장,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복지, 문화 : 사회출발 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청년 건강 증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청년 인프라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 10] 아래의 한 쌍씩 짝지어진 **청년정책의 영역**에 대하여, 어느 정책 영역이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평가해주세요.

- ㉠ **일자리**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일터 안전망 강화,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 개선
 ㉡ **주 거**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주거취약 청년 집중 지원,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 **교 육** : 학자금 지원 등 고른 교육 기회 보장,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 **복지·문화** : 사회출발 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청년 건강 증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 **청년 인프라**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평가항목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하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평가항목
㉠ 일자리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주거
㉡ 주거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교육
㉢ 교육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복지, 문화
㉣ 복지, 문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청년 인프라
㉤ 청년 인프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주거
㉡ 주거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교육
㉢ 교육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복지, 문화
㉣ 복지, 문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청년 인프라
㉤ 청년 인프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주거
㉡ 주거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교육
㉢ 교육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복지, 문화
㉣ 복지, 문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청년 인프라
㉤ 청년 인프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주거

[문 11] 다음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관련 국정과제입니다. 아래의 한 쌍씩 짝지어진 **국정과제 유형**에 대하여, 어느 과제가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평가해주세요

- ㉠ **국정과제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조실·국토부·고용부·중기부·교육부)
 ㉡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국조실·고용부·권익위·금융위·복지부)
 ㉢ **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국조실·법제처)

평가항목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동등 하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평가항목
㉠ 국정과제 90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국정과제 91
㉡ 국정과제 91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국정과제 92
㉢ 국정과제 92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국정과제 90

[문 12] 다음은 청년정책의 영역입니다. 각 정책영역이 청년을 위한 공정사회의 기여의 **(현재)** 달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낮다 ← (현재) 달성 → 매우 높다								
1) 일자리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일터 안전망 강화,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주거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주거취약 청년 집중 지원,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교육 : 학자금 지원 등 고른 교육 기회 보장,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복지, 문화 : 사회출발 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청년 건강 증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청년 인프라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 13] 다음은 청년정책의 영역입니다. 각 정책영역이 청년을 위한 공정사회의 기여의 **(향후)**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낮다 ← (향후) 중요 → 매우 높다								
1) 일자리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일터 안전망 강화,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주거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주거취약 청년 집중 지원,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교육 : 학자금 지원 등 고른 교육 기회 보장,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복지, 문화 : 사회출발 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청년 건강 증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청년 인프라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 14]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국정과제의 세부내용입니다. 각 세부내용의 **(현재) 달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낮다 ← (현재) 달성도 → 매우 높다								
1) 내 집 마련 (국정과제 90):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취업지원 혁신 (국정과제 90):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청년창업 기반 강화(국정과제 90): 청년의 과감한 창업 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미래역량 강화 지원(국정과제 90):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교육 부담 완화(국정과제 90): 국가장학금 내실화, 학자금 대출 저금리 유지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공정기반 구축(국정과제 91):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등 공정문화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자산형성 지원(국정과제 91): 청년을 위한 신규 장기 자산형성 지원상품 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취약청년 출발 지원(국정과제 91): 취약청년 발굴·지원 체계 재편 및 취약청년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9) 청년참여 확대(국정과제 92):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 통로를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국정과제 92): 청년정책 종합 정보 제공, 쌍방향 소통, 청년활동 진흥 등을 추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1) 지방 및 민간 협업(국정과제 92): 중앙부처와 지자체·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2) 청년정책 인프라(국정과제 92): 청년문제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성 방안을 강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3) 법제 개선(국정과제 92): 일·학습 병행 또는 취업 후 진학 청년에게 불공정하거나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에 장애가 되는 자격제도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 15]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국정과제의 세부내용입니다. 각 세부내용의 **(향후)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 (향후) 중요도 → 매우 중요하다								
1) 내 집 마련 (국정과제 90):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취업지원 혁신 (국정과제 90):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청년창업 기반 강화(국정과제 90): 청년의 과감한 창업 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미래역량 강화 지원(국정과제 90):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교육 부담 완화(국정과제 90): 국가장학금 내실화, 학자금 대출 저금리 유지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공정기반 구축(국정과제 91):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등 공정문화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자산형성 지원(국정과제 91): 청년을 위한 신규 장기 자산형성 지원상품 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취약청년 출발 지원(국정과제 91): 취약청년 발굴·지원 체계 재편 및 취약청년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9) 청년참여 확대(국정과제 92):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국정과제 92): 청년정책 종합 정보 제공, 쌍방향 소통, 청년활동 진흥 등을 추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1) 지방 및 민간 협업(국정과제 92): 중앙부처와 지자체·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2) 청년정책 인프라(국정과제 92): 청년문제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성 방안을 강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3) 법제 개선(국정과제 92): 일·학습 병행 또는 취업 후 진학 청년에게 불공정하거나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에 장애가 되는 자격제도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 16] 다음은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세부정책 대안입니다. **(현재)** 달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낮다 ← (현재) 달성 → 매우 높다								
1) 채용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국가자격시험 운영 실태 모니터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직무 능력·성과 중심 임금 보상 체계 개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공공분양·임대주택 개선 및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부정입학·학사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장학금 등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복지제도 부정수급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9)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문화 사각지대 해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청년정책 관련 정보제공 및 공간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 17] 다음은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세부정책 대안입니다. **(향후)**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낮다 ← (향후) 중요 → 매우 높다								
1) 채용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국가자격시험 운영 실태 모니터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직무 능력·성과 중심 임금 보상 체계 개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공공분양·임대주택 개선 및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부정입학·학사비리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 장학금 등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8) 복지제도 부정수급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9)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문화 사각지대 해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청년정책 관련 정보제공 및 공간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공정의 의미를 파악하고 정책을 둘러싼 주체인 청년, 전문가, 공무원이 인식하고 지향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공정'은 그 자체로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주체가 가진 성격에 따라 해석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이 개념이 청년정책과 결합되었을 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평가하는 과정에서 주체 간 합의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이 연구를 통해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개념을 살펴보고 청년, 전문가, 공무원이 인식하는 공정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서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먼저, 사회적인 공정의 개념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2차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년정책에서의 공정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통해 청년세대가 인식하는 공정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학계 및 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의 방향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끝으로, 청년정책의 주체인 청년, 전문가, 공무원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세미나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주체 간 청년정책에서의 공정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중심으로 각 영역별 청년정책에서 나타나는 공정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청년층 내에서도 성, 연령, 소득에 따른 공정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역별 청년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적에 있어서도 청년정책을 둘러싼 주체 간 성격에 따라 공정 의미가 다르게 인식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 일자리, 주거영역을 중심으로 5개의 정책과제와 15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government's youth policie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fairness' as discussed in these policies and examines what young people, experts, and public officials perceive and aim for in these policies. The concept of 'fairness' carries various meanings in itself and is subject to different interpretation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keholders. In particular, when this concept is combined with youth policies, it becomes difficult to reach a consensu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these policies. Through this study, the differences in the concept of 'fairness' in youth policy were analyzed, and the perceptions of fairness among young people, experts, and public officials were examined. This provided a basis for policy measures to realize the concept of 'fairness' in youth policies centered on national tasks.

First, the concept and meaning of social fairness were analyzed by examining how the discourse of fairness in youth policy is formed through secondary data and big data analysis. To establish empirical evidence, a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young people (aged 19-34) to analyze their perception of fairness. The direction of fairness in youth policy was also addressed based on the opinions of academics and policy experts. Finally, three seminars were held targeting young people, experts, and public

officials, the main stakeholders in youth policy. Through these seminars, the thoughts and evaluations of fairness in youth policy among the stakeholders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concept of fairness as it appears in youth policies across various sectors.

Such analysis revealed that within the youth demographic,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fairness based on gender, age, and income. The meaning of fairness was also perceived differently among stakeholders in terms of the direction and objectives of youth policies in different sectors. Based on this, five policy tasks and fifteen detailed action tasks were established, focusing on education, employment, and housing, as measures for fair social entry for the youth.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3-기본01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 김지경·서정아·송현주
연구보고23-기본02	청소년활동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문호영·서고운·김진호
연구보고23-기본0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 이윤주·최용환·길정아·황현정
연구보고23-기본04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 임희진·황여정
연구보고23-기본05	디지털 유해환경과 청소년 위험행동 실태 연구 / 배상률·김영한·황현정
연구보고23-기본06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 오해섭·최홍일·송원일
연구보고23-기본07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 최정원·이인영·박지숙·이호준
연구보고23-기본08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인재·임지연·김민·강영배
연구보고23-기본09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 박지수·이지연·한윤선·김혁
연구보고23-기본10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조혜영·한지형
연구보고23-기본11	청소년 디지털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 이창호·모상현·최항섭
연구보고23-일반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유성렬·이수정
연구보고23-일반01-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
연구보고23-일반02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I / 양계민·권오영·이영신·장윤선·장인숙
연구보고23-일반07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황진구·김윤희·정윤미
연구보고23-일반07-01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윤희·정윤미
연구보고23-일반08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임선아·김지혜

- 연구보고23-일반08-01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 연구보고23-일반08-02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6-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Ⅲ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3) 김형주·김정숙·김문길·변금선·배정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 참여-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임성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01) 참여-심층분석 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1 청년종합연구Ⅱ: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 백혜정·김지연·김승경·김이배·노혜진·김성아·박광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2 2023년 시설외소청년의 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1) 백혜정·김지연·김승경·노혜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3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의 실태와 과제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2) 김성아·김문길·나원희·한영섭·강예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4(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3)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의 실태와 정책과제 /
박광옥·김용득·이복실·이은영·이동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9-01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6) 김경준·김영지·윤철경·이은주·이은주·임성은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23-수시0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내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 / 황진구·김윤희
- 연구보고23-수시02 미디어 속 학교폭력 양상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도출 / 배상률
- 연구보고23-수시0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유민상·서고운·신동훈·이지연
- 연구보고23-수시04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
- 연구보고23-수시05 닛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현·김나영

수탁과제

〈 일 반 〉

- 연구보고23-수탁01 디지털시대, 디지털 문해력 개념의 확장 / 황용석·이현주·황현정
- 연구보고23-수탁02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 강진숙·김지연·류숙
- 연구보고23-수탁03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사업 성과 연구 / 이윤주·최정원·최홍일·이수진
- 연구보고23-수탁04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 연구보고23-수탁05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김승경·백혜정
- 연구보고23-수탁05-01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정책자료집 / 김승경·백혜정
- 연구보고23-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플랫폼 개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 연구보고23-수탁07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교실 - 교사용 수업활용 안내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 연구보고23-수탁08 학교-지역사회-민간연계를 통한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이창호·주예찬·이슬기
- 연구보고23-수탁09 인성교육 프로그램 비인증제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김봉제·신현우·곽현석
- 연구보고23-수탁10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이정민·최홍일
- 연구보고23-수탁10-0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이미숙·양소현·고혜정·최진혁·한송이·문미혜·윤애영·김주이·조성윤·박유정
- 연구보고23-수탁11 2023년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용역 / 최용환, 이동성, 장혜윤, 임채홍
- 연구보고23-수탁12-01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초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 연구보고23-수탁12-02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중고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 연구보고23-수탁13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최용환·김동일·박윤수·김보경·장혜윤·임지영
- 연구보고23-수탁14 2023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 서기희, 김성혜
- 연구보고23-수탁15 2022년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 최용환·박윤수·김보경·장혜윤·김수진, 오지혜
- 연구보고23-수탁16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서기희·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7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박소영
연구보고23-수탁18	2023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황진구·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3-수탁19	202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0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1	청소년활동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현황 연구 / 서정아·김정율·김지수
연구보고23-수탁22	글로벌 K-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체계 연구 / 양계민·권오영
연구보고23-수탁23	레인보우스쿨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 양계민·이영신
연구보고23-수탁24	지방소멸시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장근영·김기현·이상준·황성수·이규용·윤석천·최성은·조양진
연구보고23-수탁25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3-수탁26	청소년동반자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연구 / 김윤희·황진구·이상현·김태성·정윤미
연구보고23-수탁27	2023년 청년정책 성과자료 제작 / 김기현·김형주·김지민
연구보고23-수탁28	청년문제 대응 재원 조성방안 연구 / 김기현·이윤주·조양진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학폭0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저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고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3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4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5	2022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발간 모음집 / 모상현·김예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모상현·김창겸·김예원
연구보고23-학폭07	2022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이경상·남지영·송채원·장원빈
연구보고23-학폭08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보고서 / 모상현·남지영·장원빈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대안01	대안학교(각종학교) 운영실태조사 / 최홍일·김세광·오해섭
연구보고23-대안0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기초 연구 / 최인재·송원일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3-01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세미나 (23.7.19.)
- 세미나23-0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 설명회 및 방법론 특강 (23.8.24.)
- 세미나23-03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역사와 전망」 (23.9.12.)

〈 위 크 쉘 〉

- 워크숍23-01 2022년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23.2.8.)
- 워크숍23-02 2022 하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23.1.16.)
- 워크숍23-03 2023 꿈지락 운영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워크숍 (23.5.2.)
- 워크숍23-04 2023년 학생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및 중립성 원칙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23.5.3.)
- 워크숍23-05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기본과정 (23.7.27.~7.28.)
- 워크숍23-06 2023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의회 (23.7.19.)
- 워크숍23-07 2023년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집필진 워크숍 참고자료 (23.8.5.)
- 워크숍23-08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심화과정 (23.11.2.~23.11.3.)

〈 포 럼 〉

- 포럼23-01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23.4.25.)
- 포럼23-02 챗GPT 알고리즘 이해와 청소년 시민성증진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23.7.4.)
- 포럼23-03 2023년 다문화 청소년 포럼: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23.8.24.)
- 포럼23-04 보호소년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보호처분제도 개선 방향 모색 (23.8.25.)
- 포럼23-05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23.9.20.)
- 포럼23-0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23.9.21.)
- 포럼23-07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포럼 (23.10.25.)
- 포럼23-08 청년종합연구 포럼: 협동연구 연구성과 보고 (23.11.14.)
- 포럼23-09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대응 (23.11.21.)
- 포럼23-10 청소년정책포럼 '도시를 만드는 아이들' (23.12.7.)

〈 콜로 키 움 〉

- 콜로키움23-01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처리의 이해 (23.4.19.)
- 콜로키움23-02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1차 콜로키움 “SDGs 시대의 청소년정책” (23.6.19.)
- 콜로키움23-03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2차 콜로키움 “학습 회복(Learning Recovery)에서 교육 혁신(Education Transformation)으로:코로나 이후 해외 교육 사업의 변화” (23.7.20.)
- 콜로키움23-04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3차 콜로키움 “청소년 사이버범죄 양상 파악을 위한 연구 방법: ATLAS.ti 23을 이용한 주제 분석(원제: Using Thematic Review with ATLAS.ti 23 to Identify Patterns of Cybercrime among Youths from Literature)” (23.8.18.)
- 콜로키움23-05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4차 콜로키움 “청소년과 국제개발협력 : 월드비전의 전략과 사례를 중심으로” (23.8.28.)
- 콜로키움23-06 교육 혁신 도구로서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방향과 현황 (23.9.18.)
- 콜로키움23-07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5차 콜로키움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 도전과 기회를 중심으로” (23.11.13.)
- 콜로키움23-08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6차 콜로키움 “공존과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의식” (23.12.01.)

〈 기 타 자 료 집 〉

- 자료23-01 2022 공교육 안팎 대안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 및 연수 보고서
- 자료23-02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23-03 인성교육 재정립 및 학교인성교육 추진방향
- 자료23-04 학교 시민교육과 시민성 개념의 재구조화
- 자료23-05 민주적 학교 운영 길잡이
- 자료23-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자료23-07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위촉식 및 연수
- 자료23-08 2023년 학생참여교육 실천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자료집
- 자료23-09 2023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 자료23-10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가이드북
- 자료23-11 제1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자료23-12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 적용평가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제10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2호(통권 제109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3호(통권 제11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11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14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146호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147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Ⅰ

148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Ⅱ

149호 다양한 가족 메타버스 상담·활동·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 연구

150호 메타버스의 활용경험이 청소년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 NYPI Bluenote 통계 〉

74호 후기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결과

75호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76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5차 조사(2022년) 주요 조사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연구보고23-기본0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인 쇄 2023년 12월 22일

발 행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91-6

연구보고 23-기본0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91-6